환황해포럼

Contents

Special Session 1 ····· 1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 1

»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 3
Current Statu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 7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Session Peace 1 ····· 13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 13

» 서해 ····· 15
The West Sea ····· 21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Session Peace 2 ····· 31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 31

»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 33
歴史的対立の解決に向けて -日本の視点から- ····· 49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에 관한 학술적 고찰 ····· 62
有关化解东亚历史分歧的学理思考 ····· 75
판은쉬(範恩實)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위원

»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권 전략**
–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와 지역 민간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 … 87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Session Prosperity 1 ····· 105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 105

»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방안 : 로컬 및 글로벌 생태계 관점** ····· 107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중국의 정책 조치** ····· 119
中国促进中小企业就业的政策措施 ····· 146
자오유푸 중국 산둥대학(웨이하이)

»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최신 동향과 지역의 대응** ····· 180
미츠이 이츠토모(三井 逸友) 가에츠대학대학원 비즈니스창조연구
과장 ·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Session Prosperity 2 ····· 187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 187

» **환황해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전략** ····· 189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으로 나아가자 항구 상호연결의 새 국면 창출** ····· 203
融入环黄海 立足东北亚 面向中东欧 不断开创港口互联互通新局面 ····· 215
송시궈(宋西閣) 웨이하이(威海) 항그룹 부총경리(副總經理)

»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 기회와 난관 –** ····· 230
Multi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 240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Session Symbiosis 1 ····· 25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 251

»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보전사업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위한 협력적 수단** ····· 253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A Collaborative Vehicle for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and living resources ····· 269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실행 목표: 관리를 위한 포화밀도 지표** ····· 285

Towards Ecosystem-based Sustainable Practice : Carrying Capacity – Indicator for Management ····· 297

장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 **일본 수산물 상업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309

Improving Commercialization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and Brand Value ····· 319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Session Symbiosis 2 ····· 329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 329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와 건강** ····· 331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징진지(京津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 349

京津冀地区雾霾治理政策举措 ····· 362

왕리 조교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도쿄 미세먼지(PM) 농도 감축** ····· 374

Automobile exhaust regulation and PM concentration reduction in Tokyo ·· 384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Special Session 2 ····· 395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 395

»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 397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 ····· 397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 **비 어펙티트 –2009년 이후의 청년 예술가들** ····· 410
Be affected –Young Artists since 2009 ····· 433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 **고교생과 사회의 다리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의 청년 지원을 논하다** ····· 456
How can we solve social issue of High school kids in Japan? ····· 472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NPO법인DxP 이사장

Special Session 3 ····· 487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487

»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교류 상황 및 협력 제안** ····· 489
河北省社会科学院对外学术 交流情况及合作建议 ····· 494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한중일 지방 싱크탱크 협력 심포지엄 발언 요약** ····· 500
中日韩地方智库合作研讨会上的发言提纲 ····· 504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싱크탱크의 역할과 제안**
– 구이저우성(贵州省)사회과학원을 사례로 ····· 508
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智囊机构的角色和建议
– 以贵州省社会科学院为个案 ····· 512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 516
通过深化对外学术交流提升智库国际影响力 ····· 522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Special Session 1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사 회 자 _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기조발제 _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안희정(충남도지사)

토 론 자 _ 김성환(한양대 국제학부 특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정승(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대사)

장후이지(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기조발제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지만 정상 간의 방문도, 양국 정부 공동 행사도 없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계획되었던 학술 · 문화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한중 수교 사반세기의 역사를 크게 기념해야 할 이 시점에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기적의 양자관계라고 불릴 만큼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6년 2114억 달러로 약 33배가 증가했고, 상호 인적교류는 연간 천만 명을 돌파해 수교 당시보다 80배나 늘었습니다. 양국 간 항공 편수도 주 1,10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중국 외교에 있어 최상위 관계 중 하나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정당 간의 4개

전략 대화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인문사회 교류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중은 그간 북핵문제, 북한 급변사태문제,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 해상경계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중요한 이견이 존재했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취약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드(THHAD)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양국이 소통과 상호 이해, 신뢰 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여전히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결코 한중 관계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 지혜를 모아 사드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중간에는 북핵 문제, 주변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 한반도의 미래, 한중 경제 협력,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협력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장,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이 모두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한중은 보다 많은 영역에서 상호 이익을 나눌 수 있고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금년 내에 양국 정상 회동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물론 한중간에는 사드문제 이외에 다른 장애요인도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우려스런 구조적인 변화는 그간 한중 우호관계의 근간을 제공했던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술격차는 사라졌고, 한중 간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홍색공급망의 확대는 그간 중간재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점으로 한중 무역 규모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호적 한중관계의 기초인 경제협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중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협력 토대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한중 간 시급한 것은 우선 정치적 신뢰, 지도자간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정책이나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추적인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외교적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며, 미중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역 강대국으로서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정 요인인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한중 정치적 신뢰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역내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한중간에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한중 경제 협력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간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의식적이고 의도적으

로’ 상호 경제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분업 체계와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봅시다.

아울러 양 지역 간에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질병, 환경오염, 테러, 관광, 에너지, 의료, 식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우선, 좁은 의미의 환황해 지역에서 시작하여, 종국에는 환발해, 환동중국해, 환동해, 환북극해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협력의 띠를 구성(構成)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북한도 결국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공존과 공영의 삶에 동참하도록 초대합시다.

한발 더 나아가 ‘환황해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하자고 제안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동북아 플러스 및 신한반도 경제구상은 상호 결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한반도 구상에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교류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장차 미래 국가전략구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화민족 부흥의 꿈과 우리 한민족 번영의 꿈이 서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역내 싱크탱크 그리고 역내 지역 지도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 공존, 발전의 기치 하에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Current Statu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hn Hee-ju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To all the visitors from Korea and abroad participating in the Pan-Yellow Sea Forum

August 24th of 2017 mark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was a very meaningful day. However, there was no visit from leaders in the two countries nor was there any public event held by the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to mark the occasion.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that were planned in commemo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cancelled or reduced in scop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uffered the most acute crisi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This is unfortunate as this should have been a time to celebrate 25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92,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remarkably developed. As of the end of 2016, Korea is the third big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or in China and China has

become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The scale of trade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 times from 6.3 billion dollars in 1992 to 211.4 billion dollars in 2016. The number of visi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eached ten million people a year – which is 80 times greater than when diplomatic relation were established. The number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1,100 times a week.

Korea and China set the goal of achieving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 as one of their highest diplomatic priorities during the times of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fterwards, when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visited China in 2013, both countries agreed to fully internalize this goal.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ve newly established four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ational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direc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member in China in charge of diplomatic matters. Korea-China FTA was concluded in 2015, and social exchanges have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South Korea and China have often disagreed on issu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matters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owever, cooperation has been improv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ding commonality while acknowledging differenc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grown significantl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However, problems clearly continue to exis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deteriorated due to the THHAD issue and this indicates that both countries will need to continue making efforts in terms of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e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led by President Moon Jae-in hopes to significantly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urrent government wants to form a practical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way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of THHAD cannot be the focal poi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 hope that Korea and China will work together wisely on the issue of THHAD. There are many matters about which Korea and China can cooperate including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uncertainty surrounding security issue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f they do not cooperate regarding the issue of a nuclear Nor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China will be in a difficult position.

Korea and China are both in a position to enjoy mutual benefits in many areas and improve on their strategic relationship. We expect both countries to conduct a general meeting within this year on the basis of pursing mutual benefits and improv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course, there are obstacles other than THHA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tructural change that concerns us the most recently is that the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Northeast Asia that has previously provided the basis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ast started to collapse. Due to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technological differences

have narrowed,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increased. The growth of China's Red Supply Chain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role Korea had previously played in providing intermediary goods. As of 2014, the scal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decreased for three years in a 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Redu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a cause for concern as it may impact negatively on relations. The strategy for relying on America for national security and on China for the economy is expected to no longer apply.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currently in deadlock and prepare for the basis of medium to long term cooperatio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efforts must be exerted together. For this, I am making two suggestions.

First of all, I am suggesting re-establishing trust among leaders as well as political trust as the most urgent matte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deliver consistent messages to China. I believe that policies biased towards either America or China, or any other policies hostile to China will not succeed. Korea must be able to solidify its relationship with America and also proceed to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s a country that plays a pivotal role, we need to pioneer new diplomatically cooperative relat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cal stability and peaceful relationships, and form cooperative and stable relationships that both America and China can rely on.

As a powerful nation near Korea, China should provide public good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China must exert the greatest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as it is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the uncertai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is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political trust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both countries must be able to draw up a new blueprint with other countries to promote mutual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rea.

Secondly, I am suggesting that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proceeded with through 'cooperation in Pan-Yellow Sea areas'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new driving force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becoming structurally difficult. As there is an accelerating trend for Korea and China to become economically separated, there is a need for Korea and China to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establish mutual economic cooperation and a work division system. I suggest making an effort to form a local work division system that goes beyond the national unit and includes interested communities by improving the cooperation among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cooperation including economic collaboration in both countries is requir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errorism, tourism, energy, medicine, and food. Speaking of geographic spaces, I suggest forming lines of glob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e narrow scope of the Pan-Yellow Sea that expands to Bohai Sea rim, East China Sea rim, The East Sea rim, and The Pan Arctic Sea rim in China. In the course of making such an effort, I suggest that North Korea is

encouraged and enticed to give up nuclear armament and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co-existence and public management.

Taking one step forward, I suggest incorporating these initiatives in a step by step manner on the basis of Pan Yellow Sea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e plan for cooperating with China in a step by step manner and also the Northeast Plus of Korea and the economic blueprint in new Korean Peninsula can be mixed and matched together. The plan of the government led by the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for new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logistic traffic belt in the West Coast." This goes beyond the scope of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t may be feasible to achieve bigger synergic effects when incorporating it with the step-by-step plan regarding China and develop it as a national strategic plan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dream of prosperity of Chinese nations suggest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19th party convention and the dream of prosperity of the Korean nation positively influence each other and these two visions are promoted to benefit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of East Asia. I suggest activating exchanges among Think Tanks and local leaders in these areas and working together. Based on these exchanges, I fervently hope a "community of interest and hope" is established based on peace, co-existence, and development in our shared lands.

Thank you.

제3회 환황해포럼

Session Peace 1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사회자 _ 존 델러리(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발표자 _ 김종대(국회의원, 정의당)

로버트 칼린(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정지용(중국 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장)

발제문

서해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최근 뉴스를 접한 사람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 중 하나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 문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문제이거나 다른 모든 문제보다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 문제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다른 사안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우선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논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한반도라고 불리는 훌륭한 건물의 맨 위 층에는 전망 좋은 아파트 방이 하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비핵화 스위트룸'으로 광고된 이 근사한 방을 임대하고 싶어 한다. 아파트 건물 전체와 주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은 신중하고 면밀해 보인다. 그러나 '서해'라고 표시된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면, 그곳에는 석유가 가득 차 있고, '금연', '불필요한 불을 피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글씨가 바래고 너덜너덜한 채로 벽에 붙어 있다. 석유가 가득 찬 지하실이 폭발한다면, 아파트 건물 전체가 맨 위층의 '비핵화 스위트룸'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 신중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에 직면

해 있다. 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중매체의 헤드라인은 그 위험성에 대해 소리 높여 경고하고 있으며 과열된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심을 간략화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비핵화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상기 예처럼 지하실이 석유로 가득 찼다면, 비핵화가 모든 다른 현안을 제쳐 두고 다뤄야 하는 유일한 긴급 현안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긴박한 위협이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표면상 단순한 국경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위협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한반도에서 서해는 국지적 충돌이 핵 충돌의 경계까지 발전하거나 핵 충돌의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따라서 그러한 충돌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 수년간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으로 인해 해당 문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지하실에 가득 찬 석유가 폭발한다면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불길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서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남북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합의의 부족으로 인해 상충된 주장이 존재하면서 발생한다. 서해 수역에서, 남한은 소위 NLL이라고 하는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국경이라고 주장한다. NLL은 한국전쟁 직후 남한 어선이 북한 국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엔군 사령부에서 단독으로 정한 경계선이다. 북한은 NLL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 군사분계선을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이러한 분쟁을 다루기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있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협의되기 전에 남한 행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합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2007년 남북한회담 성명이 발표된 이후, 강화된 군사훈련, 병력 증강, 신무기 도입과 더불어 서해상에서 양 측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월과 2010년 11월에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서해상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공동어로구역 설정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은 어떻게 군사적 긴장을 줄일 것인가라는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시점에는, 이를 통해 병력 축소나 서해 전체 혹은 일부 그리고 주변 지역의 비군사화를 향한 신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인 목표로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많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새롭게 던져진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는 것이다.

국경 분쟁을 넘어서 서해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자부심,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내 문제, 빈틈없는 군사안보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과 관련이 있다. 서해 5도(휴전협정의 조건에 따라 유엔군 지도부의 '군사적 통제'를 받는다)에 대한 통제와NLL로 인해 남한 군대는 군의 판단 하에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병력을 최대한 전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전진 배치는 북한의 항구 도시 해주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도시의 군사적 및 상업적 활용도를 감소시켜 왔다.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사안의 영향을 이해하거나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남한이 서해상에서 가지는 전술상의 군사적 이점을 쉽게 포기하는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론적으로도, 남한이 많은 유연성을 보여줄 동기도 거의 없어 보인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더라도 북한은 현 상황에서 상당한 전술적 영향력을 가지며, 북한의 현안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의 자유자재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는 양측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것이다. 양측 모두 충돌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행동은 긴장 고조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핵 문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긴장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종류의 긴장 고조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 내재된 위험 요소들은 서해에서의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기를 신속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진지하고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단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민간 및 군)이 서해 수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동 강령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 강령은 해상에서 위험한 사고를 피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맺은 기존 협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 주장의 최종적 해결은 전적으로 남북한의 책임이며, 외부 세력은 단지 (말과 행동으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남북한 양쪽 모두에, 각 측의 요구는 실제적인 안보적 시사점과 강력한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2014년에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범위를 서해 수역으로까지 확대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북한이 서해상의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열려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신호가 2013년부터 있기는 했다. 그 신호들을 간략하게나마 훑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2013년, 북한은 황해남도, 즉 서해의 가장 민감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경제특구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에 발표한 새로운 경제 특구 명단에는 황해남도,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령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령군은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 포병대가 배치되었던 곳이다. 이후에, 북한 매체는 강령군 경제특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2016년 5월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했던 었을인은긴 연설문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남북한이 서해상의 긴장을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해 8월에 김정은이 서해상의 섬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참관한 것은 서해 문제가 잊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해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석유가 가득 찬 지하실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앞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중 한 가지 아이디어는 서해상에서 남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해 합의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도록 도울 제3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서해상의 충돌이 긴장 고조 가능성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이러한 긴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은 서해상의 충돌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남북한이 서해상의 긴장 완화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관련된 남북한 협상을 지원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까지 협상의 결과물인 남북한의 합의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돕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1. 예를 들어, 남북한, 중국, 미국의 전문가(군 및 민간)로 구성된 비공식 실무단을 조직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이 실무단이 착수하는 합동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서해 수역에서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 즉 수산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제3자의 지지와 적절한 관여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수립하고 또 유지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과 미국이 제 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관련 문제에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가 관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3. 이러한 실무단은 아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서해상의 사고를 관리하고 억제하는 것
   -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

4. 명확히 말해, 현 상황에서 서해 문제의 영구적 해결은 휴전협정을 대체할 최종적 평화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광범위한 협의 외에, 서해상의 국경선에 대한 궁극적 해결만 해도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모든 과도적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과 미국이 외부 세력으로서 해결책을 강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

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비공식 실무단은 핵심 위험 지점을 확인하는 역할과 위험을 막거나 억제하고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과 절차, 양식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것이 민감한 문제임을 알기에 요점을 강조하자면, 외부 세력이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가능성은 적지만 중국도 함께)은 언제라도 남북한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토론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북한 어느 쪽이든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가 되기 쉽다. 요점을 다시 말하자면, 최종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남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결부돼 있으며, 남북한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루어냈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해결책은 결국 가치가 없다.

6. 핵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최상의 경우,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상의 상황은 방치할 경우 더욱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를 불필요하고 매우 위험한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실제적인 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휴전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서해상의 위험은 이후에 평화 유지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영구적 평화협정이 핵 문제의 중요한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비록 서해 문제와 핵 문제는 매우 상이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중요도의 순서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공통의 근원을 가지며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공동의 최종 목적지를 갖는지도 모르겠다. 실제적 수준에서, 모든 크고 작은 외교 및 안보 문제의 해결에는 입구가 필요하다. 어쩌면 서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입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

The West Sea

Robert Carlin
Visiting Fellow,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Robert Carlin

As anyone who has looked at the news recently know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reeminent issue of concern. That concern is growing as the dangers pos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ecomes ever more serious.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nuclear issue is the only problem in need of attention, nor is it necessarily the single issue that should be addressed before everything else. If there are other equally pressing dangers, simple prudence dictates that they need to be high on the agenda.

Let's take a simple example to illustrate the point. Assume someone is interested in renting a nice apartment, advertised as The Denuclearization Suite, something on the top floor with a very good view, in a fine building called The

Peninsula. There are plans for upgrading the entire apartment house and the surrounding grounds, and these look well thought out. But when one goes down to the basement, through a door marked "West Sea," one discovers it is filled with gasoline, and that the signs on the walls – "No smoking," "Avoid Unnecessary Sparks" are faded and badly tattered. If this pool of gasoline explodes, obviously the whole apartment house blows up, the lovely top floor Denuclearization Suite with it.

Today, we face not a question of real estate but rather one of prudence and precedence. This is not an easy point to make in the face of screaming headlines and super-heated pronouncements surrounding the nuclear question. There is no mistaking that denuclearization is of critical importance, but as the example of the pool of gasoline in the basement suggests, perhaps denuclearization ought not be seen as the only pressing issue, pushing all others to the side.

Another pressing threat, as I indicated above, arises from the disput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est Sea. The dangers coming from what appears on the surface to be a simple boundary dispute -- but is actually something more complex -- are immense. Nowhere on the Peninsula can a local clash more easily escalate up to or even tumble over the edge of a nuclear confrontation. Preventing or limiting such a clash is thus vital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escalation. The growth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recent years has made the need to focus on this problem not less but even more urgent. Remember, if the pool of gasoline in the basement explodes, the whole apartment house goes up in flames.

The West Sea problem has several parts. The most obvious arises from the conflicting claims stemming from the lack of a mutually agreed demarcation line separating the two sides. In these waters, the Republic of Korea (ROK) claims the so-called northern limit line (NLL) -- a line unilaterally declared by the UN Command soon after the Korean War as a way to keep southern fishing boats away from the coast of the north -- as the de facto bord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oes not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at line and has drawn its own seaward military demarcation line further south.

A modest first step toward dealing with (though not finally resolving) this dispute was taken in the October 2007 inter-Korean summit, which laid out the goals of creating a "joint fishing area" and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Before the details could be negotiated, a change of administrations took place in the ROK, and the new government put aside those understandings.

In the years since the 2007 statement was issue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military buildup by both sides in the area, with beefed up exercises, reinforcements,

and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Serious incidents in March 2009 and November 2010 intensified concerns. Consequently, any effort to resolve the boundary question – much less deal with a joint fishing area -- must face even more difficult questions of how to reduce military tensions in the area. At some point, this likely will entail drawing down military forces or even measured steps toward demilitarization of all or part of the sea area and its immediate environs. At first glanc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these hardly seem realistic goals. But circumstances change—often for the worse as we have witnessed in recent years, but sometimes for the better. New ideas thrown into the stew may open new possibilities.

Beyond the boundary dispute, the basic problem in the West Sea has to do with a complicated mixture of national pride, domestic political imperatives, and hardheaded military-security calculations. For the ROK, the combination of its control over the five West Sea islands – put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UN Comman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 and the NLL has allowed the ROK military to position its forces as far forward as possible against what it sees at the contingency of a North Korean attack by sea. This forward positioning has also effectively bottled up the North's port of Haeju, reducing its utility both as a military and a commercial entity.

Establishing a workable joint fishing zone at this point will not be feasible without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the influence of these deeper issues. It seems unlikely that the South will easily give up a tactical military advantage afforded by its position in the West Sea. On paper, the ROK has seemingly little incentive to show much flexibility.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North is in the weaker position, it has considerable tactical leverage n the situation, and can create a crisis almost at will in order to show that its concerns cannot be ignored. The result is a combustible situation in which both see the need to demonstrate how determined they are to hold to their positions. Both sides have shown themselves ready to take dangerous actions that have the effect of lowering barriers to escalation in the midst of a clash. And in the context of the broader tensions over the nuclear issue, escalation of any sort could become fatal.

The dangers inherent in the status quo call for serious, practical efforts to reduce the possibilities of further clashes in the West Sea, and to devise means of quickly defusing a crisis if conflict erupts. Simply asserting that one side must honor the claims of the other is not sufficient. There need to be established well-defined codes of conduct governing how vessels (both civilian and military) behave in these waters, perhaps along the lines of existing agreements between various countries on avoiding dangerous incidents at sea.

The ultimate disposition of the claims of each side is entir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two Koreas, and outside powers can only urge them (through words and actions)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For both North and South, the claims have real security implications as well as potent symbolic importance. Even so, there seemed to be a window of opportunity in 2014. It is interesting to consider what might have happened if President Park Geun-hye had extended her idea for a DMZ Peace Park to the waters of the West Sea during that time.

On the North Korean side, there have been a series of signals since 2013 that suggest Pyongyang might be open to exploring ways to reduce tensions in the West Sea, though these signals remain to be probed. It is worth reviewing them briefly. In 2013, Pyongyang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in every province except South Hwanghae, that is, the province bordering the most sensitive areas on the West Sea. In 2014, a new list of the economic zones included South Hwanghae, very specifically Kangryong County—where the North Korean artillery that had fired on Yeonpyeong-do in 2010 had been emplaced. Subsequently, North Korean media have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Kangryong economic zone. Perhaps most important, in his lengthy May 2016 speech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Kim Jong Un specifically called for the two Koreas to deal with tensions in the West Sea. Signaling that the West Sea issue is not something to be forgotten, this past August Kim attended a drill simulating an attack on the West Sea islands.

The problem is not one for the future. There is currently no mechanism for the two sides to manage the risks in the West Sea.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n incident in several years should not be taken as a sign that the dangers have lessened. A pool of gasoline can explode on any day.

Earlier I mentioned that new ideas thrown into the stew can open new possibilities. One such idea is considering the utility of having third parties, at least in the initial phases, assist in monitoring or implementing any agreed tension reduction step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est Sea.

It has already become clear that clashes in the West Sea have the potential to draw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ways that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the chances of escalation. Given this pressing reality, Beijing and Washington have strong reasons to lower the risk of a clash in the West Sea, and thus in seeing the two Koreas reach agreement on ways to defuse tensions there. It is in the interest of both the PRC and the U.S. to support relevant North-South negotiations and, to the extent necessary and feasible,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any inter-Korean agreements that result.

Perhaps, for example, it is worth organizing an unofficial working group composed of specialists (military and civilian) from North and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initiate a joint *process* that will significantly lessen the chances of future military clash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est Sea, while exploring arrangeme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utilizing the fishery resources for common benefit in those waters.

In the long run, such a process can more easily be established *and sustained* with the endorsement and appropriate involvement of third parties. These could be, as I've noted, China and the U.S., though one could imagine other countries with experience in maritime affairs becoming involved as well.

Any such working group might consider dividing its approach into two conceptual baskets:

- Managing and containing incidents in the West Sea, and
- Preventing such incidents.

To be clear, under current circumstances a permanent solution to the problems in the West Sea is probably not possible prior to final peace arrangements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ltimate disposition of boundaries in the West Sea is too complicated apart from such broader arrangements. Moreover, it is crystal clear that the specific content of any interim agreement is up to the two Koreas. There is no

attempt here to suggest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outside powers should try to impose a solution, something that would be not only counterproductive but also impossible to achieve. However, such a group could identify key danger points and explore the necessary mechanisms, procedures, and modalities to avoid, contain, or otherwise deal constructively with those dangers.

To underline the point since I know it is a sensitive one, I am not advocating outsiders try to mediate a solution. However, the US (and less likely China) could stand ready to facilitate discuss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a manner that both Seoul and Pyongyang deem appropriate. The immediate reaction from either Korean capital is liable to be, "It is none of your damned business." And final resolution of the issue, to repeat the point, is entirely up to the two Koreas. That cannot be too strongly emphasized. But there are practical considerations involved, and a prideful resolution by the two Koreas that cannot be sustained will in the end be worthless.

While not directly linked to the nuclear question, in the best case, measures to reduce tensions in the West Sea could serve as stepping-stones to dealing with other sources of tension. Left unattended, the situation in the West Sea will grow into an even more dangerous flashpoint, trapping all parties in an unnecessary and highly dangerous cycle of escalation. On the other hand, a resolution of the problem, even

an interim one that lessens the chances of another armed clash, could provide a practical example for addressing other sources of tension on the peninsula.

As a problem left unresolv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the dangers in the West Sea will have to be finally resolved in future peacekeeping arrangements. At the same time, such permanent peace arrangements will almost certainly also be necessary for any significant movement on the nuclear issu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West Sea and the nuclear issue are widely different issues and, at least on the surface, are orders of magnitude apart, they share a common origin, are intertwined in a most dangerous way, and may have a common endpoint. At a practical level, a solution for every diplomatic/security problem, large and small, needs an entry door. Perhaps beginning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West Sea provides just such a doorway.

제3회 환황해포럼

Session Peace 2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사회자 _ 김은숙(한국교원대 교수)

발표자 _ 우메노 마사노부(조에츠 교육대학 부학장 및 이사)

판은쉬(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원)

윤용혁(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발제문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1. 문제의 소재와 학술적 방도

본 발표는 ① 한중일 간의 과거사와 역사 교육을 둘러싼 대립점에 관한 역사 교과서 기술이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검정 교과서와 집필자인 역사 연구자의 노력으로 일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①에는 주로 민간의 협동적 작업,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본측의 역사적 경위가 있는 점, ③정부 관여에 의한 협동적 작업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대립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국의 역사 전시 등에서 일본의 판결에 기재된 사실 확인이나 학술적 기재 등을 활용해 해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의 역할로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3국 국민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수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의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2. 일본에서의 역사 교과서 현황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특히 식민지 통치기에 관한 기술에 대해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정부 주장의 반영, 집단적 자위권이나 위안부 문제 고등학

교용 검정」(2016년 3월 19 일 아사히신문), 「교과서, 강력해지는 문부과학성 관여」(2017년 3월 25 일 아사히신문)은 2016년도 고교 역사 등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검정 기준의 3대 요건(①정부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를 둔다, ②특정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③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의 기술은 여러 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할 것)이 적용된다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난징 사건)의 희생자수가 '일본에서는 수만~수십만 이상 등 여러 설이 있음' '중국 정부는 30만 이상을 주장'이라고 기재하더라도 '통설적인 견해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본사 A의 경우, '간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조선인 수를 '수천명'이라고 기재했었으나 '통설이 없다'고 지적되어 '수백명~수천명'으로 바꾼' 점, '중국인 강제 노역을 둘러싼 전후 보상 관련 기술에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됨'이라고 추가한' 점, 일본사 2권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말의 한일 합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나온' 점, 영토 관련 기술은 '현행의 1.6배 분량이 된' 점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는 검정 교과서에서도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 [1)]

도쿄 서적	(본문)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와 광산이나 공장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및 전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p. 227)
교육 출판	(본문)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가운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점령지 사람들도 노동력의 병력으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 끌려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p. 227) (칼럼)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보상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대립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법에 근거해 그 해결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p. 259)

1)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 - 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 - 」『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제37 권 제1호 표 1은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제국 서원	(본문)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하자, 일본은 기업 등에서 반 억지로 할당을 정해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 일본 각지의 탄광·광산 등으로 데리고 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p. 227) (본문)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 259)
이쿠호샤	(본문) 전쟁 말기는 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징용 되어 힘겨운 노역을 강요당하는 조선인이나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p. 238)
시미즈 서원	(본문) 억지로 데려 온 조선인·중국인이나 연합국군의 포로까지 탄광 등에서 일하게 했다. (p. 241)) (본문) 아시아 근린국가들과는 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과거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그러한 가운데 1995년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평화 이념과 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총리 담화가 발표되었다. (p. 270)
마나비샤	(본문) 또한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 사람들을 노무자로 징집해 비행장 건설 등 강제로 육체 노역을 시켰습니다. 1942년, 태국에서 버마로 향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버마로부터 10만명, 태국으로부터 4만명, 말레이반도와 자바섬으로부터 8만명 등 수많은 노무자를 열대 정글 지대의 건설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1여년의 돌관공사로 철도는 완성시켰지만, 중노역으로 인해 수많은 노무자가 과로나 병으로 쓰러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영국군 등 포로 6만명 또한 노역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후에도 '롬샤(Romusha)'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괴로운 육체 노역의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p. 239) (칼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정부는 패전까지 약 70만명의 조선인을 국내 탄광 등에 보냈다. 장시간의 중노역으로, 식사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도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지원이나 징병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또 군속으로서 일본 점령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감시인이나 토목작업 등을 명할 수 있었다. 조선으로부터는 군인 20만명 이상, 군속 약 15만명, 대만으로부터는 군인 약 8만명, 군속이 약 12만명에 달했다. 한편, 조선·대만의 젊은 여성 중에는 전지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p. 239) (본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인 전쟁 피해자와 유족이 개인으로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중일공동성명 등을 근거로 소송은 거부되

	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법원이 판결에서 '피해자 등의 고통이 극히 크고, (중략)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고 부언한 점을 받아들여 화해를 추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금을 지급했으며, 기념비를 지어 강제 연행·강제 노역의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 281) (주석)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 담화(자료)의 해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칼럼) 1990년대, 세계에서는 전시 하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1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회의에서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은 것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을 요구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넣어 고문·학대한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1991년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1993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전시 하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미국·네덜란드 등 각국 의회도 이 문제를 채택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전시 하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p. 281)

표 2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2)]

신일본사 B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다수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에 강제 연행해 광산 등에서 일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인 여성 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자도 있었다. (p. 325)
현대 일본사 A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일본 식민지에서 만난 조선·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점령 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공장·광산 등에서 노역을 당했다. (p. 150)
일본사 B 시미즈 서원	(본문)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 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더불어 점령지역의 중국인까지 강제 연행해 혹사시켰다. (p. 228) (주) 패전까지 조선인은 약 80만명, 중국인은 약 4만명의 사람들이 일본에 연행되었다. 1945년 6월에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 연행된 중국인 약 900

2)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 - 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 - 」『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 제37 권 제1호 표 2는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명이 봉기해 420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p. 228) (칼럼) 노역자의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조달도 이루어졌다. (p. 253)(자료) 무라야마 담화 (본문)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8월에는 '식민지 지배' '침략' 등 무라야마 담화 등의 문구를 포함한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12월에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갹출할 것임을 표명했다.
고교 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경제면에서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적용해 군수 생산을 실시하고, 국민징용령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을 공장이나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p. 213) (주)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39년부터는 집단 모집을 통해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으로, 1944년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 이 기간 중에 415만명의 조선인을 조선 내 광산이나 공장에, 11만명을 군대 내 노무요원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한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사망자를 내었고,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의 봉기까지 일어나, 약 4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13) (주)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의 화인(華人, 재외 중국인) 수만 명, 필리핀의 일반주민 약 9만명을 학살했다. 또 버마·태국·자바(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가혹한 노역 동원을 실시했다. (p. 213) (본문)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정 하에서 석유·고무·식량 등을 징발하고 군표 등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노역자 징병이나 항일운동에 참가한 주민 학살도 이루어졌다. (p. 213) (본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에 경계감을 주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 책임,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되었다. 1991년, 한창 소해정을 파견할 무렵,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는 침략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고, 1993년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총리가 처음으로 총리로서 '침략전쟁'이라고 명언했다. 전후 50년인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현지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예가 지적되었다. (p. 247) (주) 1993년 8월 5일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지에 반해 소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p. 247)

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조선·대만·'만주국'에서도 황민화 정책과 전쟁 동원이 이루어졌다. (p. 316) (주)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점령 후, 일본군이 항일적으로 간주한 중국계 주민 수만 명을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에서 학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하에서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중국인은 약 4만명이 넘으며 이 중 약 7,000명이 사망했다. 또, 1945년 6월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혹사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 노역자가 봉기했으나,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하나오카 사건)(p. 317) (본문)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나 복고적 내셔널리즘의 대두에 대한 위구심이 존재하고,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후 50년에 해당하는 1995년, 국회에서 전후 50년 결의가 이루어지고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침략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전체에 대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pp. 354-355) (본문)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역의 보상문제 등을 성실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 등 아시아 국민들의 진정한 공존을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p. 358)
신일본사 A 짓쿄출판	(본문)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의 군수 공장이나 탄광 등에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 중국인도 강제 연행했습니다. (p. 104) (주) 조선에서는 1939년부터 집단 모집이 시작되어, 42년에 관 알선, 44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이 내지·사할린 등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또 1942년의 도조(東条) 내각의 각의 결정을 통해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탄광이나 광산, 댐 공사 현장 등에서 가혹한 노역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말기,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 봉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오카 사건) (p. 105) (본문) 20 세기 후반에 전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이 대량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의 사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식민지로부터의 강제 연행·강제 노역이나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p. 163) (칼럼) 사할린에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인은 본토로 돌아왔지만, 한국·조선인은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p. 182)

신선 일본사 B 도쿄 서적	(본문) 병력이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에는 조선에서, 1945년에는 대만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이나 대만으로부터, 나아가 중국의 점령지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연행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가혹한 노역 여건하에서 일하면서 참담한 생활 속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28) (주) 징용령의 실시에 앞서 1942년 이래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이라고 한다. 또,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도 적지 않았다. (p. 225) (본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강제 연행·롬샤·한국·조선인과 대만인의 전 일본병·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 군표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국간 협정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개인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부정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어 보상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해산)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p. 233)

3.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민간의 협동적 연구가 수행한 역할

일본 검정 교과서 집필자의 상당수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 교육자이며, 『한일역사 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연구회 아카시 서점 2007년)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未来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한중일 3 국 공통 역사교재위원회 고분켄 2005년) 등을 필두로 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협동적 작업은 국민적 공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후 보상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온 일본의 역사 교육자 · 교사[3]가 수행한 역할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3) 스즈키　도모코(鈴木　智子) (1997) 「『従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歴史地理教育』12월호 pp. 108-114, 가토 고메이(加藤 公明)(1999) 「リレー討論 従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教育』 49호 pp. 115-124,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 正一郎) (2001) 「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歴史地理教育』7

4.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 수행한 역할

일본의 역사 교육사를 되돌아 볼 때,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三郎)가 위헌, 위법한 검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1965년의 1차 소송을 제기한 이래 32년에 걸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교과서 소송, 특히 제3차 소송이 수행한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8월 2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은 '일본군의 잔학행위' '난징대학살' '소모타이(草莽隊)'등의 기술에 대한 검정의 위법성과 더불어 '731 부대'의 검정 의견에도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했다[4].

1980년 검정, 1983년 검정에서 이에나가는 '일본군은 난징 점령 때, 다수의 중국군민을 살해했고, 일본군 장병 중에는 중국 부인을 욕보이거나 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각주에 '일본군은 도처에서 주민을 살해하거나 촌락을 불태우고 부인들을 욕보이는 등 중국인의 생명 · 정조 · 재산 등에 대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첨가했는데, 검정은 '중국 부인을 욕보이고' '부인을 욕보이고' '정조'의 각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을 교부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은 '학계의 상황에 근거해 판단하면, 검정 당시에 연구자 사이에서는 난징 점령 시 일본군 장병이 중국인 여성에게 범한 정조 침해 행위에 대해 특히 비난을 받을 만큼 다수이고, 잔학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다수의 중국 군민에 대한 살해 행위와 더불어 난징대학살로 불리며,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 발생한 특징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문부성의 검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대법원 1997년 8월 29일 판결은 관동군 안에 세균전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731 부대'라는 군대가 존재해 생체 실험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월호 pp. 54-57, 쓰카모토 노보루(塚本 登) (2007) 「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 - 高校生は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歴史地理教育』9월호 pp. 52-55, 히라이 미쓰코(平井 美津子)(2013) 「歴史教育の現場から：「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研究』No, 901 2013년 pp. 27-34

4) 도쿄 지방 재판소 1989년 10월 3일, 도쿄 고등 재판소 1993년 10월 20일

설은 이미 검정 당시 학계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설화하고 있었다.'라며 검정 의견은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의의[5)]

1990년대 이후,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80건 가까이에 이른다. 전후 보상(배상) 청구 소송 중 원고의 호소를 용인(일부 용인)한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삭제된 것을 포함하면, 야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1998.4.27, 도쿄 지방 재판소 2001.7.12, 교토 지방 재판소 2001.8.23,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2001.12.26,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4.26등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 시효나 민법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 조약 등에 의한 배상청구권 포기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정은 비록 재판의 승패로 결부되지 않더라도 사실을 앞에 두고 입법 조치나 화해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 측의 화해 대응, 정부 시책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후 보상문제 관련 재판에 기재된 사실 인정의 일부를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원고명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또 지면 관계상 내용은 요지만 실었다).

5.1 후쿠오카 고등 재판소 1999.10.1(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1997.12.2) 한반도로부터의 강제 연행과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1942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 다수의 조선인 노역자를 일본 내지로 이입시켰다. 1944년 8월에는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각의 결정)에서 국민징용령에 따른 일반 징용을 한반도에서도 발동시켰다. 판결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징용이라고 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기업에 의한 여관이나 차 안에서의 대응 또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관리인 순경이 연행을 하고 감시한 행

5)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越境する歴史教育』2004년 6월 교육사료출판회 pp. 45-71

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 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1944년 12월 하순, 부산부장(일본 관리)이 발한 징용 영서가 송달되었으나 남겨질 가족이 걱정되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수, 순경(일본 관리)이 모친을 찾아가 징용 영서를 받았으면서도 도망친 경우에는 일체의 생활필수품이 배급되지 않는 다고 위협하며 안내를 했다. A는 반항해봤자 얻어맞을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체념하고 순경을 따라 그대로 군용수송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 부두 가까이의 여관까지 연행되었지만 도망 방지를 위한 감시역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관부 연락선에 올라 선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상시 감시를 받으며, 시모노세키까지 연행되어 행선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기차로 나가사키까지 연행되었다. 기차 입구에는 감시역이 서있었고, 창의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다. 나가사키 역에는 일본기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A등은 비로소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들었고 직원의 감시 하에 기숙사까지 행진을 했다. 조선에서 온 징용공의 외출은 허가제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징용공 여덟 명 내지 열 명이 한 방에 넣어졌고 식사는 충분치 아니하였다. 징용공 중에는 영양 실조에 걸리거나 이질에 걸린 자도 있었다. 작업 중에 사망한 징용공이 있었던 외에 A자신도 바다에 빠졌다. 1945년 8월 9일, 하수구에 몸을 숨겼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마간 기절하였다. 이듬 날, A는 기차를 갈아타고 나가사키를 탈출해 8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5.2.1 도쿄 고등 재판소 2000.11. 30 종군위안부

판결은 병사에 대한 강제 매춘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군의 행위는 집단적, 조직적 강간이라고 하였으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 국적의 여성에 대하여 만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하여 기각하였다.

'B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1938년경, 업무 내용이 성과 관련되고, 심지어 추업(醜業)인 점 등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서 일할 것을 승낙했고, 다수의 여

성과 함께 무창의 일본군 육군 위안소에 끌려갔다. 울면서 저항했으나 군의관에 의한 성병 검사를 받고, 뜻에 반하여 종군위안부로서 일본 군인의 성행위 상대를 하게 하였다. 그것이 싫어 도망하고자 하면 위안소의 초바(帳場) 담당자 등에게 다시 끌려와 맞거나 발로 차는 등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군인을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 위안소에 오는 시간대는 병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이 저녁부터 오후 9시까지, 장교가 그 이후로 정해져 있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군인을 상대하여야 했다. 때로는 일요일은 오는 군인 수가 많았고, 통과 부대가 있을 때에는 다수의 군인이 방문해 그 상대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군인 중에는 사소한 일로 격앙해 군도를 들이대거나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자도 있었다. B는 초바 담당자, 군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맞다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옆구리에 군인이 비수를 들이대 칼자국이 남아 있다. 무창의 위안소에서는 왼팔에 문신을 당해 현재도 남아 있다. 군인은 피임 도구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도 있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제2차 대전 종료 시까지 위안부로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을 상대로 추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5.2.2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종군위안부

'C는 1940년 무렵, '일본의 공장에 돈 되는 일이 있다' 등의 권유를 받아 부산에서 배를 이용해 대만의 위안소에 끌려가 거의 매일 일본인이나 대만인의 민간인 외에 수많은 일본 군인을 상대하다가 걸린 병 때문에 오른쪽 대퇴부에 수술자국이 남았고, 2, 3차례 위안소를 이동하였다. 식사는 1일 2식으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외출 또한 부자유스러웠다. 전쟁 후 귀향하여 혼인을 하고 네 자녀를 두었으나 위안소에 대한 일은 근친자에게도 숨겼다. 현재는 폭력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한다.'

5.3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여자정신대

'D는 1944년 봄 무렵, 국민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일본에 가면 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권유했고,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에 인솔되어 도야마시에 도착하였다. 공장에서는 주린 배를 참으며 회전하는 금속봉을 절단해 비행기의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담당하였고, 1일 6000~8000개의 할당량이 끝나지 않을 때는 잔업도 하게 하여 작업 중에는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2회 수술을 하였다. 공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고, 정신 안정제를 먹고 쉬던 차에 1945년 7월 무렵 북한으로 끌려가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종전이 되었다.'

5.4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5. 1 중국인 강제 노역

화북 정무위원회 및 각 행정장관은 노무 동원총부를 조직하여 노역자 강제 징수 계획을 세우고 화북노공협회와 일본군정당국이 협력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행정 공출의 실태는 강제 징수였다. 외무성 보고서는 사망 원인과 질병 원인에 대하여 총 사망자수 6830명 가운데 질병사는 6434명(92.4%), 상해사는 322명(4.7%), 그 외 자살자가 41명, 타살자가 33명이다. 그 중 배 안에서 사망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자는 583명, 일반 질병에 의한 자는 3889명,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자는 1962명이다. 상해사 중 공상사는 267명, 사상사는 55명이다. 공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탄갱 및 발전소 건설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원인은 낙반 낙석, 측벽 붕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아 71명, 차량에 의한 경우가 30명, 가스 폭발은 20명이다. 사상사 55 명 중 35명은 전재사이다.

5.5 도쿄 지방 재판소 2002.8. 27 세균전

판결에는 '역사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상세한 사실의 확정은 최종적으로는 무제한의 자료에 근거한 역사학, 의학, 역학, 문화인류학 등의 관련 제과학에 의한 학문적 고찰과 논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내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당 법원으로서 본건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구 일본군에 의한 중국 각지에서의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에서 말하는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사용'에 해당된다. '세균전과 관련하

여 헤이그 육전 조약 3조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1936년에 편성된 관동군 방역부는 관동군 방역 급수부로 개편되었고 이윽고 731 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 부대는 1938년 무렵 이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 교외의 핑팡(平房)에 광대한 시설을 건설하여 본부를 두고, 그 밖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부대의 주된 목적은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제조로, 핑팡 본부에서 이루어졌다. 또 중국 각지로부터 항일운동의 관계자 등이 731 부대로 이송되어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 731 부대나 1644 부대 등에 의해 중국 각지에서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세균전)을 이루어졌다.'

'1941년 11월 4일, 731 부대의 일본 군기가 창더(常德) 상공에 날아와 페스트 감염 벼룩과 면, 곡물 등을 투하하였고 현성 중심부에 낙하하였다. 11월 11일에는 페스트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약 2개월 사이에 1차 유행으로 현성 지구에서 8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약 70일의 간격을 두고 1942년 3월부터 2차 유행이 발생하여 6월까지 현성 지구에서 총 34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창더 시가지의 페스트가 농촌부로 전파되면서 각지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창더 관련 페스트에 의한 사망자는 7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6 전후 보상 재판 판결의 의의와 역할

전후 보상 재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를 근거로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는 판결도 나와 있다. 판결이 기업과의 화해를 촉구하고, 현실적으로 화해가 성립되는 케이스 또한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한데 의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하여 미나미 노리오(南典夫)(2004)는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와 가해의 사실, 권리행사를 둘러싼 사정 등의 '사실적 시행착오'가 일률적으로 청구를 물리치는 '제소의 적용 제한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수

령이다'[6]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일본의 사법이 확인하고 공표한 사례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6. 역사 박물관 등의 전시해설에서의 실증적 역사 기술의 확충(총괄)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정치 주도로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국간 외무성이 대응한 한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1차 2005년, 제2차 2010년)[7],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2010년)[8] 등의 성과 또한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본 발표의 마지막으로 3국의 많은 국민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전시, 관광용 자료 등에 대한 역사 전시의 해설, 특히 식민지화 프로세스, 종군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개 사항 해설에 대하여 자국민의 기존 지식, 이해를 전제로 한 상징적 전시에서 벗어나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에 의한 국외 방문자를 전제로 한 설명 기술로의 개선, 구체적으로는 3국의 역사 연구 현황, 사실 인정의 비교, 교과서 기술의 비교를 가미한 역사적, 학술적 해설을 중시하는 전시 해설로의 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하는 2008년에 전시 확인에 근거한 지적이며,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일본어판 2004년 개정판)에 기재된 문구를 토대로 한 지적이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의 전시 담당자가 참가한 심포지엄(2010년 개최)에서 지적된 내용[9]이므로, 이미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그 경우에는 양해해주기 바란다.

---

6) 미나미 노리오(南 典夫) 「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法律時報』일본평론사 2004년, p. 12
7)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8)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9)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한국국립박물관·도호쿠 아시아역사재단 2010년 8월 pp. 75-83 (2010년 08월 12일-13일 국제 심포지엄(서울국립박물관).

6.1 '을미 조약' 관련 재현 모형

일본측 자료 등에 의한 일본측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교권 박탈이 군사적 압력 하에서 강요당한 사실은 하야시 곤스케(林 権助)『회상기(回想記)』, 니시요쓰쓰지 긴타카(西四辻公堯)『한국외교비화(韓国外交秘話)』, 『대한리년사(大韓李年史)』, 이토 히로부미(伊東博文)의『복명서(復命書)』 (일본외교문서) 등에 의해, 예전에는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일본의 한국 병합(日本の韓国併合)』 (태평 출판사 1966년), 근래에는 운노 후쿠주(海野福寿) 『한국 병합(韓国併合)』 (이와나미 신서 1995년) 등에 기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실행 계획을 결정(1905년 10월 27일)하고 한국 주재군 군사령관에게 명령, 일본군을 한성에 종결시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보호권 설정을 통지함으로써 열국에 사정 설명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2) 한국 황제는 시종 외교권의 위양을 거부하였으나, (3) 이토히로부미가 한성에 입성(11월 9일)하여 보병 1대대 · 포병 중대 · 기병 연대가 왕궁 앞과 종로에서 군사훈련을 통한 시위를 하고, 일본병이 시내를 순회하는 가운데(11월17−18일) (4) 일본병으로 가득 찬 경운궁에 이토가 군사령관, 헌병 대장과 참내하여 황제가 최고회의를 거부하였기에 대신을 심문하였다. 이토는 각 대신의 비동의를 '반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5) 오후 11시, 하야시 공사와 박 외상이 협약안에 기명, 외상이 직인을 날인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재현 모형 전시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 장면의 재현인데,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설은 생략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문자들이 사실로써 납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강제적 병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6.2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의 경우, 지역에서 트럭으로 납치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납치 당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

계는 한국국민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상징적 이미지를 얻는데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전시나 해설 등에 일본에서의 판결 사실 인정 부분(본 발표 5)이나 한국 및 일본의 교과서 기술(일본에 대해서는 본 발표 2)을 추가한 해설 전시가 검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 사실 공유에 공헌

영화 '피의 일요일'(2002)은 1972년 1월 30일(일요일), 북아일랜드 델리 시에서 발생한 가톨릭계 주민의 공민권, 억류(Internment)에 대한의 항의 행동을 무력 탄압해 1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영국 정부는 자기 방위라고 설명하면서 북아일랜드 전체를 직접 통치 하에 두었다. 사건은 영국과 IRA의 처참한 살육과 항쟁을 거쳐 38년이 경과한 2010년 6월 15일, 카메론 총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사죄를 했다. 원작자인 돈 마랑은 이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이다' '사실 해석이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화해 프로세스가 틀렸다[10]'고 지적한다.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의 역할은 단기적 해결을 전망할 수 없을 때에도 역사적 사실의 공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장래 화해를 목표로 연구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사실의 확인을 반복하며 사회에 제공해 나가는데 있다. 이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자 한다.

주요 저서 등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일본도서센터 2004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아카시 서점 2006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시즈오카 학술출판 2017년

10) 돈 마랑의 말은 본 작품 DVD에 수록

발제문

歴史的対立の解決に向けて
－日本の視点から－

梅野正信
上越教育大学

1. 問題の所在と学術的方途

本報告は、①日本、中国、韓国の間の歴史と歴史教育をめぐる対立点に関わる歴史教科書記述は、日本政府の方針を反映して修正を求められたが、検定教科書と執筆者である歴史研究者の尽力により一定の記述が確認できること、②①には主に民間の協働的作業、家永教科書訴訟の経験と成果をふまえた日本側の歴史的経緯があること、③政府関与による協同的作業を経ても政治的な対立点は改善の方向を見いだせないでいるが、各国の歴史展示等において、日本の判決に記載された事実確認や、学術的記載等を活用して解説を改善していくことは、歴史研究者、歴史教育者の役割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また、このことを通して、日本人を含む3国の国民による歴史的事実の受容プロセスを改善することの意義を指摘する。

2. 日本における歴史教科書の現状

日本における歴史教科書、近現代史、とりわけ植民地統治期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改善の兆しはみえない。「教科書、政府の主張反映　集団的自衛権や慰安婦問題　高校向け検定」（2016年03月19日朝日新聞）、「教科書、強まる文科省関与」（2017年3月25日朝日新聞）は、2016年度の高校歴史等の教科書検定に関して、2014年1月に改訂された検定基準の三要件（①政府見解がある場合はそれに基づく②特定の事柄を強調しすぎない③近現代史で通説的な見解がない数字などの記述では諸説あることを示す）が適用されと報じた記事によれば、南京大虐殺（南京事件）の犠牲者数で、「「日

本では数万～十数万以上など諸説あり」「中国政府は30万以上を主張」と書いも、「通説的な見解がない」ことを明確にするよう求められたと報じている。また、日本史Aでは、「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人数を「数千人」としていたが、「通説がない」と指摘され「数百人～数千人」に変えた」こと、「中国人の強制労働をめぐる戦後補償の記述に「各国との条約で解決済み」と追加した」こと、日本史2冊に対し、「慰安婦問題に関する15年末の日韓合意を書くよう求める検定意見がついた」こと、領土関連の記述は「現行の1.6倍の分量になった」ことなどが報じられた。

しかし下記表1 表2からは、検定教科書においても、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が一定程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表1 教科書における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2017年度使用中学校歴史教科書）[1]

東京書籍	（本文）日本は、植民地や占領地でも、厳しい動員を行いました。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意思に反して日本に連れて来られ、鉱山や工場などで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こうした動員は女性にもおよび戦地で働かされた人もいました。（p. 227）
教育出版	（本文）戦争が総力戦となるなか、日本国内ばかりでなく、植民地や占領地の人々も、労働力の兵力として動員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労働力の不足を補うために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日本の鉱山や工場に連れてこられ、低い賃金で厳しい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p. 227） （コラム）先の戦争や植民地支配をめぐる補償の問題、領土問題などで対立も生じています。日本の立場をふまえたうえで、相手の考えを尊重し、武力に頼らず対話と法に基づいてその解決をめざ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p. 259）
帝国書院	（本文）戦争によって日本国内の労働力が不足すると、日本は企業などで半ば強引に割り当てを決めて朝鮮人や中国人を集め、日本各地の炭鉱・鉱山などに連れて行き、低い賃金で厳しい労働に就かせました。（p. 227） （本文）日本は、東アジアの国々の間には、歴史認識や領土をめぐる問題もあり、関係改善に向けて努力が続けられています。（p. 259）
育鵬社	（本文）戦争の末期は、朝鮮や台湾にも徴兵や徴用が適用され、人々に苦しみを強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の鉱山や工場などに徴用され、厳しい労働を強いられる朝鮮人や中国人もいました。（p. 238）
清水書院	（本文）むりやり連れてきた朝鮮人・中国人や連合国軍の捕虜も炭鉱などで働かせた。（p. 241）） （本文）アジアの近隣諸国とは、関係が深まる一方で、過去の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への反省などをめぐって摩擦が生じた。こうした中、1995年に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反省し平和の理念と民主主義を進めていくとした首相の談話が発表された。（p. 270）

[1] 山元研二・梅野正信「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37巻第1号 表1は山元研二の作成による。

学び舎	（本文）また、日本軍は、東南アジア各地から人々を労務者として集め、飛行場建設などの肉体労働にかり立てました。1942年、タイからビルマに向かう鉄道を建設するため、ビルマから10万人、タイから4万人、マラヤとジャワ島から8万人など、多くの労務者を熱帯のジャングル地帯の建設現場に送り込みました。1年あまりの突貫工事で、鉄道は完成させましたが、重労働で多くの労務者が過労や病気で倒れ、多数の死者を出しました。この工事では、イギリス軍などの捕虜6万人も労働させられました。インドネシアでは、戦後も「ロームシャ」という言葉が語られ、苦しい肉体労働の記憶が残りました。（p. 239） （コラム）戦争が長期化すると、日本政府は、敗戦までに約70万人の朝鮮人を国内の炭鉱などに送り込んだ。長時間の重労働で、食事も不十分だったため、病気になったり、逃亡したりする人も多かった。さらに、志願や徴兵で、多数の人々が日本軍に動員された。また、軍属として、日本の占領地にある捕虜収容所の監視人や土木作業などを命じられた。朝鮮からは軍人20万人以上、軍属約15万人、台湾からは軍人約8万人、軍属約12万人にのぼった。一方、朝鮮・台湾の若い女性の中には、戦地に送られた人たちがいた。この女性たちは、日本軍とともに移動させられ、自分の意思で行動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p. 239） （本文）1990年代になると、人権を求める世界の流れのなかで、中国人の戦争被害者と遺族が、個人として、謝罪と補償を求めて裁判を起こしました。しかし、いずれの裁判でも、最終的には日中共同声明などを根拠として、訴えは退けられました。そのような中で、2007年に最高裁判所が判決に、「被害者らの苦痛はきわめて大きく、（中略）被害救済の努力が期待される。」と付言したことを受けとめて、和解をすすめた企業もあります。この企業は、被害者に謝罪して和解金を支払い、記念碑を建て、強制連行・強制労働の事実を後世に伝える取り組みを続けています。（p. 281） （註）河野洋平官房長官談話（資料）の解説　現在、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資料は発見されていない」との見解を表明している。 （コラム）1990年代、世界では、戦時下や植民地支配下での人権侵害を問い直す動きがすすんだ。2001年に南アフリカで開かれた、国連主催の会議で、奴隷貿易や奴隷制度、植民地支配の責任が初めて問われた。アメリカ政府とカナダ政府は、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系アメリカ人を強制収容所に入れたことを謝罪し、被害者に補償を行った。2013年、イギリス政府は、植民地だったケニアで独立を求めた人々を収容所に入れ、拷問・虐待した問題で、被害者に補償を行うことを表明した。1991年の韓国の金学順の証言をきっかけとして、日本政府は、戦時下の女性への暴力と人権侵害についての調査を行った。おして、1993年に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示す政府見解を発表した。このように、東アジアでも戦時下の人権侵害を問い直す動きが進んだ。アメリカ・オランダなど各国の議会もこの問題を取り上げた。現在、世界各地の戦時下の暴力や人権侵害の責任が問い直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p. 281）

表 2　教科書における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2017 年度使用高校日本史教科書）[2]

新日本史B 山川出版社	（本文）多数の朝鮮人や占領地域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て鉱山などで働かせ、さらに朝鮮人女性などの中には従軍慰安婦になることを強要されたものもいた。（p. 325）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本文）日本の植民地であった朝鮮・台湾の人々や、日本の占領下にあった中国の人々が日本本土に連行されて工場・鉱山などで労働させられた。（p. 150）
日本史B 清水書院	（本文）国内でも労働力不足の深刻な鉱山や土木建築業では多数の朝鮮人に加え、占領地域の中国人も強制連行し、酷使した。（p. 228） （註）敗戦までに朝鮮人は約80万人、中国人は約4万人の人々が、日本に連行された。1945年6月に秋田県花岡鉱山で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約900人が蜂起し、420人が虐殺される事件がおきた。（p. 228） （コラム）労働者の強制動員や慰安婦の調達も行われた。（p. 253）（資料）　村山談話 （本文）安倍晋三内閣　8月には、「植民地支配」「侵略」といった村山談話などの文言をもりこんだ戦後70年の「安倍談話」を閣議決定し、12月に日韓外相会談で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は政府の責任を認め、韓国が設立する財団に10億円を拠出することを表明した。
高校日本史B 実教出版	（本文）経済面では国家総動員法などを適用し、軍需生産を行い、国民徴用令を適用し、多くの人々を工場や炭鉱などへ強制的に連行した。（p. 213） （註）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1939年からは集団募集で42年からは官斡旋で44年からは国民徴用令によって、約80万人の朝鮮人を日本内地や樺太・アジア太平洋地域などに強制連行した。また、同期間に415万人の朝鮮人を朝鮮内の鉱山や工場に、11万人を軍隊内での労務要員に強制連行した。さらに、約4万人の中国人も日本などに強制連行した。さらに、約4万人の中国人も日本などに強制連行した。過酷な労働の中で、多くの死者を出し、秋田県では中国人の蜂起もおこり、約420人の死者を出した。（p. 213） （註）シンガポール・マレー各地の華人（在外中国人）を数万人、フィリピンの一般住民約９万人を虐殺した。また、ビルマ・タイ・ジャワ（インドネシア）などでは、過酷な労働動員を行った。（p. 213） （本文）東南アジアでは、軍政のもとで石油・ゴム・食糧などを徴発し、軍票などを乱発したため、悪性のインフレーションが進んだ。さらに、労働者の徴発や抗日運動に参加した住民の虐殺も行った。（p. 213）（本文）　日本の軍事的役割の拡大の動きは、アジア各国に警戒感を与えた。その背景には、戦争責任、戦後補償問題の未解決がある。1990年代に入ると、慰安婦や強制連行などについて、日本に補償を求める動きが噴出した。1991年、掃海艇派遣の最中に東南アジア諸国を訪問した海部俊樹首相は、侵略への謝罪を表明し、1993年には細川護熙首相がはじめて首相として「侵略戦争」と明言した。戦後50年の1995年には村山富市首相が談話で植民

[2] 山元研二・梅野正信「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 37 巻第 1 号　表 2 は山元研二の作成による。

	地支配と侵略への反省を表明した。しかし、戦後補償問題の解決は十分ではなかった。また、日本企業のアジアへの進出が現地住民の不信を招いている例が指摘された。（p. 247） （註）1993年8月5日談話では、「甘言、強圧による等、本人の意志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慰安所における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にあったと述べている。（p. 247）
日本史B 実教出版	（本文）朝鮮・台湾・「満州国」でも皇民化政策と戦争への動員がなされた。（p. 316） （註）1942年2月15日シンガポール占領後日本軍が抗日的とみなした中国系住民数万人をシンガポール・マレー各地で虐殺したのはその代表的な事例である。また、アジア・太平洋戦争下で日本本土に連行され、強制労働させられた中国人は約4万人を数え、うち約7、000人が死亡した。また、1945年6月秋田県花岡鉱山で酷使に耐えかねた中国人労働者が蜂起したが、残酷に鎮圧された。（花岡事件）（p. 317） （本文）戦後補償問題の未解決や復古的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に対する危惧があり、歴史認識をめぐる対立も続いているからである。日本政府は、1993年に、慰安婦問題での日本軍関与を認め、元慰安婦の人々への「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た。（河野官房長官談話）戦後50年目にあたる1995年に、国会で戦後50年決議がなされ、村山首相の談話が発表された。しかし、その後も日本政府は、アジア・太平洋戦争について侵略的事実を認めても、戦争全体を侵略戦争と性格づける態度を明確にしないまま現在にいたっている。（pp. 354-355） （本文）日本がアジア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る」ためには、過去の侵略を反省し慰安婦問題や強制労働の補償問題などを誠実に解決するとともに経済力をいかしつつ、東アジアの平和的地域共同体形成への協力など、アジア諸国民の真の共存をめざす一貫した努力が必要である。（p. 358）
新日本史A 実教出版	（本文）日本政府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約80万人の朝鮮人を日本内地や樺太の軍需工場や炭鉱などに強制連行しました。また、中国人も強制連行しました。（p. 104） （註）朝鮮では、1939年から集団募集が始まり、42年に官斡旋、44年には国民徴用令によって多くの朝鮮人が内地・樺太などに連行されました。また、1942年の東条内閣の閣議決定により約4万の中国人も日本に強制連行されました。彼らは、炭鉱や鉱山、ダム工事現場などでの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ため、多くの死者が出ました。戦争末期、秋田県では中国人の蜂起事件も起きました。（花岡事件）（p. 105） （本文）20世紀の終わりに、戦後補償をめぐる裁判が多く起こされます。アジア・太平洋戦争時のできごととそこに発生する問題に対し、被害者たちが声をあげたのです。植民地からの強制連行・強制労働や「慰安婦」をめぐる訴訟がなされました。（p. 163） （コラム）サハリンには、朝鮮から来た人々も住んでいました。敗戦後、日本人は本土へ引き揚げましたが、韓国・朝鮮人は引き揚げることができず、そのまま住み続け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p. 182）

新選日本史 B 東京書籍	（本文）兵力や労働力の不足を補うため、1943年には朝鮮に、1945年には台湾にも徴兵制が実施された。また、国民徴用令によって朝鮮や台湾から、さらに中国の占領地からも、多くの人々が、労働力として日本に連行された。これらの人々は日本の軍需工場や鉱山などで過酷な労働条件のもとに働かされ、厳しい生活の中で多数の死者を出した。（p. 228） （註）徴用令の実施に先立つ1942年以来、集団的に連れてこられた朝鮮人は約70万人といわれる。また、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植民地や占領地の女性も少なくなかった。（p. 225） （本文）太平洋戦争が終わって半世紀以上を経た今日もなお、アジア・太平洋戦争地域から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が問われている。日本政府に謝罪と補償が求められているのは、慰安婦・強制連行・ロームシャ・韓国・朝鮮人と台湾人の元日本兵・インドネシア人兵補、軍票などの問題である。これに対し、政府は国家補償について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や各国と個別に結んでいた２国間協定で解決済みとの立場を一貫して主張し、個人への新たな補償を否定してきた。　慰安婦問題では、1995年に「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が発足し、償い事業が実施された。（2007年解散）　その一方で、政府のこうした対応に対して日本政府の責任の明確化と補償を求める動きが各地で起こった。（p. 233）

3 歴史的事実としての記述に民間における協働的研究の果たした役割

日本の検定教科書執筆者の多くは歴史研究者と歴史教育者であり、『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歴史教育研究会、歴史教科書研究会　明石書店 2007 年)『未来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 3 国の近現代史-』(日中韓 3 国共通歴史教材委員会 高文研 2005 年) 等をはじめとする歴史研究、歴史教育における協働的作業は、国民的な共有にまでは至っていないとしても、少なくとも教科書記述については、一定の影響を与えるものとな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また、従軍慰安婦問題をはじめ戦後補償問題等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日本の歴史教育者・教師[3]の果たした役割も評価したい。

4 歴史的事実としての記述に家永教科書訴訟が果たした役割

日本の歴史教育史を振り返るとき、家永三郎が違憲、違法な検定で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1965 年の 1 次訴訟提訴以来、32 年余りにわたり国に損害賠償を求めてた

[3] 鈴木智子(1997)「『従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歴史地理教育』12 月号 pp.108-114、加藤公明(1999)「リレー討論 従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教育』49 号 pp.115-124、高橋正一郎(2001)「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歴史地理教育』7 月号 pp.54-57、塚本登(2007)「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高校生は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歴史地理教育』9 月号 pp.52-55、平井美津子(2013)「歴史教育の現場から：「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研究』No,901 2013 年 pp.27-34

教科書訴訟、とりわけ第3次訴訟の果たした役割も忘れてはならない。

1997年8月29日、最高裁は、高裁判決は、「日本軍の残虐行為」「南京大虐殺」「毒ガス隊」等の記述に対する検定の違法性とともに、「731部隊」の検定意見にも裁量権の逸脱を認定した[4]。

1980年検定、1983年検定では、家永は、「日本軍は南京占領のさい、多数の中国軍民を殺害し、日本軍将兵のなかには中国婦人をはずかしめたりするものが少なくなかった。」と記述し、脚注に「日本軍はいたるところで住民を殺害したり、村落を焼きはらったり、婦人をはずかしめるものなど、中国人の生命・貞操・財産などにはかりしれないほど多大の損害をあたえた」と加えたが、検定は、「中国婦人をはずかしめ」「婦人をはずかしめ」「貞操」の各部分を削除する修正意見を付した。しかし高裁判決は「学界における状況に基づいて判断すると、検定当時における研究者間においては、南京占領に際して日本軍将兵が中国人女性に対して行った貞操侵害行為について、特に非難されるほど多数で、残虐であったとするのが支配的な見解であり、多数の中国軍民に対する殺害行為とともに南京大虐殺と呼ばれて日本軍の南京占領に際して生じた特徴的な事件としてとらえ論じられているのが一般的である。」として、文部省の検定は、「裁量権の範囲を逸脱した違法なものである」との判決を下した。

さらに最高裁1997.8.29は、関東軍の中に細菌戦を行うことを目的とした「731部隊」と称する軍隊が存在し、生体実験をして多数の中国人等を殺害したとの大筋は、既に検定当時の学界で否定するものはないほど定説化していた。」として、検定意見は「看過し難い過誤があり、裁量権の範囲を逸脱した違法がある」との判決を示した。

5. 日本の戦後補償裁判で確認された歴史的事実の意義[5]

1990年代以降、外国籍の原告による日本政府や日本企業を訴訟対象とした裁判は80件近くに及ぶ。戦後補償（賠償）請求訴訟のうち原告の訴えを容認（一部容認）した判決は、上級審で取り消されたものを含めると、山口地裁下関支部1998.4.27、東京地裁2001.7.12、京都地裁2001.8.23、長崎地裁2001.12.26、福岡地裁2002.4.26等にすぎない、他の多くは、国家無答責の法理、時効や民法七二四条後段の除斥期間、条約等による賠償請求権放棄等を理由に棄却されている。　しかし事実認定は、たとえ裁判の勝敗に結びつかなくとも、事実を前にしての立法措置や和解の根拠とされている。また企業側の和解への対応、政府の施策に影響を与えてきた。このことを過小に評価すべきではない。

戦後補償問題関係の裁判に記載された事実認定の一部を下記に示しておきたい。

---

[4] 東京地裁1989.10.3、東京高裁1993.10.20

[5] 梅野正信「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越境する歴史教育』2004年6月教育史料出版会 pp.45-71

（原告名はアルファベットで示している。また紙幅の関係で内容は要旨にとどめている）

5.1 福岡高裁 1999.10.1(長崎地裁 1997.12.2) 朝鮮半島からの強制連行と長崎での被爆

1942年2月13日、日本政府は「朝鮮人労務者活用に関する方策」を閣議決定し、これに基づいて多数の朝鮮人労働者を日本内地に移入する。1944年8月には、「半島人労務者ノ移入ニ関スル件」（閣議決定）が国民徴用令による一般徴用を朝鮮半島にも発動させた。判決は、国民徴用令に基づく徴用としても到底許容されるものではなく「違法である」と判じ、日本企業による旅館や車中での対応も同様に「違法」とした。また、国の官吏である巡査が連行し、監視した行為は「公権力の行使又は国家の権力作用に当たる」とした

「Aは大韓民国に生まれた。1944年12月下旬、釜山府長（日本国官吏）が発した徴用令書が届けられたが、残される家族のことが心配で悩んでいた。しかし数日後、巡査（日本国官吏）が母親のところへ行き、徴用令書を受け取りながら逃げた場合には一切の生活必需品が配給されないと脅して案内させた。Aは、反抗しても叩かれるだけで効果がないものと思って観念して巡査に従い、そのまま軍用輸送列車に乗せられた。釜山埠頭近くの旅館まで連行されたが逃亡防止のための監視役がいた。翌朝、関釜連絡船に乗せられ、船室から外に出られないように常時監視されて下関まで連行され、行き先も教えられないまま汽車で長崎へ連行された。汽車の入口には監視役が立ち、窓のカーテンは全部おろされていた。長崎の駅には日本企業の職員が待っていて、Aらは、初めて造船所で働くことを聞かされ、職員の監視の下に寮まで行進させられた。朝鮮からの徴用工の外出は許可制で、許されないこともあったし、一般に単独で外出することは許されなかった。徴用工八人ないし10人が1部屋に入れられ、食事は十分でなかった。徴用工の中には栄養失調になったり赤痢にかかったりする者もいた。作業中に死亡した徴用工がいたほか、A自身も海に転落した。1945年8月9日、下水溝に身を隠したところで原子爆弾の投下に遭い、しばらく気絶した。翌日、Aは汽車を乗り継いで長崎を脱出し、8月17日、下関から船に乗り釜山に帰り着いた。」

5.2.1 東京高裁 2000.11.30 従軍慰安婦

判決は、兵士への強制売春に従事させた旧日本軍の行為は集団的、組織的強姦であるとしたが、謝罪と損害賠償を請求した韓国籍の女性に対して、仮に損害賠償請求権を取得したとしても民法724条後段の除斥期間により請求権は消滅したとして棄却した。

「Bは、朝鮮半島で生まれた女性である。1938年頃、仕事内容が性に関係し、まし

て醜業であることなど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戦地で働くことを承諾し、多数の女性とともに武昌の日本軍陸軍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た。泣いて抗ったが、軍医による性病検査を受けさせられ、意に沿わぬまま従軍慰安婦として日本軍人の性行為の相手をさせられた。いやになって逃げようとすると、慰安所の帳場担当者らに連れ戻され、殴る蹴るなどの制裁を加えられたため、否応なく軍人の相手を続けざるを得なかった。軍人が慰安所に来る時間帯は、兵士が朝から夕方まで、下士官が夕方から午後9時まで、将校がそれ以降と決められており、連日のように朝から晩まで軍人の相手をさせられた。ことに日曜日はやってくる軍人の数が多く、通過部隊があるときは多数の軍人が訪れ、相手が数十人に達することもあった。軍人の中には、些細なことで激高して軍刀を突きつけたり、殴る蹴るなどの暴行を加える者もあった。B は、帳場の担当者、軍人らから繰り返して殴られるうちに、右耳が聞こえなくなった。脇腹に軍人から匕首で切り付けられた刀傷が残っている。武昌の慰安所では左腕に刺青をされて現在も残っている。軍人は避妊具の使用を義務づけられていたが、使用しない者もあって性病にかかり、妊娠する慰安婦もいた。第2次大戦の終了時まで慰安婦として軍人相手の醜業に就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5.2.2 広島高裁 2001.3.29 従軍慰安婦

「C は、1940 年ころ、「日本の工場でお金になる仕事がある」などと誘われて、釜山から船で台湾の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ほとんど毎日日本人や台湾人の民間人のほか多くの日本軍人の相手をさせられ、かかった病気のため右大腿部に手術痕が残り、2、3回慰安所を移動した。食事は1日2食で十分に与えられず外出も不自由だった。終戦後に帰郷し、婚姻して4子をもうけたが、慰安所のことは近親者にも隠していた。現在は暴力による後遺症のため耳も聞こえにくい。」

5.3 広島高裁 2001.3.29 女子挺身隊

「D は、1944 年春ころ、国民学校の担任教師から、女学生が工場で働いている写真を見せられ、「日本に行ったらもっと勉強ができるし、生け花もできるから、1番先に行くのが1番有利だ」と勧められて、企業から派遣された日本人に引率されて富山市に着いた。工場では、空腹に耐えながら回転する金属棒を切断して飛行機の部品を作る機械を担当し、1日 6000～8000 本のノルマが終わらないときは残業もさせられ、作業中に指にけがをして2回手術した。空襲の恐ろしさで不眠症になり、精神安定剤を飲んで休んでいたところ、1945 年7月ころ北朝鮮へ移動させられ、自宅待機中に終戦となった。」

5.4 福岡地裁 2002.5.1 中国人強制労働

華北政務委員会及び各行政長官は、労務動員総部を組織し、労働者強制徴収計画を立て、華北労工協会と日本軍政当局が協力し、あるいは武力でこれを支援した。行政供出の実態は強制徴収であった。外務省報告書は、死亡原因と疾病原因について、総死亡者数6830人のうち、疾病死は6434人（92.4%）、傷害死は322人（4.7%）、その他自殺者が41人と他殺者が33人である。その内、船中で死亡し、病名不詳の者は583人、一般疾病による者は3889人、伝染病又は伝染性疾患による者は1962人である。傷害死のうち、公傷死は267人、私傷死は55人である。公傷者のほとんど全部は炭坑及び発電所の建設作業に従事していた者で、原因は落盤落石、側壁崩壊によるものが最も多く71名、車両によるものが30名、ガス爆発は20名である。私傷死55名中35名は戦災死である。

5.5 東京地裁 2002.8.27 細菌戦

判決には「歴史の審判に耐え得る詳細な事実の確定は、最終的には、無制限の資料に基づく歴史学、医学、疫学、文化人類学等の関係諸科学による学問的な考察と議論に待つほかはない。しかし、そのような制約ないし問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つつ、当裁判所として本件の各証拠を検討すれば、少なくとも次のような事実は存在したと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て、「旧日本軍による中国各地における細菌兵器の実戦使用はジュネーブ・ガス議定書にいう「細菌学的戦争手段の使用」に当たる。「細菌戦に関しヘーグ陸戦条約三条の規定を内容とする国際慣習法による国家責任が生じていた」と結論付けた。

「1936年に編成された関東軍防疫部は、関東軍防疫給水部に改編され、やがて731部隊の名で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同部隊は、1938年ころ以降中国東北部のハルビン郊外の平房に広大な施設を建設して本部を置き、他に支部を有していた。部隊の主たる目的は、細菌兵器の研究、開発、製造で、平房の本部で行われていた。また、中国各地から抗日運動の関係者等が731部隊に送り込まれ、細菌兵器の研究、開発の過程で各種の人体実験を行った。」

「1940年から1942年にかけて、731部隊や1644部隊等によって、中国各地に対し細菌兵器の実戦使用（細菌戦）が行われた。」

「1941年11月4日、731部隊の日本軍機が常徳上空に飛来し、ペスト感染ノミと綿、穀物等を投下し、県城中心部に落下した。11月11日にはペスト患者が出始め、約2か月間の一次流行で県城地区で8人の死亡患者が出た。約70日の間隔を置いて、1942年3月から2次流行が起き、6月までに県城地区で合計34人の死亡患者が出た。常徳市街地のペストが農村部に伝播し、各地で多数の犠牲者を出した。常徳関係のペストによる死亡者は7643人に上るとされている。」

5.6 戦後補償裁判判決の意義と役割

戦後補償裁判において、裁判の過程で、「条約による請求権放棄」を根拠に賠償を認めない場合も、被害事実そのものは認める判決も出てきている。判決が企業との和解を促し、現実に和解が成立することもまた、裁判所が事実認定を行っていることに依る部分が少なくない。戦後補償裁判にかかわる南典夫(2004)は、裁判で明らかにされていく被害と加害の事実、権利行使をめぐる事情などの「事実の積み重ね」が、一律に請求を退ける「除斥の適用制限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の分水嶺になっている」[6]と指摘する。

歴史的事実として日本の司法が確認し、公表された事例の活用が期待される。

6. 歴史博物館等の展示解説おける実証的歴史記述の拡充（総括）

戦後補償問題をめぐる課題については、教科書問題をはじめ、政治主導で和解が期待できる状況にはない。2国間の外務省が対応した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1次2005年、第2次2010年）[7]、日中歴史共同研究報告書(2010年)[8]等の成果も十分に資するものとはならなかった。

このような現状をふまえ、本報告の最後に、3国の多くの国民が訪れる博物館や記念館展示、観光用資料等における歴史展示の解説、とりわけ植民地化のプロセス、従軍慰安婦問題等、戦後補償問題の個々の事項解説について、自国民の既有知識、理解を前提とした象徴的展示から、歴史研究者、歴史教育者による、国外からの訪問者を前提とした説明記述への改善、具体的には、3国の歴史研究の現状、事実認定の比較、教科書記述の比較を加えた歴史的、学術的解説を重視する展示解説への改善を提案する。

以下は、2008年における展示確認に基づく指摘であり、『独立記念館展示品要録』（日本語版2004年改訂版）の記載をもとにした指摘であるし、独立記念館の展示担当者が参加されたシンポジウム（2010年開催）で指摘した内容[9]であるので、既に変更が加えら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が、その場合はご寛恕願いたい。

---

[6] 南典夫「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法律時報』日本評論社 2004年、p.12

[7]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8]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9] 梅野正信「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韓国国立博物館・東北アジア歴史財団 2010年8月 pp.75-83 (2010年08月12日-13日国際シンポジウム(ソウル国立博物館)。

6.1「乙巳条約」関係再現模型

日本側資料等による日本側の研究では、韓国の外交権剥奪が軍事的圧力のもとで強要された事実は、林権助『回想記』、西四辻公亮『韓国外交秘話』、『大韓季年史』、伊東博文の「復命書」（日本外交文書）などにより、古くは山辺健太郎『日本の韓国併合』（太平出版社 1966 年）、近年では海野福寿『韓国併合』（岩波新書 1995 年）などに記述されてきた。具体的には以下の通りである。

(1)日本政府は閣議で韓国に対する保護権確立の実行計画を決定（1905 年 10 月 27 日）し、韓国駐箚軍司令官へ命令、日本軍を漢城に終結させ、韓国政府の同意が得られずとも保護権設定を通告し、列国に事情説明を行うよう決定した。(2)韓国皇帝は終始外交権の委譲を拒否したが、(3)伊藤博文が漢城に入場（11 月 9 日）し、歩兵 1 大隊・砲兵中隊・騎兵連隊が王宮前や鐘路で演習による示威を行い、日本兵が市中を巡回した（11 月 17-18 日）中で、(4)日本兵に満ちた慶運宮に、伊藤が、軍司令官、憲兵隊長と参内し、皇帝が御前会議を拒否したため、大臣を尋問した。伊藤は各大臣の不同意を「反対と見做すを得ず」と判断し、(5) 午後 11 時、林公使と朴外相が協約案に記名し、外相職印を捺印した。

独立記念館の再現模型の展示は、歴史的資料に基づく歴史的場面の再現であるが、根拠資料をもとにした解説は省略されている。日本をはじめとする諸外国の入館者が事実として納得するに足る資料を加えることで、強制的併合の理解をより容易にすることができよう。

6.2「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関係再現模型

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関係の再現模型では、地域でトラックに拉致する様子が再現されている。ここに登場する拉致当事者と被害者の関係、日本人と韓国人との関係は、韓国民及び植民地統治の歴史を知る者は理解できるが、関係する知識が無いものにとっては象徴的イメージを得るにとどまる。ここでも、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に限らず、日本の戦後補償問題関係の展示や解説等において、日本における判決の事実認定部分（本報告 5）や、韓国及び日本の教科書記述（日本については本報告 2）を加えた解説展示を検討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7 事実の共有に貢献する

映画「ブラディ・サンデー」(2002) は 1972 年 1 月 30 日(日曜日)、北アイルランドのデリー市で起きたカトリック系住民の公民権、インターンメント（Internment）への抗議行動を武力弾圧し、13 名が死亡した事件を取り上げた映画である。イギリス政府は自己防衛と説明し北アイルランド全体を直接統治下に置いた。事件は、イギリスとＩＲＡのせい惨な殺戮と抗争の後、38 年を経て、2010 年 6 月 15 日、キャメロン

首相が政府として謝罪した。原作者のドン・マランは、この作品の意図を説明する中で、「事実だ」「事実の解釈ではない」「結論ではない」「和解のプロセスを間違えている」と述べている。[10]

歴史研究、歴史教育の役割は、短期的解決が見通せないときも、歴史的事実の共有に対する努力を放棄することなく、将来の和解を目指し、研究者、教育者として、歴史的事実の確認を繰り返し社会に提供していくことにある。この作業を粘り強く続けていきたい。

主な著書等

梅野正信『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日本図書センター2004
梅野正信『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明石書店 2006
梅野正信『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静岡学術出版 2017

[10] ドン・マランの言葉は本作品 DVD に収録。

발제문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에 관한 학술적 고찰

판은쉬(範恩實)[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위원

현재 몇 가지 역사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동아시아 각국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학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견해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소위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는 비정상적인 일면이 존재한다. 이 중 일부는 학술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설사 학술적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학술적 범주를 크게 넘어서기도 한다. 일부 갈등 문제는 관련국 간 정상적인 관계 발전을 해치고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이 지역 협력을 전개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황해 주변 정부 간 상호 교류와 평화 발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학술 회의에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을 특별 어젠다로 채택해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빌려 이 문제를 고찰해보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토론해보고자 한다.

소위 역사 인식의 견해차는 주로 학술, 정치, 감정 세 가지 요인이 만들어내지만 문제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동아시아 역사 인식에 대한 견해차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맞춤형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학계에 존재하는 역사 갈등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법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

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邊境)연구소 동북 및 북부 변경연구실 부주임 겸 부연구원

첫 번째는 근현대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료(史料)가 충분하고 역사적 사실 관계가 명확해서 기본적인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위 갈등은 주로 학술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인으로 야기된다. 또 이러한 역사 문제는 현시대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워 현재 동아시아 각국 간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일본과 2차 대전 역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기 판단을 토대로 이러한 갈등의 해법은 정치 협상, 민간단체와 전문 학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관련국의 정치적 인도를 확보하면서 교육과 홍보 분야에서 정확한 인식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성과도 거두었다. 일례로 2002년 3월 한중일 3국의 민간단체와 역사학자들이 난징(南京)국제학술회의에서 3국 중고생들이 사용하는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를 공동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학자 23명, 중국 학자 17명, 일본 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공동편찬위원회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외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진술을 해결하였다. 공동편찬위원회는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3국 학자들이 3년여간 각자 고유의 역사적 인식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와 2012년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적 2권을 출판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2020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공동으로 편찬한 역사책 심지어 역사 교과서가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각 분야의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그 효과도 시간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비롯됐기에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발전한 정치 토양, 사회풍조에 적당히 존재한다면 갈등을 근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반대하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현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시기로, 사료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만 사료 기재에 쟁점이 존재해 학술적으로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이다. 물론, 이 중에는 학술 이외의 요인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거의 명확하기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또한 연대(年代)가 상대적으로 멀어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도 충분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주요 견해차는 학술적 범주 내에 있다.

일례로 청대(淸代) 조중(朝中) 경계선 연구에서 두만강의 원류가 과연 어느 쪽인가에 대한 인식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한중 학계뿐 아니라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청나라에서 국경 조사를 위해 파견한 목극등(穆克登)은 백두산 수원에 일명 '목극등비(碑)'를 세웠는데, 이 비는 청대 조중 간 국경 위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리화쯔(李花子) 저서 '조중 국경의 형성과 특징-명 · 청대를 중심으로'에서 명청 시기 조중 국경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풀어 놓았다. 여기에는 압록강, 두만강 경계의 점진적 형성, 백두산 지역 경계의 형성, 1885년[광서(光緖) 11년] 제1차 국경 확정, 1887년(광서 13년) 제2차 국경 확정이 포함된다. 1712년[강희(康熙) 51년] 목극등이 확정한 경계는 천지 동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원류를 경계로, 동쪽으로 흑석구(黑石溝)와 두만강 원류[홍토수(紅土水)]를 경계로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비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두만강 원류까지 물이 없는 지대에 석퇴(石堆), 토퇴(土堆), 목책(木柵) 등을 설치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2] 니이(倪屹) 저서 '목극등비 원지(原址) 고증'에서는 조선의 관련 문헌을 분석,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 원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石乙水) 혹은 홍토수이며, 정계비의 최초 위치는 백두산 천지 남쪽 기슭이지 소백산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3] 이들 견해와 달리 천후이(陳慧) 저서 '청대 목극등비 최초 위치 및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正源) 고증'에서는 관련 사료 문헌에 따라 두만강 원류의 지리적 외관으로 볼 때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이 소홍단(小紅丹)이라고 간주한다.[4] 2011년 천후이 저서 '목극등비 문제 연구: 청대 조중 두만강 경계 고증'[5]과 리화쯔 저서 '명청 시기 조중 국

2) 『헤이룽장(黑龍江) 사회과학』, 2015년, 제2판
3) 『북방문물』, 2012년, 제2판
4) 『청사(淸史)연구』, 2009년, 제4판
5) 중앙편역(編譯)출판사(2011)

경사(國境史) 연구'[6]가 잇달아 출판되면서 관련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에 초석을 다져 주었다.

1887년 제2차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은 조중 국경의 토문강(土門江)을 현재 중국 경내의 해란강(海蘭江)으로 봐야 하며, 현재 투먼장(圖們江, 두만강의 중국 명칭)은 두만강이고 토문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란강과 두만강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을 '간도 문제'라고 일컫는다. 1887년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이 토문, 두만, 투먼을 하나의 강으로 인정했지만 두만강 원류 분쟁으로 정식 국경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고 '간도 문제'에 갈등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한중 주류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고 주요 갈등이 학술적 차원에 존재할 경우 정치적, 감정적 요인이 개입되더라도 작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러한 역사 갈등 문제는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고증과 판단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상기 두 부류와 달리 상기 두 부류 사이에 있어 생기는 역사 갈등이다. 첫째, 이러한 갈등 역시 학술 연구상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달리 이러한 갈등은 주로 '사론(史論)'으로 불리는 역사적 서술에서 나타난다. 사론 자체는 소위 '견인견지(見仁見智,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다름)'라 연구자의 사관, 역사적 지식, 역사적 재료에 따라, 또 신분지위, 시대배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에 따라 도출하는 결론이 천차만별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 첨예화는 정치적, 감정적 요인의 작용에서 기인하지만 학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정치적, 감정적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평가가 어렵다. 일례로 한중 학계에 고조선, 고구려, 조공/책봉 등 문제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 해소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앞의 두 부류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갈등의 첨예화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기인했더라도 표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의 정치적, 감정적 요인은 학술적 이견과 별개이기에 이러한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최우선

6) 지식산권(知識産權)출판사(2011)

목표를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 맞춰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견이 발생한 학술적 측면부터 손을 대야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론 부류의 이견은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옛말에 '문예에 1등 없고, 무예에 2등 없다(文無第一, 武無第二)'는 말이 있다. 어울리진 않지만 역사 연구에 비유해 보자면, 고증은 무예로 간주할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한 사람이 1등이 되는 반면, 문예에 비유되는 사론의 경우 사료에 근거해 의견을 발표하면 누구의 말이 더 뛰어난지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거나 억측으로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되짚어 보자면, 사론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진리가 하나가 아닌 사론의 특징을 이용해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각자의 결론을 조정하여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상호 이해에 도달한다면 갈등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역사 갈등 상황에서 상호 존중, 상호 이해,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남겨둔다), 미래 지향을 제창해야 한다.

상호 존중. 이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사론의 다른 해석이므로 각자의 주장은 학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학술적으로 문제를 다뤄 질의든, 비평이든 학술적인 범주 내에서 실행하되 비학술적인 말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가장 부적절한 행동이다.

상호 이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의 관점을 분석하고 상대의 관심을 고찰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구동존이. 학술적 법칙을 존중하고 관점의 완전한 일치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은 잃지 않음)한다고 했다. 상대방에게 선회할 여지를 주어야 교류하고 토론하여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다.

미래 지향. 넓은 마음으로 불필요한 역사적 부담을 지지 말아야 한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는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으므로 역사를 지역 협력의 토대이자 우의를 다지는 교량으로 삼아야 한다.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에서 학술적으로 출발한다면 '격렬한 교전'을 거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우의가 깊어질 것이다.

동아시아는 유가(儒家) 문화의 전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유가 도덕 문화의 정수는 중용이며, 중용의 핵심은 적절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용의 도를 역사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면 갈등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한다.

이러한 교류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술 교류를 강화하면 학술적 사상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각자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적절한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학술적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부류의 모든 문제에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론 갈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중 학계가 모두 주목하는 고구려 문제에는 인식상의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고구려 민족의 기원 문제에서 현재 주류 관점은 문헌 기록에 따라 부여 왕자가 남하해 맥(貊) 지역에 건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내용에 의심을 표하는 학자도 있다. 건국 신화의 범주에 속하고 부여의 건국 신화 상황과 비슷해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부여가 남하해 건국한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구려의 평양 천도 초기 한반도 대동강, 재령강 유역으로 들어온 전연(前燕) 이민 관계 문제도 현재 논란이 분분하다. 덕흥리 벽화고분의 벽화와 묵서(墨書)에 전연 이민과 고구려 정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타나 있다. 심지어 일부 고분의 주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악 3호분의 묘주는 동수(冬壽, 연나라에서 고구려로 망명)인가, 아니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인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이는 또한 고구려 민족의 기원과 역사적 위치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초연구를 심화하려면 국제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연구 역량 확대, 연구 시야 확장이라는 이유 외에 이러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 학계에서 이견이 분분한 역사 문제 자체도 국제성을 갖는다. 예컨대 고구려 문제의 경우, 첫째, 관련 문헌 사료가 한자로 씌어졌기에 사료 해독에서 중국 학자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다. 둘째, 고구려 전성기 때 분포 지역이 지금의 중국, 북한 및 한국 북부의 일부분이어서 고고학적 자료가 3개국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3국 학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조공, 책봉 문제에서도 중국 학계의 중심-변방이라는 시각 외에 한일 등 국가 학계의 변방-중심, 제2의 중심-변방의 시각도 필요하다.

셋째, 학술적 논의 과정에서 핵심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세 번째 부류의 역사 갈등을 고찰하려면 일부 핵심 문제에 대한 연구, 특히 각국 학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역사상 정치 공통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는 일반적 의미의 경제,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이해는 현재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학계의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인식에는 중요한 시각이 존재한다. 즉, 일본학자가 고안하고 후에 한국, 중국 심지어 일부 구미 학자가 보강한 '체제론'이 그것이다. 쑹청유(宋成有)의 조사에 따르면, 고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국제 체계 개념 확정에 관하여, 일본학자 니시지마(西嶋)의 '책봉 관계 체제설', 호리 토시카즈(堀敏一)의 '동아시아 세계 체계설', 타니가와 미치오(谷川道雄)의 '고대 동아시아 세계설', 아베 타케오(安部健夫)의 '사방천하설', 쿠리하라 토모노브(栗原朋信)의

'내신(內臣)외신(外臣) 예법설', 후지마 세이타(藤間生大)의 '동아시아 세계설',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淸三郎)의 '화이(華夷) 질서설'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의 '중화제국 조공무역 체계설', 한국학자 전해종의 '조공 제도설', 미국 한학자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의 '중화 세계 질서', 중국학자 허팡촨(何芳川)의 '화이 질서설', 홍콩학자 황즈롄(黃枝連)의 '천조예치(天朝禮治,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의 왕조이고 그곳은 예로써 다스려진다) 체제설', 타이완학자 장치슝(張啓雄)의 '중화세계제국 체계설' 등 관련 학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

현재 학계의 연구로 볼 때 '체제론'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중국의 적극적인 운영 하에 형성된 '체제', '체계', '질서' 나아가 '권(圈)'을 고대 중국지역 패권주의의 발현으로 간주하며, 이를 현재 중국굴기(屈起) 후의 발전 방향에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실질적 의미를 부정한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형식일 뿐 중국의 정치 통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관점은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서방의 식민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동아시아 세계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중국학자는 "조공을 바치면 화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동아시아 조공 체계는 서방의 식민주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식민주의국가가 아니며 주변 지역을 식민지로 구분하여 식민통치를 벌인 적이 없다. 양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조약의무를 지는 정치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명대 이후 형성된 '종번(宗藩, 종주국과 번속국)제도' 또한 서방 식민주의 체계의 종주국과 보호제도와는 구별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번속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조공관계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중국은 더 많은 답례를 통해 이를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의 통상과 문화 교류로 바꾸었다."고 밝혔다.[8] 또 다른 학자는 "중국은 전통적

7) 쑹청유(타이베이), 『동북아 전통 국제 체계의 변천-전통적인 중국과 주변국 및 민족의 상호관계 평론』,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정치외교팀(2002), p.2-3
8) 위정량(俞正梁) 외,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관계』, 푸단(複旦)대학출판사(2000), p.7-8

으로 특유의 '덕을 존중해 무력을 억제하고 덕으로 남을 설득시킨다(尚德抑武, 以德服人)'는 관점으로 주변 국가 및 민족과의 관계를 대해왔다. '덕으로 사람을 설복하면 천자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 황복(荒服)에서도 왕이 나온다(舜舞幹戚, 荒服來王)', '군주가 남풍(南風)처럼 따사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해진다(舜歌南風, 天下大治)'와 같은 생각은 수당(隋唐)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9] 양롄성(楊聯陞)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체 중국 역사를 관찰하게 되면 다양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기에, 정도가 다르게 때로는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에서 만들어진 신화."라고 지적했다.[10]

또 다른 일본학자는 소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책봉 관계의 출현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진북조(魏晉北朝) 시대 바야흐로 중원 정국이 동요하던 때 고대 일본 및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국가는 이 시기에 중원에 조공을 하고 중국의 관직을 얻음으로써 소위 책봉관계를 형성했다. 이들 정권과 중원 왕조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관계 수립은 화하문화(華夏文化)의 유입에 도움이 되었다.[11] 따라서 이때부터 화하문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획득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다. 실제로 왜5왕이든 고구려, 백제이든 대부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관직의 명칭을 정해서 중국 왕조에 승인과 책봉을 요구했다.[12] 이는 소위 책봉 관계가 책봉을 받는 측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한다. 반대로 중국에 있어서는 평화 공존의 국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통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련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여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향후 한중일 등 동아시아 각국 학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는 관련 역사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9) 왕샤오푸(王小甫) 편집 『당나라 전성기 시대와 동북아 정국』, 상하이사서(辭書)출판사(2003), p.3
10) 양롄성, 『역사에서 본 중국의 천하질서』, 싱이톈(邢義田), '식화월간(食貨月刊)' (타이베이) 복간(復刊) 2권 2판 (1972)
11) 參見(일)·이성시,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이와나미(岩波)서점(도쿄)(1998)
12) 호리 토시카즈, 『수당제국과 동아시아』, 한성(韓升)·류젠잉(劉建英), 란저우(蘭州)대학출판사(2002), p.4

둘째,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오늘날 사학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근대 이후 등장한 것이며 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졌고 그 중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국가와 민족이다.

'국가'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의 이해로 풀이하면 국가는 국토, 국민(민족), 정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정된 영토 범위 내에 국민(통상 동일 민족 혹은 동질감 소유)이 살며 국민이 합법적인 정치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인식은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제창한 것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이러한 체계에서 국가의 영토, 국민은 고정화된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영토와 국민은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 서술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밝힐지는 각국 역사학자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다. 이웃 국가 간 역사적 영토의 확장/축소 변화는 상호 영향 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변화를 서술할지는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야기된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지역의 특징에 적합한 역사적 국가 정의를 찾아야 한다.

셋째, 민족과 민족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서구에서 생겨났으며, 유럽 자본계급이 민중을 동원해 봉건통치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뚜렷한 혁명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이후 동양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운동과 결합되어 이러한 혁명적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종족 민족론'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언어, 문화, 체질상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민족 개념이 민족 역사 연구에 응용되면서 민족 '원초론'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 역사를 좁은 틀에 가둬놓았다.

그러나 국제민족사회학, 문화인류학계의 논의에 따르면, 소위 '민족'의 개념에 대해 논쟁 중이다. 초기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문화론이 주를 이뤘고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객관론, 기반론 등이 있다. 프레드릭 바스(Fredrick Barth)는 "문화론자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을 민족으로 간주한다. (1) 생물학적으로 강력한 연속성을 갖는다. (2) 기본적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 형식상의 공개적인 통일을 실현한다. (3) 교류와 상호작용의 영역을 조성한다. (4) 동질감과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구성원 자격을 갖춰야 기타 동일 계층을 보유한 집단과 다른 민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3] '주관적 동일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련 문헌에 대한 사학 연구가 미흡한 경우 문화론(객관론)은 소위 '자체 동일시와 타인 인정'을 공통의 문화적 특징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 국제 민족학계(사회인류학계)는 민족문화론, 원초론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고 주관적인 동일시를 부각시키며 선천적이지 않은 개체적, 주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조정되는 동일시가 민족의 의식 형성, 발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네 가지 민족관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경계론'으로, 민족이 특정 언어, 문화, 체질적 특징의 종합체가 아닌 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주관적인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집단의 주관적 동일시(민족 범위)는 집단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며 집단의 경계선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집단 동일시 가운데 민족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범위의 '집단'이다. 이러한 주관적 민족 범주의 형성으로 특정 정치/경제 환경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자기 호칭 및 민족 기원의 역사로 내부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집단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타인을 배제하며 체질, 언어, 종교 혹은 문화적 특징을 주관적으로 강조한다. 내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의 범위도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혹은 전체 집단의 동일시도 변하게 되었다.[14] 두 번째는 도구론이다. 족칭과 본적은 원초적이거나 없어서는 안 될 신분이 아니라 실리적인 상호작용 환경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직업, 계급, 본적, 성별 등 신분에 의해 불시에 교체되고 집단 동일시를 일종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간주한다.[15] 집단 지도자와 엘리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화 집단을 군중 동원의 장소로 이용하고 그들의 권력과 자원 경쟁의 지원군으로 삼는다. 그들은 집단 군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계급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13) 프레드릭 바스, 『민족과 민족문화』, 가오충(高崇) 역, 쉬제순(徐傑舜) 편집, 헤이룽장인민출판사(2006), p.43
14) 왕밍커(王明珂), 『화하의 주변지역』, 사회과학문헌출판사(2006), p.76-77
15) 저우촨빈(周傳斌), 『개념과 패러다임-중국민족이론 일백년』, 민족출판사(2008), p.212

알기 때문이다.[16] 세 번째는 상상론이다. 두 사람이 상대가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고 서로 인정하면 그들은 한 민족에 속한다. 바꿔 말해 민족은 사람을 창조하고 민족은 사람의 신념, 충성심, 단결의 산물이다. 만일 어떤 유형의 사람(예컨대 특정 영토에 사는 사람, 특정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공동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고히 인정할 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 된다. 그들을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상호 인정이지 이러한 유형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과 구별하는 기타 공통적 특징이 아니다.[17] 네 번째는 집단-상징주의론이다. 이 이론의 제창자는 객관론과 주관론의 편파적인 면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집단-상징주의는 주관적 요인이 집단의 연속, 민족 형성, 민족주의 영향에 미치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객관적'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을 자신의 분석 범위 밖으로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 가치, 감정, 신화, 상징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을 더 중시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과 민족주의 '내재적 세계'에 진입, 이해를 추구한다.[18] 집단-상징주의론은 동일시를 통해 민족을 형성하고 상징을 통해 동일시를 강화하므로 민족 발전의 실제와 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인식을 토대로 민족사 연구 과정에서 객관론, 원초론의 잘못된 영향을 버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세상에 단일 종족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은 거의 없다. 오늘날의 민족은 역사 변천 과정에서 지속적인 집단 융합 발전과 장대하게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융합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원초론에서 출발하는 배타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한다.

2. 일부 역사적 집단은 흥기, 발전, 변화의 과정 후 다른 집단에 융합되며 그 역사는 후자에 의해 지속된다. 그러나 진입을 받아들인 집단의 경우 전체 진입도 있고 부분적인 진입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온 역사 집단의 경우 그 역사는 현재의 민족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

16)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홍이(葉江譯), 상하이세기출판그룹(2006), p.58
17) 어니스트 겔러(영국), 『민족과 민족주의』, 한홍이(韓紅譯), 중앙편역출판사(2002), p.9
18)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홍이, 상하이인민출판사(2011), p.60

넷째, 국제적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성과 유사하게 유럽에도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존재한다. 오랜 기간 유럽 각국도 공동의 역사 서술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성공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발제문

有关化解东亚历史分歧的学理思考

范恩实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东北与北部边疆研究室副主任、副研究员

毋庸讳言，今日东亚各国学界，在对若干历史问题的认识上，存在一定的分歧。在学术研究中，出现认识分歧是正常现象，然而所谓东亚历史分歧，却有着不正常的一面：其中有些并不属于学术范畴，有些虽然属于学术范畴，但其影响却已经大大超出学术范畴。特别值得注意的是，一些分歧问题甚至破坏了有关国家间关系的正常发展，成为东亚各国开展区域合作的重要障碍。我想，这也是今天，在这样一个以加强环黄海周边政府之间的互相交流与和平发展为目标的国际学术会议上，特别安排一个专题，研讨解决历史分歧的策略的原因。借此机会，我也谈一谈对这一问题的思考，提出我的一些想法，与大家共同讨论。

总的来说，所谓历史认识分歧，主要由学术、政治和情感三方面因素造成，但是，在不同问题上，这三方面因素所发挥的作用是有所不同的。在东亚历史认识分歧方面也是如此，因此我们的应对策略也必须是有针对性的，不能一概

而论。我认为，东亚各国学界在历史问题上的认识分歧，可以分作三大类，因此解决历史分歧的途径也应该分别考虑。

第一类，是近现代史上的问题。一方面，这类问题史料充分，史实清楚，基本的结论不容质疑，所谓分歧，主要由学术以外，即政治和情感因素造成；另一方面，这类历史问题距离当代最近，对当代东亚各国间关系影响极大，因此也必须引起我们的足够重视。例如中韩与日本有关二战历史的系列认识分歧。

基于这样的判断，我认为这类分歧的解决，主要是通过政治协商，以及民间团体和专业学者的共同努力，确保有关国家在政治导向上，在教育和宣传领域，形成并保持正确的认识。在这方面，前人已经有很多讨论，达成了一定共识并在实践中取得了重要成果。例如 2002 年 3 月，中日韩三国的民间团体和历史学家在中国南京国际学术会议上决定，共同编撰可供三国中学生使用的近代现代历史教材。由 23 名韩国学者、17 名中国学者和 14 名日本学者组成的共同编撰委员会随后召开了数十次国内外会议，终于解决了有争议的历史阐述。共同编撰委员会在书中指出，“为了创造东亚的光明未来，三国学者经过 3 年多的共同努力证明了在尊重各自国有历史认识的同时，可以达成对历史的共识”。日前，“中日韩三国共同历史编纂委员会”已经出版了两本书籍，分别是 2005 年的《东亚三国的近现代史》，以及 2012 年的《超越国境的东亚近现代史》。据悉，该委员会正在编写一部教科书，预期 2020 年能够完成。可以说此项工作已经取得了突出的成就。当然，这类共同编写的历史书，甚至是历史教材如何深入到相关社会之中并发挥应有的影响力，还有待各方面的共同努力，其效果也有待时间的检验。同时还必须认识到，由于此类分歧源自政治和情感因素，只要适宜于其发生、发展的政治土壤、社会风气存在，就很难将其根除，因此我想，反对这类错误的历史认识将使一项长期、艰巨的工作。

第二类，是距今有一定的年代距离，史料相对充足，但是由于史料记载上存在一些争议，因此造成学术分歧。当然，其中也有一些学术以外的因素的参与，但是由于史实基本清晰，可供发挥的空间有限，同时年代的相对久远，又

使这种脱离史实的发挥缺乏足够的社会吸引力，因此主要分歧仍保持在学术范畴之内。

例如有关清代中朝划界的研究，关于图们江江源究竟是哪一条水，就存在一定的认识分歧。不仅是中韩学界间，中国学界内部也有一些不同认识。当时，清朝派出查边的穆克登在长白山江源立碑，即“穆克登碑”，该碑对于理解清代中朝边界位置至关重要。李花子著《中朝边界的形成及特点——以明清为中心》，详细梳理了明清时期中朝边界的形成过程。包括鸭绿江、图们江边界的逐步形成，长白山地区边界线的形成，1885 年（光绪十一年）第一次勘界，1887 年（光绪十三年） 第二次勘界。作者认为，1712 年（康熙五十一年）穆克登所确定的边界，应以天池东南约 5 公里的立碑处为标志，西边以鸭绿江源为界，东边以黑石沟与图们江源（ 红土山水）为界； 而从立碑处到图们江源的无水地段，则设置了石堆、土堆、木棚等作为标记[1]。倪屹著《穆克登碑原址考证》，从朝鲜的相关记载分析，确定穆克登勘定的土门江源是发源于长白山的石乙水或红土山水，其所立石碑最初位置是在发现位置长白山天池南麓而不可能是在小白山[2]。与上述观点不同，陈慧著《清代穆克登碑初立位置及图们江正源考论》，根据相关史料记载，结合图们江源的地理面貌，确定穆克登勘定的图们江正源是小红丹水[3]。2011 年，陈慧著《穆克登碑问题研究：清代中朝图们江界务考证》[4]与李花子著《明清时期中朝边界史研究》[5]相继出版，为相关问题的进一步深入讨论奠定了基础。

在 1887 年第二次勘界过程中，朝方又提出中朝边界的土门江应为今中国境

[1] 《黑龙江社会科学》2015 年第 2 期。

[2] 《北方文物》2012 年第 2 期。

[3] 《清史研究》2009 年第 4 期。

[4] 中央编译出版社，2011 年。

[5] 知识产权出版社，2011 年。

内的海兰江，而今图们江时称为豆满江，与土门江为两水。这样一来，又造成海兰江与图们江之间的领土纠纷，又称“间岛问题”。尽管在1887年勘界过程中，朝方已认同土门、豆满、图们为一江，但是因图们江源之争而未能签订正式界约，因而也给“间岛问题”留下了制造分歧的空间。但是这种观点严重偏离历史事实，目前已为中韩主流学界所摒弃。

总的来说，要解决这类史实相对清晰，主要分歧在学术层面，政治、情感因素虽有参与，但是空间不大的历史分歧问题，主要还是在学术层面，并且以基本史实的考辨为主要突破口。

第三类，与上述两类不同，还有一类历史分歧，它产生的原因是介于上述两类之间：首先它也是学术研究上的分歧，但是不同于对具体历史问题的讨论，这一类分歧主要表现在对历史的定性论述上，或者称作史论。而史论本身，正所谓见仁见智，由于研究者的史观、史识、史才的不同，加上外部因素的影响，如身份地位、时代背景等等，得出的结论也会千差万别。其次，此类问题的尖锐化，主要还是根源于政治因素和情感因素的作用，但是由于在学术层面就存在难以评判的情况，因此这些政治因素、情感因素是否正确、是否合理也就难以简单评判。例如中韩学界之间有关古朝鲜、高句丽、朝贡册封等问题的分歧。

从化解分歧的角度说，此类问题较比前两类更为复杂。需要注意的是，尽管这类分歧的尖锐化根源于政治因素、情感因素，但是我们却不能被表象所迷惑，因为这里的政治因素、情感因素是附着在学术分歧之上的，它们是否正确、是否合理不易做简单评判。基于此，我们显然不能把解决此类分歧的首要目标对准政治因素、情感因素，个人认为，如果我们纠缠于此，非但无助于解决问题，反而会使问题更加复杂。

实际上，解决此类问题，还是要从产生分歧的学术层面入手。当然，上文也已经提及，这种史论类的分歧见仁见智、难分高下。中国有句俗语，叫“文无第一，武无第二”，如果用来不很恰当地比拟历史研究的话，考证可以算作武的部分，谁的证据充分，谁就是第一，史论则是文的部分，只要是根据史料发

表的议论，我们很难说谁的论述更高明。当然，必须强调指出，这里讲的史论，是基于史实发表的议论，绝不包括那些罔顾事实、臆想连篇的奇谈怪论。回过头来说，在史论难分高下的情况下，我们又如何化解分歧呢？我想我们恰恰可以利用史论的这种并非唯一真理的特点，通过沟通、交流，对各自的结论加以调适，最终形成某种共识，或者达成相互的理解，从而使分歧进入可控的状态。具体而言，可以从以下几个方面入手：

首先，面对此类历史认识分歧，应该提倡相互尊重、相互理解、求同存异、面向未来。

相互尊重，是指这类历史分歧，主要是基于史实的史论歧义，各方的论述，都有自己的学理基础，对此应该给予学术的对待，不论是质疑，还是批评，都应该遵循学术规范，而不应该进行贴标签式的非学术话语的批判。例如说哪位专业的历史学者“歪曲”历史，我觉得是极不合适的。

相互理解，是指真正从学术层面分析对方的观点，思考对方的关切，多做换位思考，己所不欲、勿施于人。

求同存异，是指尊重学术规律，不苛求观点的完全一致，君子和而不同，给彼此留有回旋的空间，才有交流、讨论、趋同的可能。

面向未来，是指要有开阔的心胸，不背不必要的历史包袱。东亚数千年的历史长河中，经济、文化的紧密联系始终是主流，应该让历史成为区域合作的基础、发展友谊的桥梁。对于那些存在分歧的部分，只要都是从学术出发，通过“激烈”的交锋，最终获得的也应该是学术友谊的深化。

我认为，东亚共同拥有儒家文化传统，儒家道德文化的精髓是中庸，中庸的核心是尚中、尚和，如果我们大家能以中庸之道面对历史认识分歧，必能找到化解分歧的路径。

其次，加强学术层面的交流。

这种交流有两个方面的好处：其一，有利于加强基础研究，从根本上推动相关问题认识的进步。其二，通过加强学术交流，可以更好地沟通学术思想，表达己方关切，寻求适中之道。

特别是从加强基础研究的角度说，学术交流必不可少。实际上，所有的这类问题，都存在基本史实认识方面的缺憾，这也是史论分歧产生的重要原因。例如中韩学界共同关注的高句丽问题，就存在很多认识上的薄弱环节。简单举两个例子：高句丽族的起源问题，目前的主流观点，仍然根据文献记载，认为是夫余王子南下貊地建国。但是也有学者对于这部分文献内容表示质疑，毕竟它属于建国神话的范畴，加上与夫余自身的建国神话情节雷同，因此真实性值得怀疑。更为重要的是，迄今为止，还没有发现夫余南下建国的充分的考古资料证据。再举一个例子，高句丽迁都平壤初期，与同样进入朝鲜半岛大同江、载宁江流域的前燕移民之间的关系问题，目前也存在较大争议，比如德兴里壁画墓的壁画与墨书题记，表现了前燕移民与高句丽政权之间怎样的关系？甚至一些壁画墓的墓主人也存在争议，比如安岳三号墓，是冬寿，还是高句丽故国原王？如果不进行全面系统的研究，是不可能得出准确的结论的。由此也影响到对高句丽族系源流、历史地位的判断。

而要深化基础研究，就需要加强国际学界的合作，为什么这么说呢？除了一般意义上的增加研究力量，拓展研究视野以外，还与此类问题的特殊性有关。因为这类引发国际学界分歧的历史问题，本身也具有国际性。例如高句丽问题，首先它的文献史料，都是汉文写成，因此在解读史料方面，中国学者自然有一定的优势；其次，高句丽鼎盛时期，其分布地域在今天中国、朝鲜，以及韩国北部的一小部分，从考古发现材料来说，来自上述三个国家，要充分利用这些材料，就需要三国学者的紧密合作。再比如朝贡、册封问题，除了中国学界的中心—边缘视角，还需要韩、日等国学界边缘—中心，以及次中心—边缘的视角。

第三，在学术对话过程中，应该加强对关键性问题的讨论。

如果从学术层面思考第三类历史认识分歧，有一些关键性的问题需要加强研究，特别是各方学者共同参与的研究。

其一，加强对东亚历史上的政治共通性问题的研究。

东亚地区各国的历史，是有着紧密关联性的历史。这种关联性除了一般意义上的经济、文化交流以外，还涉及到一定的政治关系。而对于这种政治关系的理解，也是造成今日东亚历史分歧的一个重要原因。

梳理以往学界的相关研究，对于这种政治关系的认识，有一个重要的视角，即由日本学者所发明，后为中国、韩国，甚至一些欧美学者所丰富的“体制论”。据宋成有先生统计：“关于古代东亚或东北亚国际体系概念的界定，……至少有日本学者西嶋定生的‘册封关系体制说’，堀敏一的‘东亚世界体系说’，谷川道雄的‘古代东亚世界说’，安部健夫的‘四方天下说’，栗原朋信的‘内臣外臣礼法说’，藤间生大的‘东亚世界说’，信夫清三郎的‘华夷秩序说’，滨下武志的‘中华帝国朝贡贸易体系说’，韩国学者全海宗的‘朝贡制度说’，美国汉学家费正清称之为‘中华世界秩序’，大陆学者何芳川的‘华夷秩序说’，香港学者黄枝连的‘天朝礼治体制说’，台湾学者张启雄的‘中华世界帝国体系说’等等”[1]。

从目前学界的研究看，对于“体制论”有三种态度。

第一种观点认为是在中国积极经营下形成的“体制”、“体系”、“秩序”甚至“圈”，因此是古代中国地区霸权主义的体现，甚至用它来影射今天中国崛起后的发展方向。

第二种观点否定这种“体制”、“体系”、“秩序”甚至“圈”的实际意义，

[1] 宋成有：《东北亚传统国际体系的变迁——传统中国与周边国家及民族的互动关系述论》，（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所政治外交组，2002 年，第 2-3 页

认为它们不过是古代东亚地区的一种外交形式，与中国的政治统治没有任何关系。

第三种观点，承认“体制”、“体系”、“秩序”甚至“圈”的存在，但是指出它与西方的殖民体系的根本区别，以及在促进东亚世界整体发展过程中的积极作用。有中国学者认为：“‘诸番入贡，华夷一统’的东亚封贡体系，与西方的殖民主义体系有着根本的区别。中国并非殖民主义国家，从未将周边地区划为殖民地，进行殖民统治。两者之间并不存在实际上负有条约义务的政治从属关系。明代以后形成的‘宗藩制度’也不同于西方殖民主义体系中的宗主国与保护制度。中国一般不干涉藩属国的内政，经济上的朝贡关系只具有象征性的意义。中国通过更多的回赠，使之变成互通有无的通商与文化交流”[1]。还有学者认为：“中国传统文化在对待与周边国家及民族关系时具其特有的尚德抑武、以德服人观点，如‘舜舞干戚，荒服来王’、‘舜歌南风，天下大治’之类，这一点在隋唐时代也不例外”[2]。杨联陞先生更是直接指出：“对整个中国历史加以观察以后，即可以发现这个多面的中国中心之世界秩序，他是在不同的时间，从许多程度不一，有时几近于零的事实上，建立起来的神话”[3]。

也有日本学者指出，所谓的中国与东亚国家间册封关系的出现，并非出自中国的主动争取。魏晋南北朝时期，正是中原政局动荡之时，倭及高句丽、百济、新罗等国均在这一时期向中原入贡，取得中国的官阶、官职，形成所谓册封关系。这些政权与中原王朝保持联系，根源于他们的建立多得益于华夏文化的传入[4]，因此自始即有获得华夏文化政治、经济、文化资助的愿望。而这一时期以更为谦卑的姿态提出请求，“应该说，这都是各国出于自身的需要而自主选

[1] 俞正梁等：《全球化时代的国际关系》，复旦大学出版社，2000 年，第 7-8 页。

[2] 王小甫主编：《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上海辞书出版社，2003 年，3 页。

[3] 杨联陞著，邢义田译：《从历史看中国的天下秩序》，（台北）《食货月刊》复刊 2 卷 2 期，1972 年。

[4]参见[日]李成市：《古代东アジアの民族と国家》，（日：东京）岩波书店，1998 年。

择的行动。从实际情况来看，无论是倭国的五王，还是高句丽、百济，大多是他们自己拟定具体的官称，……向中国王朝提出来，要求获得承认和册授”[1]。这说明，这个所谓的册封关系对受封者具有政治、经济、文化诸方面的重要意义；相反，对中国来说，则更多的是代表一种和平相处的局面。

显然，如何理解这种政治共通性，对于相关史事的评价结论是完全不同的。如果未来能够通过中、韩、日等东亚各国学界的共同努力，达成一个大致相同，或者主要结论相近的认识，对于相关的历史分歧问题的消弭将起到关键性作用。

其二，深化“国家”定义的古今对接。

今天，我们从事史学研究，尽管研究对象都是历史上的事情，但是所使用的定性名词却都是近代以来出现的，且主要是从西方传到东方的，这里面影响最大的是国家和民族。

国家这个词，按照今天的理解，是由国土、人民（民族）和政府三个要素组成的。当在一个固定的领土范围内居住着一个人民（经常是同一民族或有共同的认同感），而在这个人民中又行使着一个合法的政治权力时，便存在着国家。这种国家意识，是由兴起于欧洲的威斯特伐利亚体系所倡导的，目前已经成为全世界的共识。在此体系之下，国家的领土、人民都是固定化的。但是从历史的角度看，国家的领土和人民又都是变化的，如何理解这种变化，又如何在历史叙述中阐明这种变化，是各国历史学家面临的共同任务。而在毗邻国家间，历史领土的伸缩变化又是一种相互影响关系，彼此按照什么标准来阐述这种变化，是造成历史认识分歧的重要原因。要化解由此产生的历史认识分歧，就需要从探讨国家定义的古今对接入手，寻找到适合区域特征的历史国家定义。

其三，深化对民族与民族主义的认识。

一般认为，民族主义兴起于西欧，是欧洲资产阶级动员民众，反对封建统

[1] [日]堀敏一著，韩升、刘建英编译：《隋唐帝国与东亚》，兰州大学出版社，2002年，第4页。

治者的产物，本身具有鲜明的革命色彩。其后，在向东方传播的过程中，与亚非拉殖民地争取独立的运动相结合，强化了这种革命色彩，演化为“种族民族论”，这种民族概念强调语言、文化、体质上的一致性。在将此类民族概念应用于民族历史研究时，又形成了一种民族“原生论”，从而将民族历史封闭起来。

然而，根据国际民族社会学、文化人类学界的讨论，何谓“民族”还在争论之中。目前看，早期的民族定义主要是文化论，与此相类的还有客观论、根基论等，弗雷德里克·巴斯指出：文化论者认为，族群一般被理解为这样的一群人：（1）生物上具有极强自我延续性；（2）共享基本的文化价值，实现文化形式上的公开的统一；（3）组成交流和互动的领域；（4）具有自我认同和被他人认可的成员资格，以形成一种与其他具有同一阶层的不同种类[1]。由于“主观认同”不易把握，特别是在缺乏相关记载的史学研究中，因此文化论（客观论）最后往往把所谓“自我认同和他人认可”转化为某种共同的文化特征。20 世纪 50 年代以来，国际民族学界（社会人类学界）已经开始对族群文化论、原生论加以检讨，突出主观认同，特别是非先赋的，个体的，能够因主客观条件而调整的认同对族群意识形成、发展、嬗变的影响。由此产生了四种族群观。其一为边界论：“民族被视为一个人群主观的认同范畴，而非一个特定语言、文化与体质特征的综合体。人群的主观认同（族群范围），由界定及维持族群边界来完成，而族群边界则是多重的、可变的、可被利用的。在多层次的族群认同中，民族是最一般性的、最大范围的‘族群’。这个主观民族范畴的形成，是在一个特定的政治经济环境之中，人们以共同的自我称号及族源历史，来强调内部的一体性与设定族群边界排除他人，并在主观上强调某些体质、语言、宗教或文化特征。随着内外环境的变化，可共享资源的人群范围也随之改变，因此造成个人或整个族群的认同变迁。”[2]其二为工具论：“族籍并非原生的、不可或缺的身份，而是在功利性的互动场景中变化的，不时会被职业、阶级、乡籍、性别

[1] 〔挪威〕弗雷德里克·巴斯著，高崇译：《族群与族群文化》，收入徐杰舜主编《族群与族群文化》，黑龙江人民出版社，2006 年，第 43 页。

[2] 王明珂：《华夏边缘》，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 年，第 76-77 页。

等身份替换，从而基本上将族群认同看作是一种政治、社会或经济现象。”[1]“族群领导人和精英们实际上是利用他们的文化群体作为动员群众的场所，并且作为他们竞争权力和资源的赞助者，因为他们发现利用族群群体比利用社会阶级更有效。”[2]其三为想像论：“当且只当两个人相互承认对方属于同一个民族，则他们同属一个民族。换言之，民族创造了人；民族是人的信念、忠诚和团结的产物。如果某一类别的人（比如某个特定领土上的居民，操某种特定语言的人），根据共同的成员资格而坚定地承认相互之间的权利和义务的时候，他们便成为一个民族。使他们成为民族的，正是他们对这种伙伴关系的相互承认，而不是使这个类别的成员有别于非成员的其他共同特征。”[3]其四为族群—象征主义论，这种理论的倡导者意图弥补单存客观论与主观论的偏颇：“历史族群—象征主义特别强调主观因素在族群延续、民族形成和民族主义影响中的作用。这并不意味着它视‘客观’因素为当然或将它们排除在自己的分析范围之外；而是给予主观的因素如记忆、价值、情感、神话和象征等以更多的重视，并且由此而寻求进入并理解族群和民族主义的‘内在世界’。”[4]个人认为，族群—象征主义论更符合民族发展的实际，即通过认同形成民族，通过象征强化认同。

基于上述认识，我认为在民族史研究过程中，应该摒弃客观论、原生论的错误影响，充分考虑以下两点：

1.世界上很少有单一种族血统的民族，今天的民族都是在历史演进过程中，通过不断的族群融合发展、壮大而最终形成的，对于这个融合过程，应该给予客观的描述，不能从原生论出发，自始便做排他性的叙述。

---

[1] 周传斌：《概念与范式——中国民族理论一百年》，民族出版社，2008年，第212页。

[2] 〔英〕安东尼·史密斯著，叶江译：《民族主义——理论，意识形态，历史》，上海世纪出版集团，第2006年，58页。

[3] 〔英〕厄内斯特·盖尔纳著，韩红译：《民族和民族主义》，中央编译出版社，2002年，第9页。

[4] 〔英〕安东尼·史密斯著，叶江译：《民族主义——理论、意识形态、历史》，上海人民出版社，2011年，第60页。

2.有些历史族群经过兴起、发展和嬗变的历程后，融入到其他族群之中，其历史则为后者所接续。但是，融入进来的族群有集体融入，也有部分融入，对于部分融入的历史族群，它的历史就不应该为任何一个当代民族所独占。

其四，充分借鉴国际经验。

与东亚历史共通性类似，欧洲各国在历史上也存在着千丝万缕的联系，长期以来，欧洲各国也都在致力于构建共同的历史叙述。这方面的成功经验，应该为我们所吸纳。

발제문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권 전략

–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와
지역 민간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환황해 동아시아 3국은 그 지리적 관계상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역사를 지속하여 왔다. 때로는 전쟁과 분쟁이 이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의 교류와 전수 혹은 경제적 상호 관계에 의하여 3국의 역사는 고대 이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1세기 동안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에의 노선은 ‘동아시아 세계’를 파괴하였고 희생과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에 무거운 역사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으로의 21세기는 동아시아 세계의 복원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한 상호 발전과 공존의 방향 모색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혹은 영토 문제 등의 갈등 요소는 환황해 동아시아권의 새로운 도정에 걸림

돌이 되어 있다. 이같은 걸림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레벨의 문제인데다 갈등의 요소가 워낙 심층에 축적되어 있어 단기간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은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논의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1] '환황해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2], 충청남도는 이 권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남 주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3]

본고에서는 환황해권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소인 역사 문제를 간략히 점검하는 한편으로, 시민 교류의 레벨에서 환황해권 동아시아 각국 시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는 방안을 충청남도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민간 레벨에서의 활동, 혹은 지자체 레벨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한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 추구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 체제 등,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개 되었다. 근, 현대에 있어서 이같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속에서 20세기 한국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의 입장, 혹은 첨예한 대결의 접점(接點)이 되어 왔다.

동아시아 평화세계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역사인식의 상호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뜨거운 문제로 부각된 바

---

1) 김성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한국의 시각에서」『제2회 환황해 포럼』, 충청남도, 2016, p.3

2) 국토해양부의 안(2011)에 의하면 '환황해권' 협의의 범위는, 한국의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제주, 중국의 허베이성(하북성) · 랴오닝성(요령성) · 산동성 · 베이징 · 톈진, 일본의 후쿠오카로 설정하고, 광의의 범위로서는 한국의 경남과 중국의 장쑤성(강소성) · 저장성(절강성) · 상하이, 일본 큐슈의 7개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송두범 · 홍원표,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심포지엄 자료집), 충남연구원, 2015, pp.16-21) '동아시아'가 흔히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환황해'는 지역간 네트워크의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읽을 수 있다.

3) 송두범 · 홍원표, 위의 논문, pp.58-60 참조.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상호 공감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그리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교과서에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같은 출발선에서의 역사 인식 정리는 환황해권 동아시아 세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1993년 일본의 고노(河野洋平) 장관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는 담화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신이 실제에는 계승,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노,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1993년, 1994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고등학교 일본사(A/B) 23종중 2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였다.[4]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를 '자학사관'으로 공박하는 우익의 집요한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역사 인식 및 교과서의 기술에 있어서 후퇴를 거듭하였다.[5] 이후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경향에 의하여 2011년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6]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9월)부터 2016년(6월)까지 10년 간 120편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4)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한일관계사연구』 54, p.371
5) 남상구, 「일본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한일관계사연구』 30, pp.325-339
6)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중학교 역사의 경우 2005년 8종중 2종으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전 교과서에서 삭제 되었다. 다만 2015년 검정에서는 学び社 발행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었다. (남상구, 앞의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72)

의 수집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의하여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군 · 정부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였다.[7)]

독도와 관련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경화된 입장을 강화해 왔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2008년에 "우리나라(일본을 가리킴)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4년에는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일본인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는 하나의 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 참배를 계기로 그것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기간 6회에 걸쳐 참배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에 A급 전범 14명이 '소화 순난자(昭和殉難者)'라는 명목으로 합사(合祀)되어 있기 때문이다.[9)]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보수 우익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은 이같은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10)] 특히 북핵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러한 국가주의적 인식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후 급격한 관계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밀접한 인국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급격한 관계 진전이 말해주는 것은 동아시아 3국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특히 북한 문제 혹은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구도 속에서 현실적으로 갖는 한계점도 확인되고 있다.

---

7) 서현주, 「2006~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8)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81
9) 남상구,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참고.
10) 이종국,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동북아역사논총』 51, 2016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연구소에서 추진한 역사 관련 사업으로서, 특히 고구려사, 넓게는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재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해당하는 국가주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는 정치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11] 역사 문제가 갈등의 초점이 되면서 이를 정치쟁점화 하지 않고 학술연구에 맡긴다는 2004년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6년에는 한중 정상 간에 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논쟁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12] 표면적 논쟁은 진정되었지만 이 같은 역사관이 중국의 현실 인식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내면에 잠복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간 논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보다 객관적이며 현실성이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이를 토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지자체 레벨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여러 지역간 상호 인식을 심화하고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1) ‘환황해권’ 기반으로서의 백제문화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유적의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백제유적이 갖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있었다. 환황해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세계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한 백제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국제적 공인인 셈이다. 백제는 불교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일본에 전수하였다. 불교는 단순한 정신적 가치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에 의하여 뒷받침된 건축, 공예, 미술, 과학 등 각종의

11) 윤명철, 「동북공정의 배경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의 구축」『단군학연구』 10, 2003; 김남철, 「역사교육에서의 ‘동북공정’과 민족주의」『역사교육』 95, 2005 등 참고.

1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에는 고대 중국의 변경에 대한 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속사 연구,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에 대한 연구, 한반도의 국가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 10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56개 과제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며, 고구려 · 발해 관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윤경,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중국학』 31, 2008, pp.567-569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셈이다.[13]

백제문화는 기본적으로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백제 지배층의 주류가 고구려 계통이었다는 점, 백제문화의 발전에 중국의 선진 문화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착문화의 고유성, 외래문화의 보편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을 이룩한 것이 백제문화였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 발전에도 교훈을 준다. 백제문화의 중심에 있는 백제 미술은 '자연미'를 특징으로 하며, 부드럽고 섬세한 백제인, 충청인의 심성(心性)이 반영된 것이었다.

백제는 원래 한성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압력에 의하여 475년 충남권의 공주로 천도한 후 538년 부여로 천도하여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백제문화가 꽃피워 특히 주변국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충남에 도읍하고 있던 약 2세기 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는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의 기반이기도 하였다.

백제문화의 제반 내용 가운데 특히 이를 대표하는 것이 무령왕(재위 501-523)과 무령왕릉이다. 무령왕은 서기 471년(혹은 472) 일본의 가카라시마(加唐島, 佐賀縣 唐津市 소재)에서 태어나고 즉위 이전 상당 기간을 오사카 지역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다. 재위 중에는 중국 양(梁)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하여 선진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약화된 백제를 다시 회복시킨 인물이다. 1971년 발견된 그의 왕릉에서는 중국 양으로부터 도입된 문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본의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가 '환황해권'을 무대로 백제의 위상을 제고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대 중국의 양의 서울은 쟝쑤성(강소성)에 위치한 현재의 남경이다. 그리하여 무령왕대의 교류는 중국 남경과 충청남도와 일본 사가현 및 오사카를 잇는 '환황해권'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13) 백제문화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장 노중국 교수는 백제문화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고대 동아시아에서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적,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가 되는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노중국,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회의』(발표 자료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p.23)

2)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제6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금년의 백제문화제는 공주에서 개막식을, 부여에서 폐막식을 거행하였으며,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주한 일본대사와 중국대사가 참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14)]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것은 1955년 부여 백마강변에서였다. 6.25 전쟁을 통하여 겪은 역사의 아픔이 1천 3백년 후 백제 땅에서, 백제 역사의 아픔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1965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를 함께 열게 되었다. 이 백제문화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륜의 근대 역사축제로 꼽히고 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과 근거는 1천 5백 년 전 고대왕국 백제에 있다. 고대 한반도의 3국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로 칭해지던 백제는 660년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는다.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이었던 때문에 백제 멸망의 한(恨)은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겨지게 되었다. 낙화암과 '삼천궁녀' 이야기도 말하자면 그러한 한(恨)의 내림이었다.

2007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여ㆍ공주 통합 개최가 실현된다. 충남의 대표 축제로서 동시에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서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단계의 진입이었다. '환황해권' 중심으로서의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백제문화제는 공인된 것이다. 이후 백제문화제의 '통합 개최'는 통일적 구도를 가지고 부여·공주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되, 기획과 운영에는 충청남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백제문화제가 3개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축제와 차별화되는 백제문화제만의 특성이며, '백제'를 역사적 고리로 하여 '환황해권'을 지향하는 축제로서의 기본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최근 수년 동안 백제문화제는 특히 일본을 중심

14) 백제문화제가 갖는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윤용혁, 「공주, 동아시아 국제교류」『공주학강좌』, 공주학연구원, 2015, pp.192-194 참조.

으로 국외 축제 조직위원회와도 밀접한 관계 형성에 노력해왔다.[15] 2007년 이후 백제문화제에서 동아시아 교류 거점으로서의 백제가 끊임없이 강조되어 동아시아 축제로서의 특성을 강조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황해권 축제'라는 지향점이 명확하게 설정된 적은 없다. 2017년은 통합 백제문화제로서 10회를 넘긴 시점이고,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비젼을 정립하여 재출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백제를 고리로 한 '환황해권 축제'이다.

백제는 7백년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다. 이 때문에 백제 관련의 축제는 공주·부여 이외에도, 서울(송파구), 익산(전북), 영암(전남) 등 여러곳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백제 관련 축제는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오사카의 왓소축제, 히라카타(枚方)의 백제페스티발, 가라츠시 가카라시마에서의 무령왕탄생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용하여 백제문화제가 '환황해권'을 연계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의 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은 통합백제문화제 향후 10년의 비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통합 백제문화제' 이후 이를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개최된 것이 2010년 1개월 동안에 걸치는 메가이벤트로서 '세계대백제전(世界大百濟展)'이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결정물이라 할 '백제문화단지'가 17년 만에 부여군 규암면에 완성되어 개관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 '세계대백제전'은 경주의 신라문화엑스포와 함께 대표적인 역사재현형 메가이벤트로 꼽히게 되었다.[16] 그로부터 10년 후의 '제2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에 대한 논의가 부여와 공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컨셉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가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된다. 2017년부터 향후 10년을 '환황해권 축제'로서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 가자는 것이다.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에 적당한 시점은 2021년이다. 서기 521년 무령왕은 양(梁)에 사신을

15)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윤용혁「2010년 세계대백제전 세계화의 과제」『충청학과 충청문화』9, 2009 참조.
16) 류정아『축제의 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p.102-104

보내면서, 백제가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강국이 되었다(更爲强國)"는 이른바 '갱위강국' 선언을 하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대응할만한 국력과 자신감을 완전 회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538년 성왕에 의한 부여 천도의 예고이기도 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1500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한편 2021년은 백제 세계유산의 핵심유적인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갱위강국', 그리고 '무령왕릉 발굴 50년'의 의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제2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의 적기는 2021년이 된다.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1) 무령왕네트워크

백제의 인물 가운데 1500년 전 백제 25대 임금이었던 무령왕은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특별한 점이 있다. 고구려에 의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제를 다시 살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임금이기도 하지만, 환황해권을 하나의 세계로 엮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환황해'에 걸치는 무령왕의 세계는 1971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에서 현실로서 입증되었다. 뛰어난 백제의 문물에, 그가 묻혀있던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무덤이었고, 그가 왕비와 함께 누워진 관은 일본에서 보낸 목재로 제작된 것이었다. 무령왕릉은 곧 고대 '동아시아 세계', '환황해권'이었던 셈이다.

2001년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을 계기로 가라츠와 공주의 두 무령왕 민간단체가 교류를 시작 하였다. 2002년에 처음 열린 무령왕 탄생제에 공주 사람들이 참석하고, 가을에 열리는 공주의 백제문화제에 가라츠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이 교류는 곧 정례화 되어 금년 2017년에 16년의 역사를 축적하게 되었다. 매회 30명 전후의 규모로 매년 시민 레벨의 정기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주의 단체는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정영일)[17], 가라츠의 단체는 처음 '친제이쵸 무령왕 실행위원회'에서 지금은 '마쓰

17) 가라츠와의 교류는 처음 공주향토문화연구회와 이루어졌으나, 교류가 진행되면서 2004년에 '무령왕국제네트워

로 ·쿠다라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미야자키 다카시, 宮崎 卓)이다.

무령왕국제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사가현 가라츠시 소재)의 무령왕탄생제에 참가하는 일이다. 6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무령왕축제는 올해로 16회를 기록하였다. 공주에서는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도합 16년 간 매년 30명 내외의 시민 방문단이 가카라시마 교류에 참가하였다. 간단히 계산하면 16년 간 연인원 500명, 가라츠를 포함하면 대략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카라시마와 공주를 상호 방문하고 교류 행사에 참여한 셈이다.[18] 9월에는 가라츠가 중심이 되어 백제문화제 참가단을 파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호 방문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 백제문화제의 가라츠 방문단은 무령왕이 모셔지는 사왕추모제(四王追慕祭)에 참석하고, 사왕추모제에 앞서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라는 프로그램을 가라츠 팀과 함께 진행한다.[19]

2006년 가라츠 시민과 공주 시민 공동의 가카라시마 무령왕 기념비 건립은 무령왕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기념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공주에서 제작하여 운반, 가카라시마 항구 현지에 건립되었다. 비용은 양측 시민의 공동모금에 의존하였고 소요 비용은 분담되었다. 3.4m 높이의 기념비(설계 김정헌)는 무령왕릉의 아치와 전벽(塼壁)의 디자인을 취하였고 중앙에 왕릉의 등감을 배치하여 생명탄생과 빛의 근원을 상징하였다. 본체는 화강암 2개의 돌을 조립하여 세움으로써 공주와 가라츠 두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상징하였다.[20]

정례적 교류가 이어지면서 공주의 백제문화제 혹은 가라츠의 축제에 서로 참여하게 되고, 학생 교류, 벽화 제작, '무령왕' 별의 등재, 사진전 개최 등이 협력 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가라츠 측의 협조에 의하여 '무령왕' 이름의 별이 등재

크협의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8) 금강포럼(대표 신용희)에서는 공주-가라츠 무령왕교류 15년 역사를 정리하는 사진전을 2016년에 열었다. 관련자료들이 전시회 도록인 『무령왕교류 15년』(2016)에 정리되어 있다.

19)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에서는 1년 간의 여러 교류 행사를 정리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무령왕 노래 '니리무세마'('임금님의 섬'이라는 뜻)를 함께 부르고, 나태주가 지은 '무령왕' 시를 같이 낭독하며, '백제 춤'을 함께 추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 무령왕기념비 건립의 경과에 대해서는 윤용혁, 무령왕에의 길- 2006년 무령왕기념비의 건립」『웅진문화』19, 2006 참고.

되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4년에는 '공주' 별의 등재가 다시 이루어졌다. 소행성의 발견자 사토 나오토(佐藤直人) 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21] 2017년 8월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여름야행 '무령왕별(星), 공주별을 찾아라' 행사가 무령왕릉 일원에서 펼쳐졌다.[22]

공주-가라츠의 무령왕 교류에는 가카라시마 기념비 건립이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기념비 제작 자체의 문제 이외에 '무령왕 탄생지'로서의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역사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념비는 '탄생 전승지'로 기록하였고, 이후 학계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우려되었던 역사 문제는 야기 되지 않았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민간 레벨의 교류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관련된 교류 사업에서는 사실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23] 그리고 이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 혹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령왕 교류가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그 중의 하나는 식민지시대 공주 거주 일본인에 의하여 반출되었던 문화재의 기증이었다. 2006년 6월 25일 기념비의 제막식에 참석했던 요코하마 거주 공주회 회장 아메미야 히로스케(雨宮宏輔)는 이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2008년에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공주 반출의 68종 328건 문화재의 기증이 이루어졌다. 아메미야 유물은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 소장되고 있다.[24]

무령왕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오사카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연결된 곤지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2014년에는 후쿠오카현 야메시에서 '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

21) 윤용혁, 「'별에서 온' 무령왕, 그리고 백제문화제」『백제, 축제로 부활하다』(최석원 편), 서경문화사, 2014.
22)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문관측(천체망원경)으로 무령왕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광 별자리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토크 콘서트(무령왕 별이 되다), 별별 사연 소개, 국악공연을 비롯해 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의 무령왕 노래 및 백제 춤 공연, 그리고 일본 가카라시마 학생들이 소-란 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파워뉴스〉 2017.8)
23) 윤용혁, 「무령왕 출생 전승에 대한 논의」『백제문화』 32,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03
2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63년만의 귀향,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특별전』, 2008

족하였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린진(隣人)네트워크(대표 萱沼紀子)의 소개로, 히라카타 백제페스티벌을 주관하는 백제회(百濟の会)와의 교류가 새로 시작되었다. 모두 '백제'를 주제로 하는 단체이다. 시민 교류라는 특성 때문에 중국 남경과의 연계와 교류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였지만, 몇 차례의 남경 방문을 통하여 그 기반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1500년 전 무령왕대의 동아시아는 백제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화권으로 발전 시켜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남경-공주-큐슈-오사카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무령왕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그 1500년 전의 역사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교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 이삼평연구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유적 부근에는 일본 아리타(有田)의 도조(陶祖)로 칭해지는 이삼평(李參平, 1579-1656)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가현 아리타에서 성금을 모아 1990년에 처음 건립한 것인데, 2016년 학봉리 도요지 가까운 동학사 입구로 새로 이전한 것이다.

원래 공주의 이삼평 기념비는 아리타 정민(町民)들이 이삼평의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고향'에 건립한 것이다. 한국도자문화진흥협회의 협조를 받아 세운 기념비의 건립에 의하여 아리타와 공주 간의 활발한 도자 문화 교류가 기대 되었으나, 도리어 비문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삼평이 '임진 · 정유의 왜란에 일본에 건너가게 되어'라는 구절이었다. '끌려갔다'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인식의 진면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25]

기념비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는 논란을 거듭하고,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심지어 아리타 현지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와 법원에 청원 혹은 제소하는 등의 방법까

25) 윤용혁, 「아리타의 도조 이삼평과 공주」『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윤용혁, 「도조 이삼평, 그리고 아리타와 공주」『공주, 역사와 문화콘텐츠』, 공주대 출판부, 2016

지 취해졌다.[26]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8년 문제의 문구는 '건너가'가 '건너가게 되어'로 수정되었다. 기념비의 건립 의도는 이삼평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표시'였고,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평 기념비는 '역사' 문제로 생각지 않은 험한 수난을 겪게 된 것이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기념비의 건립과 이후의 논쟁 과정에 공주에서의 지역적 입장과 역할이 거의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립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이 거의 배제된 때문이었다. 비문 정정의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논의의 과정에서 건립 주체들과 지역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이들 당사자 간의 상호 소통이 보다 충분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공주에서 민간단체로 '이삼평 연구회(회장 이종태)'가 결성된 것은 그 후 2013년의 일이었다. 학봉리 철화분청사기 요지로 대표되는 지역 도자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삼평 기념비의 의미에 주목하고 기념비가 원래의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주의 지역적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다. 2013년 처음으로 공주에서 아리타의 도조제에 공식 참여하고, 8월 11일에는 첫 번째 이삼평 추모행사를 공주에서 가졌다. 이삼평연구회는 김해에서 열린 제19회 분청자기 축제의 참관 답사 행사를 실시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연이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27] 특히 2016년 아리타 도자기 400년이 되는 해로서, 풍물단 파견에 의한 아리타 도조제 참여하고, KBS 대전 방송국에서 계룡산 철화분청을 주제로 다큐를 제작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이삼평연구회 조직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2016년 이삼평 기념비의 이전이었다. 공주-유성 간의 국변에 위치한 이삼평 기념비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삼평연구회에서는 공주에 있어서 이삼평기념비의 중요성과 문제의 복합성을 홍보하는 한편 특히 시청 담당자들과의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입지 선정에 중요한 중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

26) 당시의 관련 자료는 이풍용, 『弘益明鏡碑-일본의 역사왜곡을 중심으로』〈자료편〉, 글담, 2005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삼평공과 분청사기에 관하여〉(2014.8.11.); 〈이삼평과 공주분청사기의 재조명〉(국회 박수현의원 주최, 2015.11.6.); 〈공주의 도자문화와 일본, 중국〉(2016.6.13.)

특히 기념비의 이전을 계기로 이삼평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에 의하여 적극 수용되어 기념비는 새로 조성된 반포면 학봉리 이삼평공원으로 이전되었다. 기념비 이전 준공식에는 도자기 관련 유관 단체인 한국도자기협회 임원, 회원은 물론 아리타에서도 정장(町長)을 비롯한 유지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삼평 기념비는 1990년 건립 이후 문구를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 2016년 기념비 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새로 창립된 이삼평연구회에서 중개역을 맡음으로써, 공주시와 관련단체, 아리타 당국, 반포면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토대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28] 역사 갈등이라는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얼마든지 현실로서 당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환황해권 지역 간 협력 발전의 미래와도 연결된다.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과 이데올로기 문제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20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화해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전문적 논의와 정치적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반한 대화와 접근 노력이 중요하다. 역사 논쟁은 쉽게 감정적으로 전환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하여 논지가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외적 공간에서의 지속적 논의와 생산적 방향을 담보하는 것이다.

환황해권 동아시아 세계의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이 편성된 점이다.[29] 자국사와 세계사라는 역사 교과의 편성이

28) 이삼평연구회 창립 이후 기념비 소재 거주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울여졌고, 관련하여 2편의 석사 논문이 만들어졌다. 박미옥, 「공주 반포면 도자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6; 이종태, 「국제교류 콘텐츠로서의 이삼평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7

29) 〈동아시아사〉 과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2012년부터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화되어 있는 전제에서 생각하면, 〈동아시아사〉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갈등 극복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사〉 수업은 다른 역사 과목보다 현저히 '평화지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었다.[30] 실제 수업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9%가 학습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국사의 객관적 인식, 문화상대주의적 관점 함양(학생)이 30.4%와 29.1%로 가장 높고, 교사의 경우 역사의 단절 극복, 민족의 편견 극복이 각 27.3%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과목을 우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역사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는 교사의 불만도 있지만,[31]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역사과목의 하나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32] 환황해권 역사 갈등의 현실 속에서 한국 역사교과에 〈동아시아〉 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33]

교과서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주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논의는 쉽게 경직성을 띠게 된다.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에 의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레벨의 논의만이 아니고 지자체 레벨의 교류와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이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30) 김유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역사교육』 130, 2014
31) 윤세병,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pp.264-272
32)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역사 과목별 응시자는 〈한국사〉가 42,529명, 〈동아시아사〉 36,982명, 〈세계사〉 28,772명이었다. 〈중앙일보〉 2013. 11.26(김유리, 앞의 논문, p.9에서 재인용)
33)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오늘날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영역과 그 외의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과 국가,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김유리 · 신성곤,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역사교육』 132, 2014 참고.

금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환황해권'은 지역간 협력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역간 협력'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과거 역사문제에 당면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환황해권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문제에 대한 솔직한 직면과 함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 갈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수(常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병행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호 이해 증진과 생산적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증진은 다른 한편으로 역사 갈등의 대화 노력에도 생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제는 현재의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에 직면한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 과목의 채택은 획기적인 것이며, 이 과목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소기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환황해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의 정규 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유용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이 역사 현장을 공동 탐방하는 역사 캠프 프로그램의 제안은 이같은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34]

환황해권에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리적으로 충청남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의 기반이라 할 백제역사는, 환황해권의 정체성을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의 대표축제이며 한국에서 가장 오랜 근대 역사축제인 백제문화제를 환황해권 중심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환황해권 협력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컨셉을 이같은 '환황해권' 조성에 맞추고, 2021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

34) 정기은은 청소년 공동 탐방의 역사 현장으로서 왕인 박사 문화전래의 길, 불교 전래의 길, 장보고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정기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역사 · 외교 분쟁」『백산학보』82, 2006, pp.285-287

울러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관련 시민단체, 무령왕국제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의 사례를 통하여 지자체를 배경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 하였다.

최근 한국의 국무총리가 일본 천황의 재임 중 방한을 조심스럽게 거론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장기간 경색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의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에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콘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보다는 지자체 레벨에서의 바탕 구축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를 토대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리는 백제문화제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 갈등 '완화'라는 환황해권의 토대를 닦는 일은 목표를 분명히 하되,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공감 확산이 중요하다.

제3회 환황해포럼

Session Prosperity 1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자 _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_ 이동주(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자오유푸(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미츠이 이츠토모(가에츠대학 대학원 대학원장 및 교수)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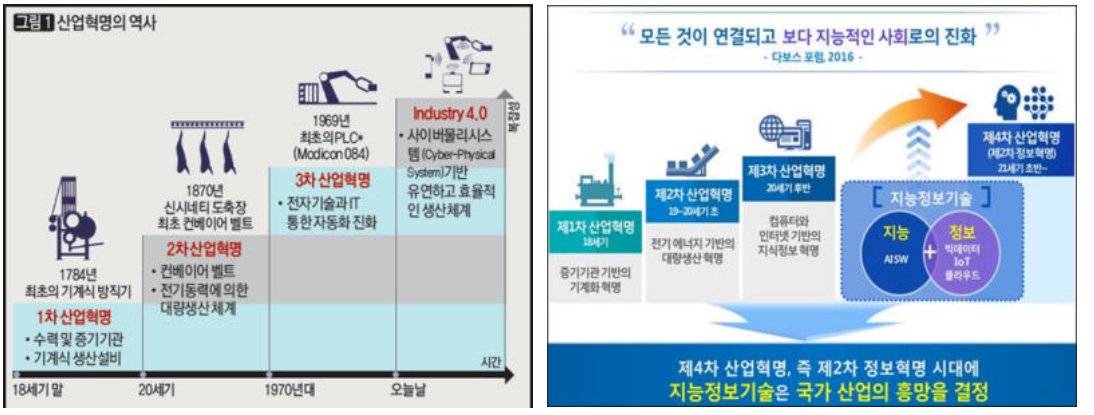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방안 : 로컬 및 글로벌 생태계 관점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1.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 4차 산업혁명의 의의

- 산업혁명에서 핵심 요소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하는 기술발전
-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데, 핵심 기술변화는 각각 농업, 기계와 전기, 컴퓨터
-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해내는 핵심 기술은 IoT와 IoE
- 다양한 기술변화가 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과정에서도 생명체와 비생명체 간 융합을 통한 경계의 붕괴는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자료: 이삼열(2016.12), "미래거대환경변화와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 2016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 과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개별기업간의 가격중심의 경쟁구조, 보호 무역주의, 업종의 개념 명확화 등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면
- 글로벌화, 4차산업시대 경영환경은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 지식기반 경제, 글로벌 무역자유화, 융합의 시대로 표현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주체로 중소기업이 부상되고 있음

□ 지배적 중소기업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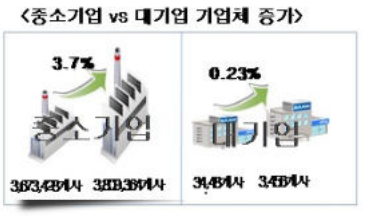
- 지배적 중소기업이란 그 시대 경제환경, 산업구조,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경영전략과 경영자원을 갖추고 고성장을 이룬 중소기업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성장중소기업은 양산형 중소기업–소프트형 중소기업–개발지향형 중소기업–시장창조형 중소기업이란 네 가지 단계로 발전
- 양산형 중소기업 :, 경제발전 초기 단계 소비재나 중간재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시기에 성장한 주도한 중소기업군. 특히 중화학공업화 시기 대기업의 계열형태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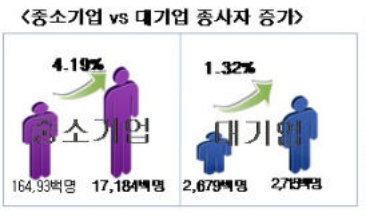
- 소프트형 중소기업 : 1990년대 들어 성숙화된 소비시장에서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가 이루어짐. 섬유산업은 패션산업화되었으며, 기계공업도 제품의 다품종화·고부가가치화의 전략으로 전환.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도 기술, 디자인, 정보 등 소프트 경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도 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 전환, 경영자원의 소프트화로 변화. 다품종소량생산이 대표적
- 개발지향형중소기업 : 다품종소량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벗어나 고도화된 기술수요를 연구하는 개발력을 갖는 것이 성장중소기업의 조건이 됨. 대표적 기업군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임
- 시장창조형 중소기업 :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기업 자립화뿐 아니라 시장측면에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시장의 성숙화에 의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고객의 잠재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조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군



□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

- 한국경제는 2014년 이후, 인구절벽 · 주력산업 위기 · 양극화 등 기존 경제문제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성장잠재력 감소와 사회갈등이 심화
-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교체 필요
-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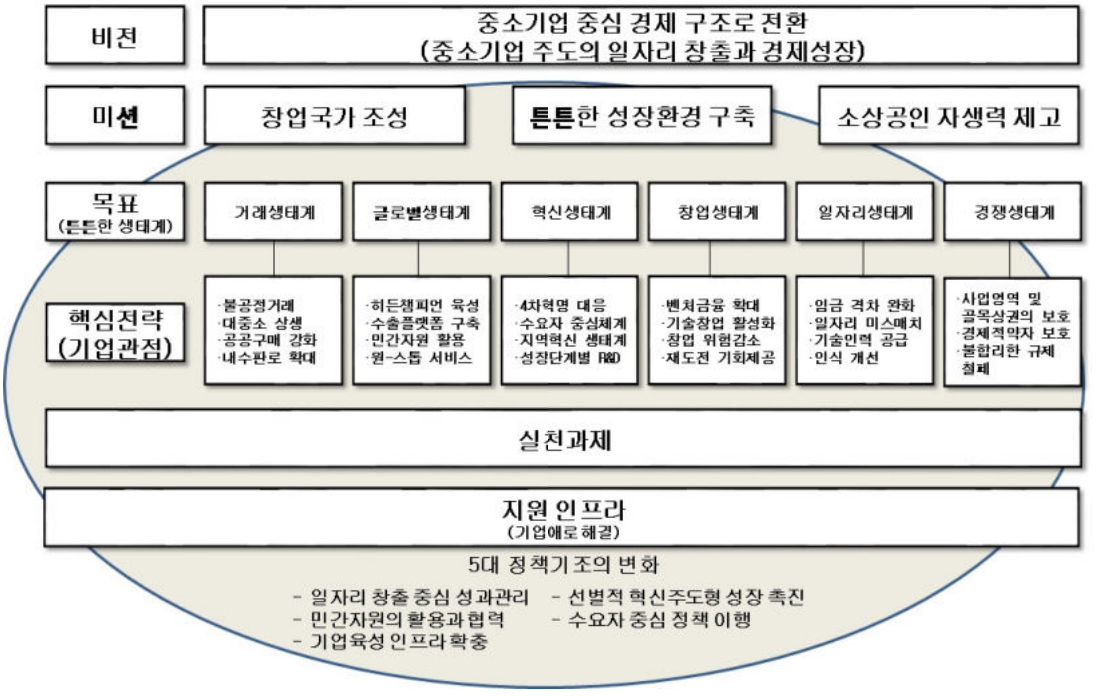






□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양적으로 세계 일등수준이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
- 중소기업정책은 선택과 집중, 성장사다리,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나누어주기식, 살포식 지원의 중단을 표방
- 개별기업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 대상은 개별기업
- 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업은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퇴출-재창업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기에 한국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기업의 창업이나 성장, 퇴출, 재창업 등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함
-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목표의 재정립 필요한 시점
- 기업생태계를 기업의 활동단위 개념에서 접근하여 중소기업이 활동단위별로 다른 기업이나 외부 조직, 외부 자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는 활동단위별 생태계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기업생태계의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정책의 목표
-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업생태계는 거래생태계, 글로벌생태계, 혁신생태계, 창업생태계, 일자리생태계, 경쟁생태계 등으로 구분이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는 개별기업, 애로해결에서 벗어나 기업생태계의 하위생태계들을 형성, 촉진, 발전시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2. 중소기업과 글로벌화

□ Mega FTA 출현

- 글로벌 분업 구조의 가속화,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한 FTA 활용률 하락 등으로 거대 경제권간, 다자간 FTA 논의 활성화
-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 RCEP, 미-EU FTA(TTIP), 日-EU EPA 등

□ 동아시아 지역통합

- 동아시아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대립 격화
- 한-중-일의 전통적 동아시아 분업 구조 와해 우려
- TPP, RCEP은 각각 중국과 미국을 상호 고립시키는 전략?
- 서로가 역내국간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등 GVC 구축, 지재권, 경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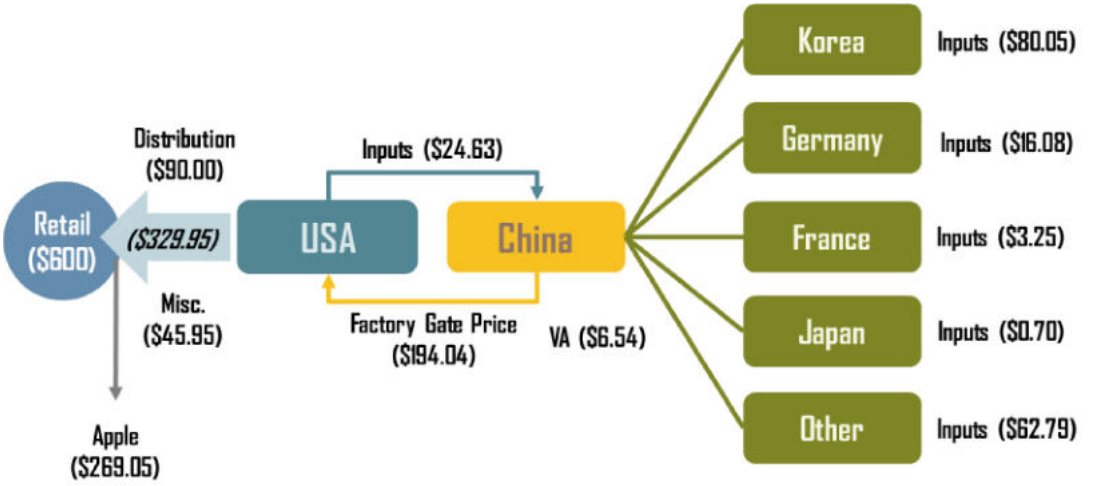
- 무역규범 확립 노력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대-중소 기업 관계 그리고 국제화

- 과거에는 지역-중소기업(local SME)이 수출과 같은 국제적인 활동과 그 활동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성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국제화를 인식
- 즉, 국제화의 과정에서 다국적기업 혹은 대기업 등과 동종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개념
-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혹은 다국적기업)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 대기업의 가치사슬(즉, 대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GVC)에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OECD, 2004)

□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의 배분

- 미국내 시판가 600달러인 iPhone4의 글로벌 부가가치 분배 현황
- 중국 기업들이 iPhone4 1대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대당 194달러의 무역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생성은 6.54달러에 불과
- 간접적으로 중국에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들은 Apple의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 1개 수출시 8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성



□ GVC의 지배(governance) 구조와 환태평양 GVC형 형성

- 모든 산업, 업종, 품목 등의 GVC는 각 각의 특징에 따라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 생산자, 중개업자 등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는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지만, 모든 GVC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님
- 때로 GVC는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형성된 시장적 관계(arm's length market relation),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관계, 비록 자본의 결합관계는 미약하지만 주통솔자(dominating governor)가 지배하는 준계층(quasi-hierarchical) 관계 그리고 해외투자(FDI) 등으로 연계된 계층관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함
- 이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전략과 관련 중요한 시사성을 가짐
- 왜냐하면, GVC를 지배(govern)하는 주체가 해당 GVC에 편입하려는 중소기업의 가입 조건을 규정/규율하고 혹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GVC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GVC의 '게임의 법칙'을 깨달아야 함
- 환태평안 분업구조 속에서 한중일 삼국 주도의 GVC 형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고려
-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직면한 중국과 일본 기업 사이에 끼인 넛 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돌파

2.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앙부처(18개) : 14조 2,939억원, 288개 사업(융자 7.3조)

• 지 자 체(17개) : 2조 2,867억원, 1,059개 사업(융자, 1.2조)

구 분	2015		2016		2017		증가율 ('16-'17)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전 체	152,788	1,287	164,670	1,284	165,806	1,347	0.7
중앙부처	129,987	246	141,374	265	142,939	288	1.1
지자체	22,801	1,041	23,295	1,019	22,867	1,059	△1.8

• 지방정부의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중(사업수 기준)

경영	금융	기술	내수	동반 성장	수출	인력	창업
26.3	16.1	16.3	12.7	0.2	17.6	6.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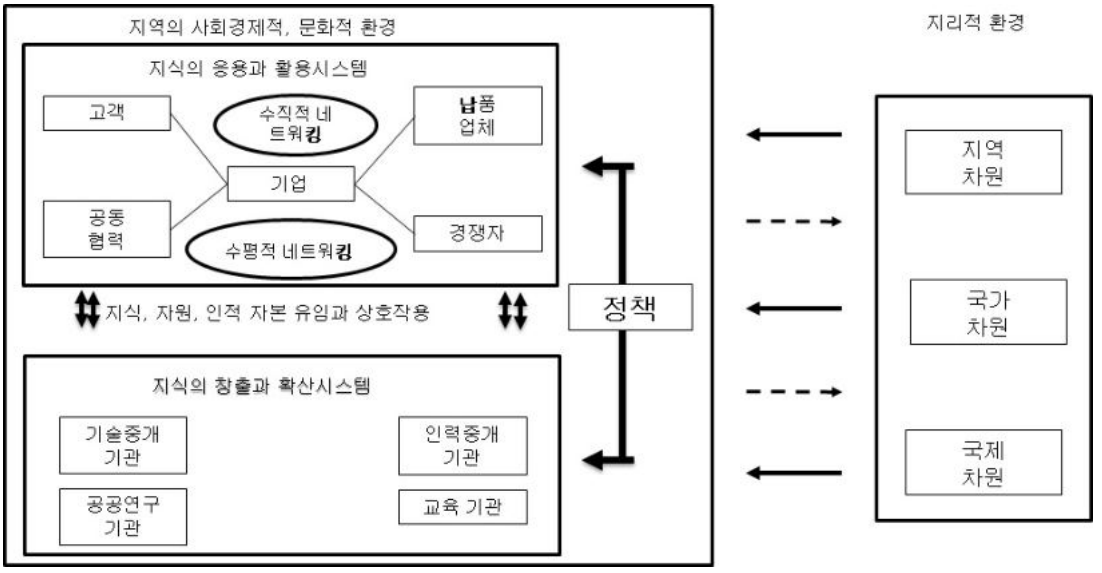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역시 개별기업 지원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

□ 생태계 구축자로서의 지방정부(플랫폼 형성자)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기업생태계 형성과 육성 관점에서 출발

• 기업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기능, 적절한 운용에 좌우

• 플랫폼의 도입,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자의유인과 선순환의 형성이 기업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을 초래



□ 지방의 창업 및 벤처 생태계(예시)

•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

✔ 벤처 생태계에서 실체적 의미와 역할이 큰 구성요소로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주체인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회수경로, 그리고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적 속성인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고수익 창업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제요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혁신창업 인프라 등을 들 수 있음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은 벤처 생태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 혁신창업 인프라는 기반요소에 해당

✔ 이외에도 물리적·제도적 환경, 문화 등 제반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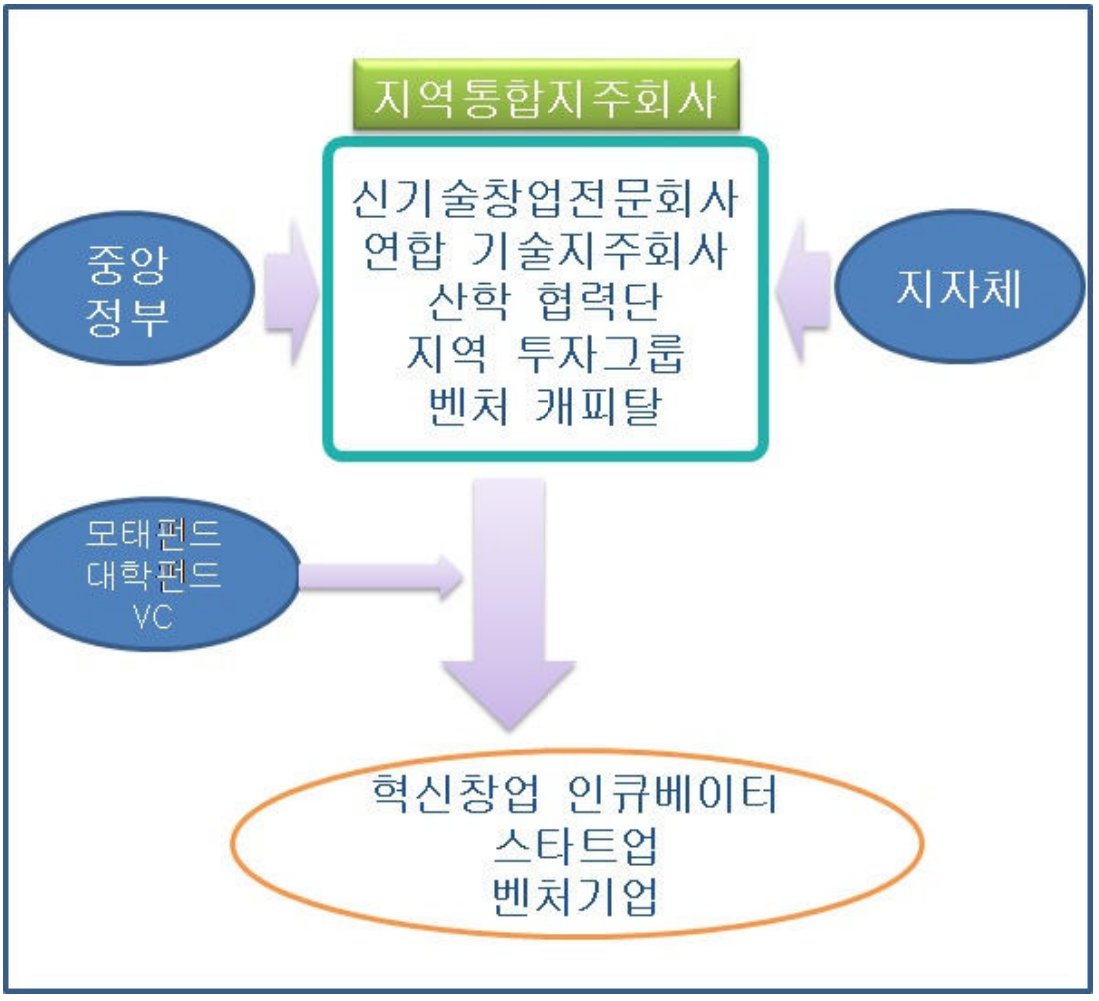
• 지역별 신집적화 거버너스

✔ 현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정책을 광역화하고 개별 대학의 혁신창업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조직화

✔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들이 경합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 대학들을

대학 밖으로 유도하고 지역 차원에서 대학 혁신창업 인프라를 외부 벤처 생태계와 연계시켜 줌으로써 혁신창업의 성과를 구현

- ✔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와 다수 대학이 연합한 형태의 혁신창업 집적지 조성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신집적지를 조성
- ✔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와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신집적지를 지정하되, 신집적지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중앙정부의 신집적지 내 정책자원 투입 대상은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내 운영기구가 되며, 동 기구가 정책자원의 배분기능을 수행
- ✔ 지역내 운영주체는 통합 거버넌스가 선정한 통합 기술지주회사 또는 통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되며 지역 내 관련 지원기구, 투자자, 선도 벤처기업 등이 운영에 참여
- ✔ 운영주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통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하여 집적지 개발기능을 부여
- ✔ 모태펀드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업 운영주체에게 선별적으로 집적화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동 집적지의 통합 거버넌스에 금융, R&D, 인력 등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제공
- ✔ 뉴욕 BTT처럼 신집적지에 대해서는 창업규제 프리존, 법인세 면세 등을 통해 양질의 혁신창업을 적극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허용



□ 생태계의 글로컬라이제이션

-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
- 한중일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
  - ✔ 구매자 탐색에서 협력자 탐색으로 지원 프로그램 전환 등
  - ✔ 일회적 수출 거래에서 장기지속적 거래관계의 형성에 기여
  - ✔ 협력 파트너를 찾아주는 공공서비스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생태계 구축 모색
  - ✔ 한중일을 테스트-베드로 인식하고 기업간 국제적 협력 모색(현지창업 인큐베이팅 등)
  - ✔ 창업이나 기업의 목표시장을 내수시장 중심에서 한중일→아시아→글로벌로 확대
  - ✔ 한중일 투자금융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태계 형성에 주도적 역할 담당
  - ✔ 한국 지역 생태계가 중국, 일본 등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도 함께 추진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생태계의 수준을 점검하고 육성 분야 및 대상에 적합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level-up 전략 수립 필요

발제문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중국의 정책 조치

자오유푸
중국 산둥대학(웨이하이)

1. 중국 취업문제 해결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소기업은 중국 민영 경제의 주체로 줄곧 중소기업은 취업 촉진, 민생 개선, 경제 발전, 사회 안정의 중요한 기초이었으며 시장 경쟁을 보증하고 시장 번영을 촉진하는 기본 역량이자 기술 혁신의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은 민생과 사회 안정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중소기업의 신속한 발전은 경제 성장, 취업 루트 확대, 자주 혁신 추진, 조화로운 사회 구축 등 방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가. 규모의 확대, 경제적 효익 증가 현저

2015년 말, 중국 중소기업은 2,000만 개, 개인사업자는 5,400만 개를 초과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이윤과 세금 기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공업을 예로 들면, 2015년 말까지 전국의 규모 이상 중소공업기업은 규모 이상 공업기업 수량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2.5조 위안을 실현하여 규모 이상 공업기업 세금 총액의 49.2%를 차지하였고 이윤은 4.1조 위안을 완성하여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64.5%를 차지하였

다. 중소기업은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취업의 주요 채널이 되었다.

(1) 민영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비중이 제고되었다.

민영경제 수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중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657.42만 개, 개인사업자는 2917.33만 개에 이르렀다. 2015년 중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1908.23만 개, 개인사업자는 5407.94만 개에 이르러 동기대비 각각 23.4%, 8.5% 성장하였다. (그림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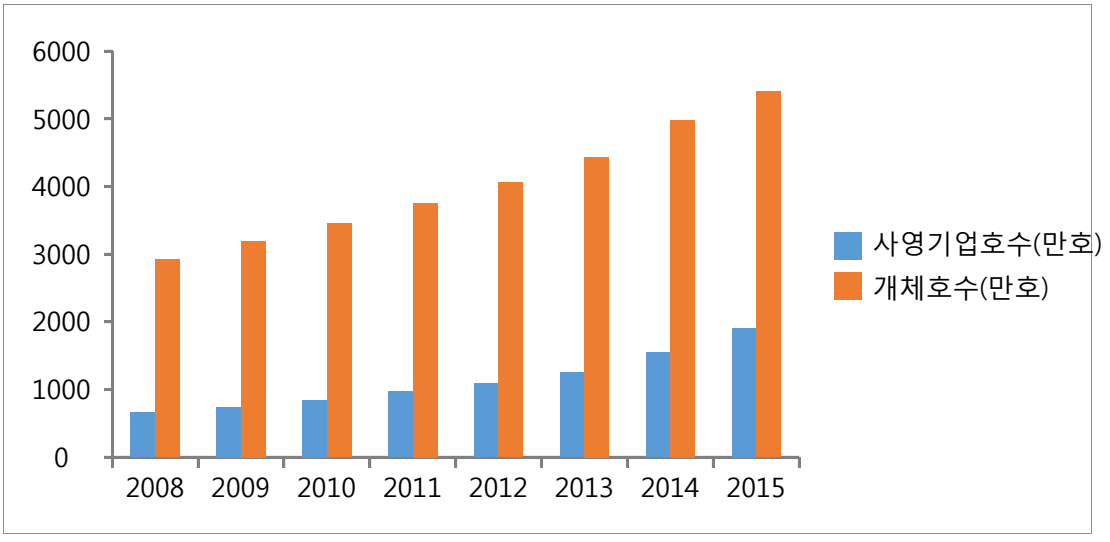


그림 1.1 2008~2015 사영기업과 개인사업자수 (자료출처 : 중국통계국 자료 정리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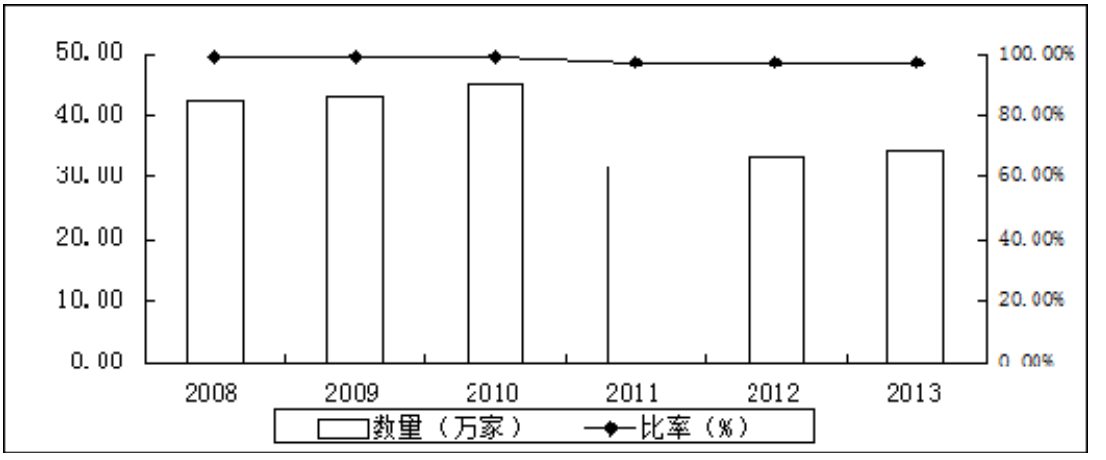


그림 1.2 2008-2013년 중소기업 숫자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 비중 (자료출처 : 정신, 친즈후이 : 《2009-2014년 중국중소기업연감》, 경제과학출판사 정리)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양호하다. 2008년부터 2010년 수량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간 하락하였 으나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중국 규모이상 중소기업 수량은 42.29만 개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99.3%를 차지하였다. 2010년 중국의 규모 이상 중소기업 수량은 34.30만 개로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였다. (그림1.2 참조)

(2) 민영공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중소기업 판매생산액의 비중이 크다.

비록 중국 사영기업은 최근 2년간 이윤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 주식회사,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 보다 높다. 2008년 사영기업 공업이윤 총액은 8302.06억 위안으로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27%를 차지하여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보다 약간 높았으며, 2015년 사영기업 공업이윤 총액은 24,249.73억 위안으로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36.6%을 차지하여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 보다 52.2% 높아(그림1.3 참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민영공업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16년 전국 공업 발전 성장 속도는 전체적으로 주춤하였으며 공업기업 이윤 총액은 소폭 반등하였고 다른 소유제 공업기업의 성과는 분화되었

고 사영기업 성장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효익은 안정적이었고 국유지분 우위기업 성장은 느렸고 효익은 두드러지게 하락하였다. 2016년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115.16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4.9% 성장하였다. 실현 이윤은 6.88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8.5% 성장하였다. 주영업 활동 수입 이윤율은 6.0%로 2015년 말에 비해 0.21%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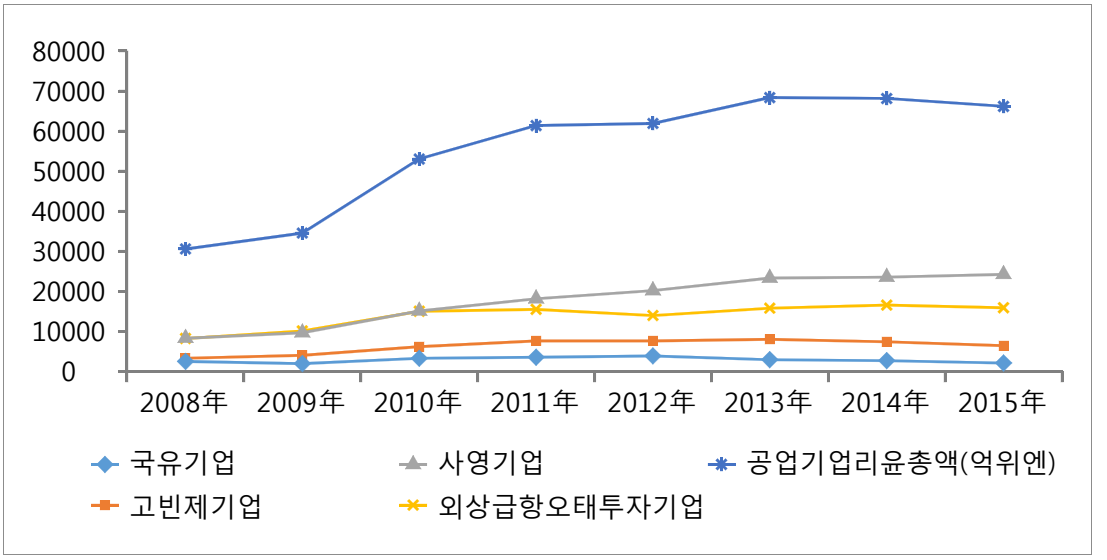


그림 1.3 2008~2015 공업기업 이윤총액 (자료출처 : 《2009~2014중국통계연감》 정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중소기업 판매생산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였다. 2008년 중소기업의 판매생산액은 33.8조 위안으로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6% 이었고 2013년 중소기업의 판매생산액은 61.9조 위안으로 제고되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2% 이었다. (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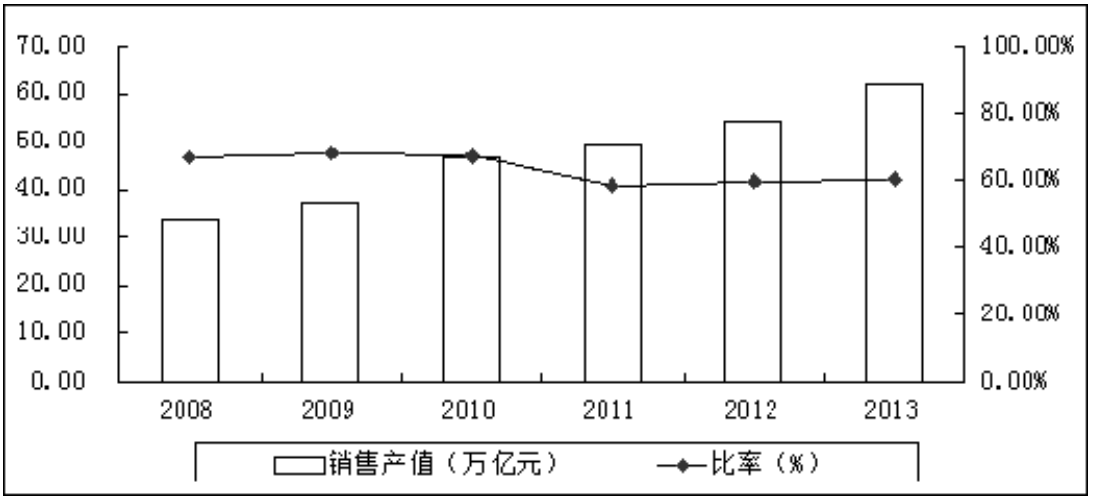


그림1.4 2001~2013년 중소기업 판매생산액 및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 그림 1.1과 동일)

(3) 경제적 효익의 성장은 빠르고 사회 공헌은 확대되었다.

2015년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1,109,852.97억 위안으로 그 중 국유 공업기업은 45,201.64억 위안, 4.07%를 차지하였고 동기대비 −9% 성장하였다. 집체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6,726.92억 위안, 6.06%를 차지, 동기대비 −12% 성장하였다. 주식회사 주영업 활동 수입은 99,630.68억 위안으로 9.0%를 차지, 동기대비 −5% 성장하였다.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의 주영업 활동 수입은 245,697.55억 위안, 22.1%를 차지하였고 동기대비 −3% 성장하였다. 사영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386,394.6억 위안으로 점유율이 가장 큰 34.8%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3.8% 성장하였다. (그림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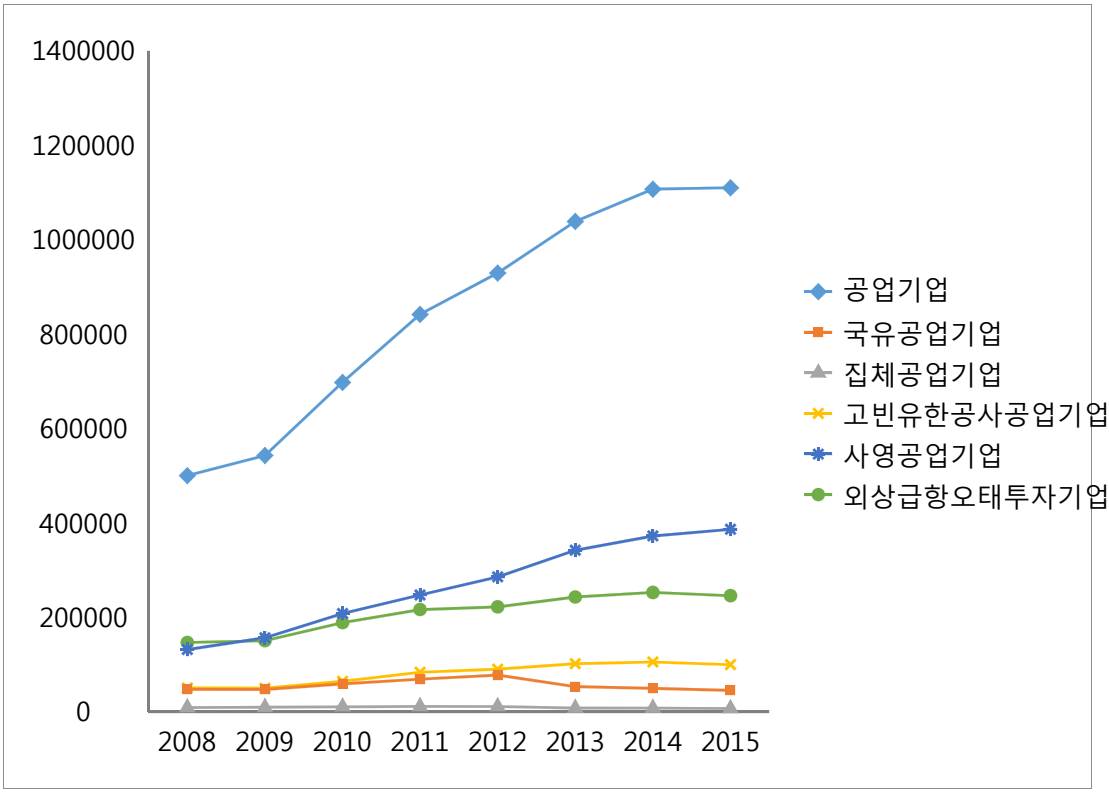


그림1.5 2008—2015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 (자료출처 : 그림 2.1과 동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1년 약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 중소기업 이윤 총액, 세금 총액 전체는 성장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의 이윤총액, 세금총액은 2008년의 20,043.6억 위안, 14,253.3억 위안에서 각각 2013년의 38,154.8억 위안, 22,354.1억 위안으로 높아졌고, 사회 공헌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익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고 사회 공헌은 확대되었다. (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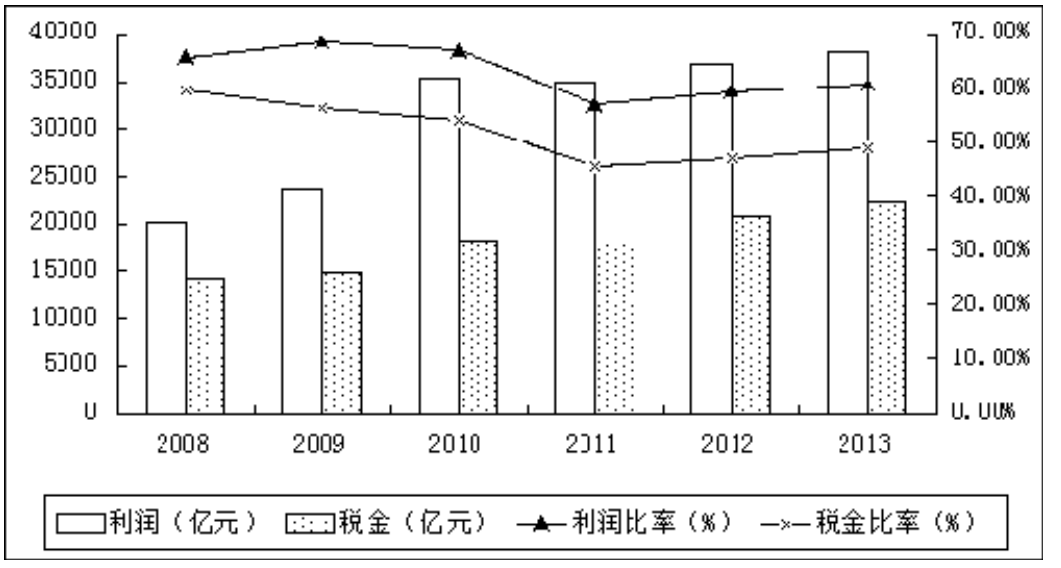


그림1.6 2008~2013년 중소기업 이윤세금총액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 그림1.1과 동일)

나. 취업인원의 비중이 높고 공헌이 두드러졌다.

(1) 민영기업이 취업과 신규 취업의 80% 이상을 차지

제2차 경제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전국 기업법인 단위 종사자 수는 21,889만 명으로 그 중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이 4,384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그 중 국유기업 2,202만 명, 10. 1%) 집체기업 905만 명, 4. 1%를 점유했다. 사영기업은 9,149만 명으로 41. 8% 점유, 외상기업은 3,113만 명으로 14. 2%를 차지했다. 회사는 5,959만 명으로 27. 2%를 점유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기업법인단위 종사자는 국유 및 주식이 20% 점유했고 나아가 집체 및 주식, 공유제 경제 종사자가 25% 정도를 점유했다. 사영 및 주식과 외자 등 비공유제 경제는 약 75%를 차지하였고, 나아가 집체 및 주식 경제, 비국유의 민영경제 종사자는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제3차 경제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공업기업 법인단위 종사자수는 14,025.8만 명, 내자기업은 80.3%을 점유,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이 9.6% 점

유, 외상투자기업이 10.1%를 차지하였다. 내자기업 중, 국유기업 종사자는 478.5만 명에 달하고 전체 기업의 3.4%를 차지하고, 집체기업 종사자는 173.6만 명으로 1.2%를 차지하였고 사영기업 종사자는 6,272.2만 명으로 44.7%를 점유하였다. (표1.1 참조)

표 1.1 2013년 공업기업 종사인원수

기업유형	종사자
국유기업	478.5
집체기업	173.6
주식유한회사	847.6
사영기업	6,272.2
홍콩마카오타이완 및 외상투자기업	2,766.7

(자료출처 : 제3차 경제 센서스 데이터 정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상은 법인단위 종사자일 뿐 개인 사업체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8년 전국 도시 취업자는 32,103만 명으로 그 중 개인사업 종사자는 3,609만 명이다. 이 외에 농촌의 종사자 중 향진기업(乡镇企业)은 15,451만 명(다수가 농촌 집체기업을 제도조정한 사영 위주의 기업), 사영기업 2,780만 명, 개인사업자 2,167만 명이다. 그러므로 전국 비농 취업자로 보면 비국유의 민영 경제가 이미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국통계연감(2016)》의 관련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면 2015년 전국 도시 취업자는 40,410만 명이고 그 중 국유단위가 6,208만 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집체단위는 481만 명, 1. 2%를 점유하였다. 회사는 8,187만 명으로 20.3%, 사영기업 11,180만 명으로 27.7%, 외상기업은 2,790만 명으로 6.9%, 개인은 7,800만 명으로19.3%를 차지하였다. 상술한 회사의 종사인원 중 3/4 이상은 사영법인 지주회사 종사자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영경제는 특히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은 대량의 도시 노동력, 농촌 잉여 노동력, 대학 졸업생 등을 위해 대량의 취업 일자리를 창조하였고, 사회 취업을 흡수하고 도농 주민의 임금 성격의 수입을 늘리고 국민 생활을 부단히 개선하는 주요 출처가 되었다.

표1.2 2008–2012년 중소기업 종사자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 도	종사자수(만 명)	비 중(%)
2008	6867.1	77.7
2009	6787.7	76.9
2010	7236.9	75.8
2011	5935.7	64.7
2012	6129.0	66.1

(자료출처 : 그림1.1과 동일)

전국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역시 성장 추세를 보이지만 2008년 중소기업 종사자 총수는 약간 하락하였고 2010년에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2011년 종사자 수는 다시 약간 하락하였으나 2012년 빠르게 회복되었다. 매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공업 기업 취업자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의 취업 압력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표1.2 참조)

(2) 민영기업 임금 소득은 해마다 증가, 업계 차이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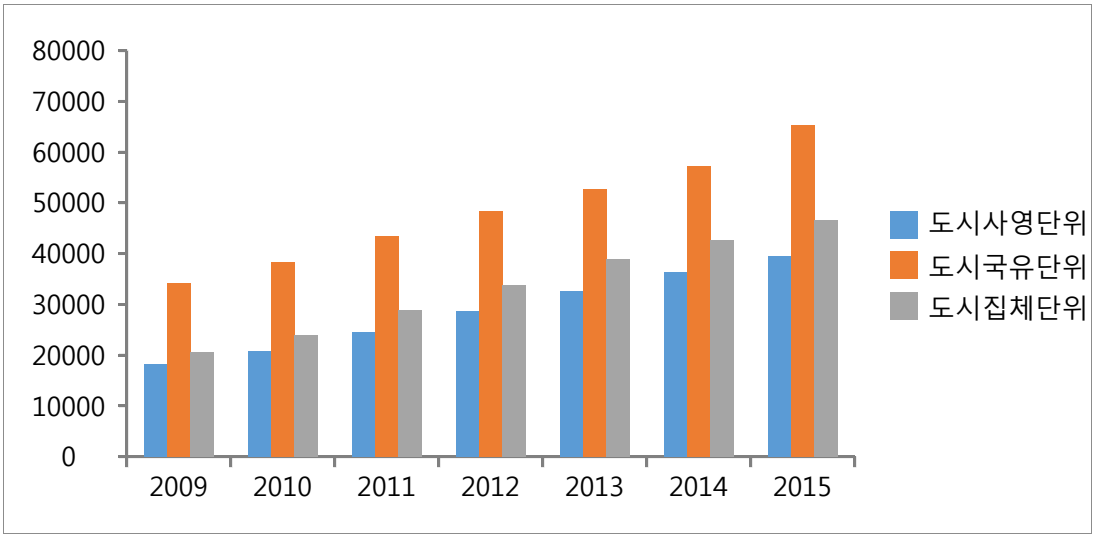


그림 1.7 2009-2015년 전국 각 도시 단위 취업인원 평균 임금 단위 : 위안
(자료출처 : 그림 1.4과 같음)

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각 도시 단위 평균 임금은 모두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 사영단위와 도시 집체단위 평균 임금은 줄곧 도시 단위 평균 임금보다 낮았으며 도시의 국유단위 평균 임금은 줄곧 도시단위 평균 임금보다 높았다. 2009년 도시 사영단위의 평균 임금은 18,199위안이고 도시 집체 단위 평균 임금은 20,607위안으로 도시단위 평균 임금 32,244위안보다 낮았다. 2015년 도시 사영단위의 평균 임금은 39,589위안, 도시 집체단위 평균 임금은 46,607위안, 도시 국유단위 평균 임금은 65,296위안이었다.

업종으로 보면, 민영경제의 각 업종 취업자 평균 임금 차이는 비교적 컸다. 정보 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조사업, 금융업, 건축업 등 업종의 평균 임금은 비교적 높으며, 민영경제 평균 임금 수준보다 높다. 2009년 민영경제 평균 임금은 18,199위안,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의 평균 임금은 28,166위안,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조사업 평균 임금은 26,187위안, 금융업 평균 임금은 30,452위안, 건축업 평균 임금은 19,867위안, 공공관리와 사회조직 평균 임금은 8,191위안, 농림목어업 평균 임금은 14,585위안,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업종 평균 임금은 15,688위안이다. 2015년 민영경제 평균 임금은 39,589위안,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의 평균 임금은 57,719위안,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조사업 평균임금은 50,441위안, 금융업 평균 임금은 44898위안, 건축업 평균 임금은 41,710위안이다. 농림목어업,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업종 평균임금 수준은 비교적 낮아서 민영경제 평균 임금 수준 보다 낮았다.

(3) 산업 분포가 집중적이고 노동집약형 업종 위주이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 공업형 중소기업 수량 순위 10위의 대분류 업종 변화는 크지 않았다. 비록 매년 대분류 업종의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범용설비 제조업, 방직업, 비금속 광물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제품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금속제품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방직의류복식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1.3 참조)

표 1.3 2008~2013년 공업형 중소기업 순위 10위의 대분류 업종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2	방직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범용설비 제조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3	비금속광물 제품업	방직업	방직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4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5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방직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6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방직업	방직업
7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8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9	전용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10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방직의류복 식업	방직의류복 식업

주 : 상기 표에서 서술한 10대 업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 순위 10위의 업종이다. (자료출처 : 표1.2와 같음)

중소기업은 자체 규모가 작고 제품 구조가 단일하며 초급 제품 가공 비중이 크며 리스트 대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은 업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노동집약형 업종은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중국이 보유한 노동자원은 독보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 위주이지만 전체 산업 차원이 낮은 편이고 경영관리 수준이 높지 않다.

한편 민영경제는 대부분 제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전국 개인사업자 실재수 산업 구조 중, 제1차 산업은 2.03%, 제2차 산업은 7.41%, 제3차 산업은 90.56%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사영기업 실재수 산업 구조 중, 제1차 산업은 2.76%, 제2차 산업은 25.20%, 제3차 산업은 72.04%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8와 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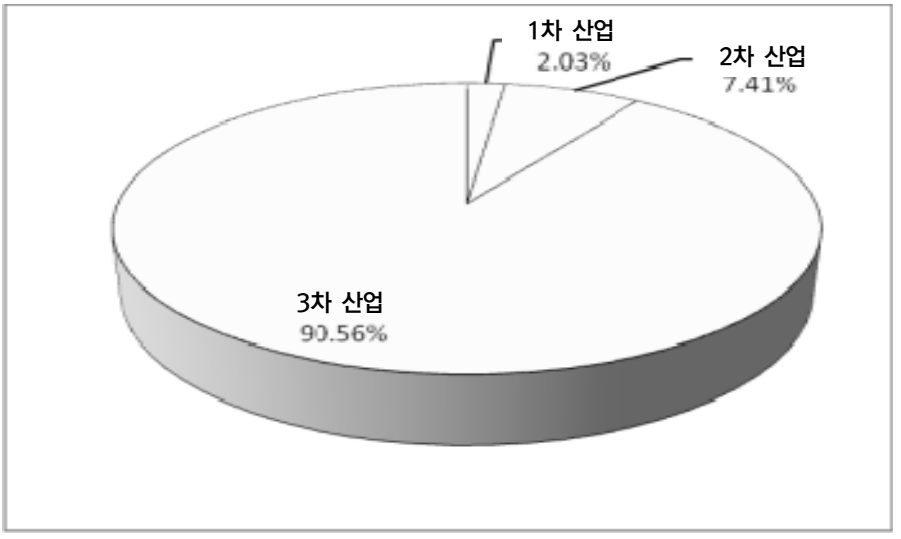


그림 1.8 2013년 전국 개인사업자 실재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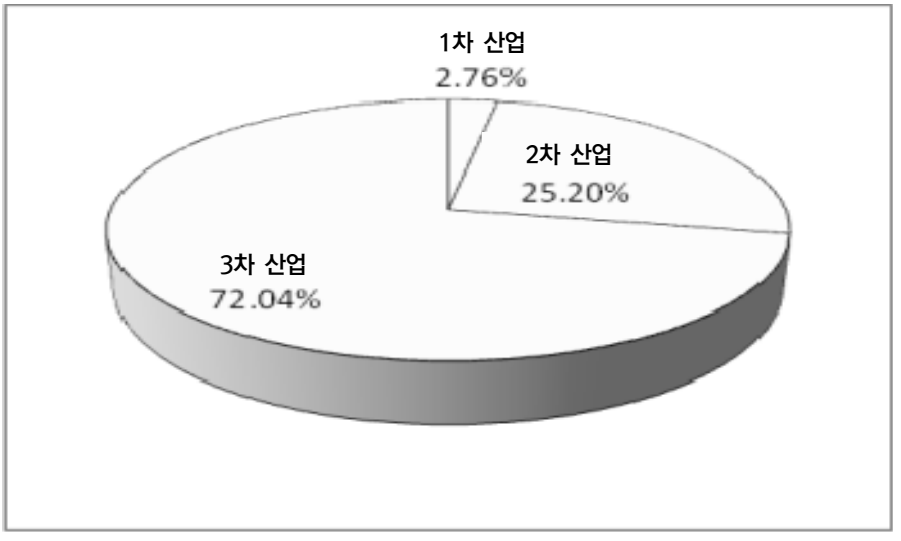


그림 1.9 2013년 전국 사영기업 실재수 산업구조

(자료출처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 《중국민영경제발전보고》,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5년 한 해 전체 공업 부가가치는 228,974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5.9% 성장하였다.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6.1% 성장하였다. 규모 이상 공업에서 경제 유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국유지분 우위기업은 1.4% 성장하였다. 집체기업은 1.2% 성장, 주식회사는 7.3%,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은 3.7% 성장하였다. 사영기업은 8.6% 성장하였다. 분류로 나누어 보면, 채광업은 2.7%, 제조업은 7.0%,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1.4% 성장하였다.

다른 경제 유형의 공업기업 영리 상황을 대조하여 절대치에서 봤을 때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투자 총액은 사영기업의 1.7배 정도이고, 양자는 각각 전국 자산 총액의 37.9%와 2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영기업의 주영업 활동 소득과 이윤 총액은 오히려 각각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두 배 정도와 두 배 이상으로 사영기업의 주영업 활동 소득과 이윤 총액은 각각 전국의 35.5%와 35.3%를 차지한다. 사영기업의 매출 이윤율 역시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과 비교하여 0.9%P 높으며 둘은 각각 5.9%, 5.0%이다. 데이터로 보면 비록 전체 경제가 하행하고 있지만 민영기업 영리능력은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보다 현저하게 강하다.

2015~2016년의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소득 이윤율 상황을 분석하면 외자기업 이윤율 수준이 여전히 가장 높고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 이윤율이 가장 낮으며 사영기업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윤율 변동폭은 비교적 작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영기업 영리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2.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대한 기본 정책적 조치

1998년 9기 전인대 2차회의는 《199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199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통과시키고 199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한 임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역시 과학기술형 중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언급하였다.

1998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진일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고 금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재취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 시범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을 제정하였고 중소형기업의 신용담보체계에 대해 첫 번째 배치를 하였다.

2000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 발전 장려 및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의견》을 반포하였고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대대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2)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3)재정조세 정책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4)융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5)신용담보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6)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전하게 한다. (7)공평 경쟁의 외부 환경을 창조한다. (8)조직적 지도를 강화한다.

2002년 9기 전인대 28차 회의는 《중소기업촉진법》을 통과시켰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서비스를 개선, 법에 따라 규범화하고 권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1)중소기업이 법에 근거하여 경영관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자체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2)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재정예산에 중소기업 과목과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종합 신용 담보 및 기술혁신 장려, 퇴직 근로자 취업 배치,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중소기업 창립 등에 중점적으로 이용한다. 건전한 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 체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융자 환경을 개선한다. (3)국가는 정책을 제정하고 다방면의 서비스 등 수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4)개인 혹은 법인의 중소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심사 비준 조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기 수속을 간소화하며 세수 등 정책상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 지원을 한다. (5)중소기업이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국내 및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격려한다. (6)건전한 중소기업의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기술, 관리, 재무 훈련을 확대하고 인재 시장을 발전시킨다.

2004년 재정부는 《중소기업 융자담보기구 리스트 잠정 방법》을 하달하였고 주로 정부 예산 및 자산 할당을 통해 지도와 지원을 진행하였다.

2005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개인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 지원 및 지도 격려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하달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1)비공유제 경제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2)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재무조세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3)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4)비공유제 기업과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한다. (5)비공유제 기업의 자체 소질 제고를 지도한다. (6)정부의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한다. (7)비공유제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와 정책 협조를 강화한다.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며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격려하고 실업자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며 실업자가 창립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수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09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중소기업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하달하였고 주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중소기업 정책 법률체계를 개선한다. (2)중소기업 융자난을 확실하게 해결한다. (3)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조세 지원을 확대한다. (4)중소기업 기술 진보와 구조 조정을 가속화한다. (5)중소기업의 국내 및 국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6)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7)중소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한다. (8)중소기업 업무의 조직적 지도를 강화한다.

2010년 국무원은 《민간 투자의 건강한 발전 격려 및 지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비공유제 경제의 진입 업종 제한 확장에 대해 더욱 명확한 표시가 있었다.

2011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의 지속적 실시에 관한 통지》와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잇따라 반포하였고 주로 중소형기업의 세수를 겨냥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영업세, 토지 부가가치세 등 방면을 포함한다.

2012년 국무원은 《소형미형 기업의 건강한 발전 진일보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고 중소형 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명확히 하였고 중소형 기업의 신용담보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였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은 《소형미형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 진일보 지원에 관한 통지》를 인쇄배포하였고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판매액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 부가가치세의 소규모 납세인과 영업세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혹은 영업세 징수 면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시 《소형미형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를 반포하였고 분기별 납세, 다른 과세 항목의 겸영, 전용 영수증 발급 등 문제를 겨냥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놓았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은 《소형미형 기업 징수면제에 대한 관련 정부성 기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다음을 규정하였다. (1)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별 납세하는 월 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세하는 분기 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9만 위안(9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설 기금,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 (2)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장애인 취업 배치가 규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재직 직원 총수가 20인 이하(20인 포함)인 소형미형 기업에 대해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면제한다.

2015년 국가는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연 20만 위안(20만 위안 포함)보다 낮은 소형박리기업에 대하여 그 소득을 50% 줄여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상하고20%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 납부를 규정하였다. 그 후, 국가세무총국는 다시 《소형박리기업의 기업소득세 절반 징수 범위확대의 실행 관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를 인쇄배포하였고 세수정책 조정에 적응하고 일부 구체적인 관리 조작 문제에 대해 진일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2015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소형미형 기업 창업 시범기지 건설 관리 방법》을 인쇄배포하였고 소형미형 기업 창업 시범기지의 신고조건, 신고절차, 시범기지관리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2016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소형미형 기업 창업혁신 시범기지 건설 관리방법》을 인쇄배포하였고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혁신에 대한 중시와 전체 사고

방향의 전환 즉, 각종 형식의 창업과 각종 형식의 혁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혁신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으로 혁신을 이끌고 창업과 혁신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양호한 전환의 실현을 부각시켰다. (2)소형미형기업 창업혁신기지 플랫폼화, 스마트화, 생태화 발전을 추진한다. (3)창업 혁신 시범기지 건설과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운영 모델의 다원화를 부각시켰다.

2016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발전 촉진계획 (2016~2020년)》을 인쇄배포하였고13차 5개년 계획 시기 중소기업 발전 촉진의 전체 사고방향, 발전목표, 주요 임무와 관건이 되는 공정과 특별행동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주관부처의 직책 이행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3. 대중창업, 만중창신,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가.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1)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메커니즘에 대한 영향

'쌍창(双创, 대중창업과 만중창신)'의 제기는 바로 원천에서부터 일자리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과거의 일자리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취업모델을 바꾸고 인력자원을 주도 요소로 하여 취업의 각종 자원 사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자원 배치 효과의 최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취업 메커니즘은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부처에 대한 영향

중국인민대학 중국취업연구소와 ZPIN이 공동 발표한 중국취업시장 경기지수(CIER 지수로 약칭)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CIER지수는 1.91으로 비록 계절적 반락이 나타나지만 전년 동기 수준보다 높다. 2017년 2분기에 진입하고 동분기 CIER 지수는 2.26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취업 형세가 안정에서 좋음으로 가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

다. 취업 형세가 양호한 10대 업종은 다수가 '인터넷+'의 신경제이다. (그림 3.1 참조) 그러므로 '쌍창'의 추진은 바로 신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이에 따라 미래 중소기업 취업부처는 전통적인 부처에서 신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형세가 출현할 것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에 관한 중대한 전략 배치를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하여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제조2025》와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 건설 및 '인터넷+' 소형미형 기업 쌍창 육성행동을 중심에 두고 실시한다. 대중창업, 만중창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풀뿌리 창업 혁신 잠재력을 일깨우고 창업혁신 자원을 집결하며 중소기업과 창커(创客)를 위해 교류전시, 산업금융결합, 프로젝트 인큐베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쌍창 프렌들리 프로젝트와 우수 단체를 찾아 육성하고 신제품, 신기술, 신모델과 신업태의 탄생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전환 업그레이드와 혁신 발전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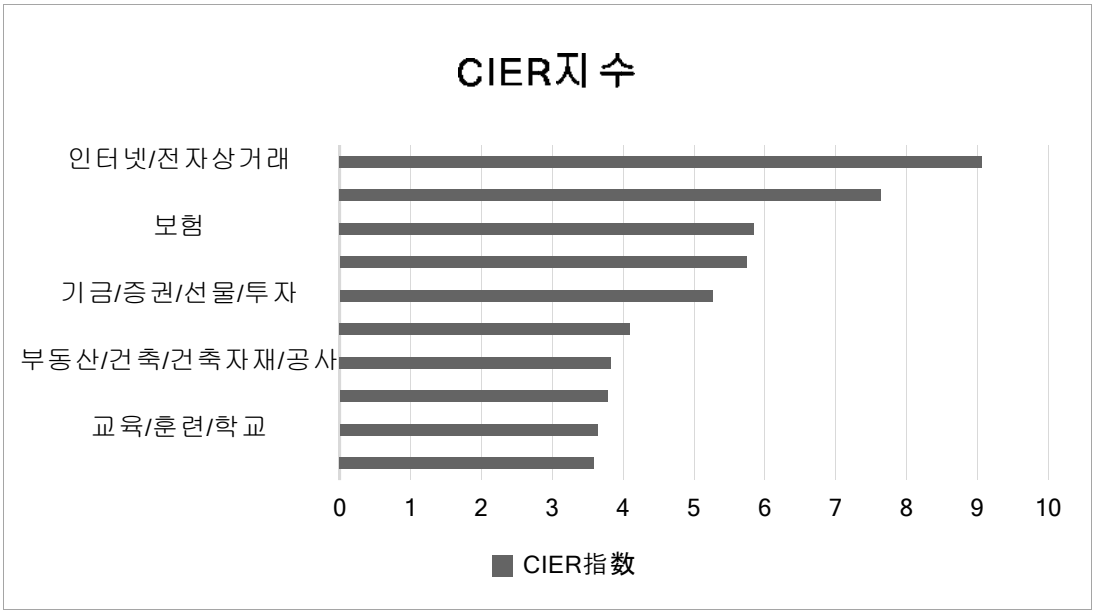


그림 3.1 2017년 2분기 취업 상황이 양호한 10대 업종 (자료출처 : 2017년 2분기 《중국취업시장경기보고》 정리)

(3)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품질에 대한 영향

대규모 기업은 리스크 대처능력이 강하고 시장 진입이 신중하며 규모 경제 등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중소기업 보다 높고 평균 수명이 길다. 중소기업은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고 취업 품질이 낮기 때문에 '쌍창'이 시장경쟁과 우승열패를 부각시킨다. '쌍창'은 창업 주체가 시장 경쟁과 등가교환 과정에 참여하여 혁신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저원가 우세가 형성한 경영모델에 기반하여 대부분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로의존 경향이 생겼지만 자주혁신을 통해 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창'은 중소기업의 최적화에 유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 안정성을 제고한다.

나.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1)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

(가)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 기간이 기업 운영과 관리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여 남성이 이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여성직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격려하기 위하여 여성의 임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남녀 임금 불균형 현상을 개선한다. 동시에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은 업무 기회를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에 취업 안정성이 비교적 강하고 쉽게 이직하지 않아 인재 유동성이 비교적 큰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 외에 원래 전업주부였던 여성이 둘째를 출산하고 생긴 생활비의 증가로 인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노동력의 일시적 부족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출산율이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여성이 비교적 집중된 일자리, 예를 들어 서기, 비서, 회계 등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쉽게 출현하고 그리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구조의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임신한 여성직원의 업무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관리자가 업무를 계획하는데 도전이 되었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기업 여직원의 두 차례 출산 휴가를 가능하게 하였고 두 번의 출산은 7개월의 업무공백기를 부대하였고 중소기업은 이를 위해 출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여성직원의 출산기간의 인재유실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효익과 시간 상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여성 직원의 둘째 출산 집중이 기업 업무에 가져오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통상적으로 기업 여직원의 출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생기기 쉽다.

중소기업 취업의 흡수능력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여성은 자신의 출산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체제 안에서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더욱 있을 수 있으며 국유기업, 사업단위, 공무원 직위는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구직을 하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중소기업 인재 구조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만약 여성이 둘째 출산을 선택한다면 여성의 출산 주기가 연장되어 가정에서 남성의 소득 압력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일부 기술자, 고위관리자 등은 더 좋은 임금과 대우, 발전 전망을 추구하여 대형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나.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장기적 영향

(1)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업종 발전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의 보급으로 인해 일부 교육, 서비스 시장 발전이 왕성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영아 교육, 어머니와 아기의 생활용품 및 의료보장 등 업종 발전 전망이 양호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새로운 정책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응하는 취업 추세 역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

최근 들어 공공취업 서비스 기구 시장 수요는 모두 시장 공급 보다 약간 높으며 노동력은 명확하게 부족하고 게다가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나 두 자녀 정책의 실시로 미래에는 노동력의 증가가 생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력 시장에는 호재일 것이다. (그림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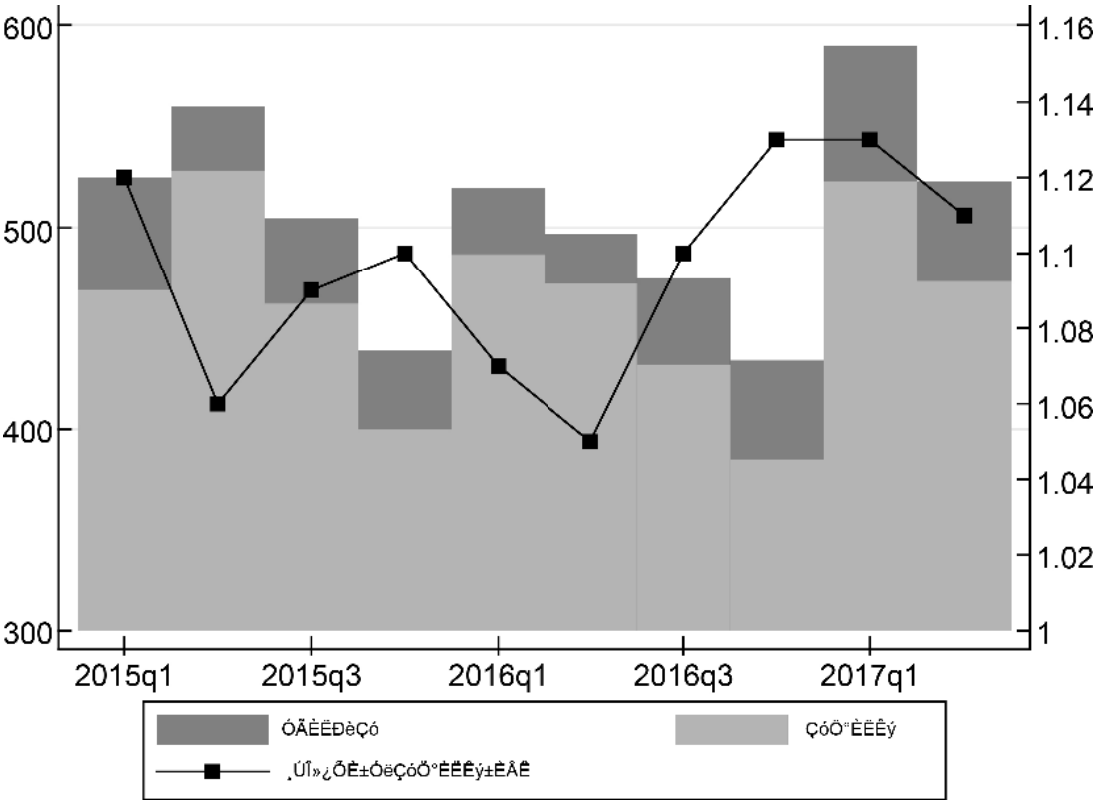


그림3.2 2015 1분기~2017 2분기 노동력 시장 고급 상황 단위 : 만 명
(자료출처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정리)

다. 결론

(1)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중소기업 취업 메커니즘으로 보면 '쌍창'은 자원 배분 효과의 최적에 유리하여 중소기업의 취업 메커니즘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부처를 보면 미래 중소기업 취업부처는 전통적인 부처에서 신경제 부처로의 전환 형세가 출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품질면에서 '쌍창'은 중소기업의 최적화에 유리하고 그리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2)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 영향은 남녀 임금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여성직원의 취업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느 정도 중소기업 노동력의 일시적 부족을 완화하는데 있다. 부정적 영향은 기업의 경제 수익을 떨어뜨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으며 일부 일자리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 미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지방정부 중소기업 취업 촉진 정책조치 - 웨이하이를 예로 들어

웨이하이시의 중소형 기업의 영업소득은 전체 시의 72.86%를 차지하며 산둥성 61.2%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 이윤과 세금 총액은 전체 시의 72.69%를 차지하고 이윤 총액 성장률은 15.87%에 이르며 매출채권이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6%이다. 이는 중소미형 기업이 전체 시의 전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지만 매출채권과 완제품 재고의 지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종사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으며 자금 유동은 빠르지만 전체 자산 규모는 작음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웨이하이시 각 부처 역시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다음의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가. 대학졸업생 창업 취업 촉진 , 인재 유입 확보

(1) 대학 졸업생의 취업 실습 일자리 신청

현재 웨이하이시는 취업실습기지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자주적 신청, 등급별 관리, 우승열패의 동태적 관리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으며 웨이하이시 인사부처는 구 취업실습기지에 대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3년 내에 실습 일자리를 신고하지 않고 졸업생의 취업실습 참가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취업실습기지 자격을 취소하였고 취소된 업체는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조건 보류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졸업생 취업 주관 부서가 다시 공포하였다.

(2) 소형미형 기업의 대학생 고용 사회보험 수당 향유

소형미형 기업이 대학 졸업생 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하고 소형미형 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웨이하이시는 대학 졸업생 취업을 흡수하는 소형미형 기업을 위해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하였다. 수당 범위와 조건 방면에서 소형미형 기업이 졸업연도와 직업선택 기간 내에 대학 졸업생을 신규 고용하고 1년(포함)이상 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할 경우, 기업에 1년의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표준은 소형미형 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위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 비용에 따라 확정한다.

(3) 대학생 창업기업 창업 수당 획득

현재 웨이하이시 인사부처 창업수당 정책은 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즉, 1회성 창업수당, 1회성 창업 일자리 개발 수당과 1회성 창업장소 임대 수당으로 이 3대 창업 수당의 커버 범위는 대학생 계층을 포함한다. 2014년 6월 17일 이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법정 노동연령 내에 있으며 웨이하이시 호적의 취업 후 실업한 사람, 대학생(졸업 5년 이내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웨이하이 주재 대학의 재학생, 호적 요구 없음, 이하 동문)에게 5,000위안의 1회성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

나. 우대정책 출시, 고급 인력 흡수

2010년 웨이하이시 인사부처는 《웨이하이시 고급 인력 혁신 창업 유치의 몇 가지 규정》과 《웨이하이 유학생 창업단지 관리 방법》 등 정책 문건을 잇따라 내놓고 웨이하이에서 혁신창업하는 고급 인력에게 정책적 지원과 경비 보장을 하였다. 2013년 웨이하이시는 2.7만 명의 각종 인재를 유치하였고 고급 기술 인력 7,200여 명을 육성하였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우수한 고급 인력이 국가 '천인계획(千人计划)'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인재추진계획, 산둥성 타이산 학자 등에 등록하도록 적극 추천하였다.

2014년 웨이하이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웨이하이 영재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을 내

놓고 현대 산업, 문화, 교육, 위생, 농업, 금융, 사회업무 등 다양한 영역의 18개 항목의 인재 유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후속적으로 《만명 대학생 웨이하이 집결 창업계획》, 《기업박사집결계획》 등 14개 부대 문건을 인쇄배포하고 인재유치평가 인정, 임금대우, 주택보장, 자금지원, 배우자와 자녀의 정착 등 방면의 우대정책을 언급하였다. 전방위 다차원의 수준 높은 혁신 인재 체계 구축은 웨이하이 전역을 인재의 지식이 고도로 집약되고 체제 메커니즘이 특히 우월하며 혁신창업이 고도로 활발하고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재발전 전략고지로 건설할 것이다.

2015년 웨이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웨이하이시 해외 고급인재 유치 서비스 녹색통로 잠행방법》을 인쇄배포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 육성하고 혁신창업 그룹을 확대하고 기업 취업을 촉진하였다.

다. 각종 그룹의 자주 창업, 적극 취업 지원을 장려

(1) 특별자금 지원 역량을 증가

2013 년 웨이하이시 정부는 《기업의 자주혁신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산학연 협력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시급(市级) 산학연 협력혁신 전문자금이 700만 위안까지 증액되었고 주로 산학연 협력혁신 시범 프로젝트, '특별초빙 전문가' 찬조 등 산학연 협력 활동에 이용되었다. 시와 각 지역구(가오취(高区), 징취(经区), 궁예신취(工业新区) 포함, 이하 동문)는 산학연 협력혁신의 자금 지원을 부단히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정투입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2016년 웨이하이시 정부는 《〈중점 산업단지 건설 업무방안 추진 가속화〉 발급에 관한 통지》를 인쇄배포하였고 탄소섬유 산업원 등 5대 중점 산업단지 건설 추진의 가속화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정부는 1억 위안 특별 지원자금을 특별 배치하고 '상으로 보상을 대신하는'방식으로 중점 단지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보장 능력을 강화하였다.

(2) 창업취업 지원 역량 강화

2014년 7월 웨이하이는 《창업취업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여 전역의 도시화와 시 지역의 일체화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각종 단체의 자주창업 발전 경로 지원 장려를 명확히 하였으며 도농 노동자의 충분한 취업을 총괄 추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고 창업취업이 전역의 도시화와 시 지역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하였다.

2016년 6월 웨이하이시 노동취업훈련센터는 '취업창업훈련 하부층' 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현재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훈련, 보육훈련, 간식요식업, 예술품 감상, 토양 개량, 과수 전지, 수박 재배 등 훈련을 개최하였고 동시에 2015년 육성기지 7곳과 육성지점 12곳을 기반으로 하여 육성기지 3곳, 육성지점 4곳을 추가하였다

2017년 9월 룽청시 중소기업국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이 기업으로 가도록 조직하였다. 룽청시 중소기업국의 협조를 받아 동 기업은 솽스인자 마을에 전기장판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가공 지점을 설치하여 농민의 현실 수익 증대를 도울 것이다. 룽청시 중소기업국은 자체 직능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자매결연 체결, 마을기업 공동구축 등 형식을 취하여 중소기업이 빈곤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농민의 소득 증가를 도우며 정확한 빈민구체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마을과 기업의 윈윈과 공동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고 '수혈'빈민구제를 '산업조혈'빈민구제로 변화시킨다.

(3) 대출담보와 수당정책 개선

2013년 웨이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웨이하이시 재정국, 웨이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소형미형 기업 창업 수당과 1회성 일자리 수당 지급과 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내놓고 2013년 10월 1일부터 처음으로 소형미형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한 경우, 1만 위안의 1회성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 2013년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설립한 소형미형 기업이 등기된 실업자와 졸업연도 대학 졸업생을 흡수하고 1년 이상 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사회 보험을 납부하였고 동시에 기업이 금융기구를 통해 월별 직원에게 지불하는 돈이 현지 최저표준임금 보수

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수당 신청 시 만들어 낸 일자리 수량에 따라 일자리당 2,000위안의 1회성 창업 일자리 개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7년 6월 웨이하이시 인사, 재정 등 관련 부처는 창업 담보대출정책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고 등록조건, 대출금액, 할인방식 등 방면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록지의 동금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서 창업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형식과 신고대상에 따라 창업 담보대출은 각각 개인신청과 기업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발제문

中国促进中小企业就业的政策措施

赵玉璞
中国 山东大学(威海)

一、中小企业在解决中国就业问题中的重要作用

中小企业是中国民营经济的主体，一直以来，中小企业是促进就业、改善民生、发展经济、稳定社会的重要基础，是保证市场竞争、促进市场繁荣的基本力量和技术创新的重要推动力。中小企业的健康发展，对民生和社会稳定具有重大意义。近年来，中国中小企业发展迅速，在对经济增长、扩大就业渠道、推动自主创新、构建和谐社会等方面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

（一）规模扩大、经济效益增长显著

2015 年末，中国中小企业超过 2000 万家，个体工商户超过 5400 万户，中小企业利税贡献稳步提高。以工业为例，截至 2015 年末，全国规模以上中小工业企业占规模以上工业企业数量的 97.4%；实现税金 2.5 万亿元，占规模以上工业企业税金总额的 49.2%；完成利润 4.1 万亿元，占规模以上工业企业利润总额的 64.5%。中小企业提供 80%以上的城镇就业岗位，成为就业的主渠道。

1. 民营经济规模扩大，中小企业比重提高

民营经济数量规模持续扩大。2008 年，中国登记注册的私营企业为 657.42 万户，个体工商户达到 2917.33 万户；2015 年，中国登记注册的私营企业达到 1908.23 万户，个体工商户达到 5407.94 万户，同比增长 23.4%和 8.5%。（见图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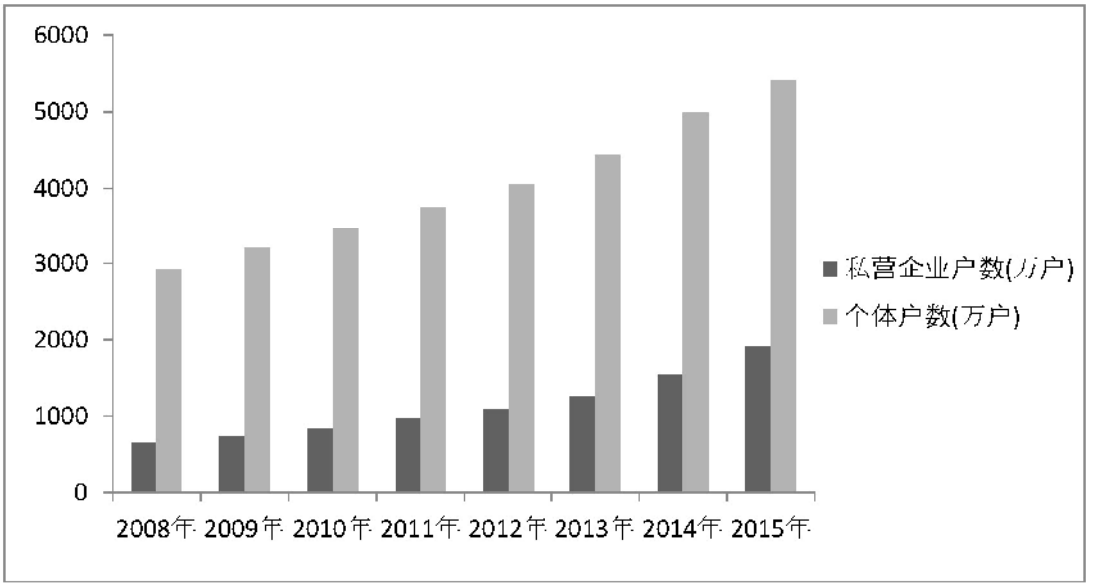


图 1.1 2008—2015 私营企业和个体户数 （资料来源：根据中国统计局资料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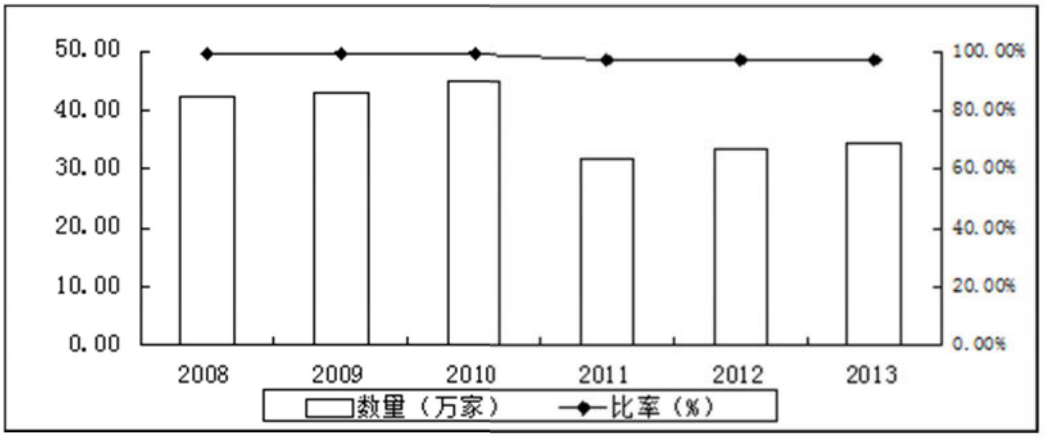


图 1.2 2008 2013 年中小企业数及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

（资料来源：根据郑昕、秦志辉：《2009-2014 年中国中小企业年鉴》，经济科学出版社整理。）

中小企业发展势头良好。2008 年至 2010 年数量逐年增加，2011 年至 2013 年有所下降，但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保持在 90%以上，

在国民经济中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2008 年，我国规模以上中小企业数量为 42.29 万家，占规模以上工业企业的 99.3%；2013 年，我国规模以上中小企业数量达 34.30 万家，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为 97.3%。（见图 1.2）

2. 民营工业拉动经济发展，中小企业销售产值比重大

虽然中国私营企业近两年利润增长速度放缓，但仍然高于国有及国有控股企业、股份制企业、外商及港澳台投资企业。2008 年，私营企业工业工业利润总额 8302.06 亿元，占工业企业利润总额 27%，略高于外商及港澳台投资企业，2015 年，私营企业工业利润总额为 24249.73 亿元，占工业企业利润总额 36.6%，高于外商及港澳台投资企业 52.2%（见图 1.3），民营工业拉动经济发展的作用突出。2016 年全国工业发展增速整体放缓，工业企业利润总额略有回升，不同所有制工业企业表现分化，私营企业增长相对较快，效益相对稳定，国有控股企业增长较慢，效益明显下降。2016 年全国规模以上工业企业主营业务收入 115.16 万亿元，同比增长 4.9%；实现利润 6.88 万亿元，同比增长 8.5%；主营业务收入利润率为 6.0%，较 2015 年末上升了 0.21 个百分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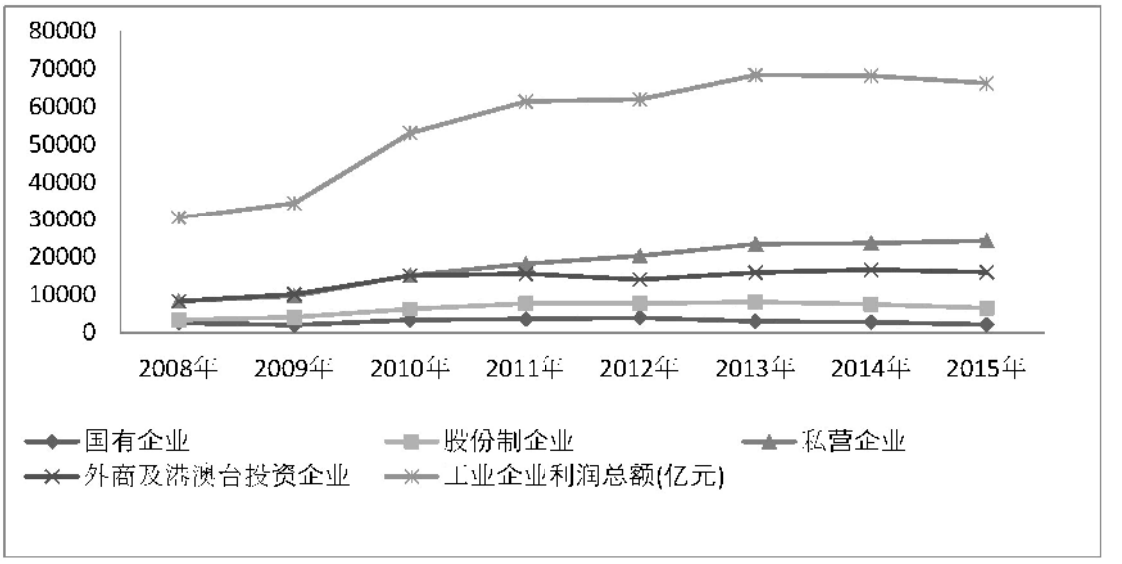


图 1.3　2008—2015 工业企业利润总额　（资料来源：根据《2009-2014 中国统计年鉴》整理。）

从 2008 年至 2012 年，中国中小企业销售产值不断增加，占规模以上工业企业的比重保持在 50%以上。2008 年中小企业的销售产值为 33.8 万亿元，占规模以上工业企业的比重为 66.6%，2013 年，中小企业的销售产值提高为 61.9 万亿元，占规模以上工业企业的比重为 60.2%。（见图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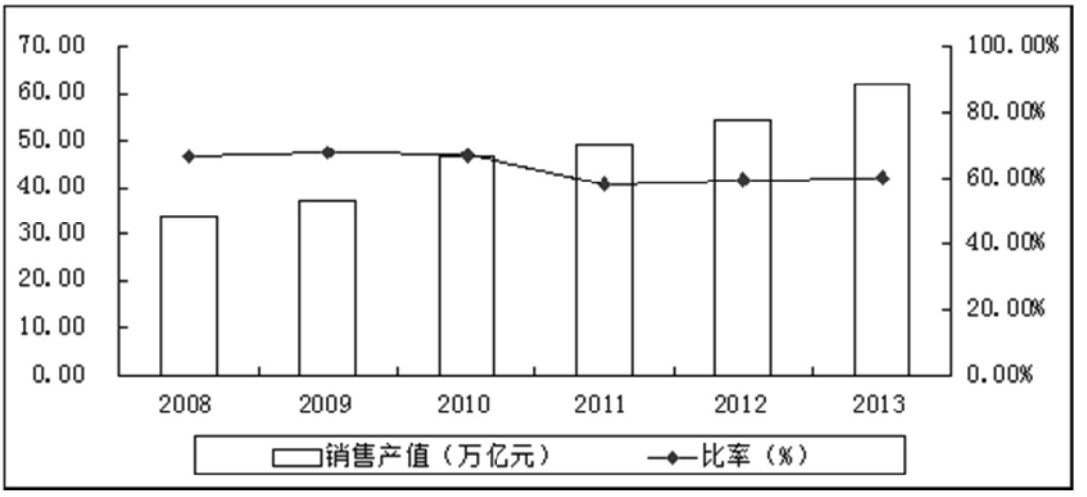


图 1.4 2001-2013 年中小企业销售产值及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 （资料来源：同图 1.1。）

3. 经济效益增长较快，社会贡献加大

2015 年，中国规模以上工业企业主营业务收入为 1109852.97 亿元，其中国有工业企业 45201.64 亿元，占 4.07%，同比增长-9%；集体工业企业主营业务收入 6726.92 亿元，占 6.06%，同比增长-12%；股份制企业主营业务收入 99630.68 亿元，占 9.0%，同比增长-5%；外商及港澳台投资企业主营业务收入 245697.55 亿元，占 22.1%，同比增长-3%；私营企业主营业务收入为 386394.6 亿元，占比最大，为 34.8%，较上年增长 3.8%。（见图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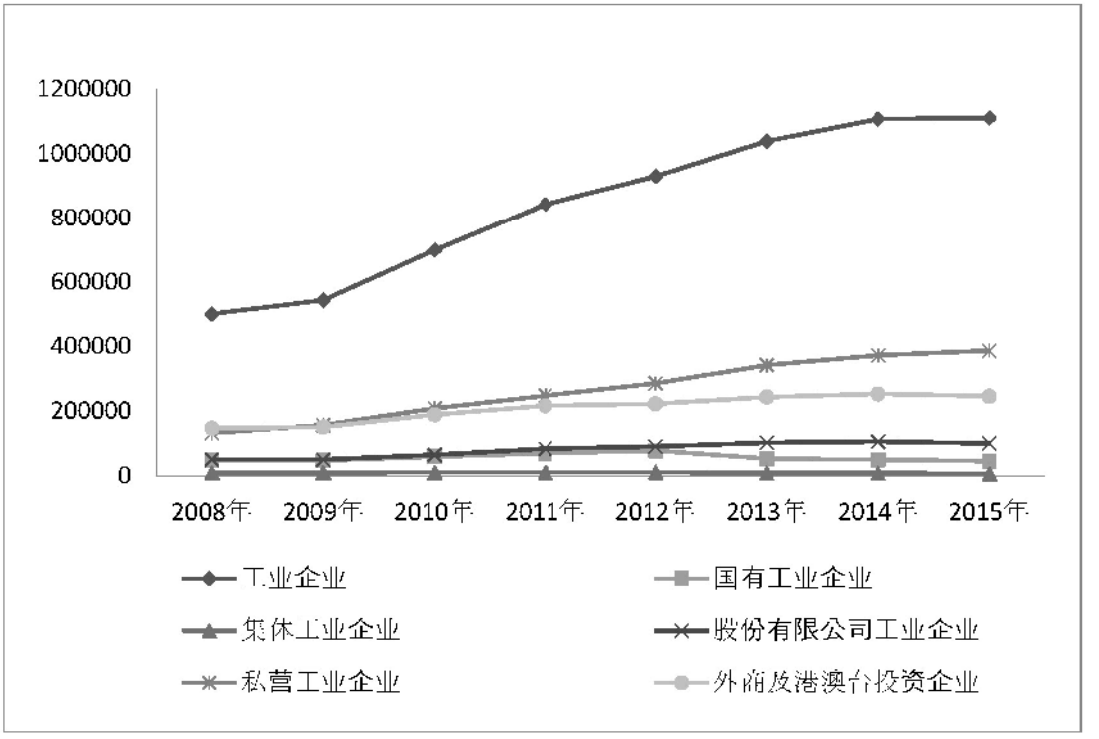


图 1.5　2008—2015 工业企业主营业务收入　（资料来源：同图 2.1。）

从 2008 年到 2013 年，除了在 2011 年略有下降外，全国中小企业利润总额、税金总额总体处于增长状态。中小企业的利润总额、税金总额从 2008 年的 20043.6 亿元、14253.3 亿元分别提高为 2013 年的 38154.8 亿元、22354.1 亿元，社会贡献增加突出。总体上，中小企业经济效益保持较快增长，社会贡献加大（见图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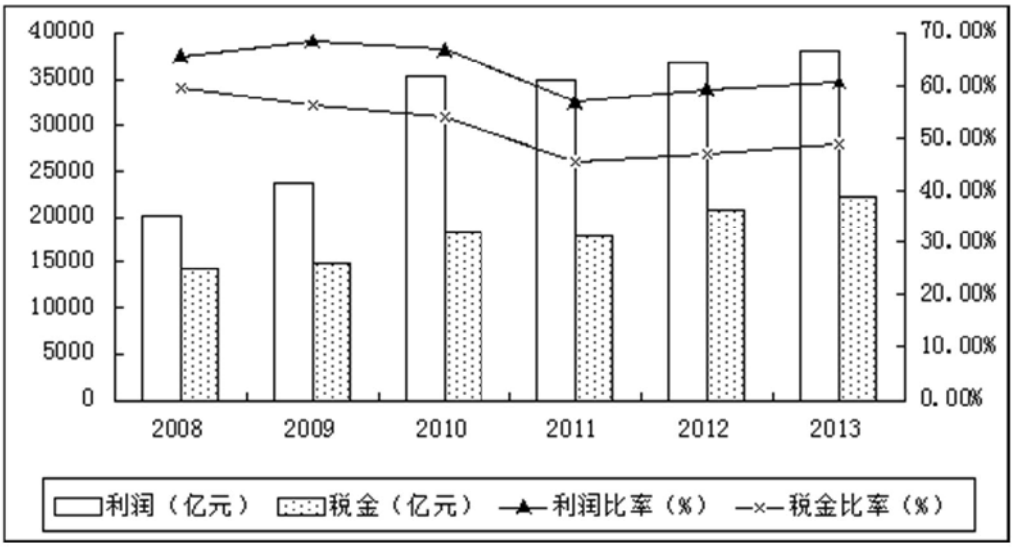


图 1.6　2008-2013 年中小企业利税总额及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　（资料来源：同图 1.1。）

（二）就业人员比重高，贡献突出

1. 民营企业占就业和新增就业的 80%以上

根据第二次经济普查数据，2008 年全国企业法人单位从业人员数为 21 889 万人，其中国有及国有控股企业 4384 万人，占 20%（其中国有企业 2202 万人，占 10.1%）；集体企业 905 万人，占 4.1%；私营企业 9149 万人，占 41.8%；外商企业 3113 万人，占 14.2%；公司 5959 万人，占 27.2%。总的看，全国企业法人单位从业人员，国有及控股占 20%，加上集体及控股，公有制经济从业人员占 25% 多；私营及控股和外资等非公有制经济占近 75%，加上集体及控股经济，非国有的民营经济从业人员占 80%以上。

根据第三次经济普查数据，2013年全国工业企业法人单位从业人员数为14025.8万人，内资企业占80.3%，港、澳、台商投资企业占9.6%，外商投资企业占10.1%。内资企业中，国有企业从业人员达478.5万人，占全部企业的3.4%，集体企业从业人员173.6万人，占1.2%，私营企业从业人员6272.2万人，占44.7%。（见表1.1）

表1.1 2013年工业企业从业人员数

企业类型	从业人员
国有企业	478.5
集体企业	173.6
股份有限公司	847.6
私营企业	6272.2
港、澳、台商及外商投资企业	2766.7

（资料来源：根据第三次经济普查数据整理。）

需要指出的是，以上只是法人单位从业人员，并不包括个体工商户从业人员。2008年全国城镇就业人员为32 103万人，其中个体户从业人员3609万人。另外，乡村从业人员中，乡镇企业15 451万人（多数为农村集体企业改制的以私营为主的企业），私营企业2780万人，个体户2167万人。因此，从全国非农就业人员看，非国有的民营经济已经占85%以上。

根据《中国统计年鉴(2016)》相关统计数据，2015 年，全国城镇就业人员为 40410 万人，其中国有单位 6208 万人，占 15.4%；集体单位 481 万人，占 1. 2%；公司 8187 万人，占 20.3%；私营企业 11180 万人，占 27.7%；外商企业 2790 万人，占 6.9%；个体 7800 万人，占 19.3%。需要指出的是，上述公司从业人员中，3 /4 以上为私营法人控股公司从业人员。民营经济特别是中小企业的快速发展，为大量城镇劳动力、农村剩余劳动力、高校毕业生等创造了大量的就业岗位，已经成为吸纳社会就业、增加城乡居民工资性收入、不断改善人们生活的主要来源。

表 1.2　2008-2012 年中小企业从业人员及占规模以上工业企业比重

年份	从业人员数（万人）	比重（%）
2008	6867.1	77.7
2009	6787.7	76.9
2010	7236.9	75.8
2011	5935.7	64.7
2012	6129.0	66.1

（资料来源：同图 1.1。）

全国中小企业的从业人员数也呈增长趋势，但是，2008 年中小

企业从业人员总数略有下降，2010 年中小企业从业人员总数迅速回升；2011 年从业人员数又略有下降，2012 年迅速回升；每年中小企业从业人员数占工业企业就业人员 60%以上的比重，中小企业已经成为我国缓解就业压力的重要力量（见表 1.2）。

2. 民营企业工资收入逐年增加，行业差距明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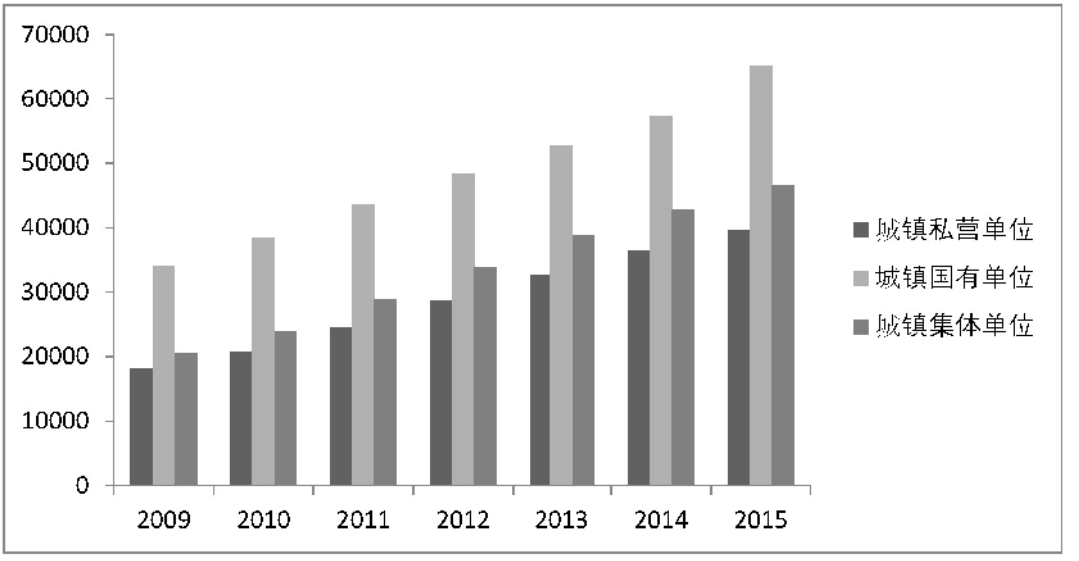


图 1.7　2009 2015 年全国各城镇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　单位：元　（资料来源：同图 1.4。）

由图 2.5 可知，2009 年至 2015 年，各城镇单位平均工资均呈上升趋势。但是城镇私营单位和城镇集体单位平均工资一直低于城

镇单位平均工资，而城镇国有单位平均工资一直高于城镇单位平均工资。2009 年，城镇私营单位的平均工资为 18199 元，城镇集体单位平均工资为 20607 元，低于城镇单位平均工资 32244 元；2015 年，城镇私营单位的平均工资为 39589 元，城镇集体单位平均工资为 16607 元，城镇国有单位平均工资 65296 元。

从行业来看，民营经济各个行业就业人员平均工资差距较大。信息传输、计算机服务和软件业，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查业，金融业，建筑业等行业平均工资水平较高，高于民营经济平均工资水平。2009 年，民营经济平均工资为 18199 元，信息传输、计算机服务和软件业的平均工资为 28166 元，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查业平均工资为 26187 元，金融业平均工资为 30452 元，建筑业平均工资为 19867 元，公共管理和社会组织平均工资为 8191 元、农林牧渔业平均工资为 14585 元、居民服务和其它服务行业平均工资为 15688 元；2015 年，民营经济平均工资为 39589 元，信息传输、计算机服务和软件业的平均工资为 57719 元，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查业平均工资为 50441 元，金融业平均工资为 44898 元，建筑业平均工资为 41710 元。农林牧渔业、居民服务和其它服务行业平均工资水平较低，低于民营经济平均工资水平。

3．产业分布较集中，劳动密集型行业为主

从 2008 年到 2013 年，中国工业型中小企业数量排名前 10 位的大类行业变化不大。虽然每年大类行业的名次有所不同，但基本上集中于通用设备制造业、纺织业、非金属矿物制品业、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金属制品业、农副食品加工业、橡胶和塑料制品业、专用设备制造业、交通运输设备制造业、纺织服装服饰业等劳动密集型产业（见表 1.3）

表 1.3　2008-2013 年工业型中小企业数排名前 10 位的大类行业

指标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通用设备制造业	通用设备制造业	通用设备制造业	非金属矿物制品业	非金属矿物制品业	非金属矿物制品业
2	纺织业	非金属矿物制品业	非金属矿物制品业	通用设备制造业	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	化学原料和化学制品制造业
3	非金属矿物制品业	纺织业	纺织业	农副食品加工业	农副食品加工业	农副食品加工业
4	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	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	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	化学原料和化学制品业	通用设备制造业	通用设备制造业

5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纺织业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6	金属制品业	金属制品业	金属制品业	交通运输设备制造业	纺织业	纺织业
7	农副食品加工业	农副食品加工业	农副食品加工业	金属制品业	金属制品业	金属制品业
8	橡胶和塑料制品业	橡胶和塑料制品业	橡胶和塑料制品业	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橡胶和塑料制品业	橡胶和塑料制品业
9	专用设备制造业	交通运输设备制造业	交通运输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专业设备制造业
10	交通运输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橡胶和塑料制品业	纺织服装服饰业	纺织服装服饰业

注：上表所述十大行业是制造业中小企业中排名前十位的行业。（资料来源：同表 1.2。）

中小企业因自身规模较小，产品结构单一、初级产品加工比重大、抵抗风险能力较弱，难以进入壁垒较高的行业。而劳动密集型行业一般进入门槛不高，由于我国具有劳动资源禀赋优势，目前中小企业以劳动密集型企业为主，但整体产业层次较低，经营管理水平不高。

同时，民营经济多集中于第三产业。2013 年全国个体工商户实有户数产业结构中，第一产业占 2.03%，第二产业占 7.41%，第三产业占 90.56%；2013 年全国私营企业实有户数产业结构中，第一产业占 2.76%，第二产业占 25.20%，第三产业占 72.04%。（见图 1.8 和图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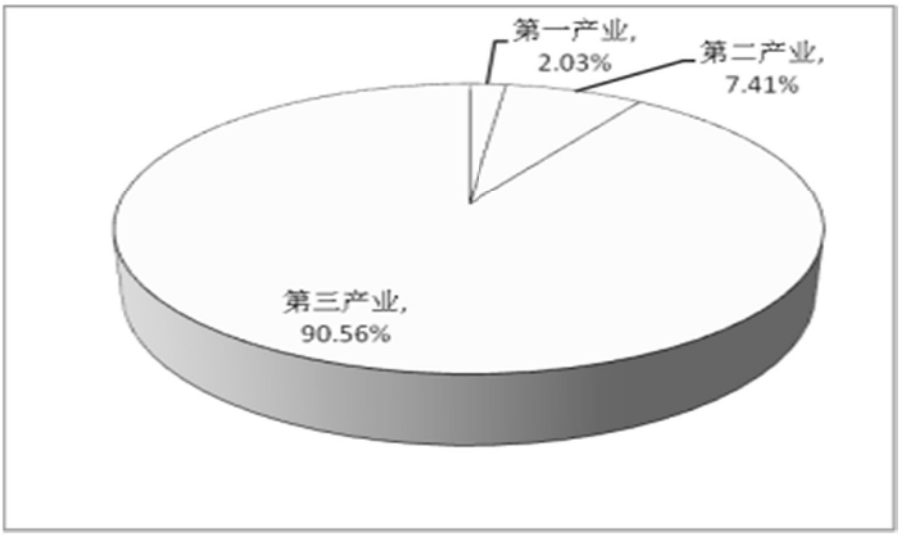


图 1.8 2013 年全国个体工商户实有户数产业结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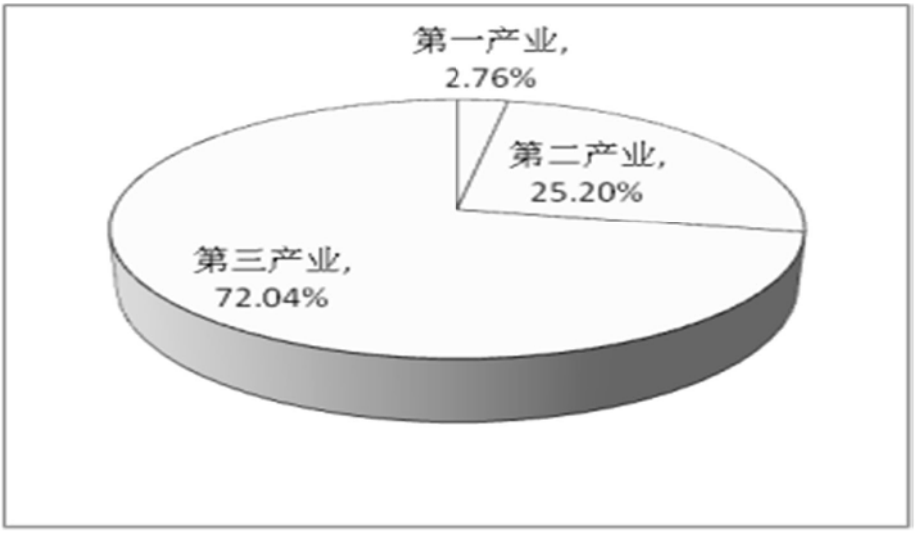


图 1.9 2013 年全国私营企业实有户数产业结构

(资料来源：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中国民营经济发展报告》，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5 年全年全部工业增加值 228974 亿元，比上年增长 5.9%。规模以上工业增加值增长 6.1%。在规模以上工业中，分经济类型看，国有控股企业增长 1.4%；集体企业增长 1.2%，股份制企业增长 7.3%，外商及港澳台商投资企业增长 3.7%；私营企业增长 8.6%。分门类看，采矿业增长 2.7%，制造业增长 7.0%，电力、热力、燃气及水生产和供应业增长 1.4%。

对比不同经济类型工业企业盈利情况，从绝对值上看，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资产总额是私营企业的 1.7 倍左右，两者分别占全国资产总额的 37.9%、22.0%；而私营企业的主营业务收入和利润总额却分别是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两倍左右和两倍以上，私营企业

的主营业务收入和利润总额分别占全国的35.5%、35.3%；私营企业的营收利润率，也较国有及国有控股企业高出0.9个百分点，二者分别为5.9%、5.0%。从数据看，虽然整体经济下行，但民营企业盈利能力显著强于国有及国有控股企业。

分析2015～2016年的工业企业主营业务收入利润率情况可以发现，外资企业利润率水平依旧最高，国有及国有控股企业利润率最低，私营企业均保持在全国平均水平上下，且利润率波动幅度较小，说明民营企业盈利能力较为稳定。

二、中国政府对促进中小企业就业的基本政策措施

1998年，九届人大二次会议通过《199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199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报告》在谈及199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主要任务中提到："必须加强对中小企业的扶持力度"。在《政府工作报告》中也提到支持科技型中小型企业的发展。

1998年，中国人民银行颁布《关于进一步改善对中小企业金融服务的意见》，通过改进金融服务积极支持再就业工程。

1999 年，国家经济贸易委员会制定了《关于建立中小企业信用担保体系试点的指导意见》，对中小型企业的信用担保体系做出了首次部署。

2000 年，国家经贸委颁布《关于鼓励和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政策性意见》，主要包括以下方面：（1）大力推进结构调整；（2）鼓励技术创新；（3）加大财税政策的扶持力度；（4）积极拓宽融资渠道；（5）加快建立信用担保体系；（6）健全社会化服务体系；（7）创造公平竞争的外部环境；（8）加强组织领导。

2002年，九届全国人大二十八次会议通过了《中小企业促进法》，于 2003 年 1 月 1 日起施行。规定国家应对中小企业实行积极扶持、加强引导、完善服务、依法规范、保障权益，为中小企业创立和发展创造有利环境。主要措施包括：（1）鼓励中小企业依法经营管理，增强自我发展能力；（2）对中小企业进行资金支持。财政预算设立中小企业科目，并设立中小企业发展基金，重点用于中小企业的综合信用担保以及鼓励技术创新，安排下岗职工就业、科技成果转化、创办中小企业等。建立健全中小企业信用贷款担保体系，改善中小企业信用贷款担保体系，改善中小企业融资环境；（3）国家制定政策，提供多方位服务等手段鼓励中小企业技术创新；（4）鼓励个人

或法人创办中小企业，放宽审批条件，简化中小企业登记手续，在税收等政策上对中小企业创业进行扶持；（5）鼓励中小企业采取多种形式开拓国内和国际市场；（6）建立健全中小企业的社会化服务体系，开展各种技术、管理、财务培训，发展人才市场。

2004年，财政部下发了《中小企业融资担保机构风险暂行办法》，主要通过政府预算以及资产划拨进行引导和支持。

2005年，国务院下发《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主要措施包括：（1）放宽非公有制经济市场准入；（2）加大对非公有制经济的财税金融支持；（3）完善对非公有制经济的社会服务；（4）维护非公有制企业和职工的合法权益；（5）引导非公有制企业提高自身素质；（6）改进政府对非公有制企业的监管；（7）加强对发展非公有制经济的指导和政策协调。

2008年，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提出扶持中小企业，多渠道、多方式增加就业岗位；鼓励企业增加就业岗位，扶持失业人员和残疾人就业，对失业人员创办的中小企业予以税收优惠。

2009年，国务院下发《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

若干意见》，主要措施包括：（1）完善中小企业政策法律体系；（2）切实缓解中小企业融资难；（3）加大对中小企业的财税扶持；（4）加快中小企业技术进步和结构调整；（5）支持中小企业开拓国内国际市场；（6）加强和改善对中小企业的服务；（7）引导中小企业加强管理；（8）加强中小企业工作的组织领导。

2010 年，国务院出台《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对拓宽非公有制经济的准入行业限制有了更为明确的表示。

2011 年，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先后颁布《关于继续实施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和《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主要针对中小型企业的税收进行调整，包括营业税、土地增值税等方面。

2012 年，国务院颁布《关于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重新明确了中小型企业对我国经济的重要性，并对中小型企业的信用担保体系进行持续完善。

2014 年，国家税务总局印发了《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政策的通知》，明确自 2014 年 10 月 1 日至 2015 年 12 月 31 日，对月销售额 2 万元至 3 万元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和营业税纳税人，免征增值税或营业税。随后又发布《关于小微企业免征增

值税和营业税有关问题的公告》，针对按季纳税、兼营不同应税项目、专用发票开具等问题做出明确规定。

2014 年，国家税务总局发布《关于对小微企业免征有关政府性基金的通知》，规定：（1）自 2015 年 1 月 1 日起至 2017 年 12 月 31 日，对按月纳税的月销售额或营业额不超过 3 万元（含 3 万元），以及按季纳税的季度销售额或营业额不超过 9 万元（含 9 万元）的缴纳义务人，免征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水利建设基金、文化事业建设费；（2）自工商登记注册之日起 3 年内，对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在职职工总数 20 人以下（含 20 人）的小微企业，免征残疾人就业保障金。

2015 年，国家发布《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规定自 2015 年 1 月 1 日至 2017 年 12 月 31 日，对年应纳税所得额低于 20 万元（含 20 万元）的小型微利企业，其所得减按 50%计入应纳税所得额，按 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随后，国家税务总局又印发了《关于贯彻落实扩大小型微利企业减半征收企业所得税范围有关问题的公告》，适应税收政策调整，对一些具体管理操作问题进一步做了明确规定。

2015 年，国家工信部印发《国家小型微型企业创业示范基地建

设管理办法》，规定了小型微型企业创业示范基地的申报条件、申报程序、示范基地管理等内容。

2016 年，国家工信部印发《国家小型微型企业创业创新示范基地建设管理办法》，主要亮点如下：（1）凸显了对创新的重视和整体思路的转变——既鼓励和支持各种形式的创业，也鼓励和支持各种形式的创新，以创新促进创业、以创业拉动创新，实现创业和创新之间的良性互动和良好转化；（2）推动小微企业创业创新基地平台化、智慧化、生态化发展；（3）凸显了创业创新示范基地建设和运营主体的多样化以及运营模式的多元化。

2016 年，国家工信部印发《促进中小企业发展规划（2016-2020 年）》，提出了十三五时期促进中小企业发展的总体思路、发展目标、主要任务和关键工程与专项行动，为促进中小企业发展提供指引，为中小企业主管部门履行职责提供依据。

三、大众创新、万众创新、二胎政策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影响

（一）大众创业、万众创新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影响

1. 大众创业、万众创新对中小企业就业机制的影响

“双创”的提出，就是要建立从源头上创造就业的机制。核心

是改变以往适应岗位的被动就业模式，以人力资源为主导因素，在就业的各类资源之间寻找最优方案，达到资源配置效应的最优。由此，中小企业的就业机制会发生积极的变化。

2.大众创业、万众创新对中小企业就业部门的影响

根据由中国人民大学中国就业研究所与智联招聘联合发布的中国就业市场景气指数（简称 CIER 指数），2017 年一季度 CIER 指数为 1.91，虽呈现季节性回落，但要高于去年同期水平。进入 2017 年第二季度，本季度 CIER 指数上升至 2.26，表明就业形势呈现稳中向好的态势。而就业形势较好的十个行业多为“互联网+”的新经济。（见图 3.1）而“双创”的推进正是新经济发展的重要动力。由此，未来中小企业就业部门或会出现由传统部门向新经济部门转变的态势。[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大众创业、万众创新的重大战略部署，工信部围绕实施《中国制造 2025》和制造强国、网络强国建设，以及“互联网+”小微企业双创培育行动。营造大众创业万众创新氛围，激发草根创业创新潜力，集聚创业创新资源，为中小企业和创客提供交流展示、产融对接、项目孵化的平台，发现和培育一批双创好项目和优秀团队，催生新产品、新技术、新模式和新业态，推动中小企业转型升级和创新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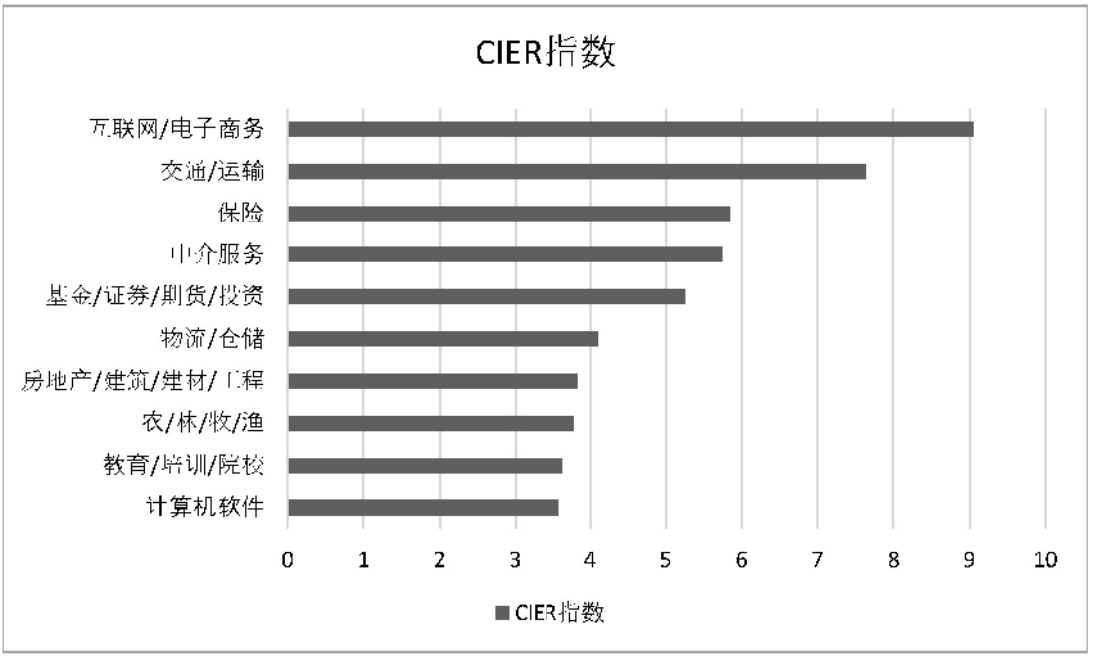


图 3.1　2017 年第二季度就业形势较好的十大行业

（资料来源：由 2017 年第二季度《中国就业市场景气报告》整理。）

3. 大众创业、万众创新对中小企业就业质量的影响

大规模企业由于抗风险能力较强，进入市场谨慎，存在规模经济等原因，其存活率高于中小企业，平均寿命较长。中小企业由于平均寿命较短，其就业质量较低，而“双创”突出市场竞争和优胜劣汰。“双创”是创业主体在参与市场竞争和等价交换过程中通过创新占据优势、获取经济收益的过程。长期以来基于要素低成本优势所形成的经营模式，使大部分中小企业产生了严重的路径依赖倾向，而通过自主创新，可实现企业的转型升级。[1]由此，“双创”利于中小企业的优化，从而提升其就业稳定性。

（二）二胎政策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影响

1.二胎政策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短期影响

（1）积极影响

中小企业为避免女性生育断岗期对企业运营及管理造成的不利影响，可能采取相关措施吸引男性进入此类岗位，或为鼓励女职员对工作投入度而提高女性薪资，从而改善男女薪资不平衡现象。同时由于经济上的压力，回归职场的女性会更加珍惜现有工作机会，其就业稳定性较强，不会轻易离职，利于人才流动性较大的中小企业的发展。此外原本做为全职妈妈的女性出于生育二胎所带来生活成本的增加，会重新回到职场，这将为缓解中小企业劳动力的暂时不足起到一定的作用。

（2）消极影响

①对中小企业运营的影响

二胎政策放开后，女性生育率提高，中小企业女性较集中的岗位例如文秘，会计等易出现“用工荒”现象，从而对中小企业岗位结构的稳定造成不利影响。同时，由于需降低怀孕女职工工作量，也对企业管理者安排工作带来挑战。

全面二孩的开放使得企业女职员有休两次产假的可能，两次生育会附带 7 个月断岗期，中小企业需为此承担生育成本。这种成本不仅表现在女员工生育期间的人才流失，更重要的是会给中小企业企业带来严重的效益与时间上的损失。基于这种原中小企业为避免女性职员集中生二胎对企业工作所带来的不便，通常会对企业女职员的生育做出相关规定，较易引起社会争议。

②对中小企业就业吸纳能力的影响

二胎政策放开后，女性为保障自身生育权益，会更倾向于选择相对安稳可靠的体制内工作，国企、事业单位、公务员职位在二胎开放后竞争会更加激烈。相应的，选择到中小企业求职的女性则会愈来愈少。

③对中小企业人才结构的影响

二胎政策放开后，若女性选择生育二胎，则女性生育周期拉长，家庭中男性收入压力增加，中小企业部分技术人员，高层管理人员等或会为追求更高的薪资待遇及发展前景而选择大型企业。

2. 二胎政策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长期影响

（1）二胎政策对中小企业行业发展影响

由于二胎政策的普及，一些教育、服务市场发展如火如荼，例

如婴儿教育、母婴生活日用品以及医疗保障等行业发展前景较好，中小企业的未来发展面临新的机遇。新的政策必然会带来新的市场，相应的就业趋势也会发生改变。

（2）二胎政策对中小企业劳动供给影响

近年来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需求都略高于市场供给，劳动力明显不足，加之老龄化现象日趋严重，二胎政策的放开在未来会带来劳动力的增加，长期看会利好劳动力市场。（见图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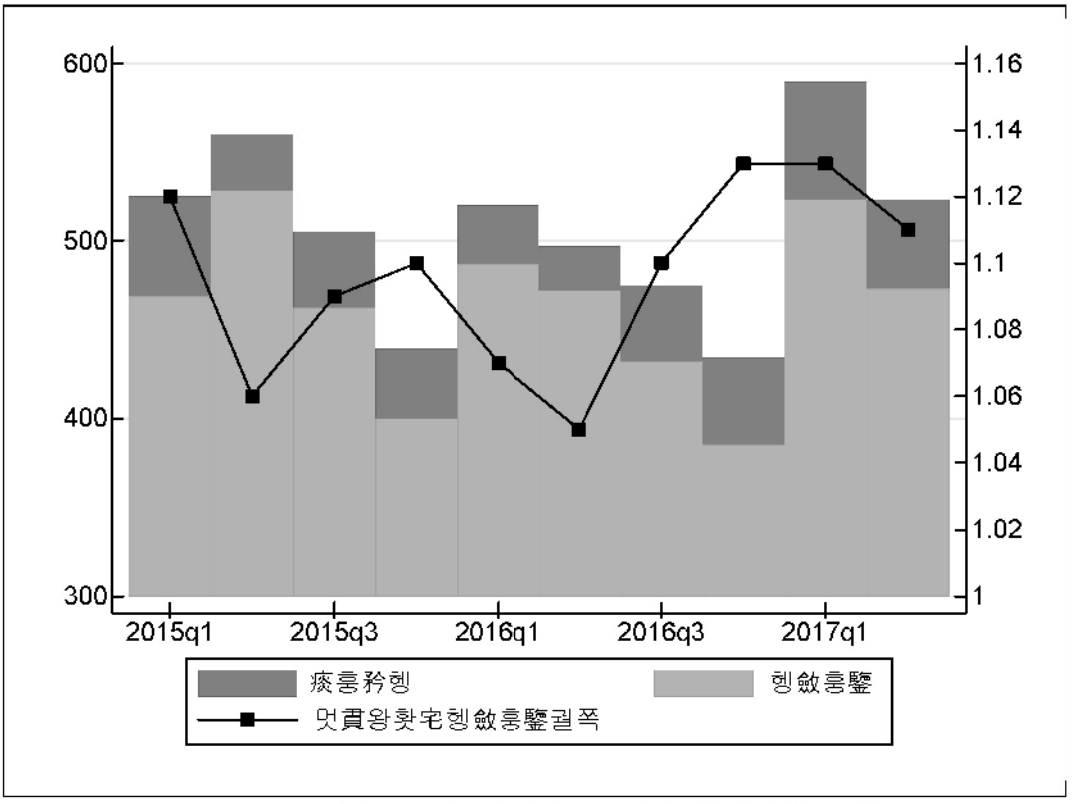


图 3.2 2015 第一季度 2017 第二季度劳动力市场供求状况 单位：万人

（资料来源：根据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数据整理。）

（三）结论

1. 大众创业、万众创新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影响

从中小企业就业机制来看，“双创”利于资源配置效应的最优，会促使中小企业的就业机制产生积极的变化；从中小企业就业部门来看，未来中小企业就业部门或会出现由传统部门向新经济部门转变的态势；从中小企业就业质量来看，“双创”利于中小企业的优化，从而提升其就业稳定性。

2. 二胎政策对中小企业未来就业的影响

从短期来看，积极影响在于或会改善男女薪资不平衡现象，增强女职工就业稳定性，一定程度上缓解中小企业劳动力的暂时不足；消极影响在于会降低企业经济收益，提高管理难度，部分岗位出现“用工荒”现象。从长期来看，会带来劳动力的增加，并为中小企业未来发展提供新的机遇。

四、地方政府促进中小企业就业的政策措施

——以威海为例

威海市中小微型企业的营业收入占到全市的 72.86%，高于山东

省 61.2%的平均水平，利税总额占到全市的 72.69%，且利润总额增长率达到 15.87%，而应收账款占全市比重为 49.56%。这说明中小微型企业在全市总体经济中占有非常大的比重，然而应收账款和产成品存货的指标却反应了中小企业与大企业相比所从事产业的特殊性，资金流动快，但总体资产规模小。近几年威海市各部门也针对相关问题制定实施了以下政策措施。

(一)促进高校毕业生创业就业，确保人才引进

1.高校毕业生申请就业见习岗位

目前，威海市对就业见习基地的建设与管理实行自主申请、分级管理、优胜劣汰的动态管理机制，威海市人社部门对原就业见习基地进行重新梳理，对 3 年内未申报见习岗位以及未接收毕业生参加就业见习的单位，取消其就业见习基地资格，被取消单位可重新申报。对符合条件保留的单位，按照管理权限由毕业生就业主管部门重新公布。

2.小微企业招用高校生享社保补贴

为鼓励小型微型企业吸纳高校毕业生就业，促进小微企业发展，自 2014 年起，威海市为吸纳高校毕业生就业的小微企业发放社会保

险补贴。在补贴范围和条件方面，小型微型企业新招用毕业年度和择业期内高校毕业生，签订 1 年（含）以上期限劳动合同，并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给予企业 1 年的社会保险补贴。补贴标准按照小微企业为高校毕业生实际缴纳社会保险费确定。

3. 大学生创办企业获创业补贴

日前，威海市人社部门创业补贴政策主要是三大类，即：一次性创业补贴、一次性创业岗位开发补贴和一次性创业场地租赁补贴，这三大类创业补贴的覆盖范围都包括大学生群体。2014 年 6 月 17 日后注册个体工商户营业执照、正常经营 1 年以上且处于法定劳动年龄内的本市户籍就业转失业人员、大学生（毕业 5 年内普通高等学校毕业生和驻威高校在校大学生，无户籍要求，下同），给予 5000 元的一次性创业补贴。

（二）出台优惠政策，吸纳高端人才

2010 年，威海市人社部门先后出台《威海市引进高层次人才创新创业若干规定》、《威海留学人员创业园区管理办法》等政策文件，对来威创新创业的高层次人才给予政策支持和经费保障，2013 年，威海市引进各类人才 2.7 万人，培养高技能人才 7200 多人；积极推

荐科技型中小企业优秀高层次人才申报国家“千人计划”、国家科技创新人才推进计划、山东省泰山学者等。

2014年威海市委、市政府出台《关于实施威海英才计划的意见》，重点扶持现代产业、文化、教育、卫生、农业、金融、社会工作等多领域的18项人才引进计划，后续印发了《万名大学生聚威创业计划》《企业博士聚集计划》等14个配套文件，涉及引进人才评审认定、工资待遇、住房保障、资金扶持、配偶子女安置等方面优惠政策。构建全方位多层次高水平的创新人才体系，将威海全域建设成为人才智力高度密集、体制机制特别优越、创新创业高度活跃、新兴产业高速发展的人才发展战略高地。

2015年，威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印发《威海市引进海外高层次人才服务绿色通道暂行办法》，引进培育科技人才，壮大创新创业队伍，促进企业就业。

（三）鼓励扶持各类群体自主创业、积极就业

1.增加专项资金扶持力度

2013年，威海市政府出台《关于进一步促进企业自主创新的意见》加大对产学研合作创新的资金扶持。市级产学研合作创新专项

资金增加到 700 万元，主要用于扶持产学研合作创新示范项目、“特聘专家”资助等产学研合作活动。市和各市区（含高区、经区、工业新区，下同）要不断加大对产学研合作创新的资金扶持，建立稳定的财政投入增长机制。

2016 年，威海市政府印发了《关于印发<加快推进重点产业园区建设工作方案>的通知》，明确加快推进碳纤维产业园等五大重点产业园区建设，市政府专门安排 1 亿元专项扶持资金，以“以奖代补”方式扶持重点园区建设和发展，增强金融保障能力。

2. 加强创业就业扶持力度

2014 年 7 月，威海出台《进一步加强创业就业工作推进全域城市化市域一体化发展的意见》，明确了鼓励扶持各类群体自主创业的发展路径，提出了统筹推进城乡劳动者充分就业的具体举措，使创业就业成为加快推进全域城市化、市域一体化的强力引擎。

2016 年 6 月，威海市劳动就业培训中心扎实推进“就业创业培训下基层”活动，截至目前已开展跨境电子商务培训、育婴培训、面点餐饮、艺术品鉴赏、土壤改良、果树修剪、西瓜栽培等培训，同时，在 2015 年 7 处培训基地和 12 处培训点的基础上，新增培训基地 3 处、培训点 4 处。

2017 年 9 月，荣成市中小企业局组织农村闲置劳动力到企业。在荣成市中小企业局协调下，该企业将在双石尹家村建设电热毯加工车间，设置加工点，帮助村民实现增收。荣成市中小企业局围绕自身职能特点，采取签约结对、村企共建等形式，引导中小企业为贫困村村民提供就业岗位，帮助农民增加收入，推进精准扶贫，最终实现村企双赢、共同发展的目标，变“输血”扶贫为“产业造血”扶贫。

3. 完善贷款担保与补贴政策

2013 年，威海市人力资源与社会保障局、威海市财政局、威海市工商行政管理局出台《关于小微企业创业补贴和一次性就业岗位补贴发放和管理工作的通知》“自 2013 年 10 月 1 日起，各类人员首次创办小微企业、领取营业执照并正常经营 1 年以上的，给予 1 万元的一次性创业补贴。对于 2013 年 10 月 1 日后首次创办的小微企业吸纳登记失业人员和毕业年度高校毕业生并与其签订 1 年以上期限劳动合同并缴纳社会保险，同时企业通过金融机构按月向职工支付不低于当地最低标准工资报酬的，可按申请补贴时创造就业岗位的数量，给予每个岗位 2000 元的一次性创业岗位开发补贴。

2017 年 6 月，威海市人社、财政等有关部门对创业担保贷款政

策进行了调整，在申报条件、贷款额度、贴息方式等方面都有明显变化。符合条件的创业者可到营业执照注册地的同级公共就业服务机构申请创业担保贷款。　按照创立企业形式和申报对象的不同，创业担保贷款分为个人申请和企业申请两类。

발제문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최신 동향과 지역의 대응

미츠이 이츠토모(三井 逸友)
가에츠대학대학원 비즈니스창조연구 과장·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1. 일본 중소기업의 오늘과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일본의 중소기업은 100년간 일본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 왔다. 특히 2차대전 전에는 수출 산업의 주력으로서, 전후 고도성장 이후는 산업 근대화 및 고도화 하의 중화학공업 및 기계 산업의 공급자로서 높은 경쟁력을 담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부문의 활력 저하와 쇠퇴 기조가 현저해지고, 국가 정책상으로도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수의 감소인 바,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를 보더라도 483만개 사에서 2014년에는 382만개 사까지, 15년동안 20% 가까이 감소했다('경제 센서스). 이러한 감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거의 유례없는 사태이며, 그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와 고용에 의존해 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최근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1999년 '중소기업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창업 촉진, 경영혁신지원으로의 이행, 그리고 2010년 '중소기업헌장'의 각의 결정과 그

후 일련의 입법, 시책 전개를 들 수 있다. 2010년 '중소기업헌장'은 '중소기업은 경제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견인한다' '사회의 주역' '국가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로 평가하면서 '한편,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자금이나 인재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취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1) 경제 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업을 늘린다' '3) 창의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도전을 촉진한다' '4)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정비한다' '5)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안심을 확보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 지원의 내실화 및 철저'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원' '기업 및 신규사업을 전개하기 쉬운 환경 정비' '해외 전개 지원' '공정한 시장 환경' '중소기업 대상 금융 원활화' '지역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 평가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등 8대 행동 지침을 부여했다. 또한 가족 경영적인 다수의 소규모 기업과 지역사회간 관계를 중시하고, 경영자원 면에서 배려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이 '헌장'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2014년에는 '소규모 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종래 중소기업의 정의와 더불어 '소기업'(마이크로 기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헌장'으로부터 7년, 또 동일본 대지진이나 세계경제의 혼란, 지역 분쟁 등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일본재흥전략'에 의거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실시 및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활성화

- 생산성의 향상 및 수익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승계의 원활화
- 소규모 사업자의 지속적 발전
- 거래·금융·세제·공공조달 등
- 해외사업전개 추진
- 신규 개업의 촉진
- 인재 문제 대응
-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정비

이들 가운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 승계 등 오늘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과제

일본의 '산지'와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집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출 경쟁력을 담당했고, 경제와 지역을 지탱해 왔으며 압도적인 고용 창출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일본을 추월하고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장기적인 쇠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많은 산지 출하액은 격감했으며, 기업 수와 종업원 수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지 진흥'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성과가 부족해 200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특징은 기존의 산업 집중이나 그곳에 형성된 기업간 조직, 분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는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연계와 사업화, 신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형적인 예를 '지역자원활용 촉진법' '농상공 연계 촉진법' '지역 브랜드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림 어업이나 상업 서비스업 등을 연계해 지역 고유의 자원이나 기술, 또 지역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횡전개를 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역자원 활용화의 경우, 1000건 이상의 사업이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2015년 2월 현재, 1333건이 지정됨). 최근에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관여하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고향 명물' 만들기나 체험형 관광사업과의 연계로도 발전하고 있다.

농상공 연계의 경우, 역시 1000건 이상의 사업이 지정되어 특징적인 농수산물 응용제품을 만들거나 기능소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사업 계획 1058건, 지원사업계획 8건이 인정되었다(농림수산성에서는 '6차 산업화' 또한 진행하고 있음).

'지역 브랜드'는 지역명+상품명이라는 형태의 상표 등록을 가능케 하는 사업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등의 단체에 부여되며(최근 상공회의소나 NPO로도

확대), 지역 사업자의 이용에 문호를 개방한다. 이는 인지도 향상이나 판로 개척에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총 110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고, 2017년 4월까지 605건이 등록 허가되었다. 또한 이들과는 별개로 세계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과 수요 확대를 지향하며, 'JAPAN 브랜드'사업이나 JETRO의 LL사업, RIT 사업 등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대응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과제가 있다. 첫째,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 특히 IT의 시대에 적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식, 개발 성과 등의 응용 도입을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축으로 하는 '산학 연계'의 대응과 성과를 지역 산업에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개척력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정보 · 지식 · 관계성의 활용을 지역의 인적자원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에서는 '국제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지역을 사랑하고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젊은 세대에게 적잖게 '국내 지향'이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주체'의 문제, 특히 기존 사업자와 협동조합조직 등이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경쟁력을 담당한 조직의 '관성적' 보수화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고, 조직과 거리를 둔 의욕적인 기업이 새로운 거래관계를 구축해 성과를 올리는 예도 적지 않다. 지역은 안팎으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요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문제와 대책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쇠퇴와 감소 경향을 초래하는 배경으로 개업률의 침체와 더불어 강력한 폐업 기조를 들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조사 등에 따르면, 경영파탄이나 경영상태의 악화뿐 아니라 '후계자 난'에 의한 폐업 사태가 소규모층을 중심으로 현저해지고 있다. '2017년판 중소기업백서'에서는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조차 후계자가 없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존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는 소규모층의 경우, 절반 이하이다.

소규모 기업은 가족 경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경영자의 자녀 등 친족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저출산화와 '가업'의식의 변화 등도 있어 전반적으로는 '비친족 · 제3자가 승계'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는 바, 도쿄상공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45%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단, 비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내 간부, 유능한 사원이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숙련도, 경영 경험의 축적, 나아가 회사 안팎으로부터의 신뢰 관계가 그 배경에 있다.

그러나 비친족 승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 주주인 친족 친척등과의 관계와 이해 확보, 상응하는 분배,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개인 보증 등 금전에 얽힌 문제가 비친족 후계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때때로 존재한다. 거품 경제 시대에는 주식 양도 등을 통해 막대한 미실현 가치가 대두되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친족을 포함해 후계자를 괴롭혀 왔다. 이러한 상황은 자산가치의 저하, '사업승계 원활화법'(1998년), 사업승계세제 도입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또 비친족 후계자를 괴롭히는 개인 보증의 계승이라는 부담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협의한 결과,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2013년)에 의거해 경감하는 방향에 있다. 자금 공급 또한 도모하고 있다. 단 그러한 경영환경적 시책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기업 경영을 계승한다고 함은 극히 인간적인 영위로, 경영적 수완과 판단, 실행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사업승계문제'에 대한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사업승계지원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과제와 관련한 상담에 응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조기계획 및 대응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로이 '사업승계 보조금'을 마련해 특히 지역에 공헌하는 존재로, 승계를 통해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투자를 보조한다. 나아가 7월에는 '사업승계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경영자에 대한 '배려'의 제공', 경영 개선을 포함한 '후계자가 승계하고 싶어지는 환경 정비', '후계자 매칭 지원 강화', '사업으로부터의 퇴출이나 사업통합 등을 실시하기 쉬운 환경 정비', '경영 인재 활용'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M&A나 제3자 경영 인재의 등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구미 지역 등에서는 널리 찾아볼 수 있는 기업 매매나 외부 전문 경영자에 대한 계승 등도 향후 일본의 과제임이 명백하리라. 그러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M&A는 사업 존속의 필요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동업이나 관련 기업, 거래처 등의 매수가 많다. 기업 가치의 재정, 다양한 부채 부담의 표면화 등도 관련이 있다. 오히려 친족, 비친족을 불문하고 힘겨운 시대에 있어서 경영의 계승과 발전, 특히 경영 혁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갈 수 있는 차세대 경영자의 육성, '학습'의 기회와 환경 정비를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후계 예정자가 '무사 수행'이라는 의미에서 타사에서 근무 경험 등을 쌓는 예는 널리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나 정보계통, 기능계통의 업종에서는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최신의 선진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흐름이 있다. 사업 계승을 경영의 고차원적 발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다만, 기업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적고, 중소기업대학교의 경영 후계자 연수, 몇몇 대학이나 대학원 외에는 사립시설이 많다. 이러한 배움의 장은 같은 입장에 있는 후계자간의 교류나 협동, 상호 협력의 기회로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승계문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경제의 담당자인 중소기업, 특히 핵심적 기업을 순조롭게 존속할 수 있어야 지역의 산업 시스템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 유지와 고용 유지, 산업 조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M&A를 통한 경영을 존속시키고, 때로는 방대한 채무로 인해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된 '전통 기업'의 재생 존속을 위해 지역 내 능력 있는 경영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등의 협력을 얻어 경영을 계승함으로써 재건과 혁신을 실행하는 등의 예도 적지 않다. 본디 커다란 잠재력, 기술과 제품, 관광 자원, 브랜드 등을 보유한 기업이 새로운 경영자의 새로운 발상 하에서 재생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다대한 것이리라.

중소기업의 존속과 혁신 발전, 이들을 버팀목으로 하는 지역 산업조직의 활력 유지, 그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소득과 고용 기회의 확보는, 일본 경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Session Prosperity 2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사회자 _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발표자 _ 김시곤(서울과기대 교수)

송서각(중국위해항무그룹 부사장)

아라이 히로후미(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_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발제문

환황해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전략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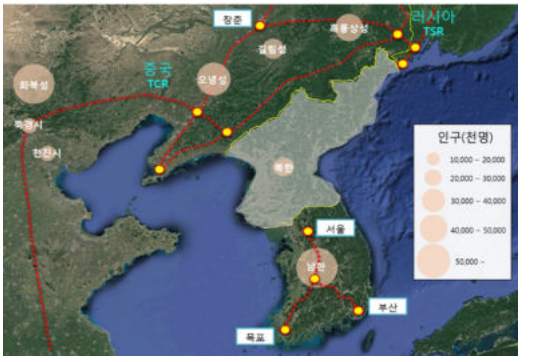
1. 환황해시대의 여건전망

가. 환황해 경제권의 개념

환황해경제권(環黃海經濟圈)이란 동북아경제권내에서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한국 · 중국 · 일본을 축으로 중국의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 그리고 부존자원, 한국의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력, 일본의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경제권을 칭한다. (참고: 지리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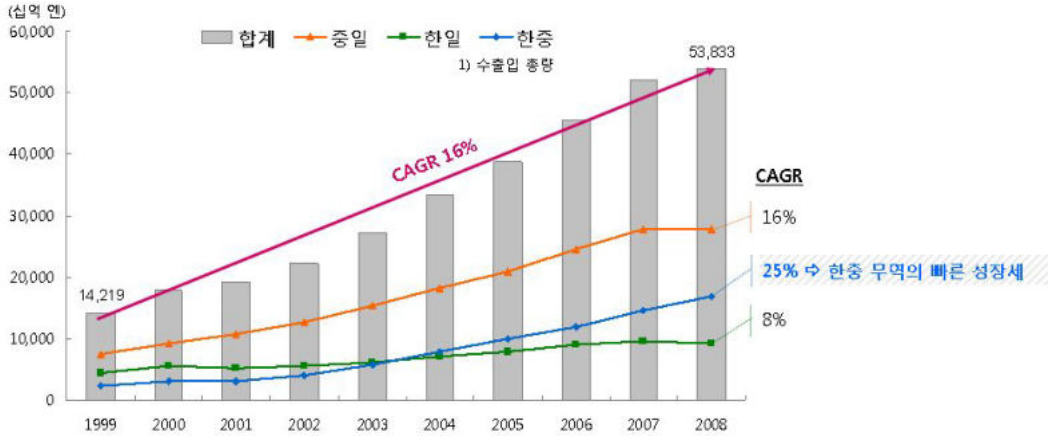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 지역의 인구가 약 3.7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평양 그리고 중국의 북경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동북아경제권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경 대도시권과 서울 대도시권, 동경 대도시권이 융합된 동북아 베세토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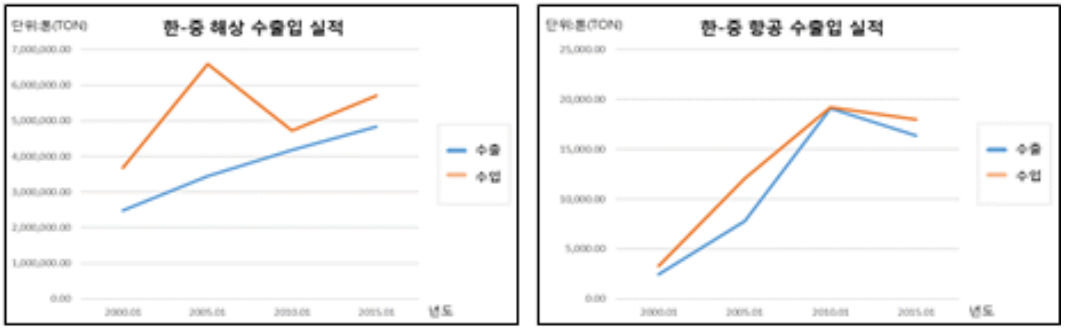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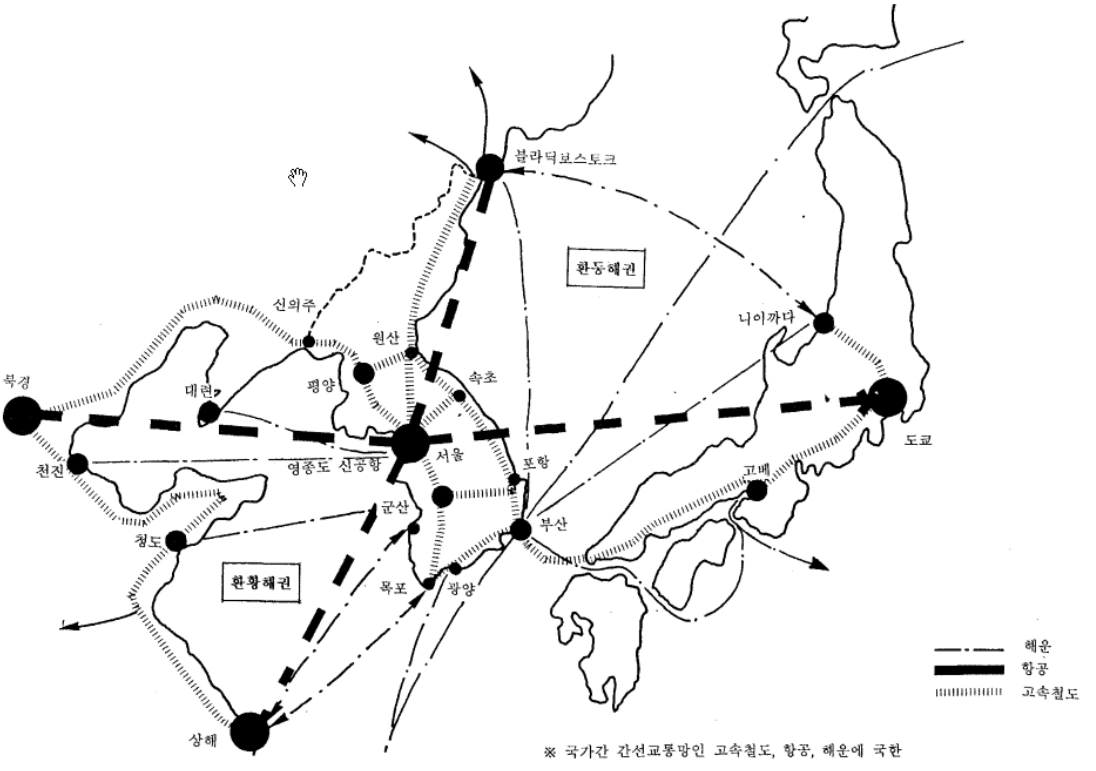
나. 환황해경제권내 교역량 추이

한·중·일 3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한·중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2008년까지 약 10년간 3국의 교역량은 3.8배 증가하였다. 중국과 한국간 교역은 지형적 특성상 북한을 경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과 항공으로만 유통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중국과의 유통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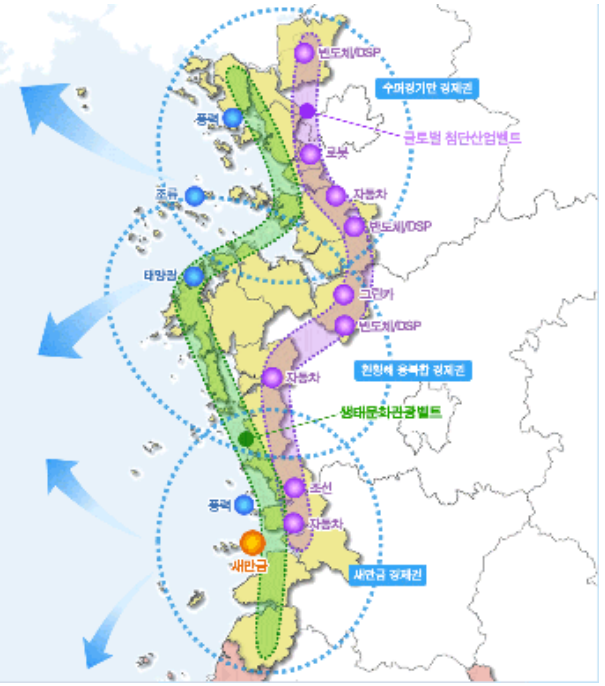
환황해경제권을 위시한 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이 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제교통구축의 필요성은 “21세기 동북아시대 한반도의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1994)”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자료: 21세기 동북아시대 한반도의 교통(1994), 김 시곤 등, 교통개발연구원

2. 서해안권의 잠재력 분석

서해안권은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입지 특성상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해안권의 면적은 9,169㎢(전국의 9.2%), 인구는 5,604천명(전국의 11.3%)에 불과하나 경제활동 인구는 전국의 36.4%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2.5%로 전국 평균(0.5%)에 비해 높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8.7%~16.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서해안권의 범위
인천광역시 (8개 구, 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6개 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7개 시, 군)	보령시, 아산시, 사신시, 서천군, 흥성군, 태안군, 당진시	
전라북도 (4개 시, 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라이스식 해안으로 전국의 54%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이 분포(1,394㎢)하는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과 2,802㎢에 달하는 해안지역, 587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천해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또한 수

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를 위하여 충남 천수만을 수산자원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전국 504개소 중 57개소, 특정도서는 전국 162개소 중 5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 간의 연계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신산업 집적거점 등 21세기 개방형 국토 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의 인프라·인력활용, 대중국 투자·소비의 잠재력 충족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첨단산업 집적기능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초고속 네트워크의 수요증대, 새로운 교통수단 및 상품의 출현 등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이 구미에서 환황해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황해권 내 신산업 경제 네트워크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남북간·동서간의 육송, 해송, 철도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 및 환황해권 수출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환황해권을 묶는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가. 남한의 경제권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

한반도의 국경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맞붙어 있고 동 지역까지 고속철도망이 완성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는 국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중심(Hub)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남한입장에서는 북한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섬나라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상 항공을 제외하고는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환황해를 따라서 목포~새만금~서울~평양~북경을 잇는 국제철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 구축된 동북아의 고속철도망과 연계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현재 섬 같이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남한과 중국과 함께 연결될 것이다. 이 경우 평양권은 동북아 관문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한~북한~북경을 잇는 국제철도교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해상을 활용한다. 기존의 해상운송을 통한 물동량의 운임비는 상대적으로 철도에 비하여 최소 2배 이상 높다. 철도로 운송수단을 변경함으로써 남북한의 교역 물동량 수송측면에서 약 50달러/톤의 운임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추가적인 운임절감은 약34달러/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송시간 절감에 따른 철도 물동량이 증가되어 남한경제권을 동북아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구분	남북교역 (달러/톤)	한국~중국(달러/톤)	한국~유럽·러시아(달러/톤)
철도수송	15.1	27.0	38.2
해상운송	64.0	62.4	72.0

주: 1TEU = 12.5톤으로 가정

나. 북한 접경지역에 풍부한 다국적 사업이 존재

1990년대 초반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주도 하에 북한 접경지역을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하기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TRADP)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동북아에 위치한 5개국(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협력하여 최초의 동북아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두만강의 하류 지역은 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중국 각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몽골 또한 이곳의 배후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 남 · 북한 동반성장이 가능

지정학적으로 평양은 남한~북한~북경을 잇는 교통요충지로서 남한 ~ 북한 간 고속철도가 연결된다면 평양이 서울과 함께 동북아 국제 관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또한, 평양과 서울 간 경평(京平)축에 위치한 도시들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해상운송에서 철도수송으로의 수단변환에 따른 시간절감 효과를 보면 남북한 구간의 경우 약42시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물동량의 경우 약 33~38시간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연결철도로 인하여 인구와 물동량이 증가하여 한반도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구간	남북교역		한국–중국		한국–유럽·러시아	
	남측구간	북측구간	남측구간	북측구간	남측구간	북측구간
철도수송(시간)	3.3	14.0	8.3	14.0	8.3	19.0
해상운송(시간)	60.0					

주: 해운운송은 환적시간, 접안시간, 항해시간으로 구성됨

4. 한반도 차원의 국제철도인프라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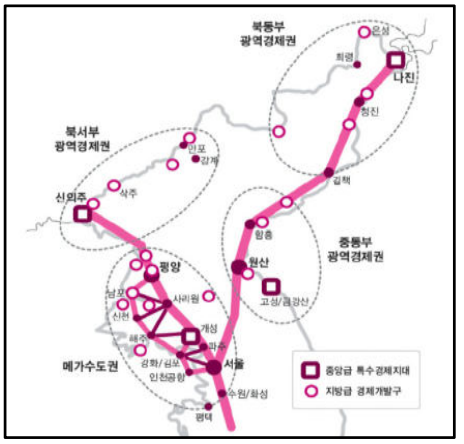
가.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검토사항

일단 남한의 경우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속철도망(HSR)을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 장래에 HSR망 같은 국제철도교통 인프라를 어느 도시를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몇 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대도시를 통과하는 것이 고속철도망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 연계, 인구의 규모, 주변 위성도시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광역경제권 현황

북한의 광역경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는 특수경제지대로 4대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선 경제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가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남한의 수도 서울과 인접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2002년 개성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번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 최근 2015년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은 평양과 서울의 주요 거점도시로 향후 통합경제권 형성 시 남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공업지구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경제특구	해당 광역경제권 (연계 대상 도시)
니선 경제특구	북동부 광역경제권 (청진 · 김책 · 온성 · 회령 · 니진 · 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북서부 광역경제권 (신의주 · 삭주 · 만포 · 강계)
강산 관광특구	중동부 광역경제권 (원산 · 함흥 · 강릉)
개성 공업지구	메가 수도권 (혜주 · 남포 · 평양 · 서울 · 인천)



다. 북한지역의 HSR망 통과예상 도시 및 주요 사회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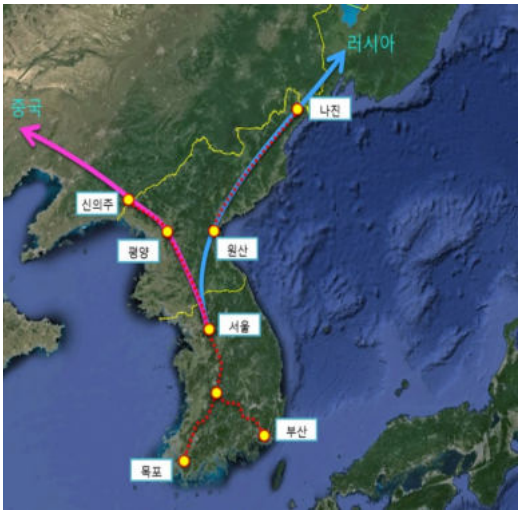
상기 북한의 대도시 중 확실한 HSR 노선망은 남한의 경부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의선 축과 경원선 축과 평행한 신규노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북한의 주요 경제권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축을 통과하는 도시로는 경의선의 경우 개성, 평양, 신의주가 예상되며, 특히 남포시는 평양시의 위성도시로서 자급자족의 도시 형태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원선의 경우 원산, 함흥, 청진, 나진시가 주요 통과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도시가 인구 규모측면에서 북한의 7대도시에 해당한다. 북한의 7대도시의 사회경제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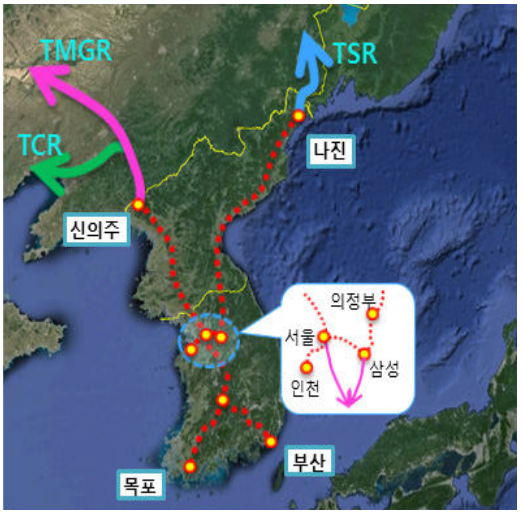
도시	KTX통과여부 (Hub 역할)	인구(명)	도로망 형태	철도 노선 갯수	주변위성도시 (개)
개성시	○	308,440	격자형	2	11
평양특별시	○	3,015,811	방사형	4	20
신의주시	○	359,875	방사형	3	10
남포시	X	366,815	방사형	3	–
원산시	○	363,127	방사형	3	12
함흥시	○	668,557	방사형	3	9
청진시	○	667,920	격자형	3	5

라. 북한지역의 국제철도인프라 구축방향

우선, 서울~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망 기반 TCR를 연결한다. 현재 평양에서 북경 구간의 철도 운행은 22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서울~평양 간 국제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평양에서 북경까지 4시간대, 서울에서 북경까지는 5시간대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철도 구상계획은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부터 건설 후, 평양~신의주 구간으로 확대해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서울~원산~나진 고속철도망 기반 TSR를 연결한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운행하는 철도는 현재 6일이 소요되지만 서울~평양의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운행이 가능해진다. TCR 연계와 마찬가지로 서울~원산 구간을 우선적으로 건설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며 나진까지 확대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로 확대하여 보면 국제철도망이 통과하여야 하는 6개의 지점이 있다. 우선 한반도 말단에 위치하여 국제철도망의 시발역이 되는 목포, 부산이 있다. 또한, 국제철도망은 반드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국제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TCR과 연결되는 신의주와 TSR로 연결되는 나진 · 선봉지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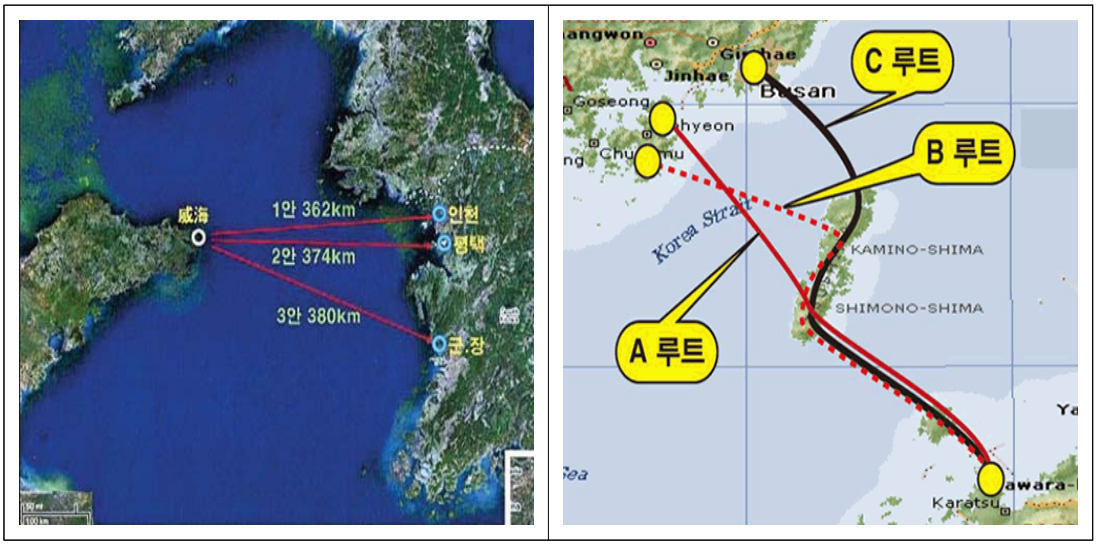




마. 한-중, 한-일 고속철도망 연결방안

북한을 통과하여 환황해경제권의 동맥역할을 할 국제철도망이 구축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북한이 개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를 대비하여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국제철도노선을 갖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게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 중국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과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 향후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된 후 북한이 개방하여 북한을 통과하는 국제철도망이 완성되더라도 꼭 중복투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해안에서 중국 하이웨이 간 해저터널의 연장은 북한을 우회하여 가는 노선보다 철도연장이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체 노선을 확보한다는 점, 향후 한-중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어는 한 노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하여 동북아를 철도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한-일 해저터널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만 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리한 협상 분위기에서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천천히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한반도 물류철도망 구축

환황해시대를 대비하여 서울~평양~신의주, 서울~원산~나진축으로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의 경의선과 경원선을 개량화 하여야 한다. 모든 물류를 고속철도망 만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물류철도망은 북한의 철도노선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열악하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남북한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면 그나마 사용은 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물류철도망은 개량한다는 전제하에 남한을 중심으로 물류철도망을 살펴보았다. 환황해경제권의 물류를 담당할 한반도 물류철도망은 서해안축의 서해안선 및 경의선, 동해안축의 동해선, 남해안축의 남해선을 중심으로 "U"자의 형태의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동해안 축은 Missing-Link 없이 철도망 연결계획이 있으나, 서해안 축에서는 목포~군산의 경우 현재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Missing-Link로 존재한다. "U"자 형태의 물류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목포~새만금~군산 간 물류철도노선 건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목포~새만금~군산 간 물류철도노선이 완성되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지역의 물동량 분산효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 입주업체 및 군장 산단 입주업체 물류비용 절감,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벨트 형성을 통한 정부의 서해안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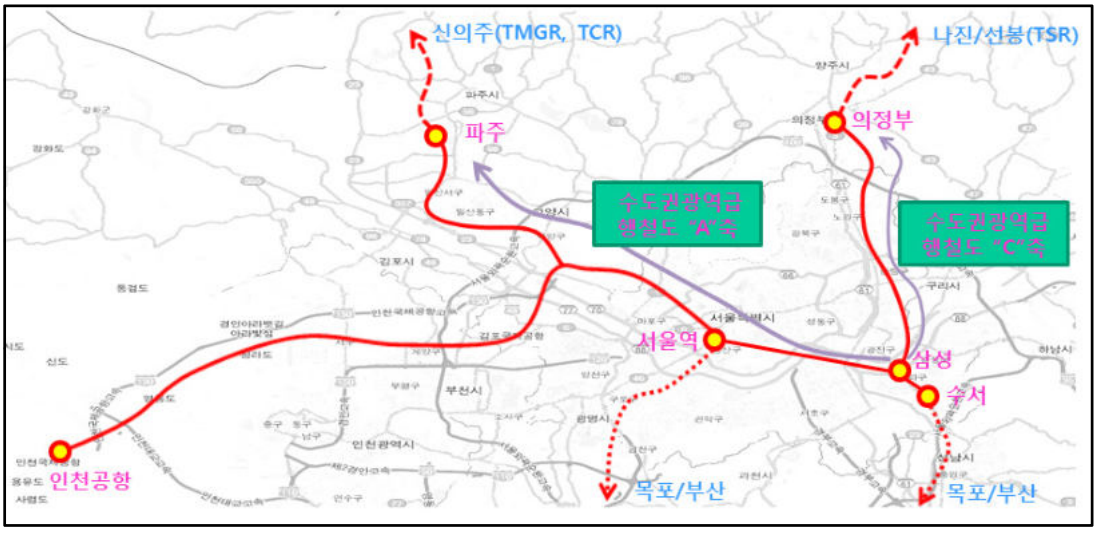
종류	구간		연장(완공년도)
서해안축	대곡~소사		19.6㎞(2021)
	소사~예산~군산		207.3㎞(2020)
동해안축	부산~포항		141.7㎞(2017)
	포항~영덕		44.1㎞(2018)
	영덕~동해		122.2㎞(2018)
	동해~제진	동해~강릉	49.2㎞(추가검토)
		강릉~제진	110.2㎞(추가검토)
남해안축	목포(임성리)~보성		79.5㎞(2020)
	광주송정~보성~순천		113.0㎞(추가검토)
	순천~진주		66.5㎞(2016)
	진주~삼랑진		102.5㎞(완료)
	삼랑진~부전		47.6㎞(완료)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미래철도 DB

6. 남북한 철도연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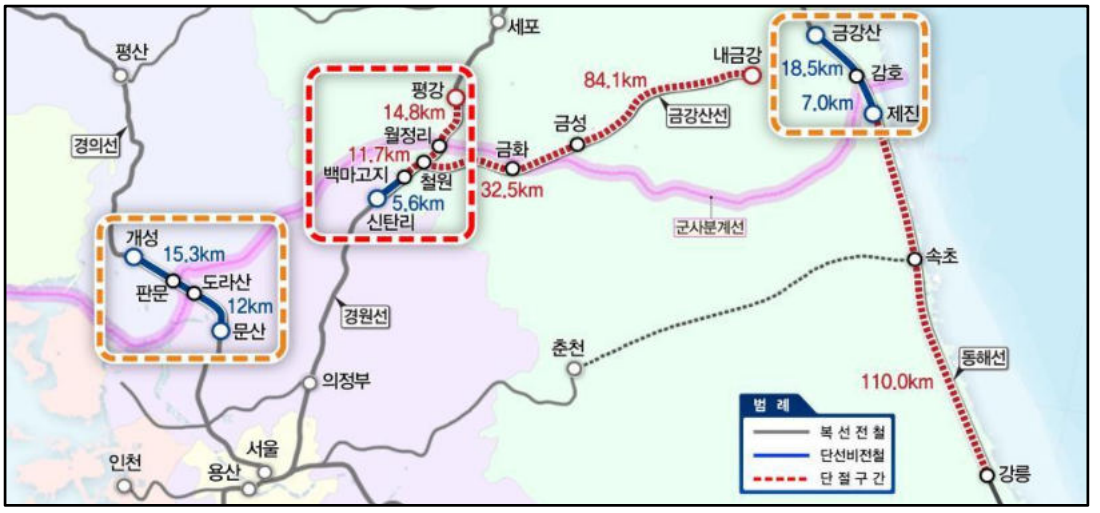
가. 남북한 국제철도 인프라 연결방안

남북한 국제철도 인프라 연결은 새롭게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에 건설할 철도시설이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GTX는 총 3개의 노선이 있다. 파주~삼성까지 이동하는 GTX A축과 경의선 축을 활용하여 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중국철도인 TCR선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금정까지 이동하는 GTX C축과 경원선 축을 활용하여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을 연결할 수 있으며, 러시아철도인 TSR선과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평양 국제철도 인프라를 통하여 북한 주요도시와 연결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남북한 물류철도망 연결방안

남북한 물류철도망은 크게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 2개가 있지만 북한의 금강산을 거쳐 원산으로 이르는 노선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또 다른 물류 경로가 될 수 있다. 우선, 이 3가지 노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경춘선을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속초를 거쳐 동해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으로 나아가자 항구 상호연결의 새 국면 창출

송시궈(宋西閣)
웨이하이(威海) 항그룹 부총경리(副總經理)

존경하는 고위 관계자, 전문가, 업계인사,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여러분과 함께 경제 글로벌화, 지역적 경제통합 시대의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하이항그룹을 대표하여 제2회 환황해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최측의 진심 어린 초청과 환대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발전 통합으로 전 세계 운송 네트워크와 시스템 연계화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무역 교류에서 항구는 나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 협력에서의 핵심 역할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구 간 상호연결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절실해지고 있으며, 항구기업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하이항을 대표하여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추진과 강화에 대한 기본 이해, 초보적 탐색, 관련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기본 이해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사회 분업은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세분화, 즉시성이 요구되면서 생산, 무역, 운송, 금융 서비스 등 각 업종 간 연계와 상호 의존, 상호 협력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국의 물류 집산운송 책임을 지고 국제 무역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는 항구와 같은 물류 거점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급사슬 체계에서 고효율, 신속, 공유에 기반을 둔 항구 상호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간 물류 연결이 나날이 긴밀해지면서 물류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은 진정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물류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체적인 서비스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항구기업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급사슬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항구 간 고효율, 신속, 공유에 기반을 둔 상호연결 능력은 대체 불가한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주위에는 13개 이상의 항구가 있으며, 이들 항구는 환황해 경제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항구를 핵심으로 하는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호연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적 우위와 양호한 기반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의 추진과 강화는 각 항구 간 자체 우위자원 배치 고도화, 상호협력/보완, 질적 성장을 하는 데 필요조건입니다. 각 항구의 국제 항구 분업 시스템 진입 가속화와 지역 항구 경쟁력과 응집력 강화, 상생발전에 있어서도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오랜 기간 환황해 항구들은 상호연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 다양한 단계,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환황해 항구들이 상호연결을 실현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하게 됩니다. 이는 협력의 기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업계인사, 전문가, 친구 여러분!

성과는 기쁘지만,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자체 수요, 추진 강도 등이 다르기에 항구 간 상호연결의 범위와 깊이가 부족하고 공통 시스템의 대칭적 지원과 공유자원의 상호배치가 미흡하여 항구기업의 강점 발휘, 우위 보완, 차별화 성장의 공통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여서 바다를 통하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연결됩니다. 항구의 편리화와 상호연결 우위는 비행기, 고속철도, 도로 등 어떤 교통 방식보다도 훨씬 뚜렷합니다. 항구를 통해서만이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통합 건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신 실크로드)'전략,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 상생 협력을 목표로 현재의 결점을 보완하고 항구 간 상호연결의 질과 수준을 높이며 실질적이고 환황해만의 특색을 갖춘 항구 상호연결 '환황해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국제 항구 간 상호연결에 우리의 '환황해 경험'을 기여하도록 합시다!

2. 항구 상호연결을 적극 모색하는 웨이하이항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이자, 산둥(山東)반도 블루경제권 도시인 웨이하이시는 다양한 발전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웨이하이항은 한중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 건설 가속화,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강화에서 좋은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특한 지리적 우위입니다. 황해의 북쪽, 산둥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웨이하이항은 중국에서 한국, 일본, 북한, 동남아 국가로 통하는 편리한 출해구(出海口)이며, 항구에서 10해리(18.52km)만 나가도 보하이(渤海)만을 드나드는 국제항로와 만납니다. 동북아 전체 위치상 웨이하이항은 중국에서 한국 서해안을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천항까지 220해리, 평택항까지 238해리입니다. 보하이만에서의 위치로 볼 때 웨이하이항에서 다롄(大連)항까지 93해리로 6~7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류의 시간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해상운송 비용도 절약해줍니다. 이처럼 독톡한 지리적 우위는 웨이하이항과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는 조밀한 항로 배치입니다. 웨이하이항은 현재 한국, 일본, 칭다오(青島), 다롄, 황푸(黃埔) 등 항구를 잇는 국제/국내 컨테이너 간선, 지선 항로를 다양하게 개설했으며, 인천, 평택, 다롄 등 항구로 통하는 국제/국내 여객 정기선 항로를 개설, 매월 200여 차례 운항합니다. 이 중 주요 노선인 한일 노선의 경우, 매주 일본 항구로 6회, 한국의 주요 항구로 13회 운항하고 있으며, 매주 부산 3회, 인천 6회, 평택으로 5회 운항합니다. 특히 여객 정기선은 매주 6회 운항하는데 한국까지 1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이처럼 조밀하고 빠른 노선 배치는 웨이하이항이 항구 상호연결을 전개하는 데 좋은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셋째는 해상, 철도, 도로의 빈틈 없는 연결입니다. 수강(疏港)고속도로는 항구지역에 직접 통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수강철도도 항구에 직접 통하며 자오지선(膠濟線, 濟南–膠州)을 통하면 전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250m, 여객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4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 철도, 도로의 물류 체인이 빈틈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넷째는 고효율의 통관 환경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당일 즉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廣州) 지역에서 한국으로 간 화물의 경우 공장에서 실어서 한국에서 내릴 때까지 3일 반이 소요됩니다. 쑤저우(蘇州), 이우(義烏) 지역에서 한국으로 보낸 화물의 경우 공장에서 실어서 한국에서 내릴 때까지 이틀이면 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전자 화물의 경우, 한국 공장에서 실어서 베트남에서 내릴 때까지 5일이 걸립니다. 광저우, 이우, 쑤저우 등 남방지역과 한국 간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동량이 매년 약 4만TEU로, 웨이하이 항구에서 진출입합니다.

다섯째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항구의 대외개방 등급입니다. 신항구의 3, 4기 터미널은 전부 대외 개방됐고 국가육류수입항구, 해상우편배달항구, 해운특급화물항구자격허가를 획득하는 등 항구의 개방 능력과 등급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외 항구 특히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온 웨이하이항은 '양대 노선 동시 추진, 전자상거래 돌파, 정보 지원, 하드웨어 고도화' 등 주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모색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상 항로를 확대했습니다.

1990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기도 전에 한중 해상 항로(웨이하이-인천)가 개설됐습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 항로는 한중 경제무역과 문화 교류의 '해상금교(海上金橋)'로 부상했습니다.

2010년 중국에서 먼저 한중 육해운송 연계 서비스를 시범 개설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 15일 한국인 여행객 5명이 2대의 자동차를 타고 인천-웨이하이 여객선을 이용해 웨이하이 항구에서 입국에 성공, 웨이하이항 최초의 한국인 자동차 여행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자동차 동반' 입국하는 자동차 여행 모델은 전국 최초로 꼽힙니다. 이는 한중 육해 연계운송 서비스 개설 이래 새로운 성과이기도 합니다.

해상항로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컨테이너 항로 개발 지도팀과 여객 정기 항로 개발 지도팀을 구성, 웨이하이항의 단체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항로 확대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웨이하이-단둥(丹東)항 여객 항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하이만 해상 '소형 버스'를 비정기적으로 개설, 보하이만 항구의 컨테이너를 웨이하이로 환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웨이하이-부산, 웨이하이-군산, 웨이하이-잉커우(營口) 항로를 증편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철도 노선 개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웨이하이-서쑤저우', '웨이하이항-광저우 다랑(大朗)' 컨테이너 특수열차 노선을 개설했고 항구 철도 노선과 다롄, 한일의 해상항로와 빈틈 없는 연결을 실현, 한국과 화둥(華東)지역 간 무역거래에 신속하고 고효율의 해상철도 연계운송 '금교(金橋)'를 놓았습니다. 이 중 광저우 철도는 웨이하이항-한국 항로와 빈틈 없는 연결이 가능하며,

주로 한일 수입전자상품, 둥베이(東北)지역 특산물, 광저우 수출전자제품, 소상품 등 수출입 연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웨이하이항 '북상남하(北上南下)' 시장 전략의 재확장이자 '해상철도 연계운송'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대담한 시도로, 웨이하이항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시범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웨이하이-광저우 철도는 웨이하이에서 광저우까지 적재율이 83.2%(이 중 대외무역 화물이 31% 차지)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쿤밍(昆明)-웨이팡(濰坊)-웨이하이' 철도 콜드체인 물류 컨테이너 열차가 개통됐으며, 이는 웨이하이에서 한국으로의 해상항로와 연결되는 해상육로 노선입니다. 해당 열차의 개통으로 동으로 한국과, 남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와 연결되는 전문 철도 콜드체인 물류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9월 2일 웨이하이에서 독일 함부르크를 잇는 중유럽 화물열차가 개통됐고, 9월 16일에는 웨이하이항에서 독일 뒤스부르크를 잇는 중유럽 화물열차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열차는 매주 1회 운행하고 1회당 41칸을 선적하며 중유럽 화물열차를 상징하는 40척 크기의 전용 컨테이너가 탑재됩니다. 또한 중국철도총공사(CRCC)의 중유럽 화물열차 특정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중도에 해체되지 않으며 다시 편성되지 않습니다. 고속 직통 열차로, 운행시간이 15-18일이 소요돼 해상운송보다 약 20일 줄었습니다. 이는 산둥 최초의 거점을 연결하는 중유럽 화물열차입니다. 9월 19일에는 국경을 넘는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시운행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한중 간 전자상거래 업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15년 웨이하이항 소속 국제물류단지를 주체로 한중 무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웨이하이시 유일의 대외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가 단지에 입주했고 해관(海關) 우편사무실과 웨이하이 특급우편도 입주했습니다. 현재 보세창고물류센터, 대외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 출입국특급화물관리감독센터, 상품분류분배센터, 보세전시거래센터, 대외무역전자상거래기지, 한국상품해외창고, '항구에서 한국제품 구매(港韓購)'O2O 우수제품체험센터 등 업무 기능지역을 구축하고 산둥전자항구시스템, 해관, 상품검사, 배송 등 정보플랫폼이 상호 연결된 대외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2016년 대외 전자상거래 건수는 64만여 건으로 총액 7,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9월 말 기준으로 2017년 누적 건수는 163.2만 건, 총액은 1억 4,110만 3,500달러에 달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웨이하이는 해운 특급 화물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해 칭다오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 국제 해운 특급 업무를 시작한 두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웨이하이는 4,500㎡의 해운 특급화물 관리감독센터와 2만㎡의 화물운송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하이는 한일 본국의 국제우편배송업무를 개척하고 있으며 한일 상품이 웨이하이를 통해 화둥, 화베이 지역에 특급으로 들어가는 물류 채널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행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철도와 해운 특급화물 업무와 고속철도 특급화물 연계 협력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9월 말 기준 2017년 누적 건수 9.27만 건, 총액 1,162만 5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차후에는 미국, 호주, 구미 기타 국가 국제상품의 인천 환적 서비스를 개척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품이 항공으로 인천에 도달 후 인천에서 해운으로 웨이하이에 도착하는 '국제, 국내' 양방향의 특급 물류 채널을 개척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 항구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 통합이라는 위대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정보기술 혁명은 인류의 역사 과정과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으며, 인터넷, 사물인터넷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구 물류 서비스업의 정보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구 물류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 간 물류 정보 플랫폼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그룹 소속의 '웨이하이-평택' 여객 항로를 운영하는 자오둥(膠東)선사를 중심으로, 중국해관총서 페이퍼리스 전자통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RFID, 베이더우(北斗) 및 GPS 위치측정 기술, 3G 통신 등 기술을 응용하고 컨테이너 육해 연계운송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정식 컨테이너 도어락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컨테이너 복합운송 사물인터넷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운송 전 과정의 위치측정을 통해 한중 고객에게 원스톱 화물 운송의 동태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보세상품 원스톱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웨이하이와 한국의 지리적, 무역의 우위에 기반해 항구, 해운, 보세물류, 도시 간 배송의 연동 우위를 발휘하여 한중 보세상품 원스톱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 간 통합 집산운송 배송 저장 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국상품의 중국 진입에 보다 신속한 무역 채널을 개척함으로써 시장을 한층 확장시켜주었습니다.

'13.5'기간 '인터넷+'발전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투자액은 5,808만 위안으로, 웨이하이항 물류 공공정보 플랫폼, 웨이하이항 여객운송 공공서비스 플랫폼, 국가 간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스마트 터미널 조작관리 플랫폼을 포함한 항구물류 정보화 플랫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항구 건설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항구 상호연결에 강력한 정보화 기술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섯째, 컨테이너 복합운송센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항구 상호연결 하드웨어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하이항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선석, 컨테이너 선석과 통관 조건은 연간 120만TEU의 통과능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항구의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종합 서비스 센터 시설을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웨이하이에 수출입되는 컨테이너의 집중 통합, 원스톱 관리감독과 서비스를 실현하고 검역 및 통관 수준과 효율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복합운송 업무의 빠른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 1기 공정 건설이 완료돼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구 상호연결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40만㎡의 야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물류 저장 창고를 세워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1.2만㎡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건설하고 작업라인을 300m 늘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강철도 개조/업그레이드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웨이하이시정부도 웨이하이 지하철 국철 귀속, 수강 고속도로 고가(高架) 건설과 제2수강고속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웨이하이항 종합 집산운송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2017년 4월 19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웨이하이항을 시찰하면서 "웨이하이항이 지리적 우위를 발휘해 중서부로 확장하고 컨테이너 환적 서비스를 양적, 질

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웨이하이가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참여하고 환황해 경제권에 융합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향후 웨이하이는 총리의 뜻을 이행하고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한 지리적 우위를 발굴, 발휘하여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까지 진출함으로써 웨이하이항 상호연결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웨이하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쪽으로 영역 확장

한국을 잇는 컨테이너와 여객 정기 항로를 확대하고 한일 나아가 한일을 통해 미주까지 확장하는 국제 물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서쪽으로 영역 확장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영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며 '한국-웨이하이-노보시비르스크-유럽'국제 물류루트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우마(侯馬),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인촨(銀川) 등 '일대일로' 선상의 주요 거점도시와 린이(臨沂), 청두(成都), 정저우(鄭州) 등에 무수항(無水港)을 배치하고 컨테이너 열차를 개통하여 웨이하이항을 중서부 지역의 주요 출해구(出海口)로 구축한다는 복안입니다.

북쪽으로 영역 확장

단둥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둥베이 3성(省) 서북부, 네이멍구(內蒙古) 동부와 러시아 동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광둥(廣東)-웨이하이-단둥-만저우리(滿洲裏)-톰스크-노보시비르스크를 잇는 국가 간 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하이만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환적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남쪽으로 영역 확장

동남아 원양 간선항로를 개설하여 동남아로 향하는 '해상 실크로드' 주요 채널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웨이하이항–광저우 컨테이너 특수열차 운영의 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웨이하이항–서쑤저우 컨테이너 특수열차 운영의 상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웨이하이항–핑샹(憑祥)–베트남 랑선–하노이를 잇는 인도차이나반도 국제열차를 개설하며 한중 자유무역지대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3.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

환황해 각국 경제무역 교류가 나날이 빈번해지고 긴밀해지면서 환황해 항구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항구 간 및 역내 항구와 역외 항구 간 상호연결 가속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전 도모, 경험 공유, 공통 시스템, 협력 추진, 시장 공유, 강점 발휘' 원칙에 따라 항구 간 집산운송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체인을 확장하며 '3대 행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 행동을 촉구합니다.

항구의 종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영향력을 발산하는 역할은 국가경제, 지역경제에서 주요 전략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전략성은 항구의 발전이 정부 결정에 부합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구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항구 상호연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웨이하이항은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서비스센터 건설, 컨테이너 철도열차 개설, 항로 개발 등 측면에서 중국정부 관련 부처의 인정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 상호연결을 추진 시 각국 정부의 관련 계획에 호응하고 국제 현대 물류 발전의 기본 수요에 맞춰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적극 구해야 합니다. 또 상호연결의 강도와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방해 없는 상호연결 플랫폼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황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둘째, 업계 연계 행동을 적극 이끌어냅니다.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체인 확장은 전체 항구산업의 긴밀한 협력 및 연동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개방성, 포용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인도와 항구의 주도적인 추진을 통해 선사, 육상운송기업, 항공기업, 무역기업, 공업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항구연맹과 업계협회 등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발전 이념을 혁신하며 항구 상호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한편, 항로 개발, 업무 연계, 가격 협의, 자원/정보 공유 측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항구의 역할을 부단히 확대한다.

상호연결 추진 측면에서 환황해 역내 대형 주요 항구는 본보기, 지원자, 선도자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항구 물류 연동 특징에 따라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항구 전략적 연맹의 특징을 갖춘 상호연결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발전 도모, 경험 공유, 공통 시스템, 협력 추진, 시장 공유, 강점 발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향후 항구 간 교류를 강화하고 양자/다자 간 정기 협력 교류를 형성하며 상호연결의 수요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절한 항구 상호연결 모델을 탐색함으로써 항구 상호연결이 지역 무역, 물류, 물류 상호연결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과 인문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촉구합니다.

고위 관계자, 업계인사, 전문가, 친구 여러분!

환황해 항구 협력은 수십 년간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추진이 가속화되고 상호연결 플랫폼이 점차 공감대로 부상하면서 환황해 항구 간 긴밀한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의 기반과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시대 발전의 공통 수요가 있으므로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 바쁘시더라도 웨이하이항에 오셔서 둘러 보시고 조언과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환황해 경제권 발전 수혜를 공유하며 상생을 도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融入环黄海 立足东北亚 面向中东欧 不断开创港口互联互通新局面

宋西阁
威海港集团副总经理

尊敬的各位领导、各位专家、各位同仁、各位朋友：

大家好！

很高兴参加本次环黄海论坛会议，很荣幸有机会与各位专家、各位同仁各位朋友共同探讨在经济全球化、区域发展一体化背景下的环黄海港口间互联互通问题。

在此，我谨代表威海港集团对第二届环黄海论坛的成功举办，表示热烈的祝贺！对东道主的诚挚邀请和盛情接待，表示衷心的感谢！

经济全球化和区域发展一体化推动了全球运输网络和运输体系协同化进程进一步加快，促使港口在国家和区域贸易交流中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在区域经济合作发展中的核心作用也越来越强烈。在此过程中，港口间的互联互通日益频繁，也日益迫切，越发成为港口企业核心竞争力的重要组成部分。在此，请允许我代表我们威海港谈谈对推进和加强环黄海港口间互联互通的基本理解、初步探索和有关建议。

一、我们对港口互联互通的基本理解

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社会分工日益成为效率提高的源动力。大规模、精细化、即时性的生产要求，使生产、贸易、运输、金融服务等各行业之间的联系和相互依存、相互协作的关系越来越紧密。尤其像港口这样物流节点企业，既承载着本国的物流集疏运责任，又承载着国际间贸易的物流运营。在这样的供应链体系中，建设高效、便捷、共享的港口互联互通体系，已成为共识最高、需求最强的时代呼声。

随着现代物流业的发展，国与国之间的物流对接日趋紧密，物流企业的全程服务功能需要真正的服务创新，这就要求物流企业通过满足客户的需求，为客户创造价值以实现其自身的服务价值。这

种创新迫使港口企业通过提供全程服务，不断延伸供应链。在这个创新的过程中，港口间高效、便捷、共享的互联互通能力，日益发挥着无可替代的桥梁和纽带作用。

环黄海经济圈周围有三十多个港口，这些港口对环黄海经济圈的发展起着举足轻重的作用。这些港口地缘相近，以港口为核心的立体式交通网络体系发达，具有开展互联互通的地缘优势和良好基础条件。推进和加强环黄海港口间的互联互通，是各港口间优化配置各自优势资源，互补互助，优质发展的必然要求；更是各港口加速融入国际港口分工体系，增强区域港口竞争力和集聚力，共赢发展的必然要求。

长期以来，环黄海各港口在互联互通方面进行了多种方式、多个层次、多个维度的积极探索和有益尝试，取得了良好成效。实践证明，对环黄海各港口来讲，互联则互荣，互通则互赢！这既是我们的经验总结和合作基础，更应是我们今后的努力方向和奋斗目标。

各位同仁、各位专家、各位朋友！

成绩固然喜人，问题也不容忽视。由于环黄海各港口间对互联互通的重视程度、内生需求、推进力度等不同，致使各港口间互联互通的广度、深度、宽度都还不够，缺乏共性系统的对称支持，缺

乏共享资源的互动配置，缺乏无法满足港口企业各施所长、优势互补、错位发展的共性要求。

地球70%是海洋，通过海洋把世界各国互相联通。海洋港口的便利化和互联互通优势远比飞机、高铁和公路等交通方式明显。唯有通过港口互联互通，才能达到世界各国真正的互联互通，经济全球化和区域一体化建设提供基础保障。今后，我们要牢牢抓住中国“一带一路”战略、中韩自贸区建设和中日韩自贸区建设等重大机遇，以上述问题为导向，以合作共赢为目标，尽快把当前的短板补齐，不断提升各港口间互联互通的质量和水平，积极探索形成符合环黄海实际、具有环黄海特色的港口互联互通“环黄海模式”，为国际港口间的互联互通贡献我们的“环黄海经验”!

二、威海港在港口互联互通方面的积极探索

威海市是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也是山东半岛蓝色经济区的深蓝城市，多重发展机遇叠加。依托上述发展平台，威海港在加速融入中韩自贸区建设和中国“一带一路”战略建设，加强与环黄海各港口间的互联互通方面，具有良好的优势：

一是独特的区位优势。威海港位于黄海北部、山东半岛最东端，是中国通往韩国、日本、朝鲜及东南亚国家便捷的出海口，出港10

海里就是进出渤海湾的国际主航道。从东北亚整体位置来看，威海港是我国距韩国西海岸最近的港口，距仁川港 220 海里、距平泽港 238 海里；从渤海湾局部位置来看，威海港距大连港 93 海里，到达大连港 6—7 小时，不仅可提高物流时效也可为企业节省海运成本。上述独特的区位优势，非常有利于威海港与环黄海各港口间的互联互通。

二是密集的航线布局。从航线布局来分析，威海港目前已开通多条至韩国、日本、青岛、大连、黄埔等港口的国际国内集装箱干线、支线，开通至韩国仁川、平泽、至大连等港口的国际国内客滚班轮航线，每月可达 200 多班次。其中以日韩航线为“精品航线”，每周到日本港口航班为 6 班，每周到韩国主要港口航班数为 13 班次，分别是：釜山航线每周 3 班、仁川线每周 6 班、平泽线每周 5 班；其中客滚班轮每周 6 班，到达韩国仅需 13 小时。如此密集、快速的航线布局，为威海港开展港口互联互通奠定了航线基础。

三是海、铁、公链条无缝衔接。疏港高速公路直达港区并与全国高速公路联网；疏港铁路直达港区前沿，通过胶济线通达全国。集装箱码头离最近的铁路站台为 250 米，客滚码头离铁路站台为 400 米。海、铁、公物流链条可实现无缝对接。

四是高效的通关环境。到港货物“当天即可通关”。据统计，广州地区至韩国的货物，从工厂装货到韩国提货，3天半左右；苏州、义乌地区至韩国的货物，从工厂装货到韩国提货，只需2天；韩国至越南的电子货物，从韩国工厂装货到越南提货，5天左右。广州、义乌、苏州等南方地区对韩进出口货物，每年有约4万TEU，“舍近求远”从威海口岸进出。

五是港口对外开放等级不断提升。新港区三四期码头全部对外开放，并获批国家肉类进口口岸、海上邮路口岸、海运快件口岸资质，港口开放能力和等级大幅提升。

长期以来，威海港始终高度重视与国际国内港口特别是与环黄海港口之间的互联互通工作，采取“两线并举、电商突破、信息支撑、硬件优化”等重要举措，进行了积极探索和努力，取得了良好成效：

一是积极加密海运航线。

1990年，早在中韩两国建交之前，我们就开通了第一条中韩海上航线（威海——仁川）。经过多年发展，该航线已成为中韩经贸和文化往来的“海上金桥”。

2010年，在我国率先试点开展了中韩陆海联运业务。特别是

2016 年 3 月 15 日，5 名韩国旅客自备两辆私家车乘坐仁川至威海的客滚班轮，成功从威海港口岸入境，成为威海口岸首例韩国自驾游旅客，这种“人-车同步”入境中国的自驾游模式，在全国尚属首例。这也是中韩陆海联运开通以来又一项新突破。

为切实有效推动海运航线开发，我们专门成立了集装箱航线开发领导小组和客滚班轮航线开发领导小组，集中威海港的集体力量和智慧全力以赴推进航线加密工作。从 2016 年开始，我们就积极推进开辟威海至丹东港的客滚航线，并不定期开设了渤海湾海上“小巴士”，把渤海湾相关港口的集装箱达到威海港进行中转。2017 年已增加开通威海到韩国釜山、威海到韩国群山、威海到营口集装箱航线。

二是全力开通集装箱铁路班列线。

2016 年，我们先后开通了“威海至苏州西”，“威海港至广州大朗”的集装箱特需班列，将港口铁路专线与至大连、日韩的海运航线无缝对接，为韩国与华东地区间贸易往来架起了快捷、高效的海铁联运“金桥”。其中，广州班列可同威海港韩国航线无缝对接，主要承接日韩进口电子商品、东北地区特产、广州出口电子产品、小商品等进出口对接业务。这既是我港“北上南下”市场战略的再次

延伸，也是积极拓宽“海铁联运”市场领域的大胆尝试，对我港进一步扩大“经济领土”具有重大示范意义。截止目前，威海—广州铁路班列，实现了威海至广州方向重载率达 83.2%（其中外贸货源占总上货量的 31%）的良好发展势头。

2017 年 9 月 1 日，“昆明—潍坊—威海”铁路冷链物流集装箱班列开通，与威海至韩国海运航线对接，一条海陆衔接，东连韩国，南接东亚、东南亚和南亚的专业化铁路冷链物流通道得以形成；9 月 2 日，威海至德国汉堡中欧班列开通；9 月 16 日，威海港——德国杜伊斯堡港中欧班列开通。该班列每周一班，单班次发货 41 节，全部使用带有中欧班列标志的 40 尺专用集装箱，并使用中铁总公司中欧班列特定编号，中途不解体，不重新编组，高速直达，运行时间 15-18 天，相比原先海运缩减近 20 天时间，是山东第一条“点对点”的中欧班列。9 月 19 日，我们又完成了中越集装箱跨境班列的试运行。

三是大力推进中韩跨境电商业务。

2015 年，我们以下属国际物流园区为主体积极打造了中韩跨境贸易电商产业园，成功争取威海市唯一的跨境电商监管中心落户园区，并吸引了海关驻邮办和威海邮政速递的入驻。目前，我们已建

设形成了保税仓储物流中心、跨境电商监管中心、进出境快件监管中心、商品分拣分拨中心、保税展示交易中心、跨境贸易电商基地、韩国商品海外仓和“港韩购”O2O 精品体验中心等业务功能区，并搭建起了与山东电子口岸系统、海关、商检、快递等信息平台相对接的跨境贸易电商平台。2016 年，全年完成跨境电商操作量 64 万余单，总货值 7400 万美金。截止 9 月底，2017 年累计完成跨境电商操作量 163.2 万单，货值 14110.35 万美元。

2017 年 6 月 23 日，正式开通海运快件业务，威海成为继青岛后国内第二个开通国际海运快件业务的城市。目前，我们拥有 4500 平米海运快件监管中心和 2 万平米的货运场站。我们积极开拓日、韩本土国际寄递业务，努力打通日韩商品通过威海进入我国华东、华北地区快件的物流通道，现已与多家物流公司、电商平台及代理公司进行合作。同时，积极与中铁快运就海运快件业务与高铁快件业务的对接合作事宜进行了深入洽谈，达成了合作意向。截止 9 月底，2017 年我们已累计完成 9.27 万单，货值 1162.05 万元。下一步，我们还将大力开拓美国、澳大利亚、欧美其他国家的国际商品的仁川中转服务，通过商品经空运运至韩国仁川，在仁川转关以海运方式运至威海，积极打造“国际、国内”双向通达的快速物流通道。

四是大力推进智慧港口建设。

在经济全球一体化的伟大历史进程中，信息技术革命正改变着人类的历史进程和社会生活的方方面面，互联网、物联网对整个社会生活的影响日益巨大。在此过程中，港口物流服务业对信息的依赖度越来越高。为适应港口物流发展需要，我们积极推进跨国物流信息平台建设，以集团下属主要经营中、韩“威海-平泽”客滚航线的胶东航运公司为主体，积极响应中国海关总署无纸化电子通关的政策，应用 RFID、北斗及 GPS 定位技术、3G 通讯等技术，通过整合集装箱陆、海联运业务流程，集成设计了固定式集装箱电子关锁，搭建起体系化、开放式的集装箱多式联运物联网管理平台，通过集装箱运输全程定位，为中韩客户提供全程货运动态管理。

我们还探索搭建了中韩保税商品全程物流服务平台。依托威海与韩国的地缘与贸易优势，充分发挥港口、航运、保税物流、城际配送的联动优势，搭建了中韩保税商品全程物流服务平台，在提供跨国一体化集疏运配送仓储信息服务的基础上，还可为韩国商品进入中国，开辟更便捷的贸易通道，拓展更广阔的市场空间。

在“十三五”期间，我们大力实施“互联网+”发展战略，总计规划投资 5808 万元，积极推进了包括威海港物流公共信息平台、威

海港客运公共服务平台、跨境电商公共服务平台和智能码头操作管理平台在内的港口物流信息化平台项目，进一步提升了智慧港口建设水平，为港口互联互通提供了强有力的信息化支撑。

五是全力加快推进集装箱多式联运中心建设，不断提升港口互联互通硬件设施水平。

目前，威海港现有的客滚泊位、集装箱泊位和通关条件，可满足年 120 万 TEU 的通过能力，为提升港口通过能力，我们投资建设了国际集装箱多式联运综合服务中心项目，可实现对威海全市进出口集装箱的集中一体化、一站式监管和服务，大幅提高查验与通关质量和效率，有效带动多式联运业务的快速发展。目前，一期工程建设已基本完成，现已正式启用。同时，为进一步提升港口互联互通保障水平，我们还计划平整建设二突堤堆场 40 万平方米；建立冷链物流存储仓库，开展冷链物流业务；建设 1.2 万平米铁路集装箱堆场，增加作业线 300 米。此外，我们还正在规划疏港铁路升级改造建设项目，威海市政府也正在积极推进威海地铁收归国铁、疏港公路高架桥建设和第二条疏港高速公路建设等建设项目。上述建设项目完成后，威海港综合集疏运水平将得到更大提升。

今年 4 月 19 日，我国国务院李克强总理莅临威海港视察，做出

了“威海港要发挥区位优势、要向中西部延伸、要做大做强集装箱中转业务”等重要指示，为我们更深地参与“一带一路”建设，更好地融入环黄海经济圈，指明了方向和道路，也更加坚定和增强了我们推进港口互联互通的信心和决心。

今后，我们将严格贯彻落实总理指示精神，进一步深入挖掘和发挥对朝日韩的区位优势，融入环黄海，立足东北亚，面向中东欧，不断开创威海港互联互通的新局面。具体来讲，我们计划从四个方向维度进行战略布局：

在东向维度，努力加密对韩集装箱和客滚班轮航线，进一步提升对日韩进而通过日韩延伸至美洲的国际物流辐射能力。

在西向维度，全力巩固提升威海“中欧班列”运营质量和水平，努力开辟新的“中欧班列”线路积，极打造“韩—威—新—欧”国际物流大通道。规划在侯马、西安、兰州、银川等“一带一路”沿线重要节点城市和临沂、成都、郑州等地布局“无水港”，择机开通集装箱班列，努力将威海港打造成为中西部地区的重要出海口。

在北向维度，积极推进与丹东港的战略合作，向东北三省西北部、内蒙古东部和俄罗斯东部地区拓展，努力打通广东—威海—丹东—满洲里—托木斯克—新西伯利亚的跨境大通道；同时，进一步

提升面向渤海湾的集装箱中转业务能力。

在南向维度，择机开通东南亚远洋干线，打通面向东南亚的“海上丝绸之路”重要通道；继续巩固提高威海港——广州集装箱特需班列运营质量和效率；积极推动实现威海港——苏州西集装箱特需班列运营的常态化；积极开通威海港——凭祥——越南谅山——越南河内的中南半岛国际班列，打通中韩自贸区与东盟自贸区之间的连接通道。

三、我们对提升环黄海港口互联互通水平的几点建议

随着环黄海各国经贸交流的日益频繁和密切，环黄海港口在该区域的地位与作用日益凸显。为适应形势发展需要，加快区域内港口间以及区域内港口与区域外港口间的互联互通步伐，已迫在眉睫。我们建议，应本着“共谋发展、共享经验，共性系统、协同推进，共享市场、各施所长”的原则，进一步加各强港口之间的集疏运紧密联系，拓展跨国物流全程服务链条，着力推进“三个作为”：

一是主动推促政府作为。

港口的综合性、功能性、辐射性作用，决定了它在国家经济、区域经济中的重要战略地位。这种战略性决定了它的发展必须符合政府的决策导向，必须接受政府的行业监管，必须寻求政府的政策支持。

在港口互联互通工作推进探索过程中，威海港在国际集装箱多式联运服务中心建设、集装箱铁路班列开通、航线开发等方面，已得到我国有关部门的认可和支持。因此，我们认为，在推进港口互联互通时，应充分响应各国政府的相关规划，着眼国际现代物流发展的基本需求，积极寻求政府对港口互联互通的政策支持，在更高层次上提升互联互通的力度和维度，全方位促进无障碍互联互通平台的搭建，为环黄海区域经济发展做出更大的贡献。

二是积极引领行业联动作为。

要拓展跨国物流的全程服务链条，离不开整体港口行业的紧密协作、联动发展。要提升环黄海港口互联互通水平，必须保持这一体系自身的开放性、包容性，要通过政府的政策性引领，通过港口的主导拉动，引领和吸引航运企业、陆运企业、航空企业、贸易企业和工业企业，积极参与。同时，我们的港口联盟和行业协会等组织要发挥更大的、更积极的协调和推动作用，创新发展理念，积极打破阻碍和制约港口互联互通的桎梏，在航线开发、业务对接、价格协调、资源及信息共享方面，提供更大的便利。

三是不断加大港口作为。

在推进互联互通方面，环黄海区域内各大型重要港口应充分发

挥表率、帮扶和带动作用，遵循港口物流联动特点、以提供跨国物流全程服务为目标，建设具有港口战略联盟特色的互联互通平台，以达到“共谋发展、共享经验，共性系统、协同推进，共享市场、各施所长”的目的。今后，各港口间应加强交流，形成双边和多边定期合作交流机制，明确互联互通需求点，积极探索更恰当的港口互联互通模式，以港口互联互通带动区域贸易、物流、产业互联互通，推促区域经济发展和人文交流更上新台阶。

各位领导、各位同仁、各位专家、各位朋友！

环黄海港口合作已经走过了几十年的不平凡历程。随着环黄海经济圈的加快推进，随着共建互联互通平台越来越成为大家的共识，必将为环黄海港口间的密切合作注入新的活力。我相信，有我们港港对话与合作的基础，有各国政府的大力支持，有时代发展的共同需求，我们一定能开创出环黄海港口互联互通的新局面！

借此宝贵机会，我也诚挚邀请和热烈欢迎各位领导、专家、同仁和朋友，拨冗到威海港考察指导、洽谈合作，共享环黄海经济圈发展红利，共谋互利共赢。

最后，衷心地祝愿大家事业腾飞，身体安康！

谢谢大家！

발제문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 기회와 난관 –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제3회 환황해포럼
2017년 11월 2-3일
한국 충청남도 공주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 기회와 난관-

아라이 히로후미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설립 목표	동북아시아 국가 경제에 대한 연구 수행, 정보 축적 및 전파를 통해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 소지역의 형성 및 개발과 국제 사회 전체에 기여한다.
설립 시기	1993년 10월 1일
법적 지위	공익재단법인 (비영리 단체)
기부금	38억 1,400만 엔 (2016년 3월 기준)
기부 단체	12개 지방정부 (니가타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군마현, 나가노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니가타시) 및 8개 민영기업
직원	21명
주소 및 연락처	Bandaijima bldg., 5-1, Bandaijima, Chuo-ku, Niigata city, Japan (tel. +81-25-290-5544)

연구 및 정책 제안

- 부문별 접근 (교통, 에너지, 환경, 경제 통합 등)
- 국가적 접근

지역 간 및 사업체 간 교류

-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사업 목표 지원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등
- 지방 대 지방(local-to-local) 교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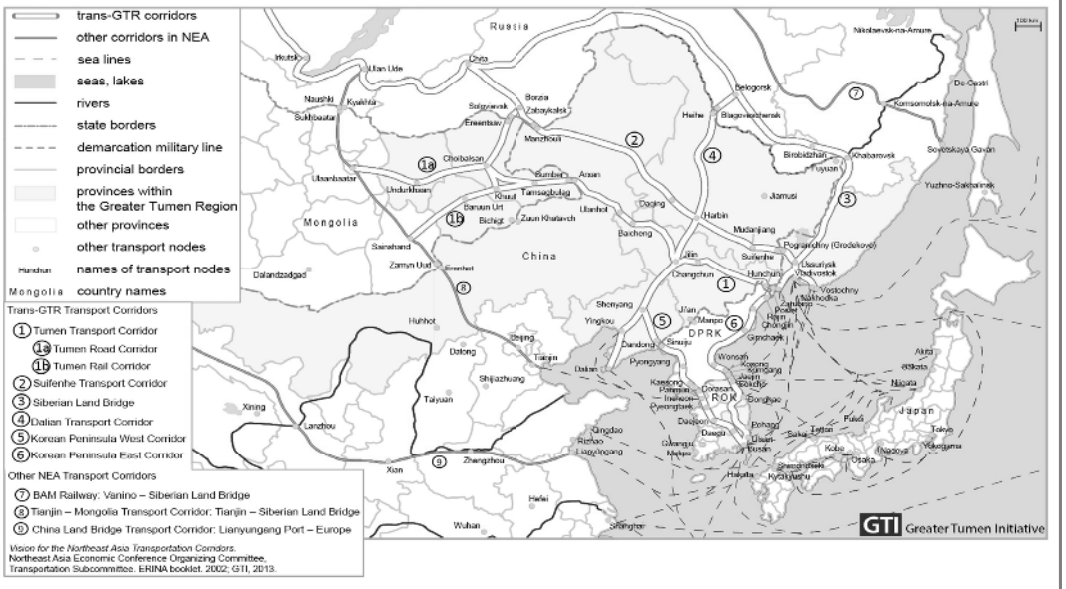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2

1.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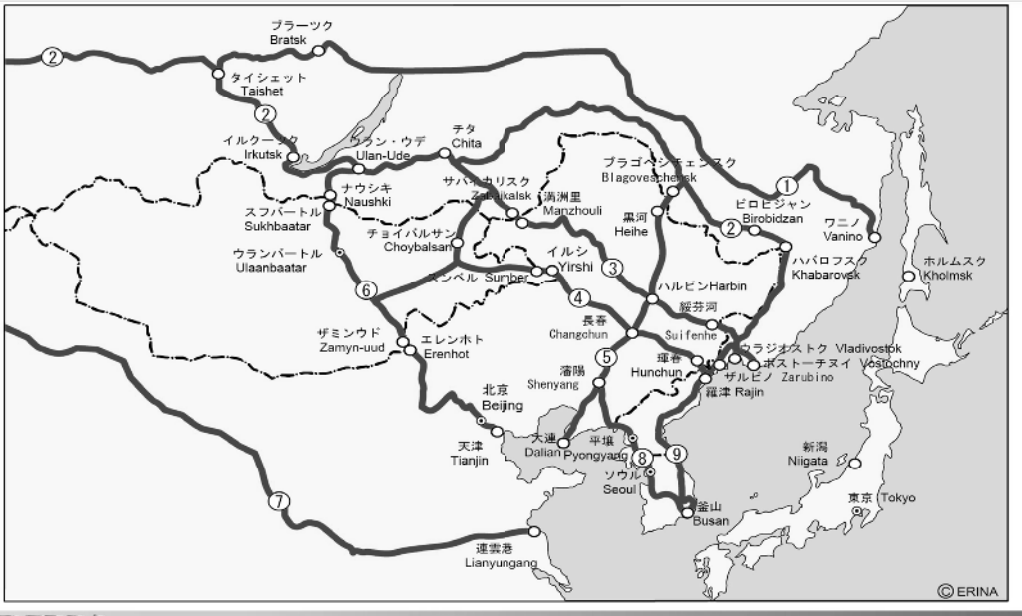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3

광역두만지역 (Greater Tumen Region, GTR) 교통망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ERINA의 “동북아시아 교통망 비전”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2. 기회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유라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포함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중국에서 구상된 계획

초원로 (Steppe Road)

- 몽골에서 추진

신북방정책 (New Northern Policy)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대체하는 계획인가?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역사적 패러다임 변화

15c~
- 대항해 시대
- 산업혁명
- 대량 생산/ 소비
- 저가 대량 운송
- 해양 운송의 이점

21c~
- 세계화
- 지식경제
- 시간 가치의 증대
- 소구역 고속운송
- 철도운송으로 재조정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8

호르고스 내륙항 (카자흐스탄-중국 간 국경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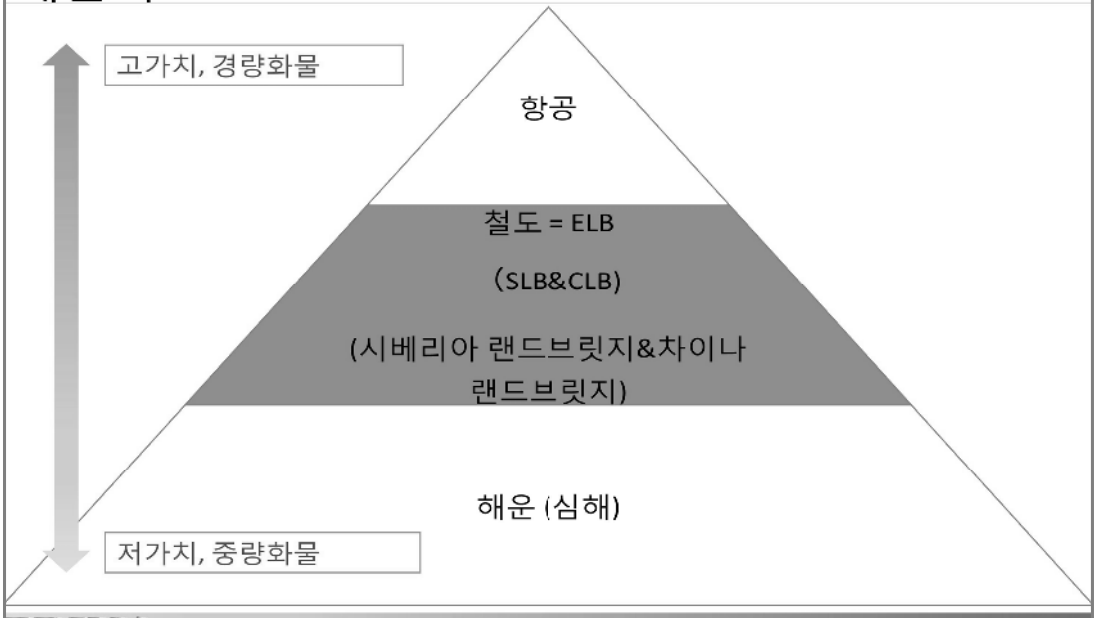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9

육로운송 vs. 해상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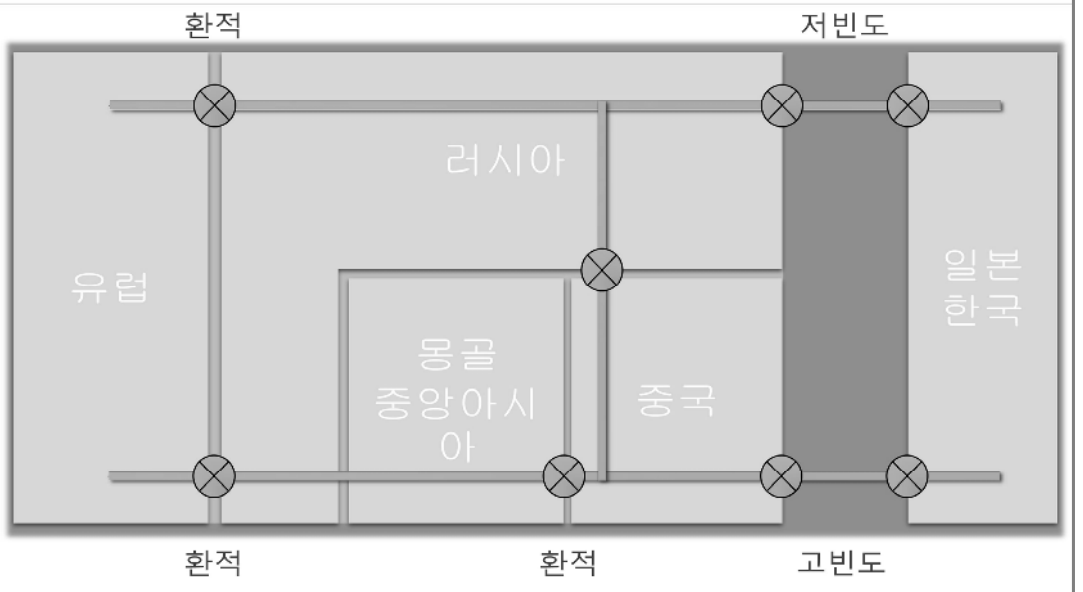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0

유라시아 대륙교 (Eurasian Land Bridge, ELB)의 시장 세분화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1

SLB & CLB 서비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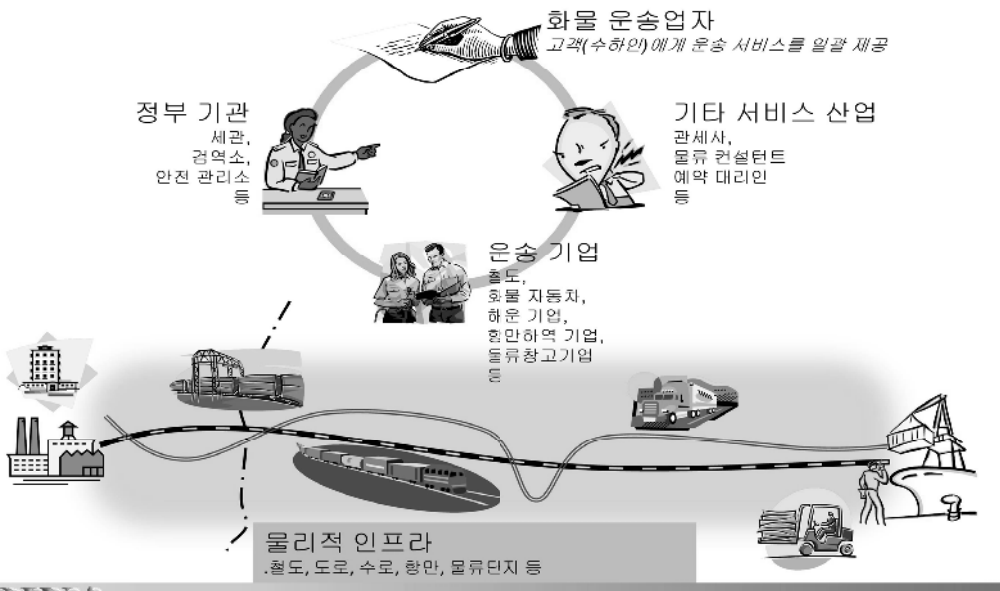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2

3. 극복해야 할 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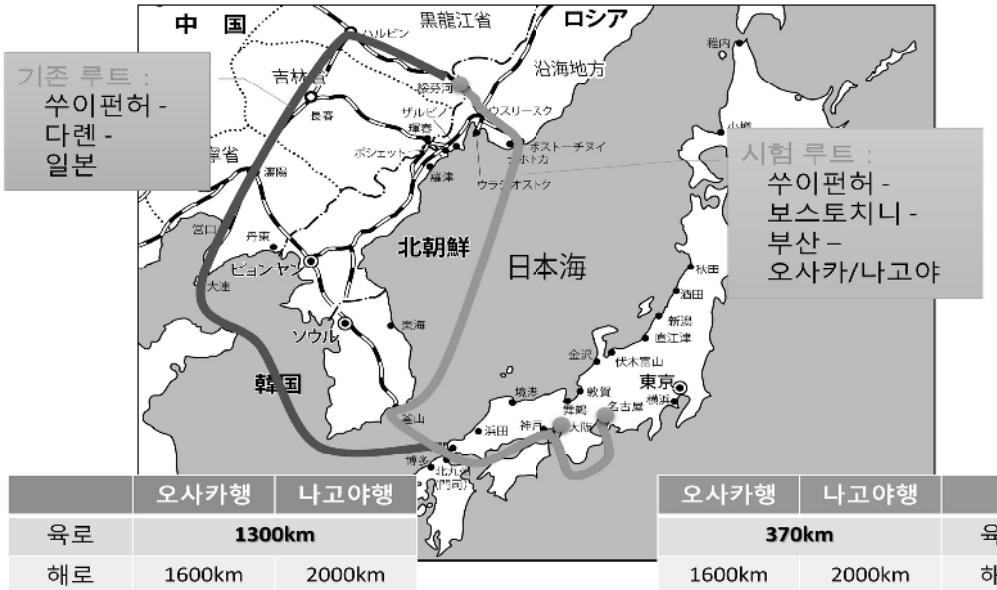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3

인프라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컨테이너 시험 선적 (2014년 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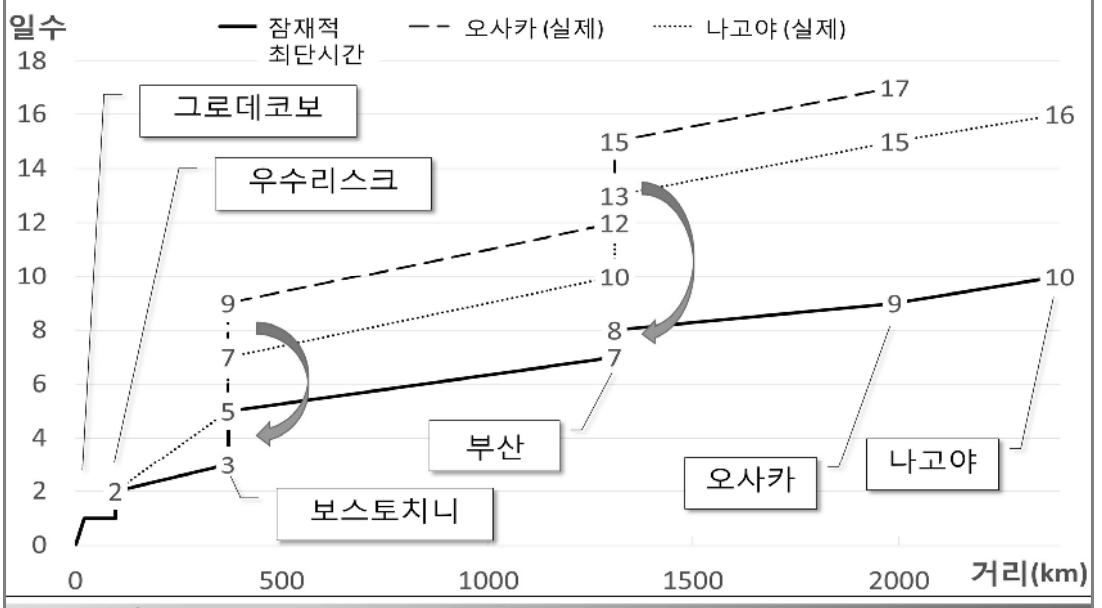


	오사카행	나고야행
육로	1300km	
해로	1600km	2000km

오사카행	나고야행	
370km		육로
1600km	2000km	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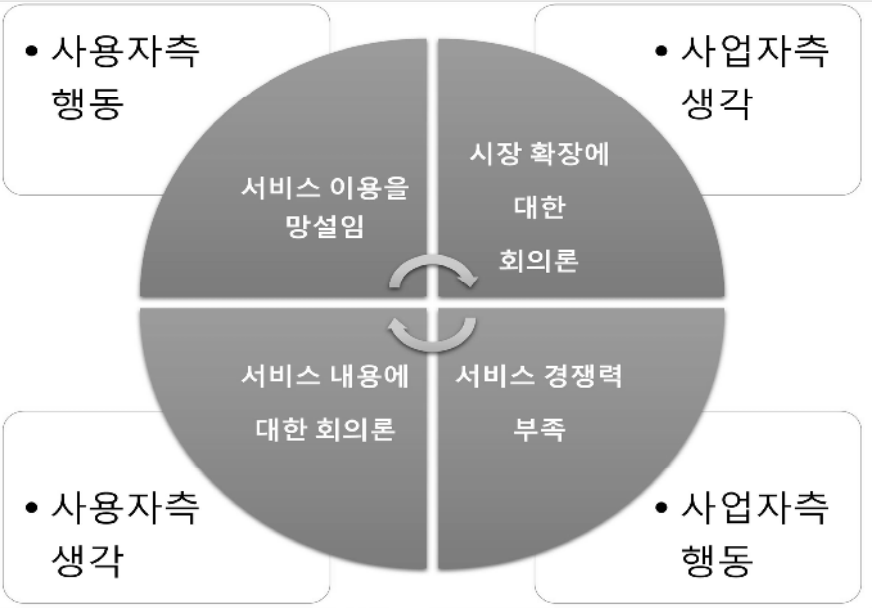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운송 시간 단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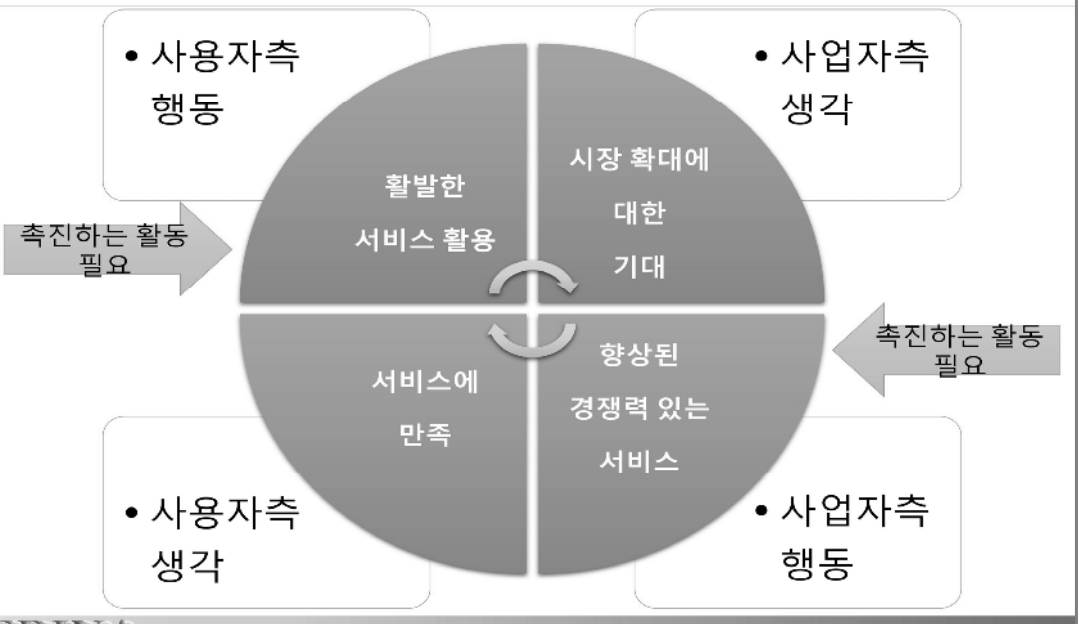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나선형 개발의 실현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8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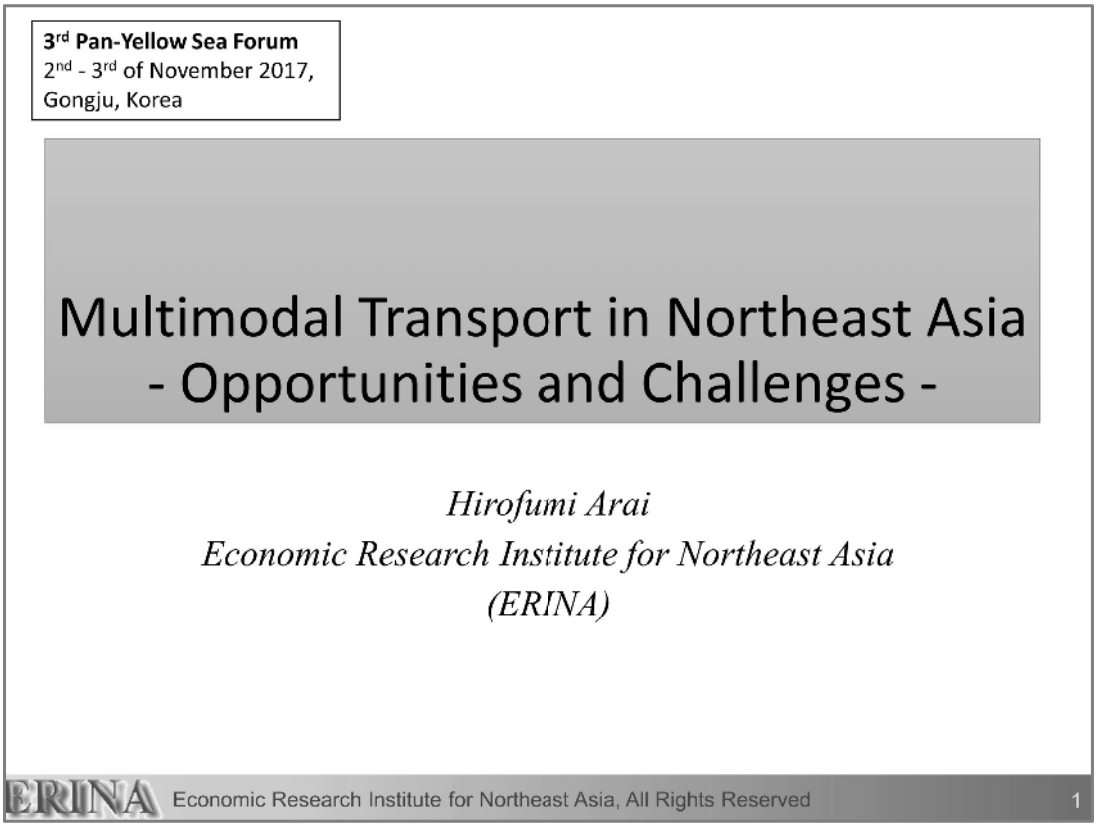
http://www.erina.or.jp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9

발제문

Multi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irofumi Ar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Objectives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between Japan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conducting research and accumula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economies of Northeast Asia,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Subregion and to international society as a whole.
Foundation	1st October 1993
Legal status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Endowment	3,814 million yen (as of March 2016)
Contributing Organizations	12 local governments (prefectures of Niigata, Aomori, Iwate, Miyagi, Akita, Yamagata, Fukushima, Gumma, Nagano, Toyama, Ishikawa and Niigata city) and eight private enterprises
Staff	21
Contact	Bandaijima bldg., 5-1, Bandaijima, Chuo-ku, Niigata city, Japan (tel. +81-25-290-5544)

Research and Policy Proposals

- Sector approach (Transport, Energy, the Environment, Economic Integration etc.)
- Country approach

Interregional and Business Exchange

- Supports to out/inbound business missions
- Business forums, seminars etc.
- Encouraging local-to-local ex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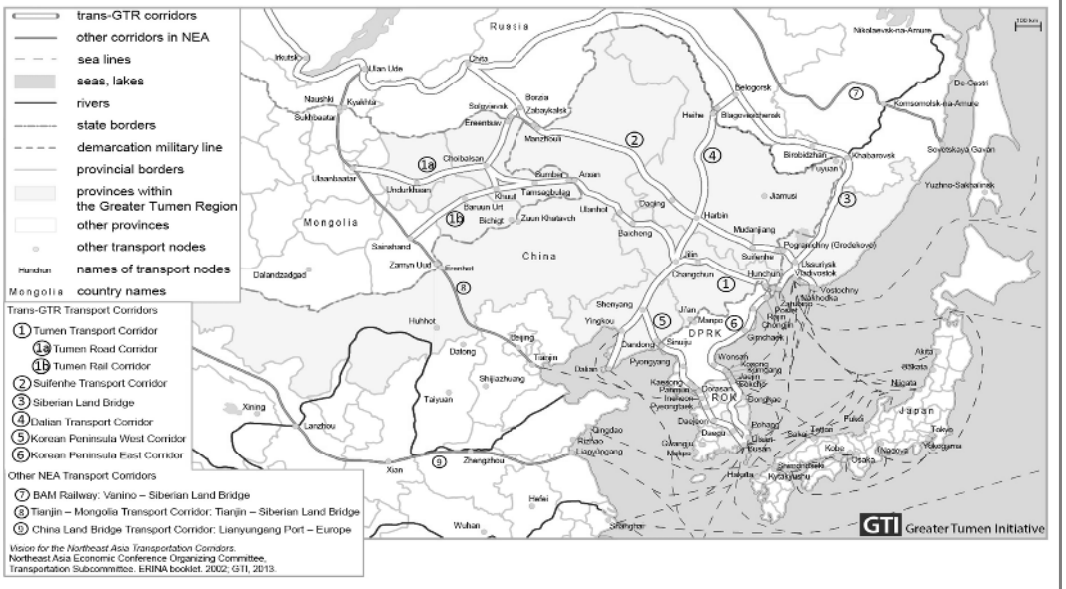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 Multimodal Transport in N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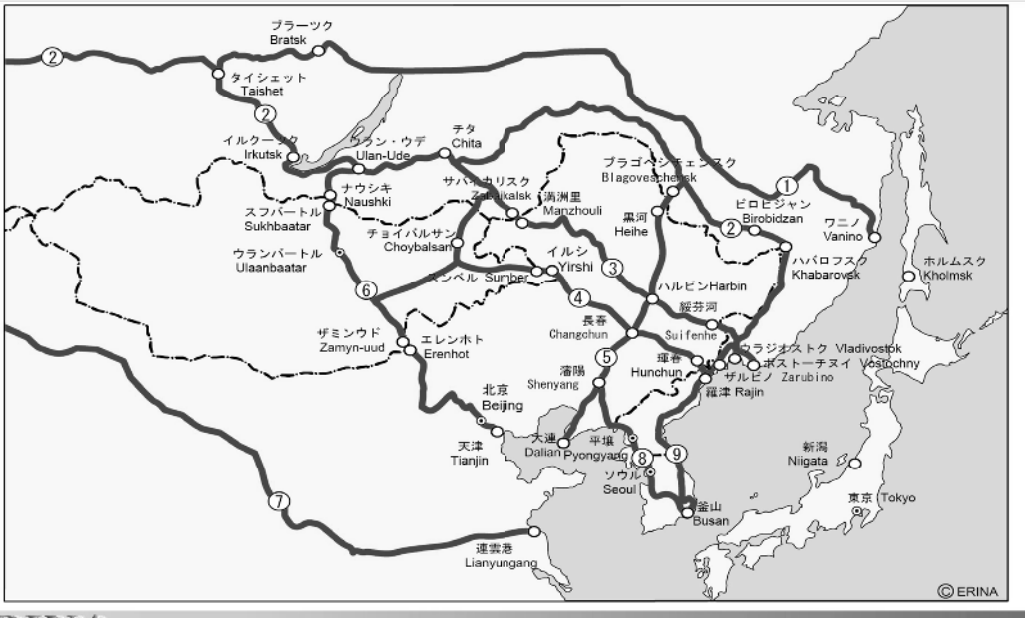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Trans-GTR (Greater Tumen Region) Corridors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Vision for NEA Transport Corridors" by ERINA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2. Opportunities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6

Enhanced Strategic Importance of Eurasia

Eurasian Economic Union (EEU)

- Includes Armenia, Belarus, Kazakhstan, Kyrgyz and Russia

One Belt, One Road

- Promoted by China, encompassing the Eurasian continent

Steppe Road

- Promoted by Mongolia

New Northern Policy

- Proposed by President Moon Jae-in
- Dose it substitute the “Eurasian Initiativ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7

Historical Paradigm Change

15 c ~

- Age of Discovery
- Industrial Revolution
- Mass Production/ Consumption
- Inexpensive Mass Transport

Advantages to Marine Transport

21 c ~

- Globalization
- Knowledge Economy
- Increasing Value of Time
- Small-lot Rapid Transport

Rebalancing to Rail Transport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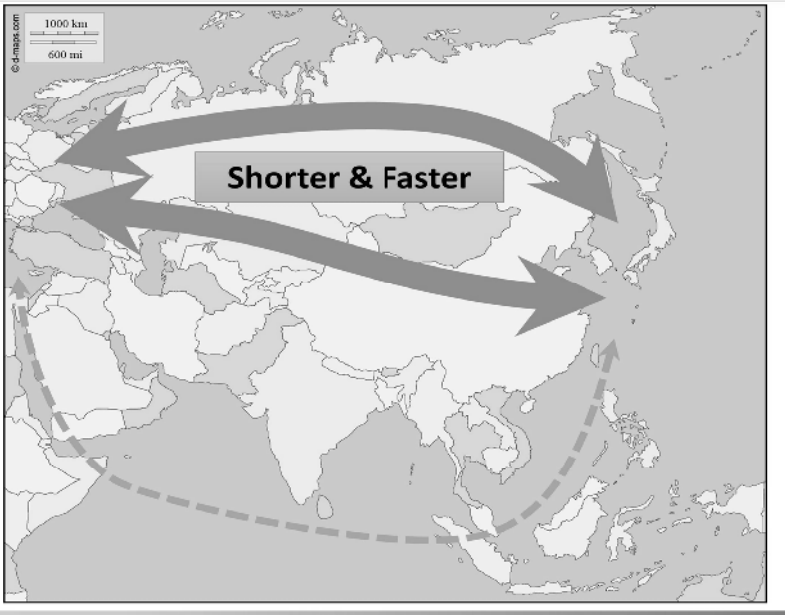
Khorgos Dry Port (Kazakhstan-China border)



Augus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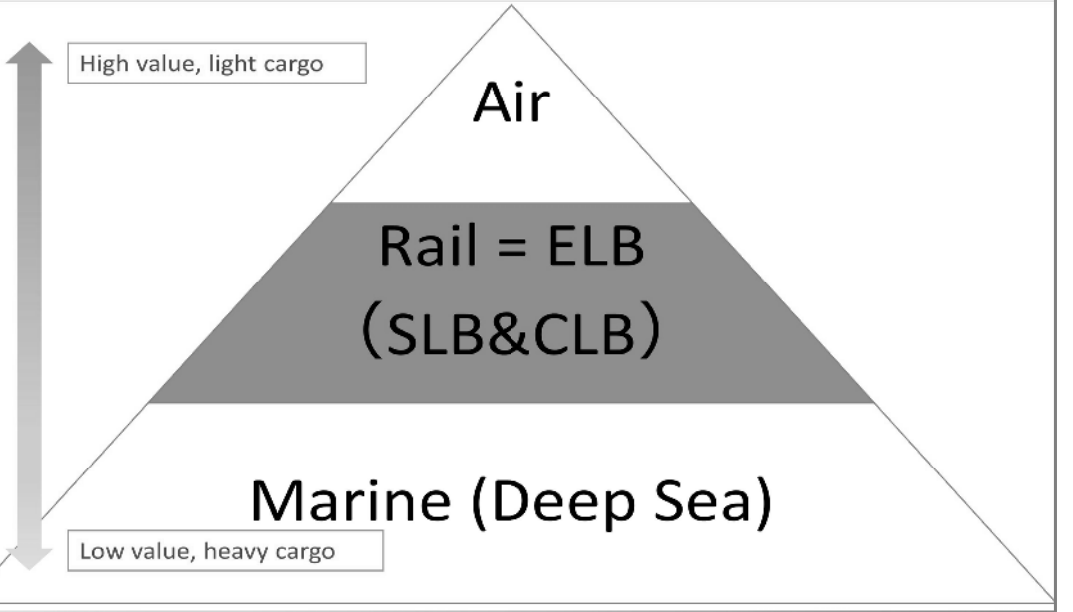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9

Land Transport vs. Marine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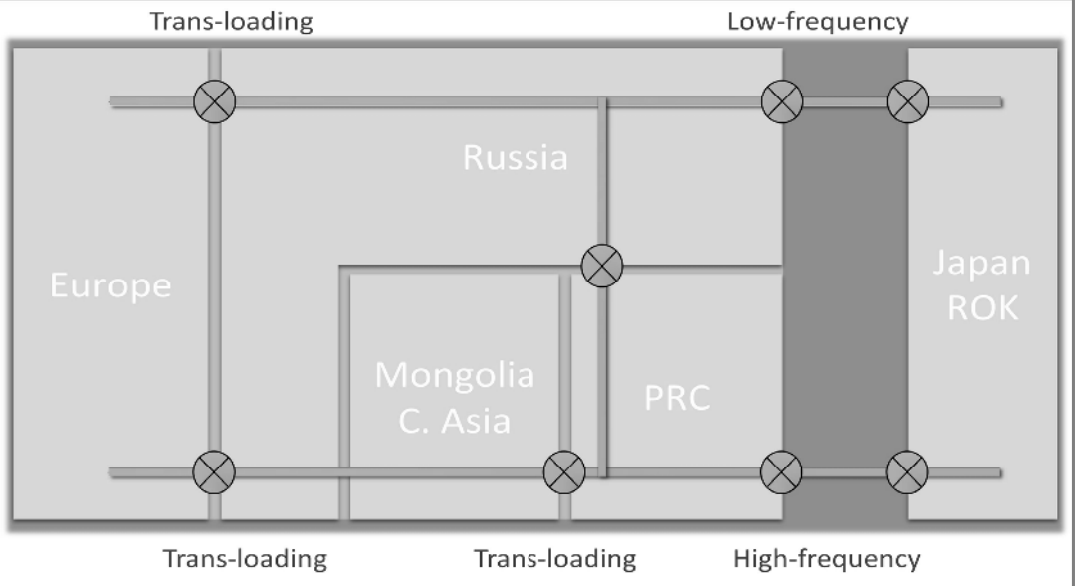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0

Market Segment for Eurasian Land Bridge (ELB)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1

Service Scheme of SLB & C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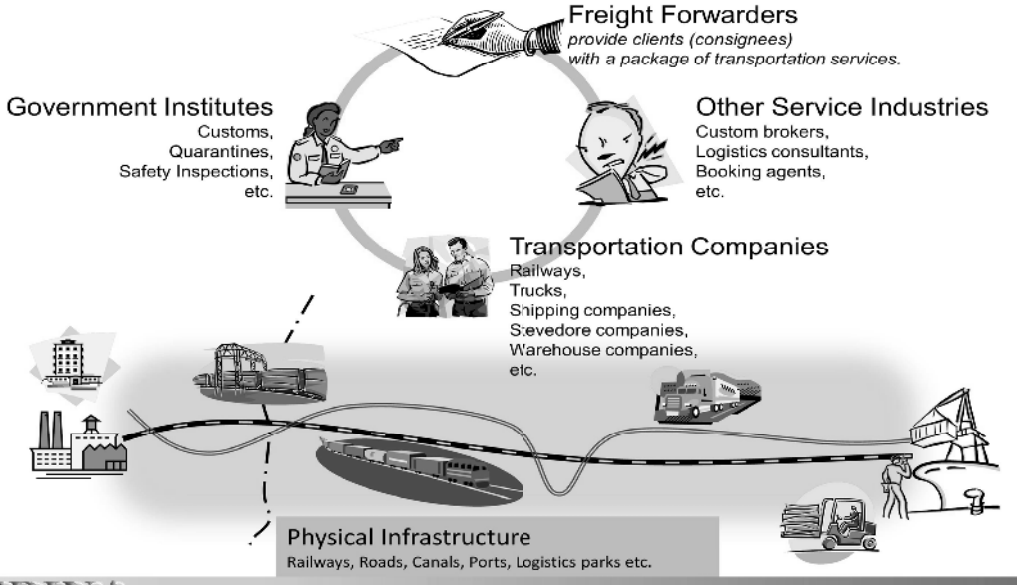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2

3.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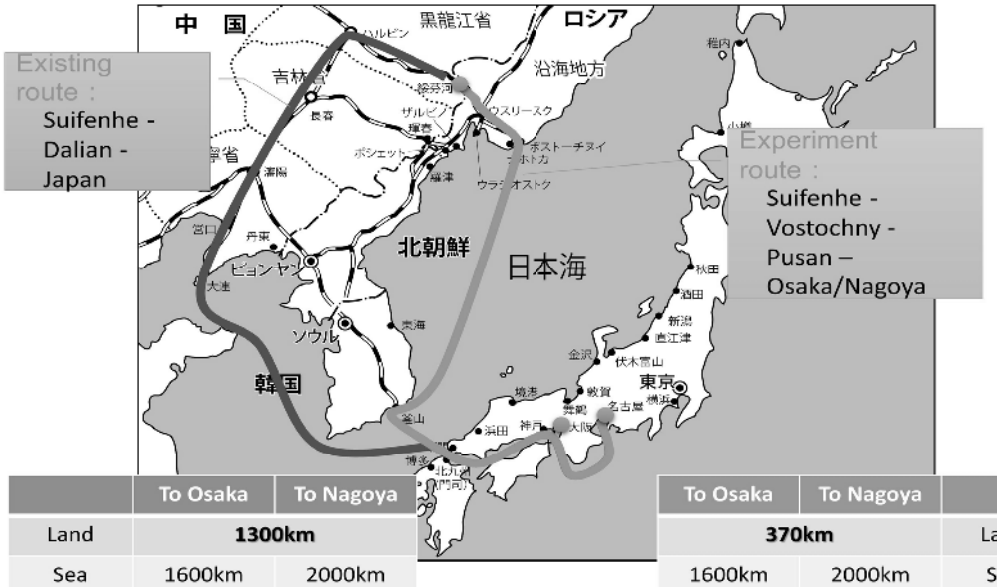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3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one is not enough.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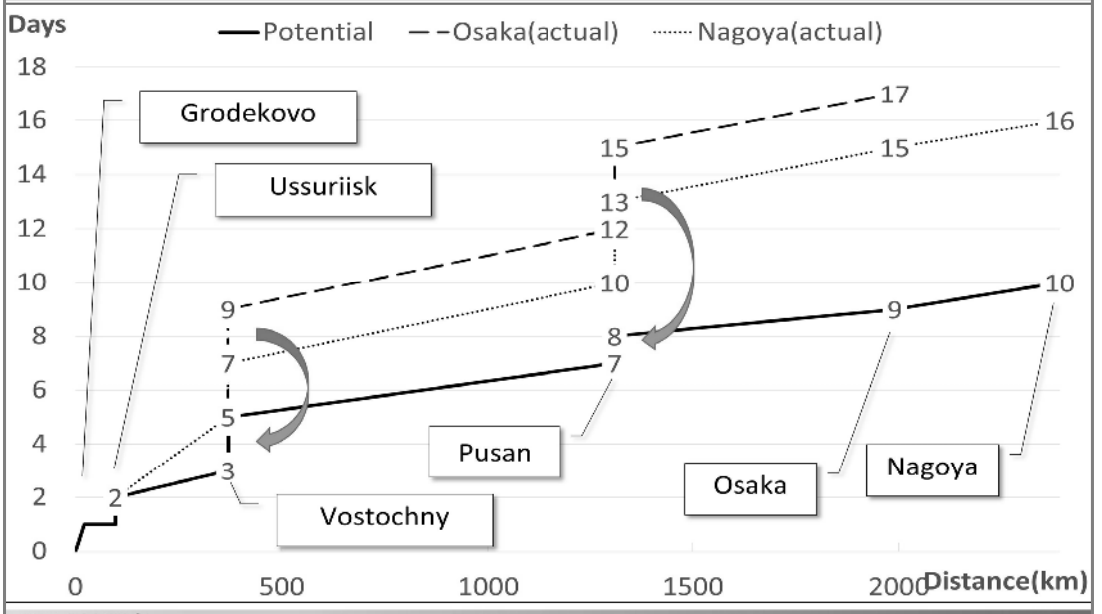
Trial Shipment of Containers (2014 summer)



	To Osaka	To Nagoya	To Osaka	To Nagoya	
Land	1300km		370km		Land
Sea	1600km	2000km	1600km	2000km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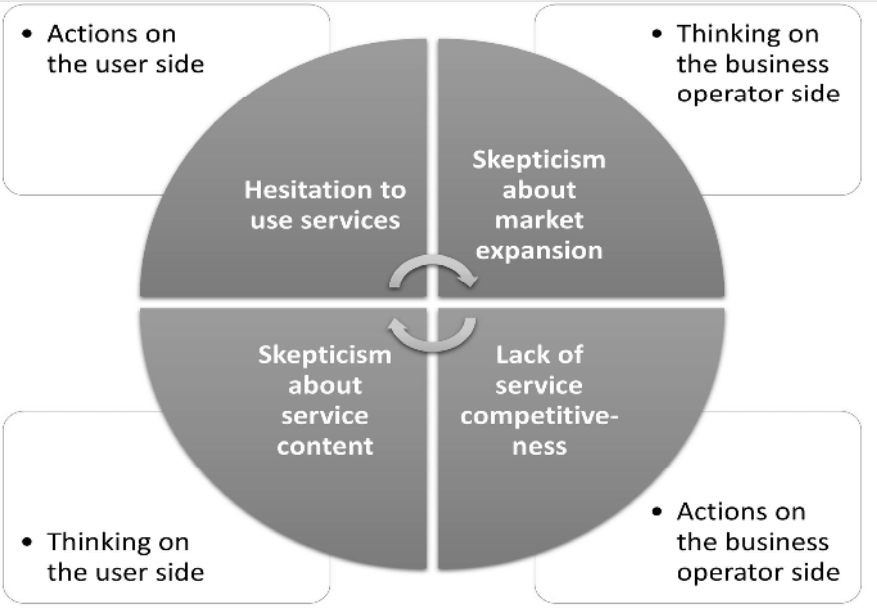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5

Transit Time Reduction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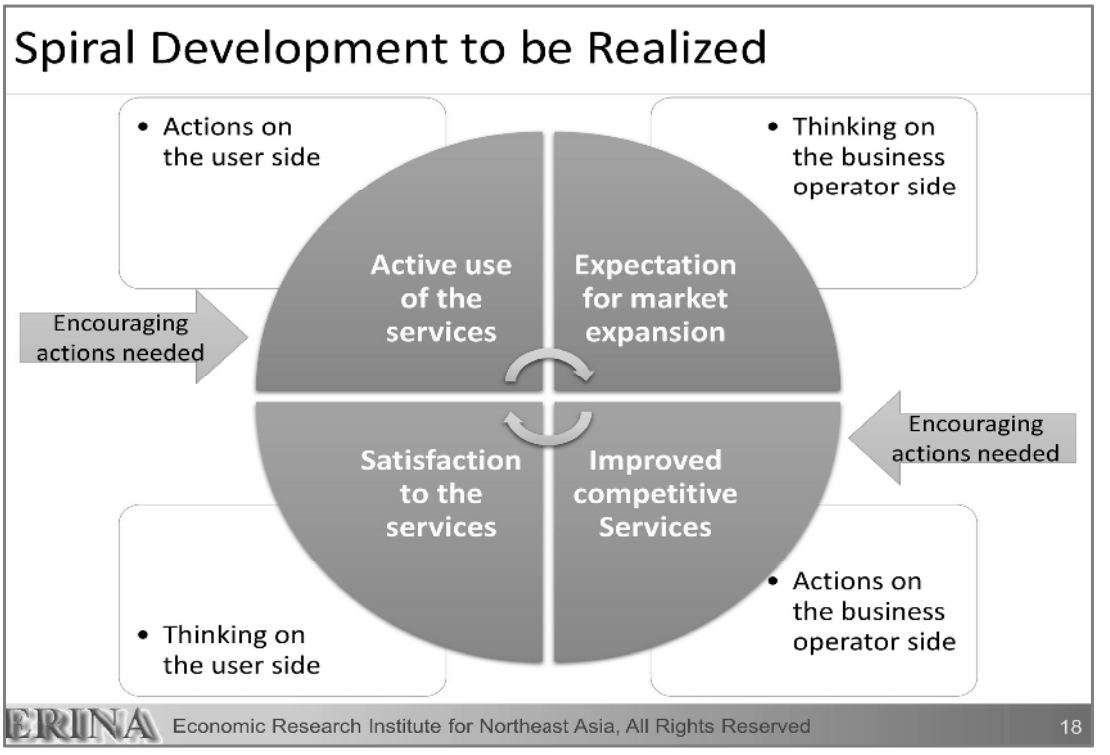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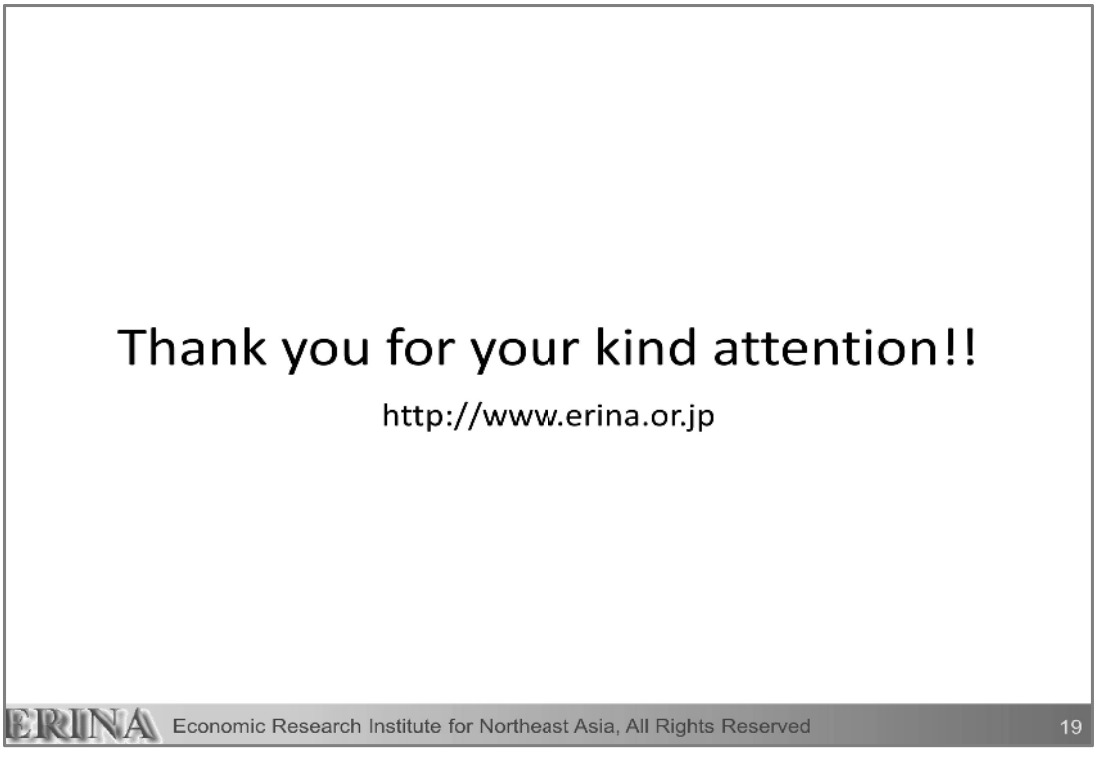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6

The "Egg" or "Chicken" Dilemma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7


Spiral Development to be Realized
• Actions on the user side
• Thinking on the business operator side
Active use of the services
Expectation for market expansion
Satisfaction to the services
Improved competitive Services
Encouraging actions needed
Encouraging actions needed
• Thinking on the user side
• Actions on the business operator side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8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http://www.erina.or.jp
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All Rights Reserved
19

제3회 환황해포럼

Session Symbiosis 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사회자 _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

발표자 _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장이항(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하마다 에이지(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토론자 _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발제문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보전사업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위한 협력적 수단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보전사업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위한 협력적 수단

2017년 11월 2일
충청남도 공주 GOMA
제3회 환황해포럼

남정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소통 개요

황해는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

지속가능한 황해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미래 과제

황해는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2000년대 초

Figure 8. Frequency of Intense Algal Bl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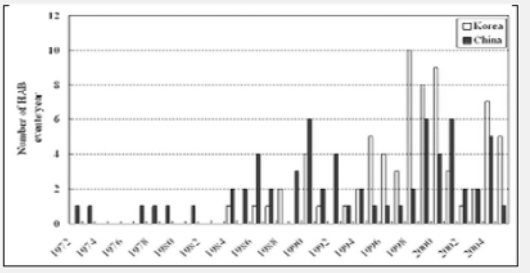


Figure 9. Capture Fisheries Landings in China and Korea in Relation to Global (ton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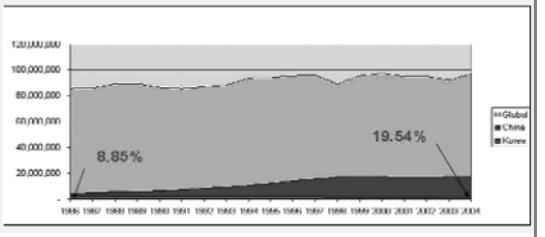


Figure 10. Annual Japanese anchovy biomass (bars) and Chinese landings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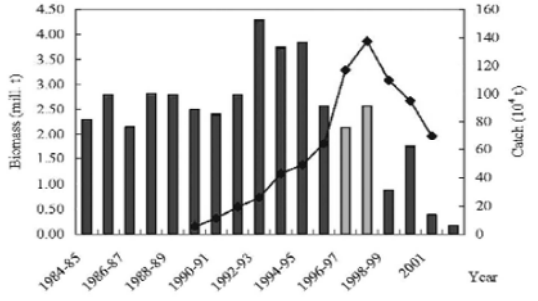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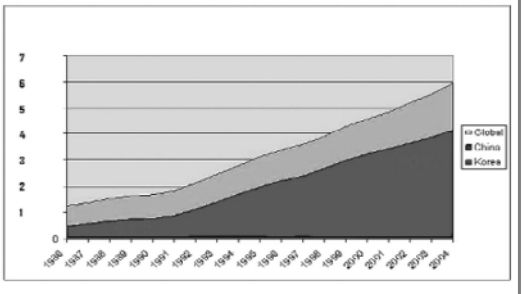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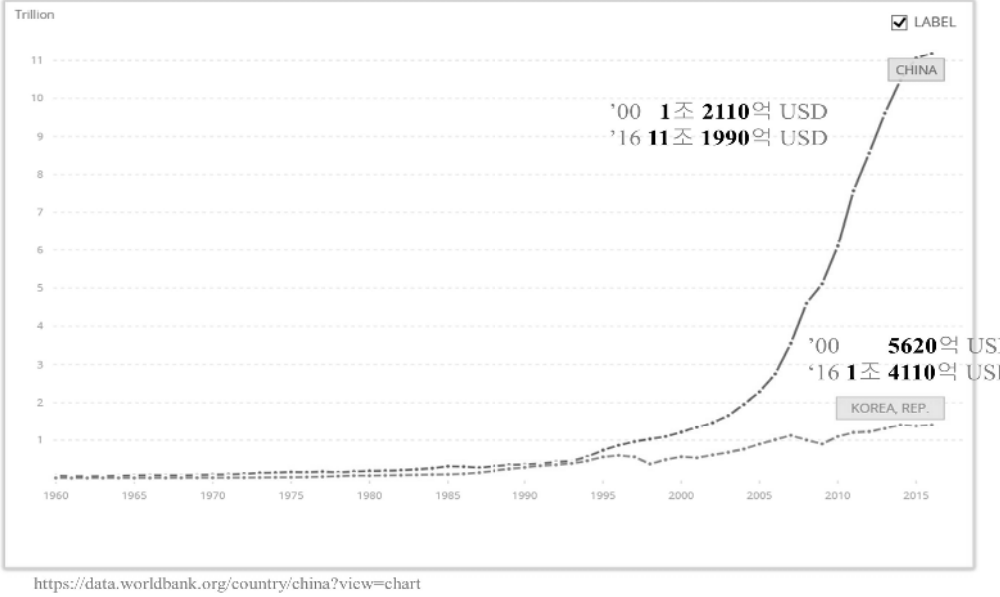


Figure 13. Growth of Combined Mariculture and Aquaculture Production in China and Korea in Comparison with Global (Millions of ton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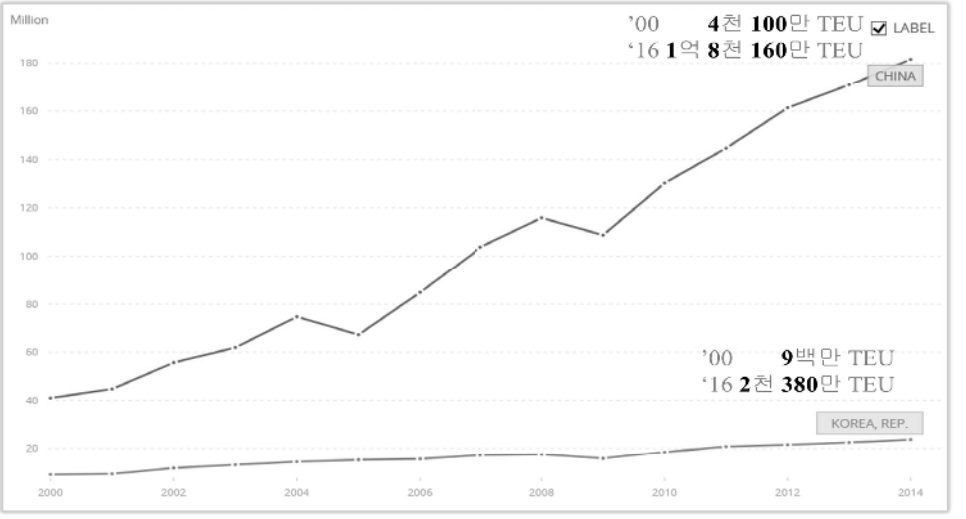
(UNDP/GEF, 2007)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사회경제적 활동 및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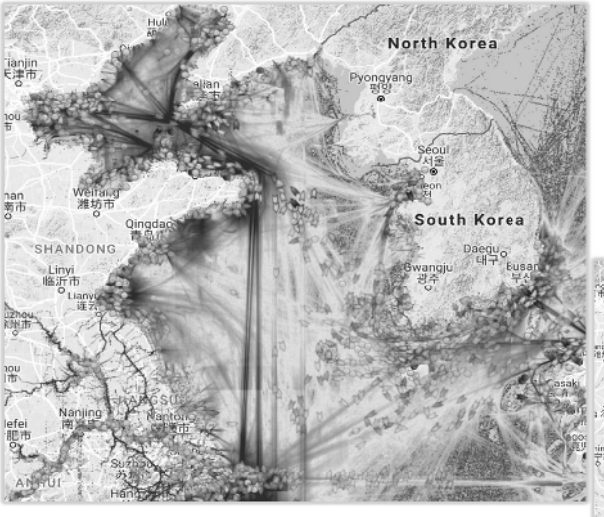
https://data.worldbank.org/country/china?view=chart

컨테이너 물동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S.SHP.GOOD.TU?locations=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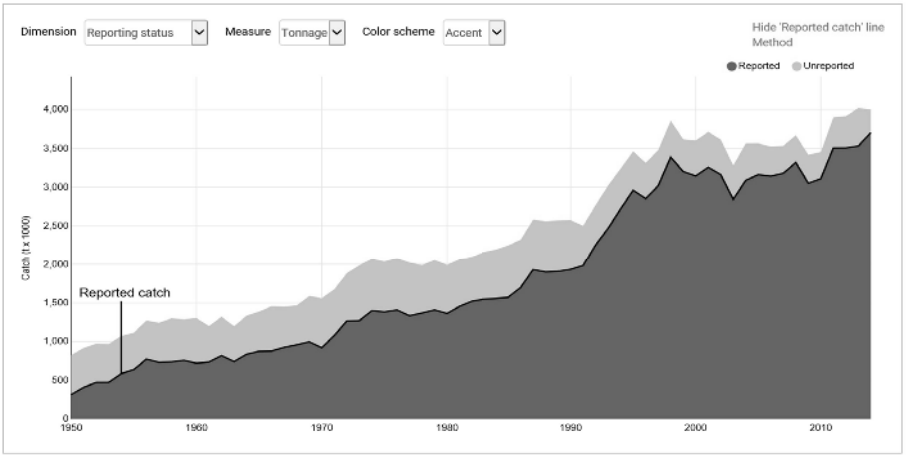
선박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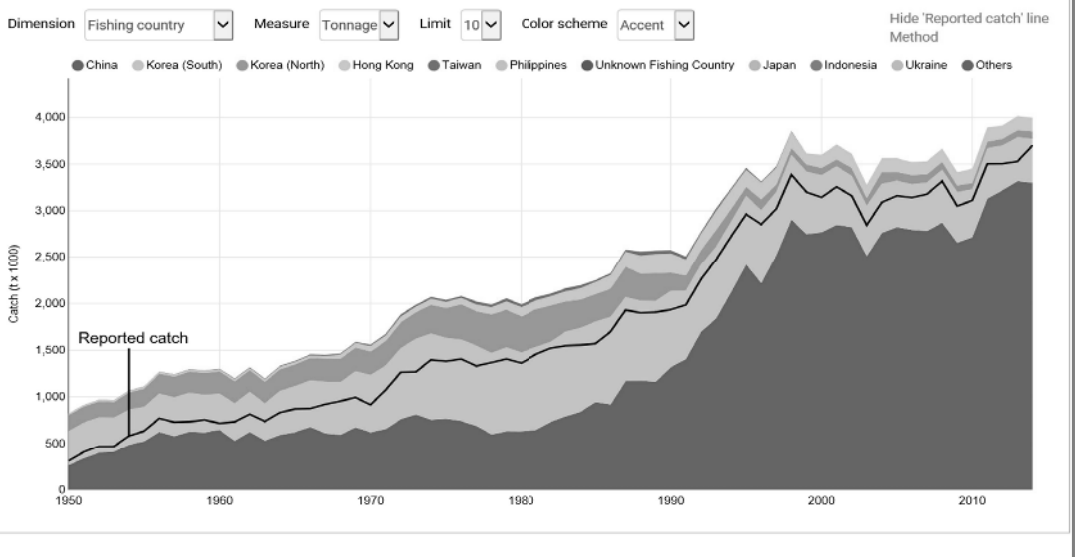
www.marinetraffic.com

황해 어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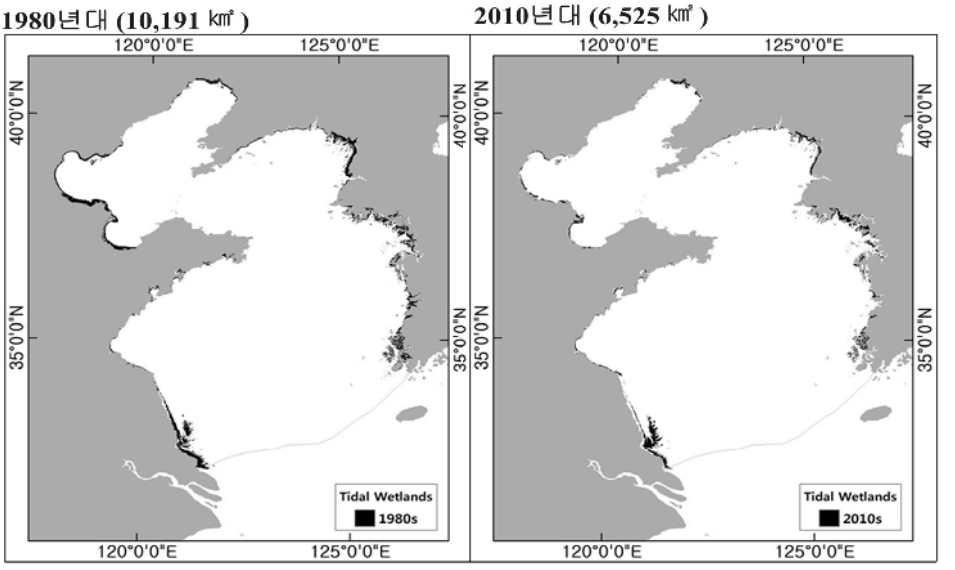
Note: The data we present ('reconstructed data') combine official reported data and reconstructed estimates of unreported data (including major discards), with reference to individual EEZs. Official reported data are mainly extracted from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FishStat database. The "Reported catch" line overlaid on the catch graph represent all catches deemed reported (including foreign) and allocated to this spatial entity. **For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reconstruction data, download the .pdf file for the specific EEZ(s) and also examine our** methods **for data and spatial allocation.**

www.seaaroundu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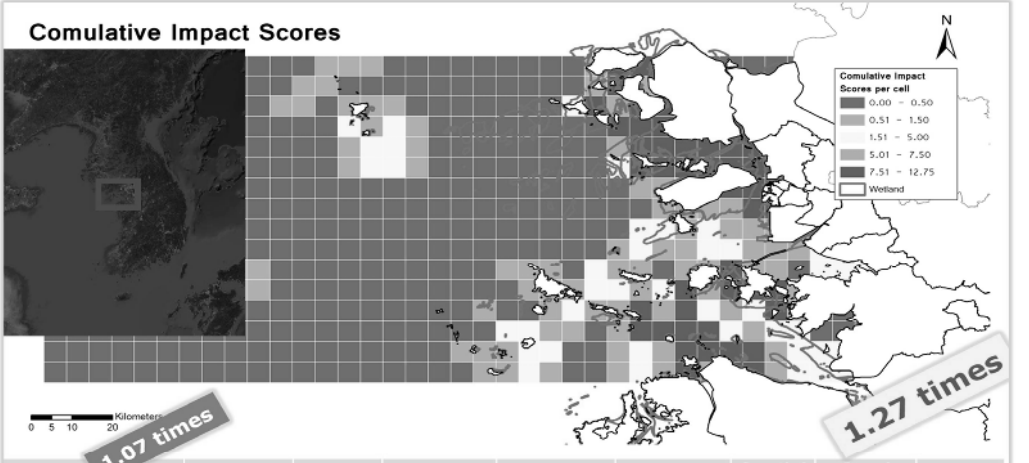
www.seaaroundus.org

연안 서식지 손실 : 황해의 조수 습지



누적되는 영향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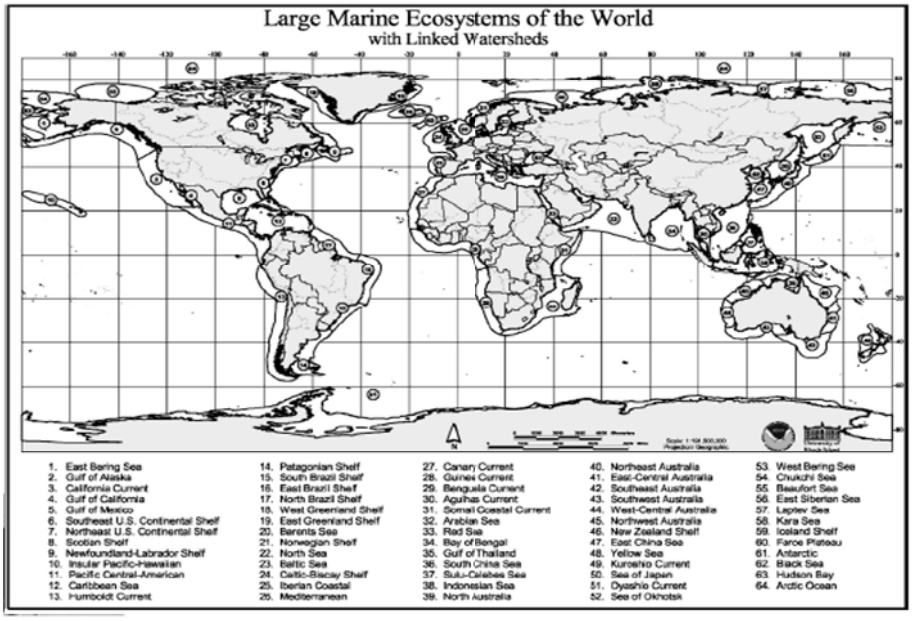
(Nam & Choi, 2017)



	Population	Fish catch	Mariculture	Shipping & Transport	Artificial coastline	Spatial uses	Sand extraction	Total
2005	2,848,711	21,326	1,714	42,463	344	85	4,924	
Cumulative impact score	101	101	**71**	82	302	**2**	**160**	**821**
2015	3,057,325	21,352	4,078	37,560	374	379	7,010	
Cumulative impact score	108	101	**170**	73	**329**	**11**	**248**	**1,040**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

광역해양생태계 세계지도 (64)



YSLME 보전사업 발전 개요

1991 — GEF, World Bank, UNDP, NOAA
(2003년, 사업 계획이 회원국의 승인을 받음)

2005 — 1단계 착수

2007 — **월경성오염물질 분석**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 TDA 분석)

2010 — **전략적 행동프로그램** (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

2014 — 1단계 완수

2015 — 2단계 재개

2017 — 착수 워크숍

2020년까지 목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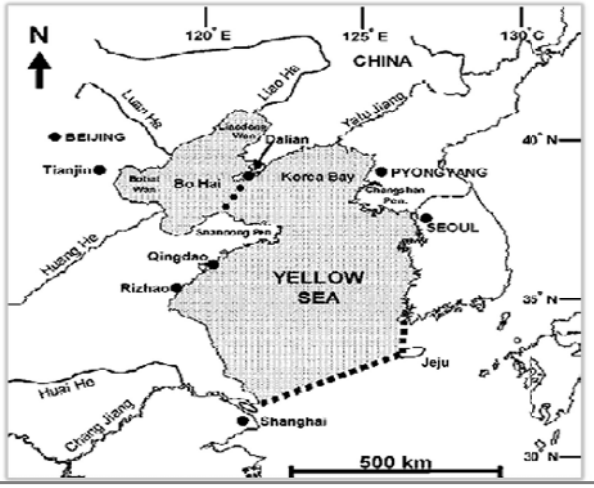




YSLME 보전사업 개요

사업 목표

인구밀집· 도시화·산업화라는 특징을 지닌 반폐쇄 대륙붕 바다, 황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 촉진 및 개발압박 감소를 통해 ***YSLME 및 주변 분수령을 생태계에 기반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운영 및 이용***



- 면적 404,000 ㎢, 길이 1000 km, 폭 700 km (최대)
- 인구: 6억 이상
- 대량의 하천 퇴적물: 연간 퇴적물 16억 톤
- 높은 어업 압력
- 급격한 경제 성장
- 연안 서식지 조정

(UNDP/GEF, 2007; Shin, 2012)

주요 문제에 기반을 둔 YSLME 월경성 오염물질 분석 (TDA) 작업

제안 단계의 주요 문제
- 어장 & 바다 양식
- 생물다양성
- 수질 & 인간의 건강
- 제도적 개발과 역량 강화

Objective	Component
I Develop Reg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Mariculture	A. Stock Assessment
	B. Carrying Capacity in Fisheries and Mariculture
	C. Mariculture Production
	D. Disease in Mariculture
	E. Regional Fisheries Agreements and National Laws
	F. Fisheries Management Plan
II Propose and Implement Effective Regional Initiatives for Biodiversity Protection	A. Habitat Conservation
	B. Vulnerable Species
	C. Genetic Diversity
	D. Introduced Species
	E. Biodiversity Regulations
	F. Regional Biodiversity Assessment & Regional Biodiversity Action Plan
III Propose and Implement Actions to Reduce Stress to the Ecosystem, Improve Water Quality and Protect Human Health	A. Stressors to Ecosystem
	B. Carrying Capacity of Ecosystem
	C. Contaminant Inputs
	D. Contaminant Levels
	E. Harmful Algal Blooms and Emerging Disease
	F. Hot Spot Analysis
	G.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H. Legal and Regulatory
	I. Fate and Transport Analysis to Facilitate SAP Analysis

지역 실무단 작업 분야
- 어장
- 생물다양성
- 생태계
- 오염
- 투자

(UNDP/GEF, 2007)

YSLME TDA 기반 전략적 행동프로그램 (SAP) (11개 목표와 32개 활동)

SAP 관련 문제 재확인
- 오염과 공해
- 부영양화
- 유해 적조
- 생태계 포화밀도를 넘는 어획 노력
- 지속불가능 문제에 직면한 바다양식
- 서식지 손실 및 악화
- 생태계 구조의 변화
- 해파리 증식
- 기후변화 관련 문제

(UNDP/GEF, 2009)

YSLME TDA 기반 전략적 행동프로그램(SAP) (11개 목표와 32개 활동)



Provisioning Services

Target 1: 25-30% reduction in fishing effort
- Action 1-1: Control fishing boat numbers
- Action 1-2: Stop fishing in certain areas/seasons
- Action 1-3: Monitor and assess stock fluctuations

Target 2: Rebuilding of over-exploited marine living resource
- Action 2-1: Increase mesh size
- Action 2-2: Enhance stocks
- Action 2-3: Improve fisheries management

Target 3: Improvement of mariculture techniques to reduce environmental stress
- Action 3-1: Develop environment-friendly mariculture methods and technology
- Action 3-2: Reduce nutrient discharge
- Action 3-3: Control diseases effectively

Regulating Services

Target 4: Meeting international requirements on contaminants
- Action 4-1: Conduct intensive monitoring and assessment
- Action 4-2: Control contaminants discharge with reference to Codex alimentarius and Stockholm Convention
- Action 4-3: Implementing MARPOL 1973/78 effectively

Target 5: Reduction of total loading of nutrients from 2006 levels
- Action 5-1: Control total loading from point sources
- Action 5-2: Control total loading from non-point sources and sea-based sources
- Action 5-3: Apply new approaches for nutrient treatment

YSLME TDA 기반 전략적 행동프로그램(SAP) (11개 목표와 32개 활동)



Cultural Services

Target 6: Reduced standing stock of marine litter from current level
- Action 6-1: Control source of litters and solid wastes
- Action 6-2: Improve removal of marine litter
- Action 6-3: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marine litter

Target 7: Reduce contaminants, particularly in bathing beaches and other marine recreational waters, t
- Action 7-1: Conduct regular monitoring, assessment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particularly i recreational waters
- Action 7-2: Control pollution in bathing beaches and other marine recreational waters

Supporting Services

Target 8: Better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ecosystem changes for adaptive manageme
- Action 8-1: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s of N/P/Si ratio change
- Action 8-2: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Action 8-3: Forecast ecosystem changes in the long-term scale
- Action 8-4: Monitor the transboundary impact of jellyfish blooms
- Action 8-5: Monitor HAB occurrences

Target 9: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current populations/distributions and genetic dive including endangered and endemic species
- Action 9-1: Establish and implement regional conservation plan to preserve biodiversity

Target 10: Maintenance of habitats according to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2007
- Action 10-1: Develop regional guidelines for coastal habitat management
- Action 10-2: Establish network of MPAs
- Action 10-3: Control new coastal reclamation
- Action 10-4: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benefit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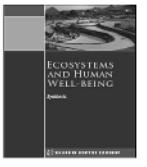
Target 11: Reduction of the risk of introduced species
- Action 11-1: Control and monitor ballast water discharge
- Action 11-2: Introduce precautionary approach and strict control of introduction of non-native species

지속가능한 황해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미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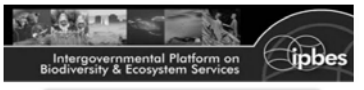
해양 생태계 서비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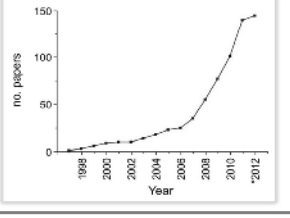
주류 생태계서비스의 YSLME 통합

1997	Costanza et al.
2001~2005	천년생태계평가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2006	유엔 환경 기획(UNEP)
2007	SGAN-UNEP WCMC TEEB, (G8+5 summit)
2008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BD COP9)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ESP)
2009	UNESCO-IOC
2010	해양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ESP)
2011	EU(생태계 평가 & 매핑)
2012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201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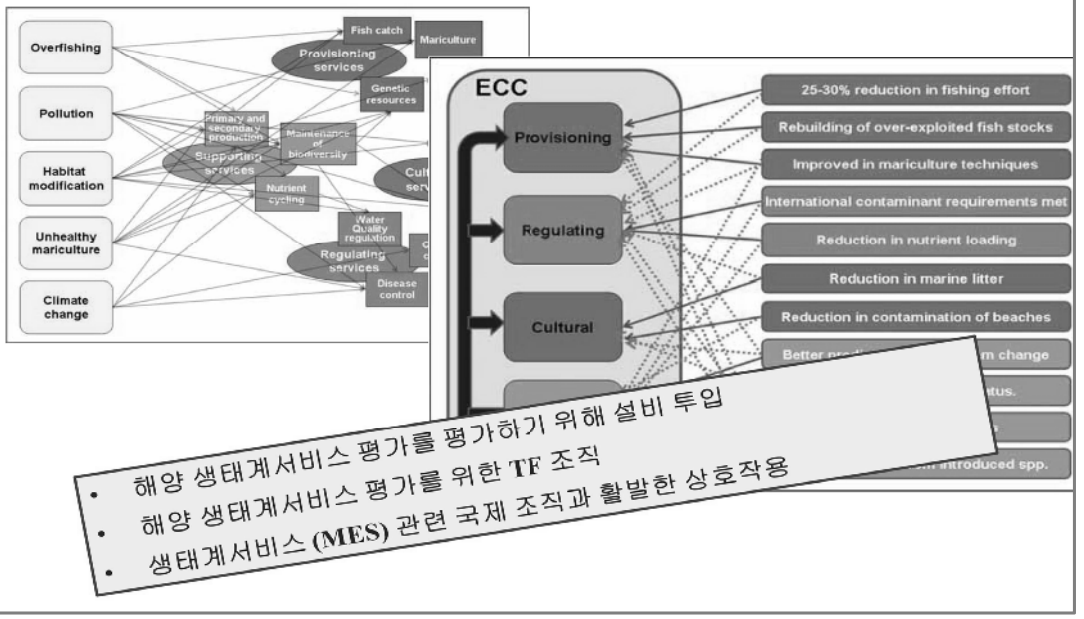






(Nam, 2014)

이미 해양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YSLME에 통합시켰으나, 황해 생태계의 생태계서비스 (MES)를 평가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함.



해양보호구역 (MPA) 네트워크 재구축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UNDP/GEF PROJECT ON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ON
CO-OPERATION IN PROMO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THE YELLOW SEA

Following the exchanging of project information and discussing potential areas and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 promoting protection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the Yellow Sea, the UNDP/GEF Project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Recognising: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implementing agency, is supporting the Project, *"Reduce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YSLME aims at: Ecosystem-based, environmentally-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YSLME and its watershed by reducing development stress and promoting sustainable exploitation of the ecosystem from a densely populated, heavi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semi-enclosed shelf sea;

The Medium-term objectives of the YSLME are:

- Enhancing national capacities i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established in the Yellow Sea, and co-operative spirit enhanced by the project; and
- Facilitating cross-sect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dealing with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lso Recognising:

KMI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developing national marine policies on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Major functions of KMI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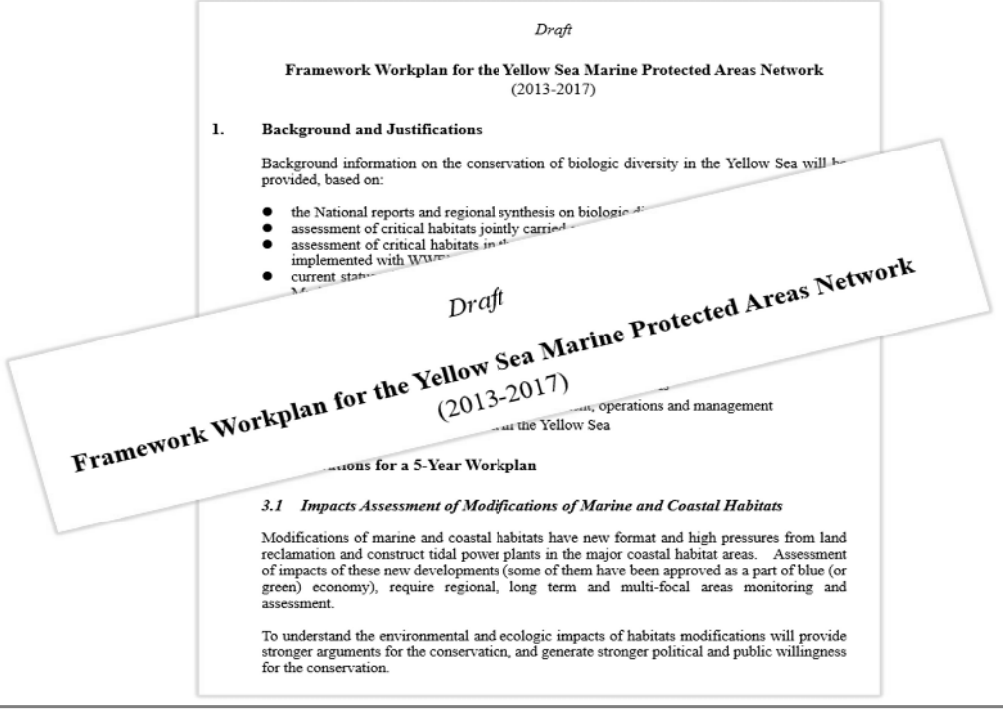












Draft

Framework Workplan for the Yellow Sea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2013-2017)

1. Background and Justification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conservation of biologic diversity in the Yellow Sea will b
provided, based on:

- the National reports and regional synthesis on biologic d
- assessment of critical habitats jointly carried
- assessment of critical habitats in t
implemented with WW
- current stat

Draft

Framework Workplan for the Yellow Sea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2013-2017)

,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Yellow Sea

ions for a 5-Year Workplan

3.1 Impacts Assessment of Modifications of Marine and Coastal Habitats

Modifications of marine and coastal habitats have new format and high pressures from land reclamation and construct tidal power plants in the major coastal habitat areas. Assessment of impacts of these new developments (some of them have been approved as a part of blue (or green) economy), require regional, long term and multi-focal areas monitoring and assessment.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 impacts of habitats modifications will provide stronger arguments for the conservatien, and generate stronger political and public willingness for the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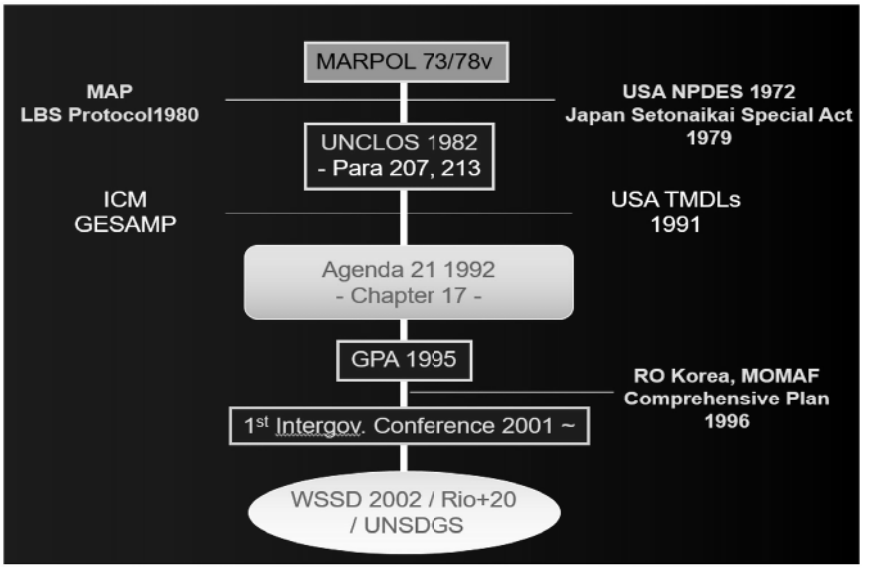
2017년 7월 둘째 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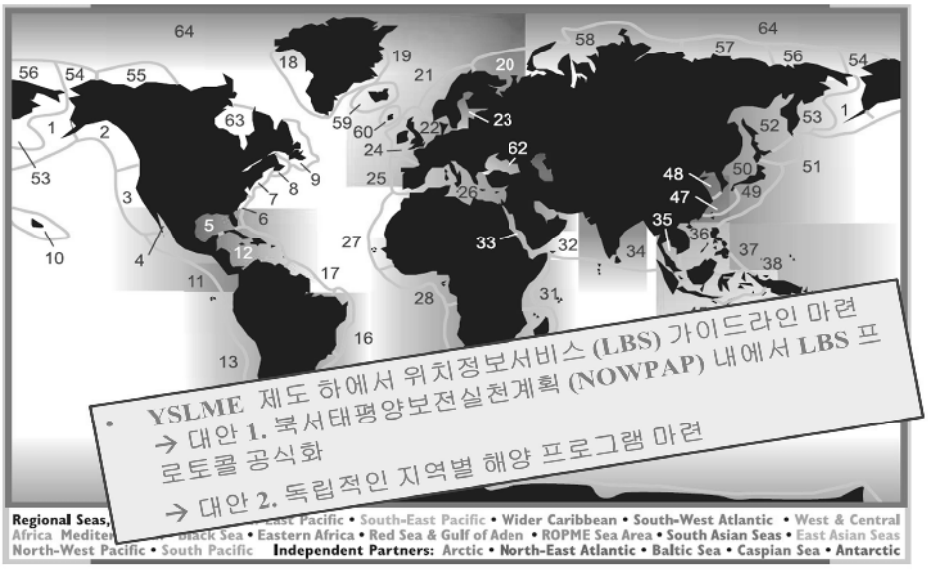
- 비전, 목표, 우선순위 및 활동을 공유하는 해양보호구역 (MPA) 네트워킹의 공식화와 시행
- 국가 수준에서 성공 사례를 위한 더욱 일치된 노력; 한국의 증도, 순천만 등
- 지역, 국가, 하위국가 수준의 MPA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정보 활용
- MPA 네트워크를 위한 전략적 기획

육상활동 관리를 위한 조약

육상활동 관리를 위한 국제 제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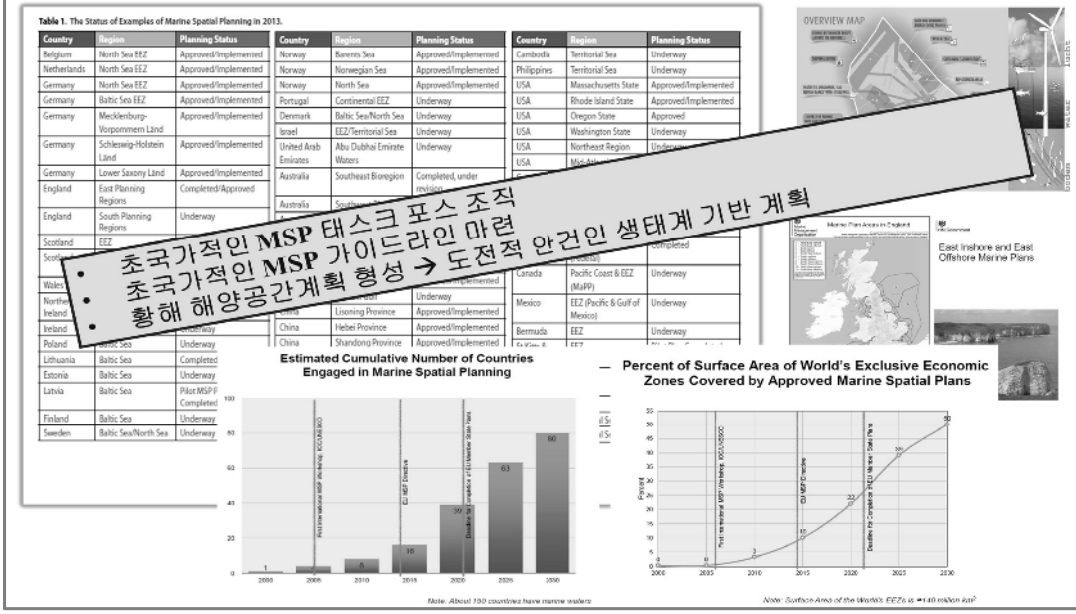


유엔환경계획 (UNEP) 지역 해양 프로그램을광역 해양 생태계와 연계



국제 해양공간계획 도입

- 40개국 60개 지역의 해양공간계획(MSP), 일부 자료 누락
- 2030년 전 세계 지역의 2/3 가 MSP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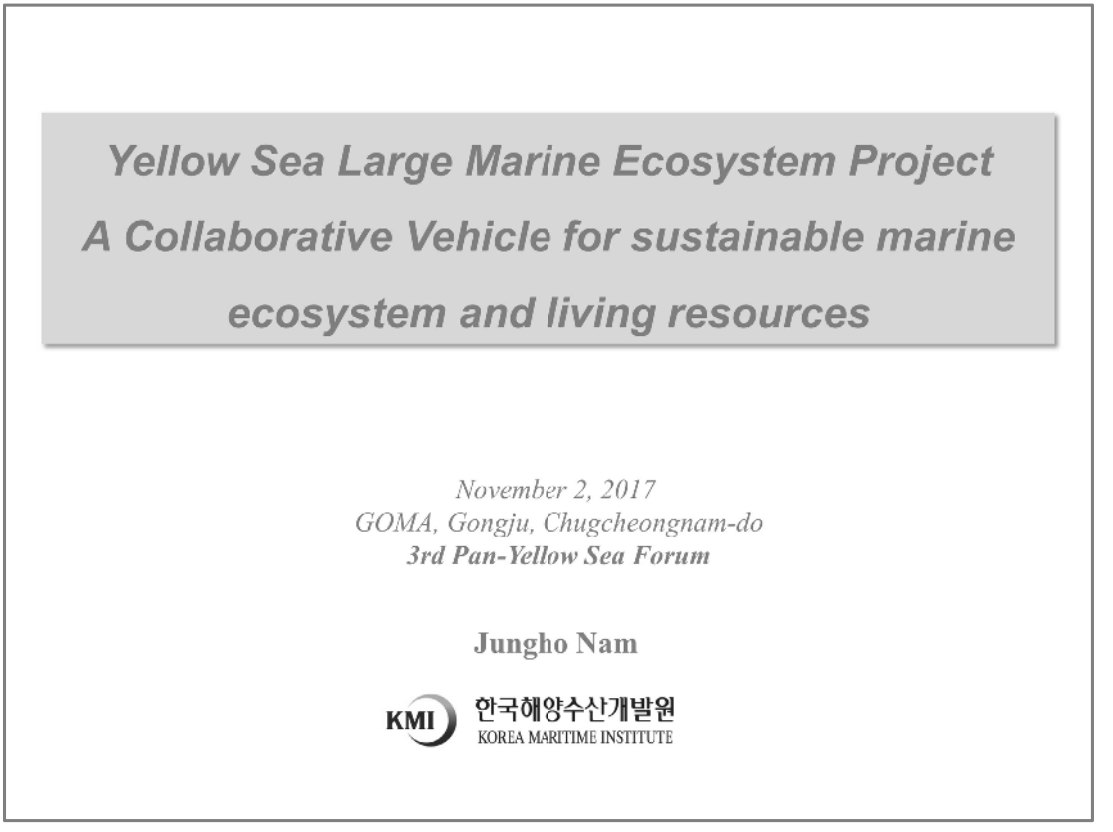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문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A Collaborative Vehicle for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and living resources

Jung-ho Nam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Communication Outline

Yellow Sea is heading for Sustainability?

YSLME, Transboundary Cooperation Mechanism

Future Tasks for Sustainable Yellow Sea and People's Well-being

Yellow Sea is heading for Sustainability?

Early 2000s

Figure 8. Frequency of Intense Algal Bl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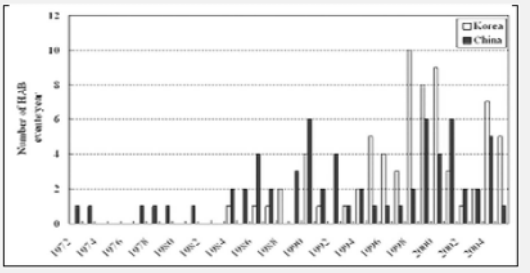


Figure 9. Capture Fisheries Landings in China and Korea in Relation to Global (ton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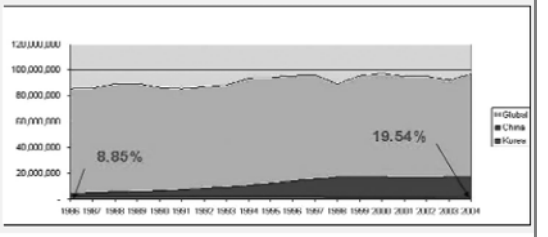


Figure 10. Annual Japanese anchovy biomass (bars) and Chinese landings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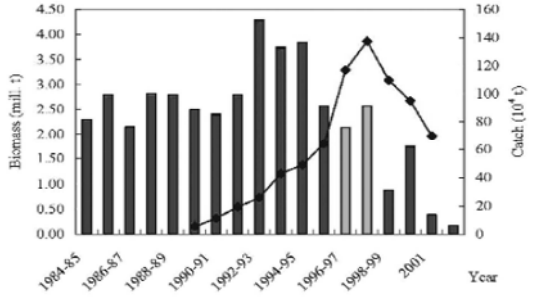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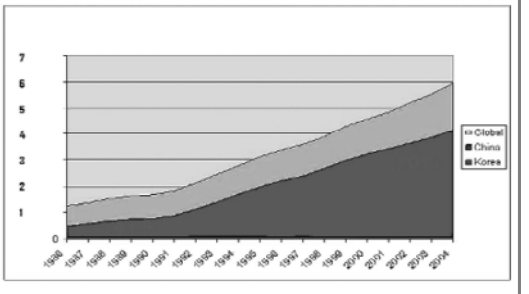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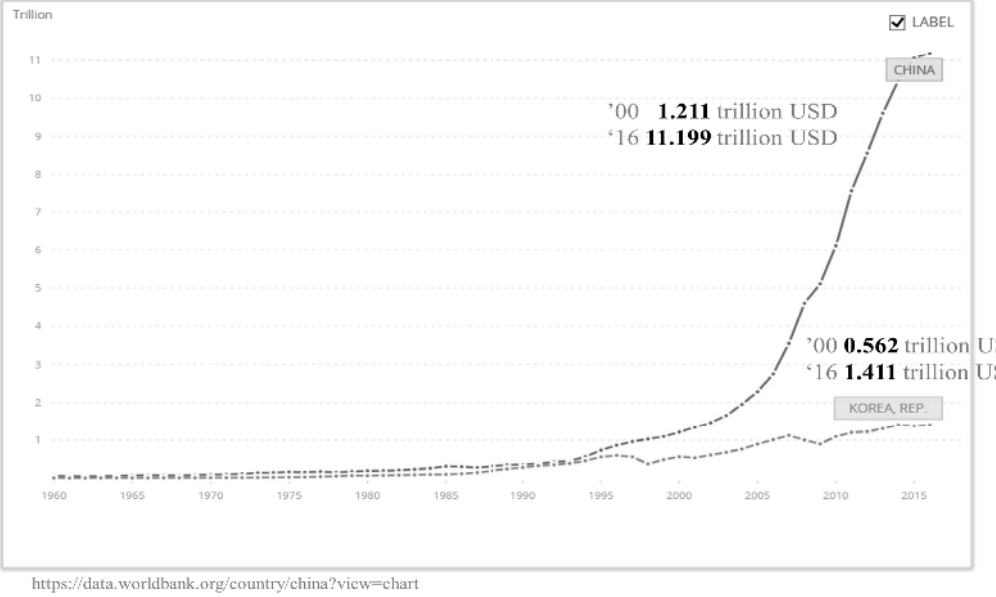


Figure 13. Growth of Combined Mariculture and Aquaculture Production in China and Korea in Comparison with Global (Millions of ton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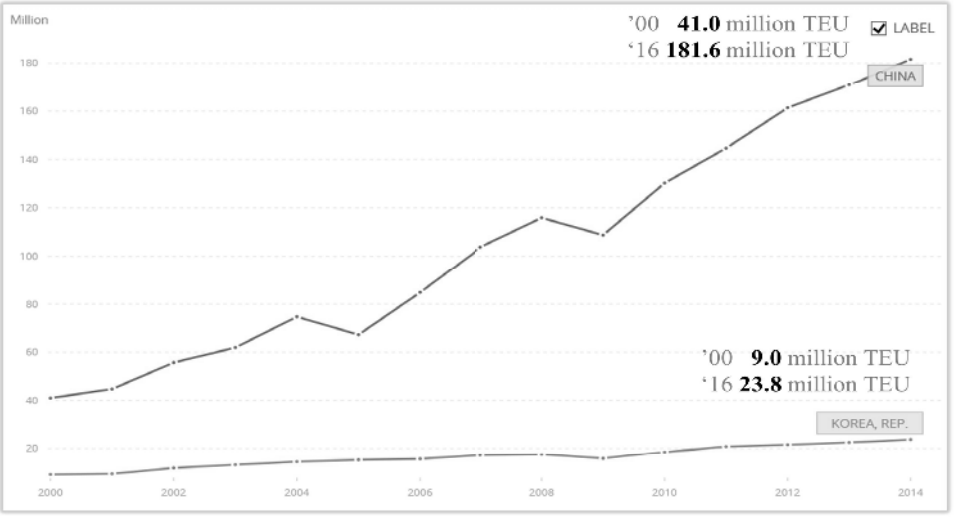
(UNDP/GEF, 2007)

Rapidly increasing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pressure since mid 200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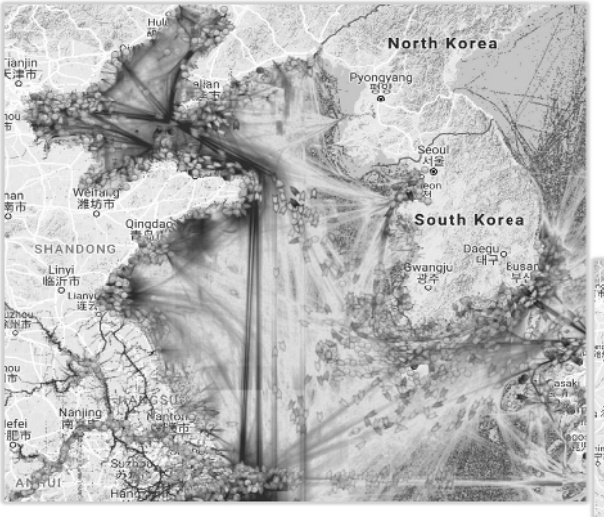
https://data.worldbank.org/country/china?view=chart

Container Traffic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S.SHP.GOOD.TU?locations=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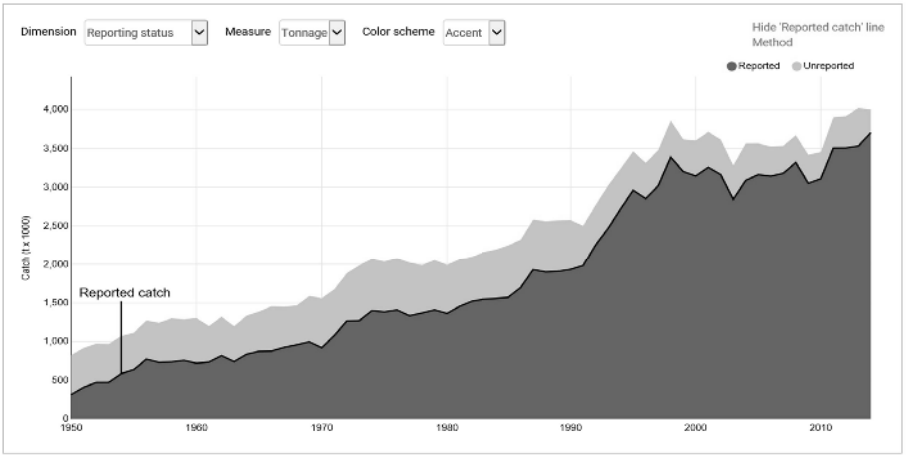
Vessel Traffic 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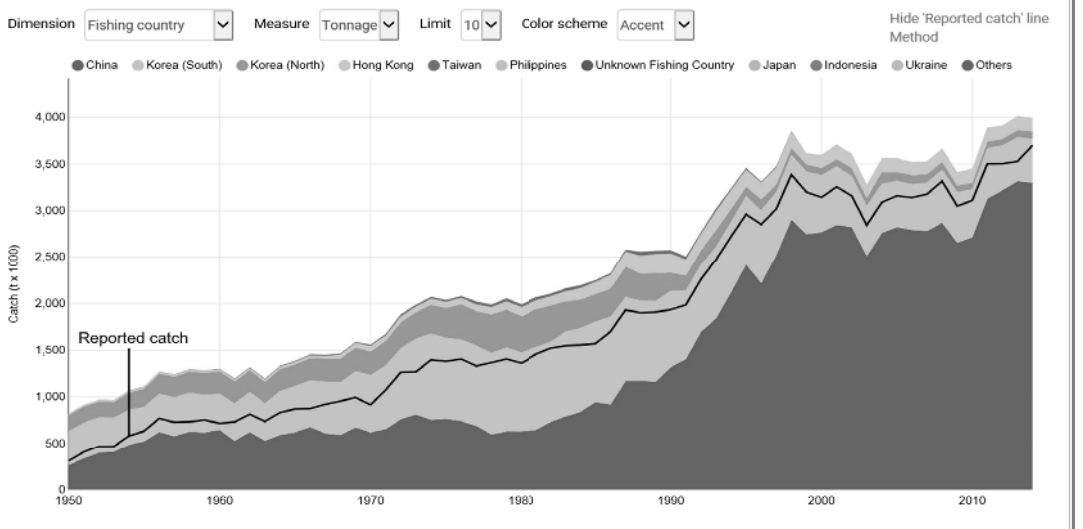
www.marinetraffic.com

Fishery Catch in Yellow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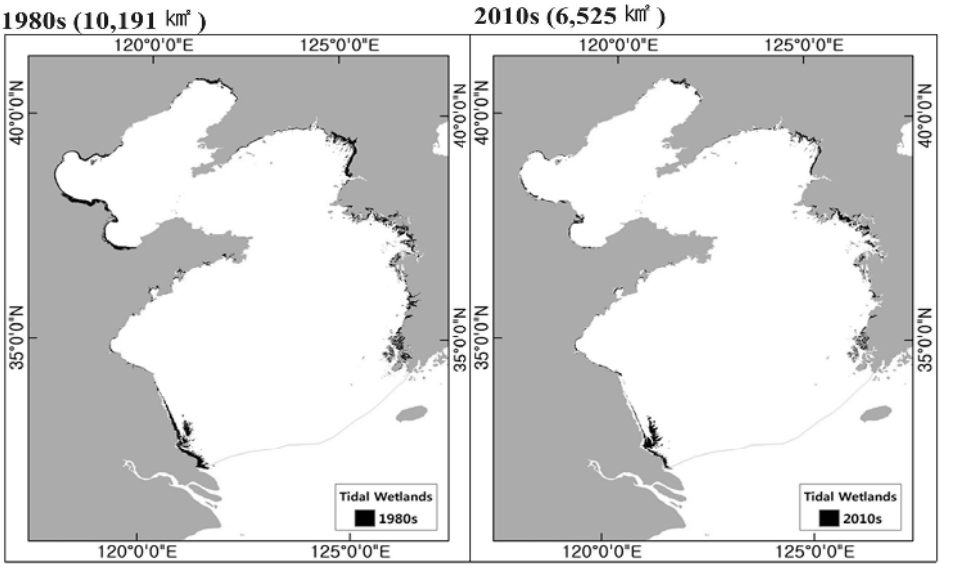
Note: The data we present ('reconstructed data') combine official reported data and reconstructed estimates of unreported data (including major discards), with reference to individual EEZs. Official reported data are mainly extracted from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FishStat database. The "Reported catch" line overlaid on the catch graph represent all catches deemed reported (including foreign) and allocated to this spatial entity. **For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reconstruction data, download the .pdf file for the specific EEZ(s) and also examine our** methods **for data and spatial allocation.**

www.seaaroundus.org



www.seaaroundu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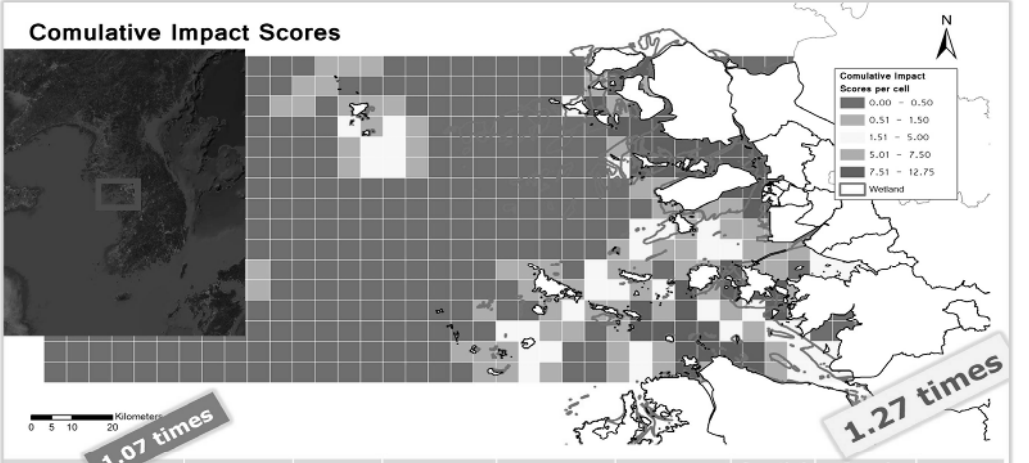
Coastal Habitat Loss : Tidal Wetlands in Yellow Sea



(Khim & Nam et al, in submission)

Increasing Cumulative Imp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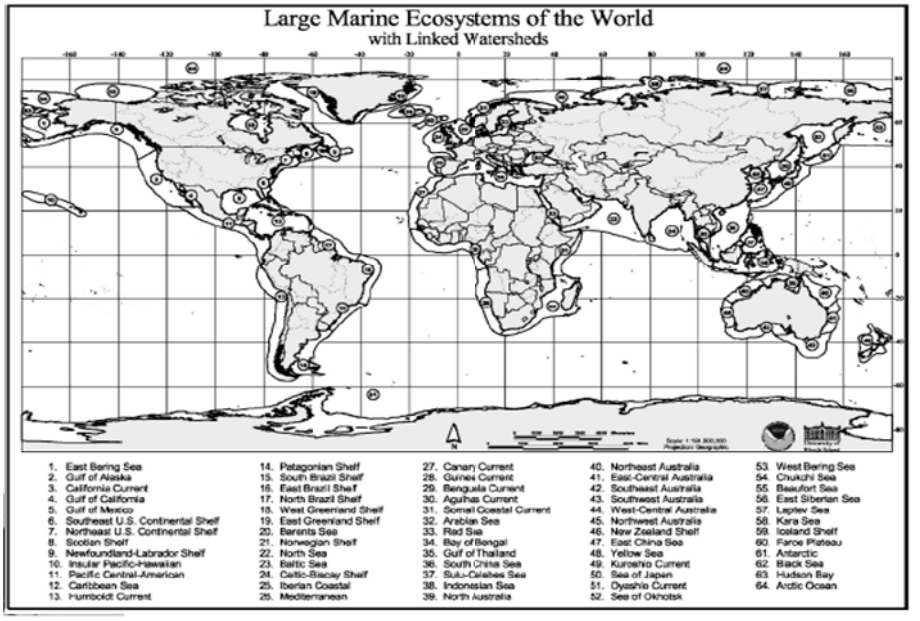
(Nam & Choi, 2017)



	Population	Fish catch	Mariculture	Shipping & Transport	Artificial coastline	Spatial uses	Sand extraction	Total
2005	2,848,711	21,326	1,714	42,463	344	85	4,924	
Cumulative impact score	101	101	**71**	82	302	**2**	**160**	**821**
2015	3,057,325	21,352	4,078	37,560	374	379	7,010	
Cumulative impact score	108	101	**170**	73	**329**	**11**	**248**	**1,040**

YSLME, Transboundary Cooperation Mechanism

Global Map of Large Marine Ecosystems (64)



Brief outline of YSLME Project Evolution

1991 — GEF, World Bank, UNDP, NOAA (2003, A Project plan adopted by member states)

2005 — 1st Phase Outset

2007 — **TDA**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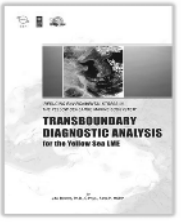
2010 — **SAP** (Strategic Action Programme)

2014 — 1st Phase Completion

2015 — 2nd Phase Resume

2017 — Inception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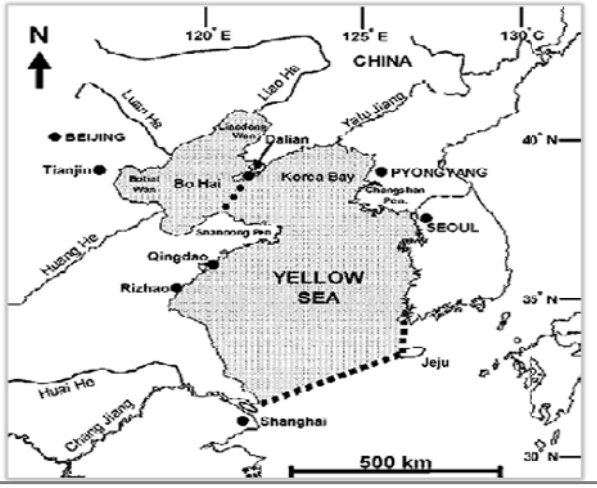
By 2020 to Achieve the objective





Overview of YSLME Project

Objective is to achieve
Ecosystem-based, environmentally-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YSLME and its watershed *by reducing development stress and promoting sustainable exploitation of the ecosystem from a densely populated, heavi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semi-enclosed shelf sea*



- Arca 404,000 ㎢, 1000 km long, 700 km wide(max.)
- Population: more than 600 million
- Large riverine inputs : 1.6 bil. Tons of sediments / year
- High fishing pressures
- Rapidly economic growth
- Coastal habitat modification

(UNDP/GEF, 2007; Shin, 2012)

Works for YSLME TDA, based on primary issues

Primary Issues at a proposal stage
- *Fisheries & Mariculture*
- *Biodiversity*
- *Water Quality & Human Health*
-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Objective	Component
I Develop Reg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Mariculture	A. Stock Assessment
	B. Carrying Capacity in Fisheries and Mariculture
	C. Mariculture Production
	D. Disease in Mariculture
	E. Regional Fisheries Agreements and National Laws
	F. Fisheries Management Plan
II Propose and Implement Effective Regional Initiatives for Biodiversity Protection	A. Habitat Conservation
	B. Vulnerable Species
	C. Genetic Diversity
	D. Introduced Species
	E. Biodiversity Regulations
	F. Regional Biodiversity Assessment & Regional Biodiversity Action Plan
III Propose and Implement Actions to Reduce Stress to the Ecosystem, Improve Water Quality and Protect Human Health	A. Stressors to Ecosystem
	B. Carrying Capacity of Ecosystem
	C. Contaminant Inputs
	D. Contaminant Levels
	E. Harmful Algal Blooms and Emerging Disease
	F. Hot Spot Analysis
	G.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H. Legal and Regulatory
	I. Fate and Transport Analysis to Facilitate SAP Analysis

Regional WGs on
- **Fisheries**
- **Biodiversity**
- **Ecosystem**
- **Pollution**
- Investment

(UNDP/GEF, 2007)

SAP based on YSLME TDA (11 Targets and 32 actions)

Re-identification of Issues on SAP
- **Pollution and Contamination**
- **Eutrophication**
- **Harmful Algal Blooms**
- **Fishing Effort Exceeding Ecosystem Carrying Capacity**
- Mariculture Facing Unsustainable Problems
- Habitat Loss and Degradation
- Changes in Ecosystem Structure
- Jellyfish Blooms
- Climate Change-related issues

(UNDP/GEF, 2009)

SAP based on YSLME TDA (11 Targets and 32 actions)



Provisioning Services

Target 1: 25-30% reduction in fishing effort
- Action 1-1: Control fishing boat numbers
- Action 1-2: Stop fishing in certain areas/seasons
- Action 1-3: Monitor and assess stock fluctuations

Target 2: Rebuilding of over-exploited marine living resource
- Action 2-1: Increase mesh size
- Action 2-2: Enhance stocks
- Action 2-3: Improve fisheries management

Target 3: Improvement of mariculture techniques to reduce environmental stress
- Action 3-1: Develop environment-friendly mariculture methods and technology
- Action 3-2: Reduce nutrient discharge
- Action 3-3: Control diseases effectively

Regulating Services

Target 4: Meeting international requirements on contaminants
- Action 4-1: Conduct intensive monitoring and assessment
- Action 4-2: Control contaminants discharge with reference to Codex alimentarius and Stockholm Convention
- Action 4-3: Implementing MARPOL 1973/78 effectively

Target 5: Reduction of total loading of nutrients from 2006 levels
- Action 5-1: Control total loading from point sources
- Action 5-2: Control total loading from non-point sources and sea-based sources
- Action 5-3: Apply new approaches for nutrient treatment

SAP based on YSLME TDA (11 Targets and 32 actions)



Cultural Services

Target 6: Reduced standing stock of marine litter from current level
- Action 6-1: Control source of litters and solid wastes
- Action 6-2: Improve removal of marine litter
- Action 6-3: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marine litter

Target 7: Reduce contaminants, particularly in bathing beaches and other marine recreational waters, t
- Action 7-1: Conduct regular monitoring, assessment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particularly i recreational waters
- Action 7-2: Control pollution in bathing beaches and other marine recreational waters

Supporting Services

Target 8: Better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ecosystem changes for adaptive manageme
- Action 8-1: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s of N/P/Si ratio change
- Action 8-2: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Action 8-3: Forecast ecosystem changes in the long-term scale
- Action 8-4: Monitor the transboundary impact of jellyfish blooms
- Action 8-5: Monitor HAB occurrences

Target 9: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current populations/distributions and genetic dive including endangered and endemic species
- Action 9-1: Establish and implement regional conservation plan to preserve biodiversity

Target 10: Maintenance of habitats according to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2007
- Action 10-1: Develop regional guidelines for coastal habitat management
- Action 10-2: Establish network of MPAs
- Action 10-3: Control new coastal reclamation
- Action 10-4: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benefit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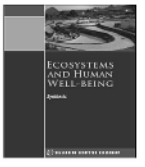
Target 11: Reduction of the risk of introduced species
- Action 11-1: Control and monitor ballast water discharge
- Action 11-2: Introduce precautionary approach and strict control of introduction of non-native species

Future Tasks for Sustainable Yellow Sea and People's Well-being

Assessing Marine Ecosystem Services

Mainstream Ecosystem Services into YSLME

1997 — Costanza et al



2001~2005 — M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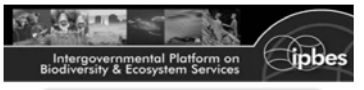
2006 — UNEP

2007 — SGAN-UNEP WCMC
TEEB, (G8+5 sum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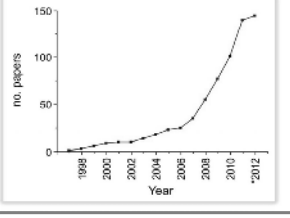
2008 — CBD COP9
ESP(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2009 — UNESCO-IOC



2010 — Marine ESP

2011 — EU (Ecosystem Ass. & M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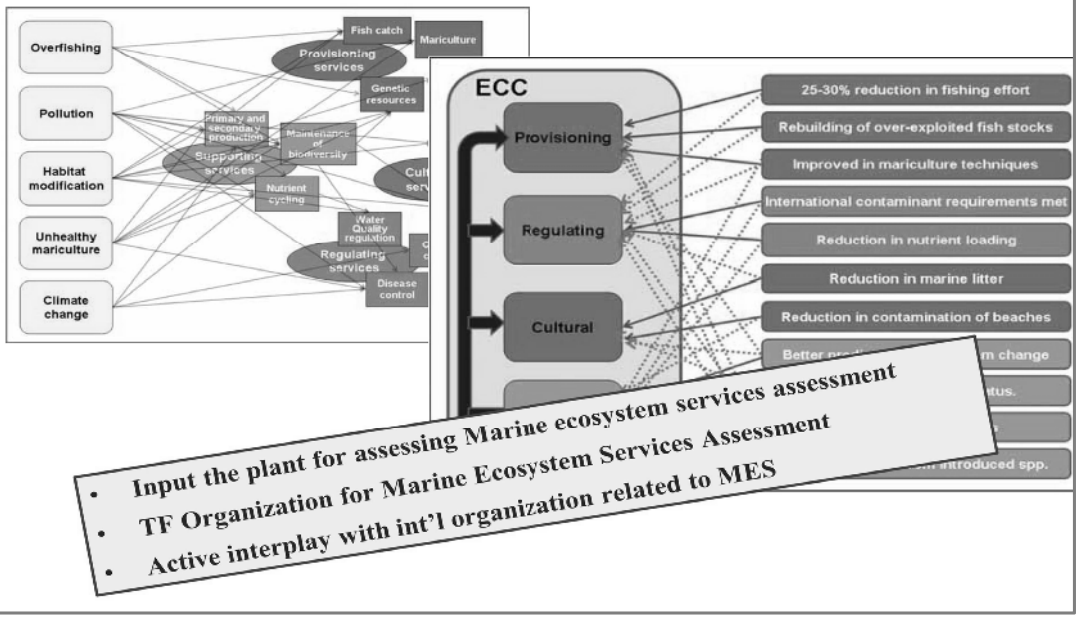


2012 — IPBES

2015 — UNSDGs

(Nam, 2014)

YSLME has already conceptualized incorporation of marine ecosystem services concept into YSLME, but workable plan to assess MES for Yellow Sea ecosystem



Re-building MPA network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UNDP/GEF PROJECT ON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ON
CO-OPERATION IN PROMO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THE YELLOW SEA

Following the exchanging of project information and discussing potential areas and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 promoting protection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the Yellow Sea, the UNDP/GEF Project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Recognising: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implementing agency, is supporting the Project, *"Reduce Environmental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YSLME aims at: Ecosystem-based, environmentally-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YSLME and its watershed by reducing development stress and promoting sustainable exploitation of the ecosystem from a densely populated, heavi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semi-enclosed shelf sea;

The Medium-term objectives of the YSLME are:

- Enhancing national capacities i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established in the Yellow Sea, and co-operative spirit enhanced by the project; and
- Facilitating cross-sect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dealing with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lso Recognising:

KMI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developing national marine policies on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Major functions of KMI are as follows:











Draft

Framework Workplan for the Yellow Sea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2013-2017)

1. Background and Justification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conservation of biologic diversity in the Yellow Sea will b
provided, based on:

- the National reports and regional synthesis on biologic
- assessment of critical habitats jointly carried
- assessment of critical habitats in t
implemented with WW
- current stat

Draft

Framework Workplan for the Yellow Sea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2013-2017)

,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Yellow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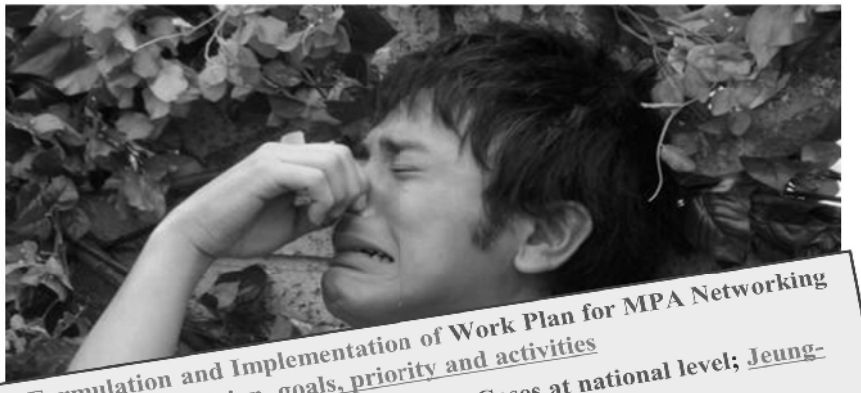
ions for a 5-Year Workplan

3.1 Impacts Assessment of Modifications of Marine and Coastal Habitats

Modifications of marine and coastal habitats have new format and high pressures from land reclamation and construct tidal power plants in the major coastal habitat areas. Assessment of impacts of these new developments (some of them have been approved as a part of blue (or green) economy), require regional, long term and multi-focal areas monitoring and assessment.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 impacts of habitats modifications will provide stronger arguments for the conservatien, and generate stronger political and public willingness for the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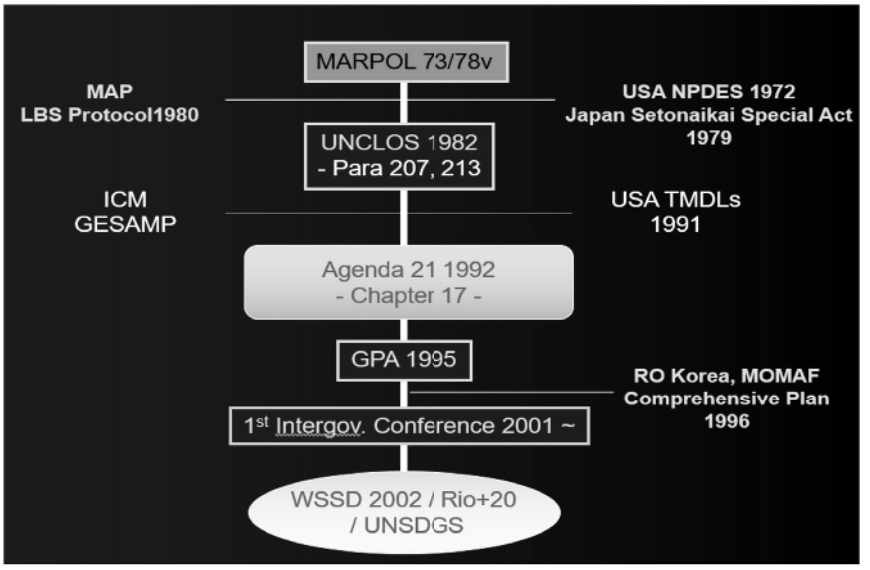
Nothing Has Happened before the 2nd Week of Jul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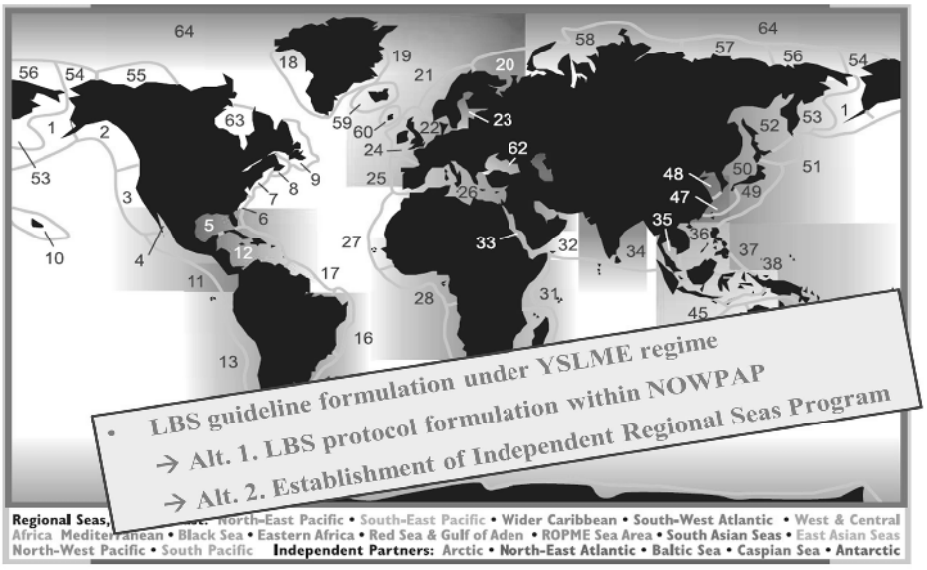
-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Work Plan for MPA Networking with common vision, goals, priority and activities
- More concerted efforts for Successful Cases at national level; Jeung-do, Suncheon Bay etc in Korea
-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in Designing MPA Network at Regional, National or Sub-nation Levels
- Strategic planning for MPA Network

Convention for Land-based Activities Management

Evolution of Global Regime for Land-based Activities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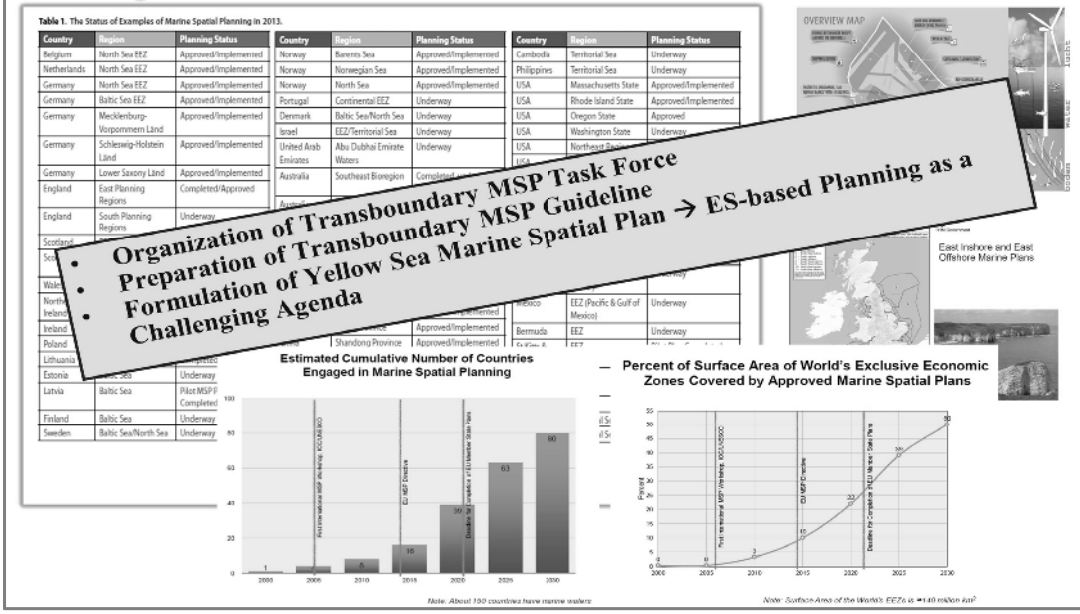


Linking UNEP Regional Seas Program with Large Marine Ecosystems



Introduction of Transboundary Marine Spatial Planning

- MSP in 60 areas of 40 countries, some data are missing
- 2/3 of global areas under MSP in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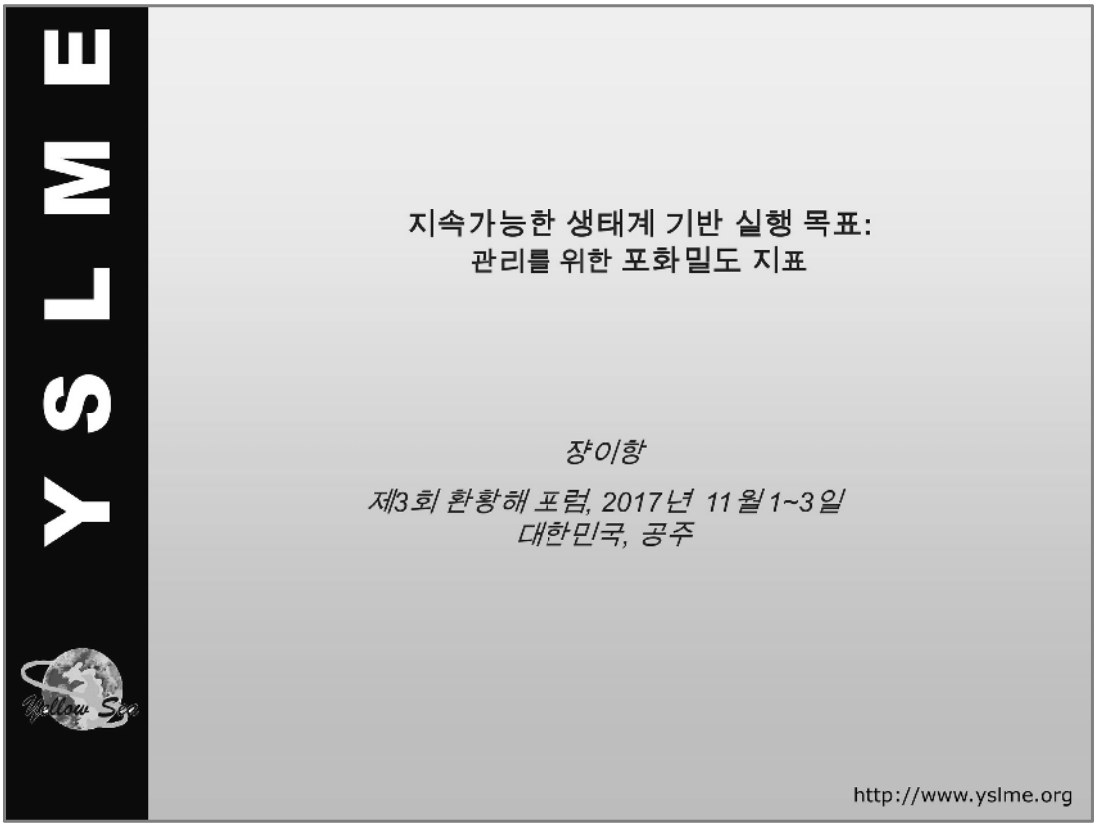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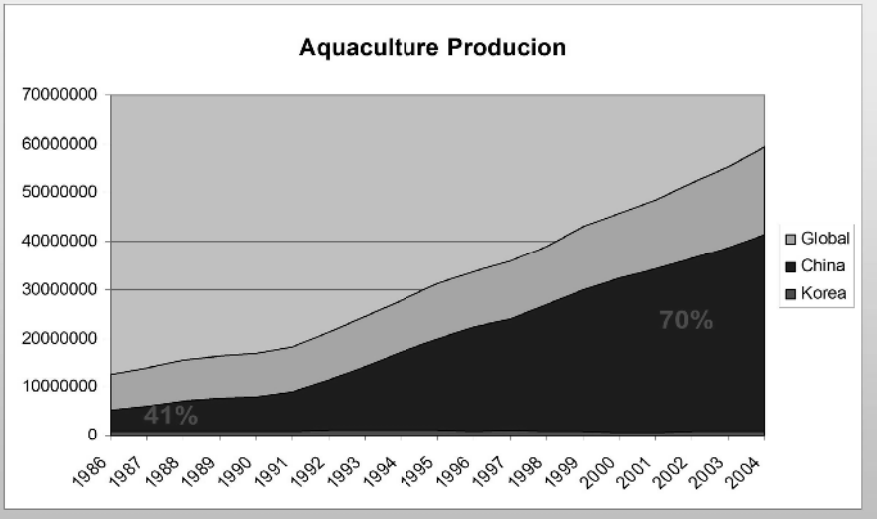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실행 목표: 관리를 위한 포화밀도 지표

장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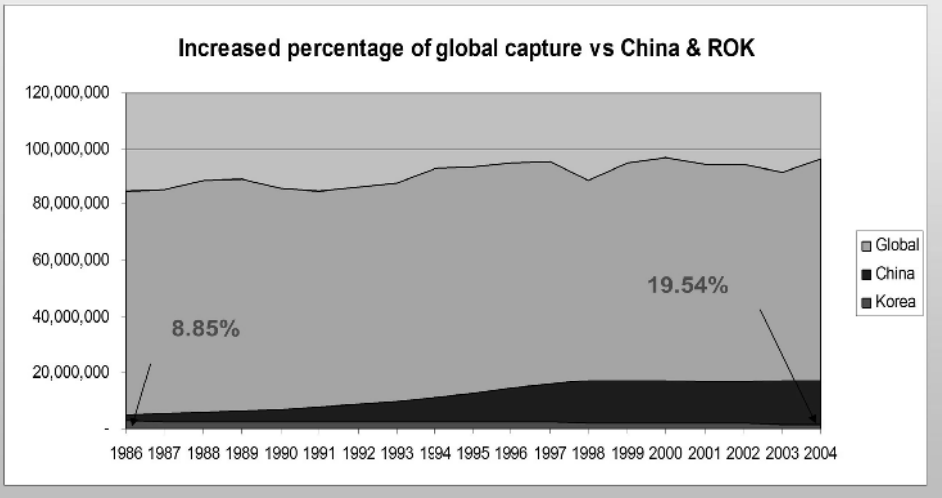
황해 바다양식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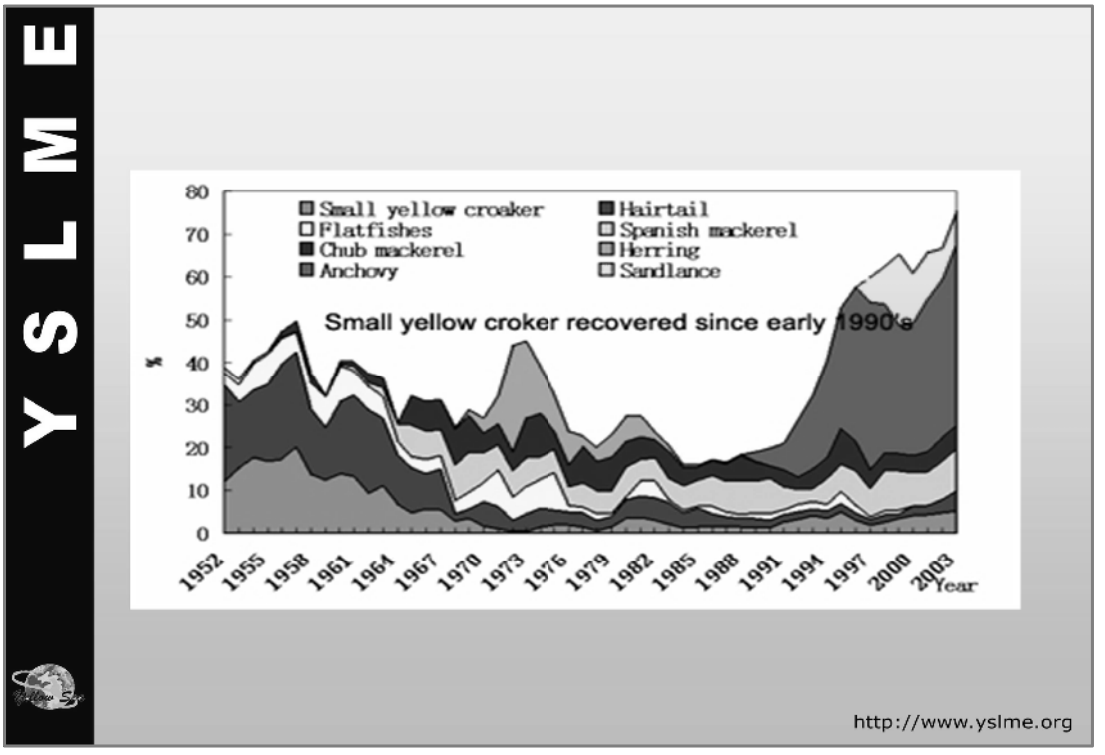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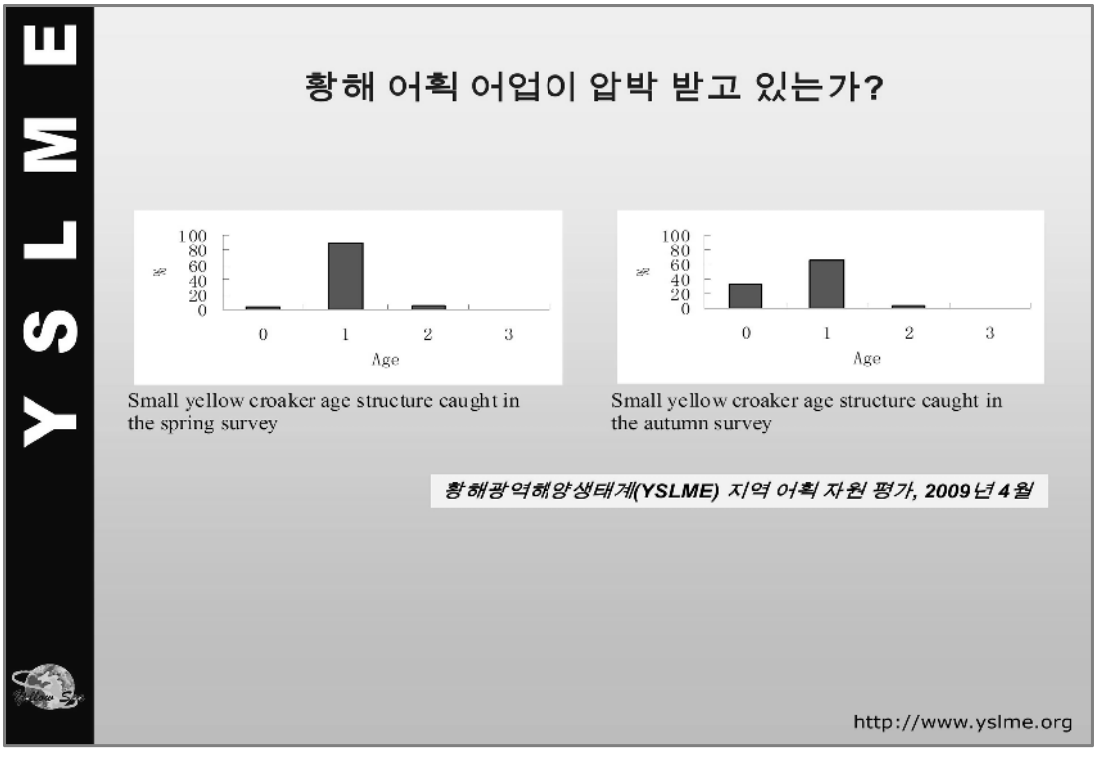
YSLME

황해 어획 어업



http://www.yslme.org


YSLME
Small yellow croaker
Flatfishes
Chub mackerel
Anchovy
Hairtail
Spanish mackerel
Herring
Sandlance
Small yellow croker recovered since early 1990's
%
Year
http://www.yslme.org


YSLME
황해 어획 어업이 압박 받고 있는가?
%
Age
Small yellow croaker age structure caught in the spring survey
Small yellow croaker age structure caught in the autumn survey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지역 어획 자원 평가, 2009년 4월
http://www.yslme.org

YSLME

유해적조(HAB) 감소 이후에, 왜 다시 영양염이 증가하는가?

	중국	한국
종	유령 해파리 & 자색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봄 (%)	14	0
가을 (%)	86	19

출처: YSLME 어획 자원 평가 크루즈



노무라입깃해파리 사진: Uye

예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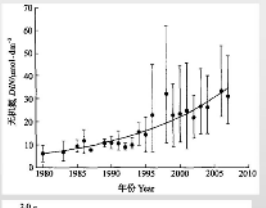
남획으로 인해 해파리 서식 공간이 증가함

규소(Si) 감소로 규조류가 와편모충류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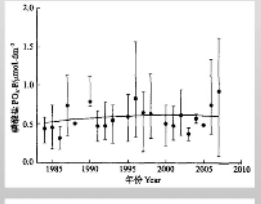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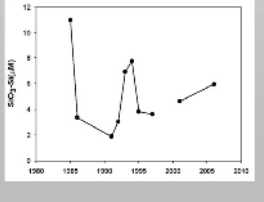
해파리 서식 환경이 압박받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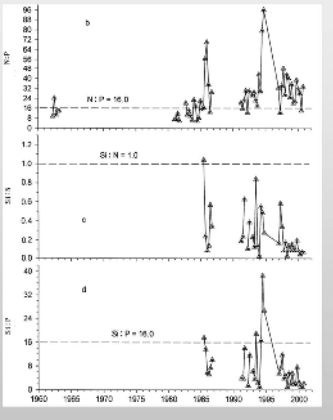
DIN



PO_4-P



SiO_3-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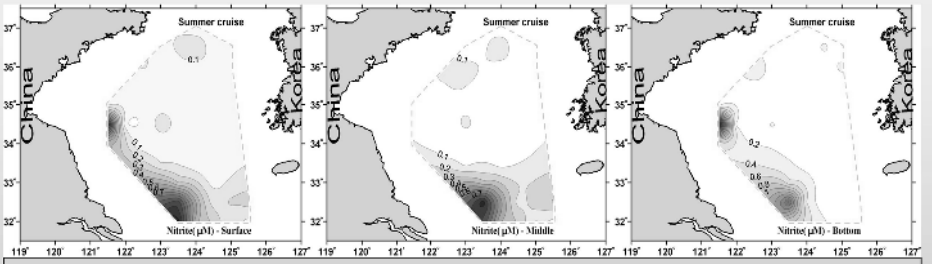
N/P>16

N/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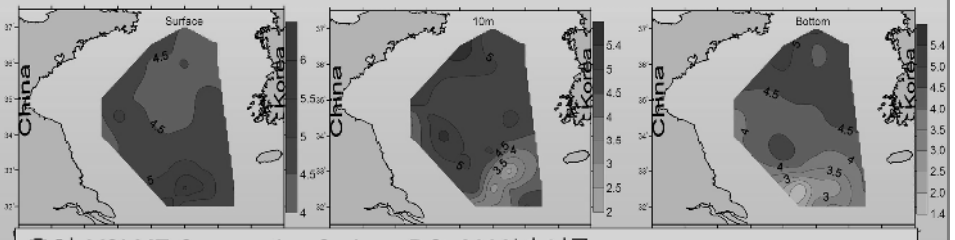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YSLME 합동 크루즈 조사에 의한 영양소 및 용존산소량(DO)



출처: YSLME Cooperative Cruises: 아질산염, 2008년 여름



출처: YSLME Cooperative Cruises: DO, 2008년 여름

http://www.yslme.org

YSLME

유해적조(HAB) 감소 이후에, 왜 다시 영양염이 증가하는가?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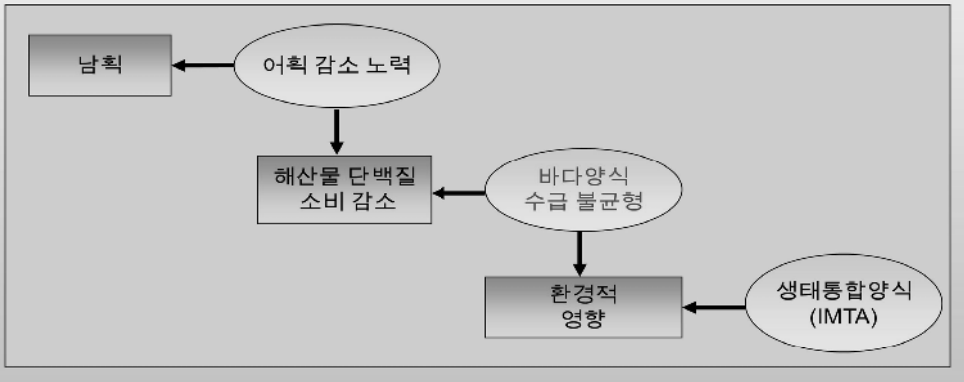
풀어야 할 "오래된" 문제들이 많고,
이해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많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은 무엇인가???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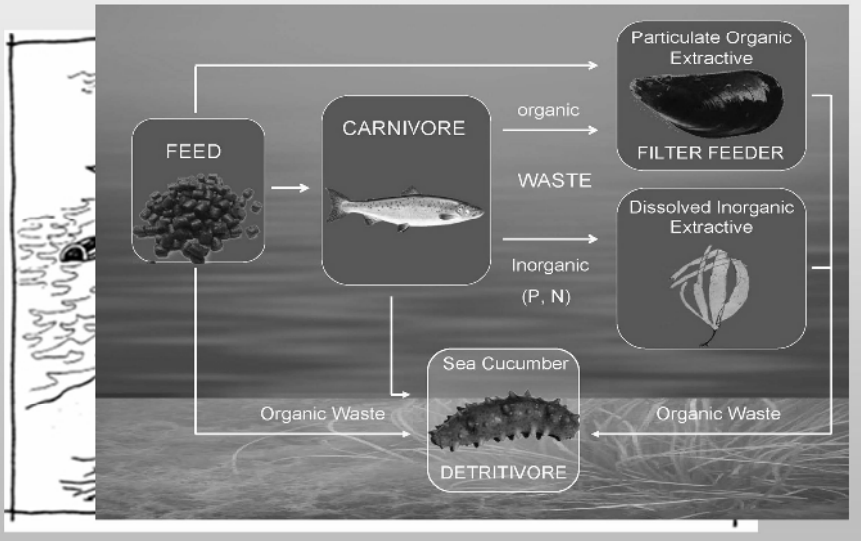
영양염류 유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
바다양식 관련 예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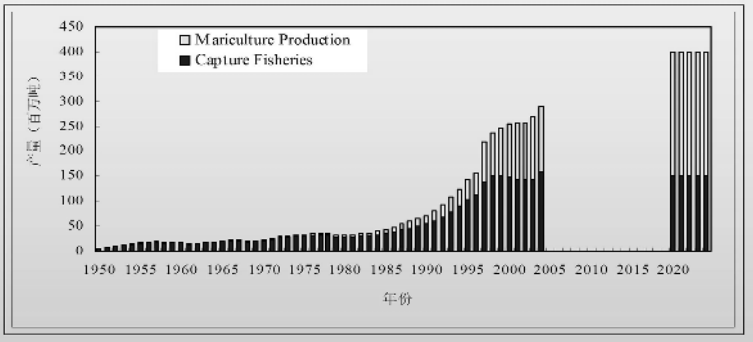
영양염류 유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

바다양식 관련 예



http://www.yslme.org

황해 어류 자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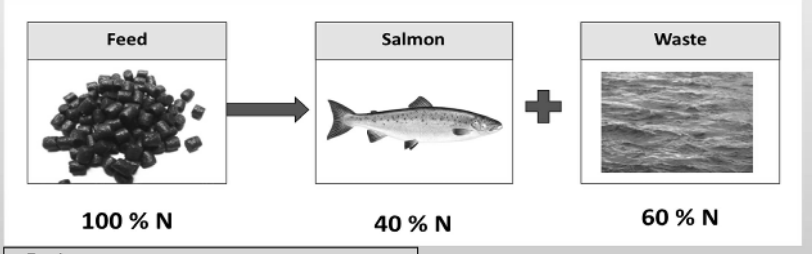
인구 증가로 인해 양식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2천 5백만 톤의 해산물이 양식에 의해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Dr. Wang Q.Y.*

가능한가? 수백만 톤의 해산물 부족 현상

http://www.yslme.org

YSLME

바다 양식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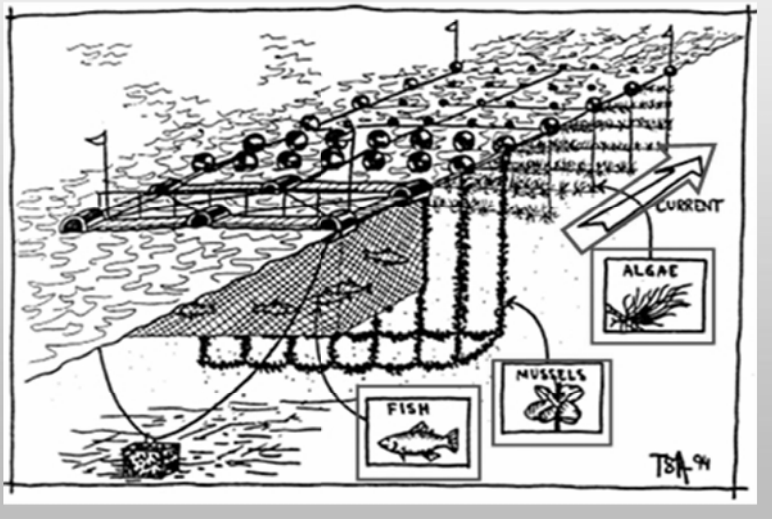


출처: Fang J.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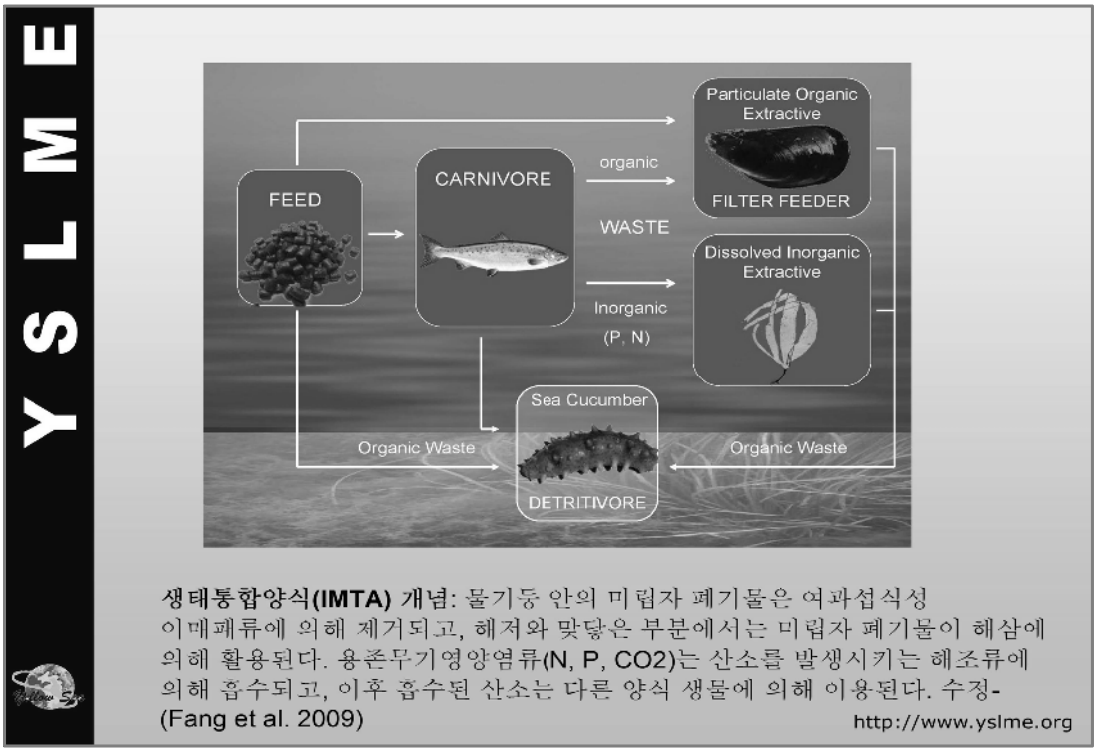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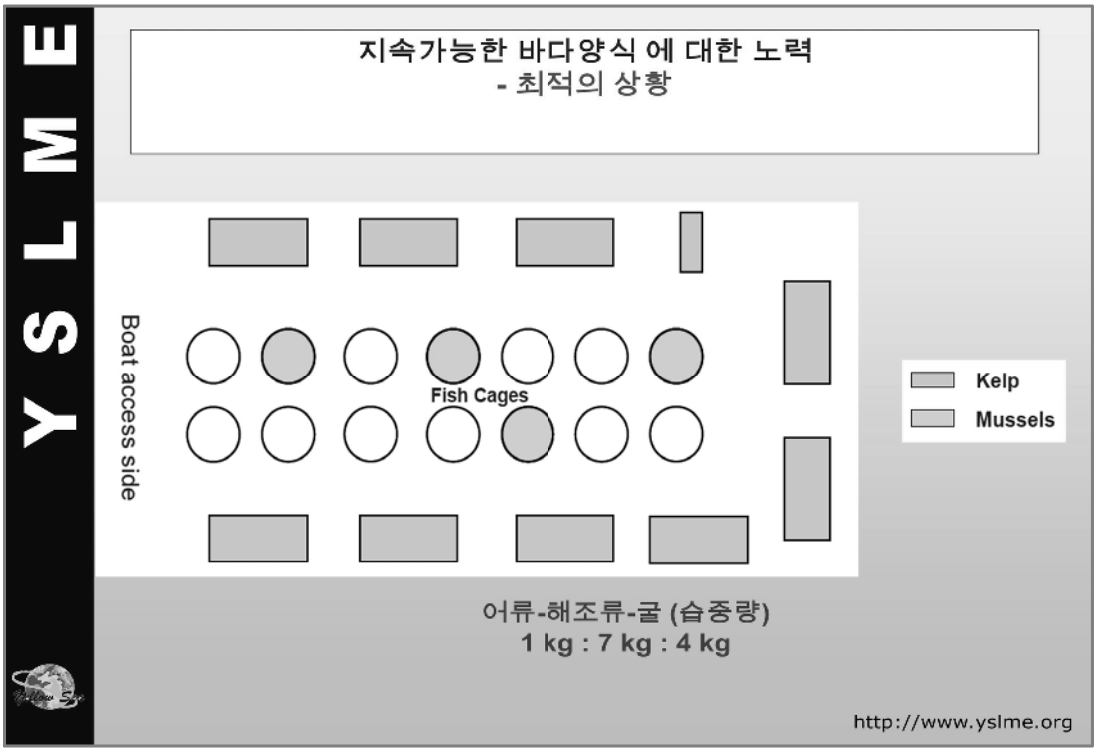
생태통합양식(IMTA)의 개념



http://www.yslme.org


YSLME
FEED
CARNIVORE
organic
WASTE
Inorganic
(P, N)
Particulate Organic Extractive
FILTER FEEDER
Dissolved Inorganic Extractive
Sea Cucumber
DETRITIVORE
Organic Waste
Organic Waste
생태통합양식(IMTA) 개념: 물기둥 안의 미립자 폐기물은 여과섭식성 이매패류에 의해 제거되고, 해저와 맞닿은 부분에서는 미립자 폐기물이 해삼에 의해 활용된다. 용존무기영양염류(N, P, CO2)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해조류에 의해 흡수되고, 이후 흡수된 산소는 다른 양식 생물에 의해 이용된다. 수정-(Fang et al. 2009)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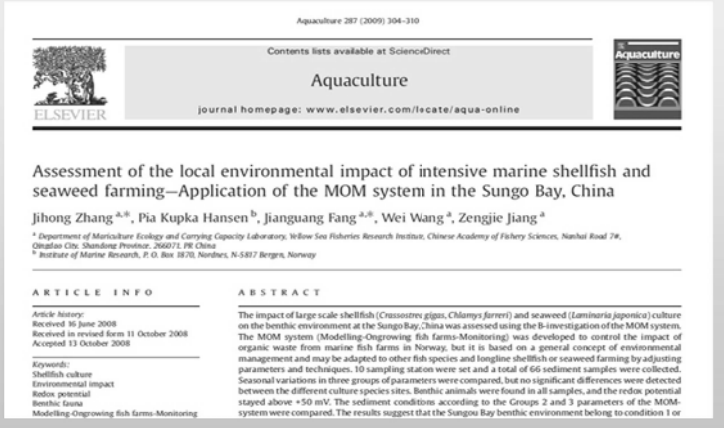

YSLME
http://www.yslme.org


YSLME
지속가능한 바다양식 에 대한 노력
- 최적의 상황
Boat access side
Fish Cages
Kelp
Mussels
어류-해조류-굴 (습중량)
1 kg : 7 kg : 4 kg
http://www.yslme.org


YSLME
http://www.yslme.org

YSLME

효과가 있을까?



Aquaculture 287 (2009) 304–310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Aquaculture

journal homepage: www.elsevier.com/locate/aqua-online

Assess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of intensive marine shellfish and seaweed farming—Application of the MOM system in the Sungo Bay, China

Jihong Zhang [a,*], Pia Kupka Hansen [b], Jianguang Fang [a,*], Wei Wang [a], Zengjie Jiang [a]

[a] Department of Mariculture Ecology and Carrying Capacity Laboratory, Yellow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Chinese Academy of Fishery Sciences, Nanhai Road 7#, Qingdao City, Shandong Province, 266071, PR China
[b]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P. O. Box 1870, Nordnes, N-5817 Bergen, Norwa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6 June 2008
Received in revised form 11 October 2008
Accepted 13 October 2008

Keywords:
Shellfish culture
Environmental impact
Redox potential
Benthic fauna
Modelling-Ongrowing fish farms-Monitoring

ABSTRACT

The impact of large scale shellfish (*Crassostrea gigas*, *Chlamys farreri*) and seaweed (*Laminaria japonica*) culture on the benthic environment at the Sungo Bay, China was assessed using the B-investigation of the MOM system. The MOM system (Modelling-Ongrowing fish farms-Monitoring) was developed to control the impact of organic waste from marine fish farms in Norway, but it is based on a general conc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y be adapted to other fish species and longline shellfish or seaweed farming by adjusting parameters and techniques. 10 sampling station were set and a total of 66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Seasonal variations in three groups of parameters were compared,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 species sites. Benthic animals were found in all samples, and the redox potential stayed above +50 mV. The sediment conditions according to the Groups 2 and 3 parameters of the MOM-system were compar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ungou Bay benthic environment belong to condition 1 or

*중국 **Sungo** 만에서, 조개류와 해조류의 장기 대량 양식이 해저 환경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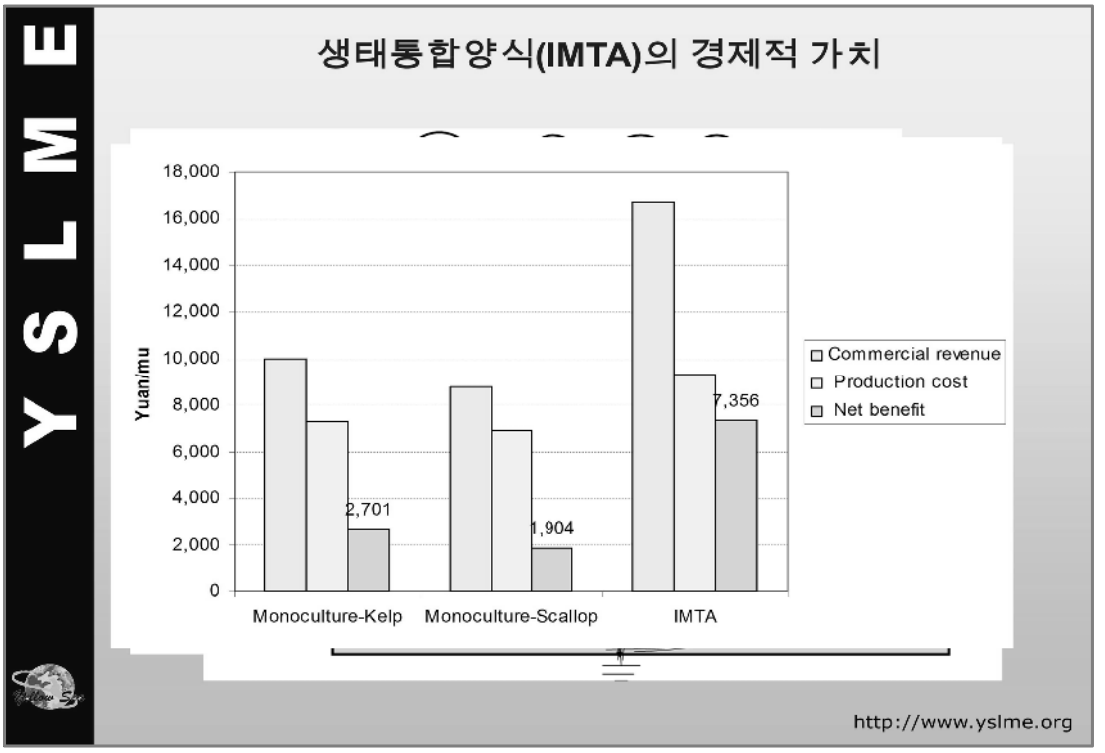
YSLME

효과가 있을까?

확인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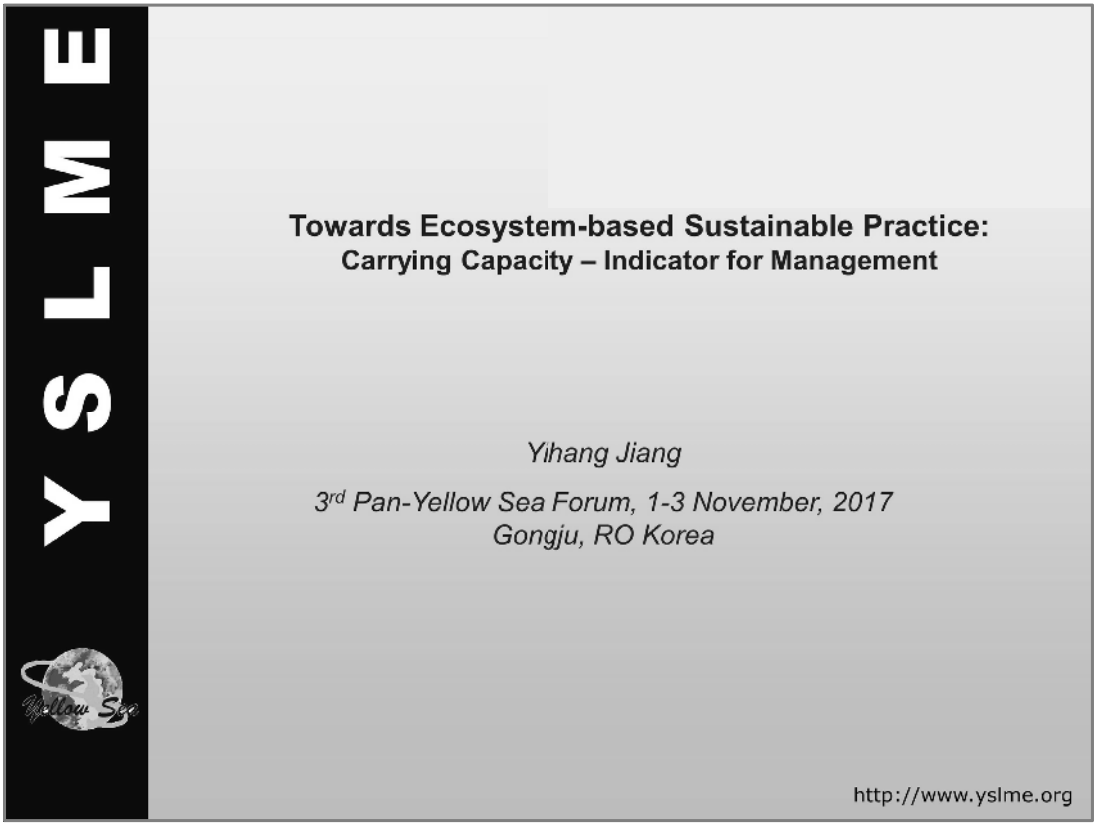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생태통합양식(IMTA)의 경제적 가치
Yuan/mu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701
1,904
7,356
Monoculture-Kelp
Monoculture-Scallop
IMTA
Commercial revenue
Production cost
Net benefit
http://www.yslme.org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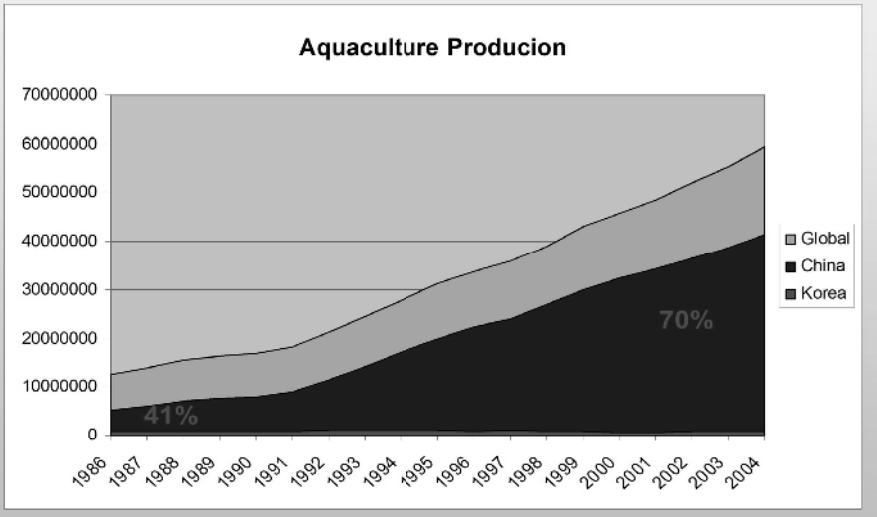
Towards Ecosystem-based Sustainable Practice : Carrying Capacity - Indicator for Management

Jiang Yihang
Former Project Manager, UNDP/GEF YSLME Project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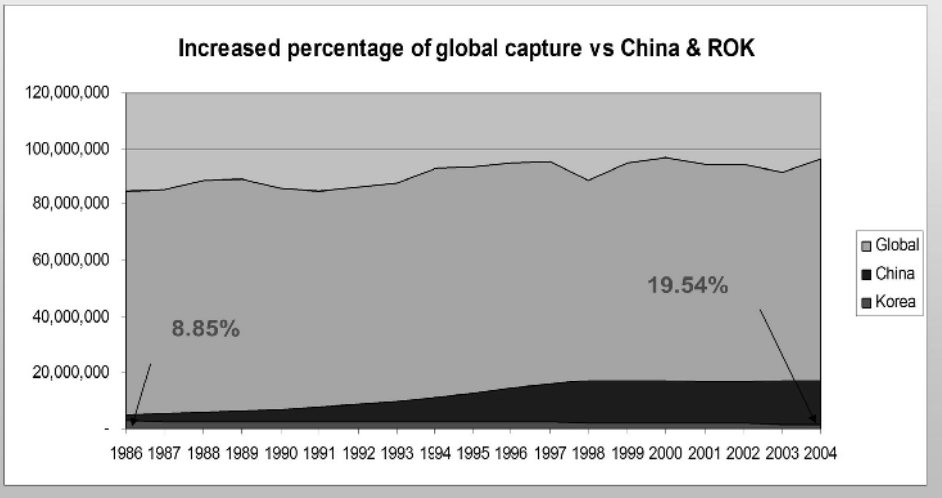
Yellow Sea Mariculture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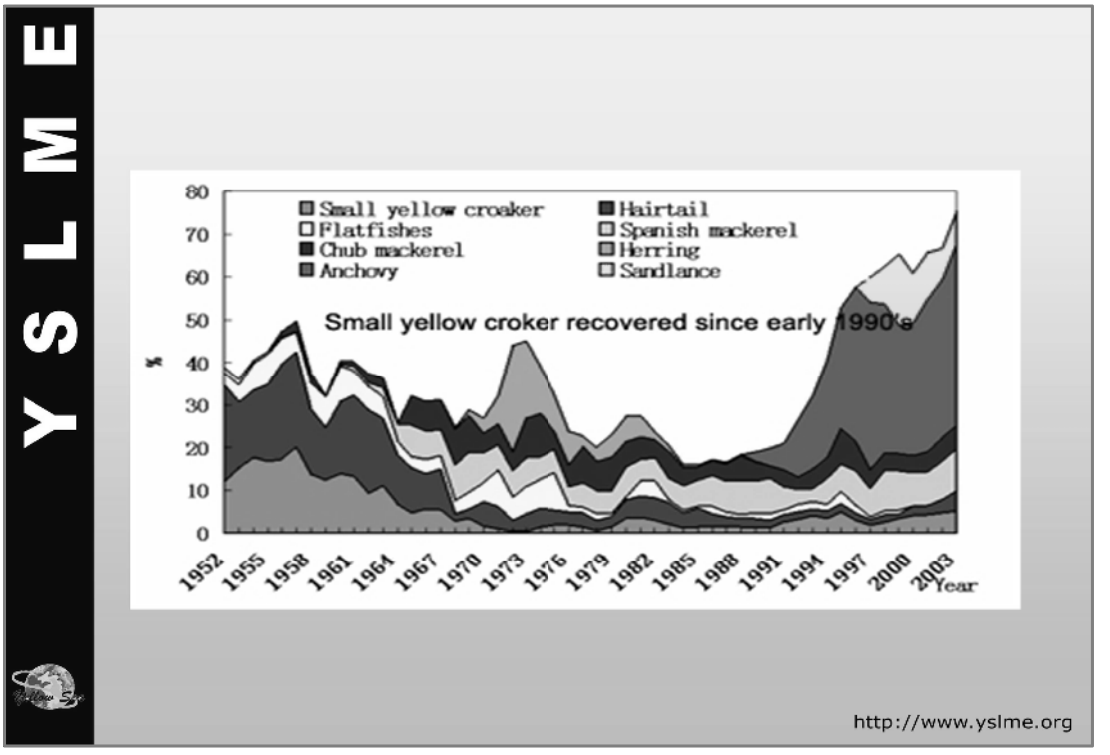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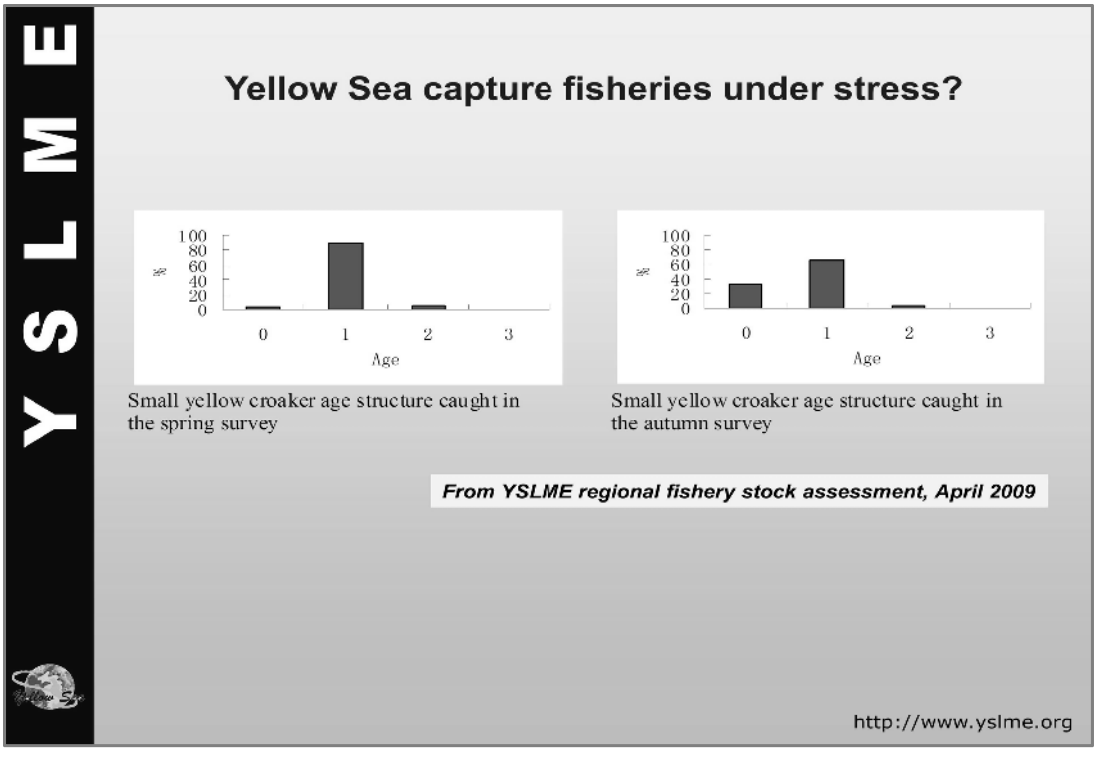
YSLME

Yellow Sea capture fisheries



http://www.yslme.org


YSLME
Small yellow croaker
Flatfishes
Chub mackerel
Anchovy
Hairtail
Spanish mackerel
Herring
Sandlance
Small yellow croker recovered since early 1990's
%
Year
http://www.yslme.org


YSLME
Yellow Sea capture fisheries under stress?
%
Age
Small yellow croaker age structure caught in the spring survey
Small yellow croaker age structure caught in the autumn survey
From YSLME regional fishery stock assessment, April 2009
http://www.yslme.org

YSLME

Following Reduction of HAB, Why Nutrients Agai n?

	China	Korea
Species	Cyanea nozakii & Cyanea purpure	Nemopilema nomurai
Spring (%)	14	0
Fall (%)	86	19

Source: YSLME fishery stock assessment cruises



Nemopilema nomurai Photo: Uye

Possible ca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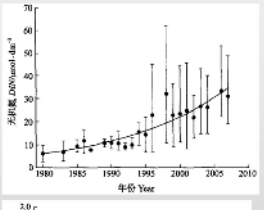
Over-fishing left more spaces for jellyfish

Diatom shift to dinoflagellates due to reduction of 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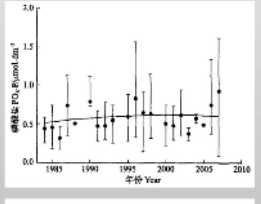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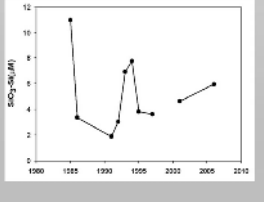
Environment for fishery is under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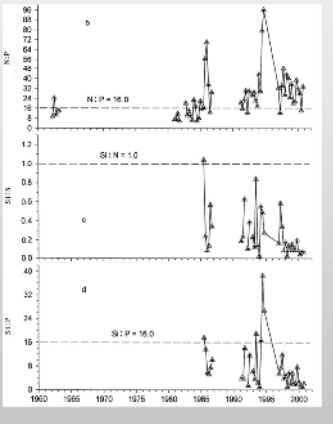
DIN



PO_4-P



SiO_3-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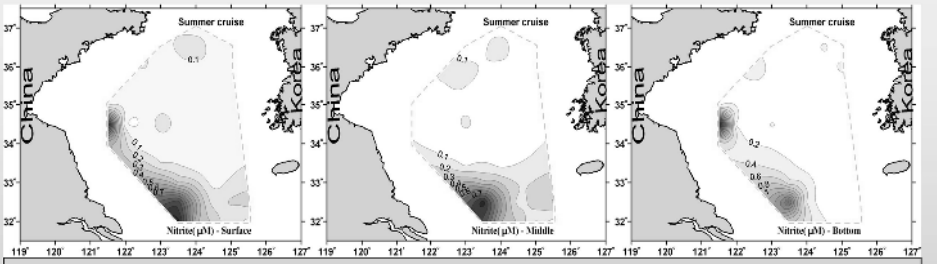
N/P>16

N/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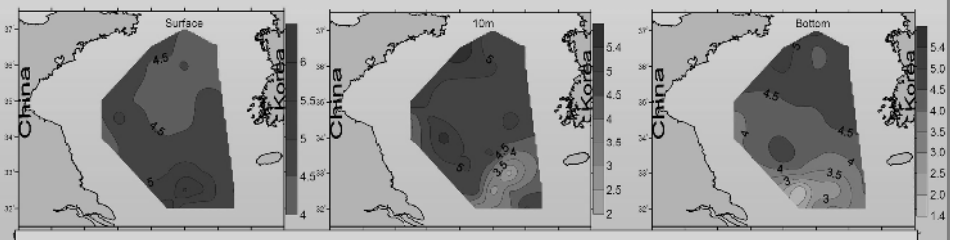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Nutrients and DO from the YSLME Joint Cruises



Source: YSLME Cooperative Cruises: Nitrite, summer 2008



Source: YSLME Cooperative Cruises: DO, summer 2008

http://www.yslme.org

YSLME

Following Reduction of HAB, Why Nutrients Agai n?



http://www.yslme.org

YSLME

We have so many “old” problems to be solved,
we have many “new” problems to be understoo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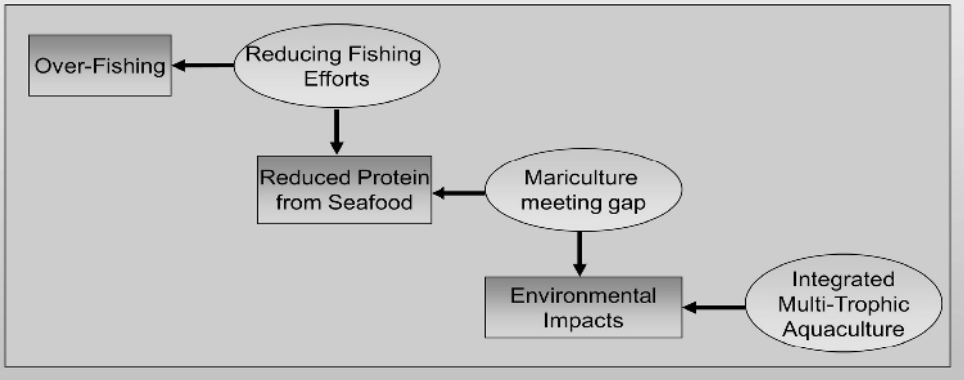
Can we do something useful ???

http://www.yslme.org

YSLME

Measures to Reduce Nutrient Discharges

Example on Ma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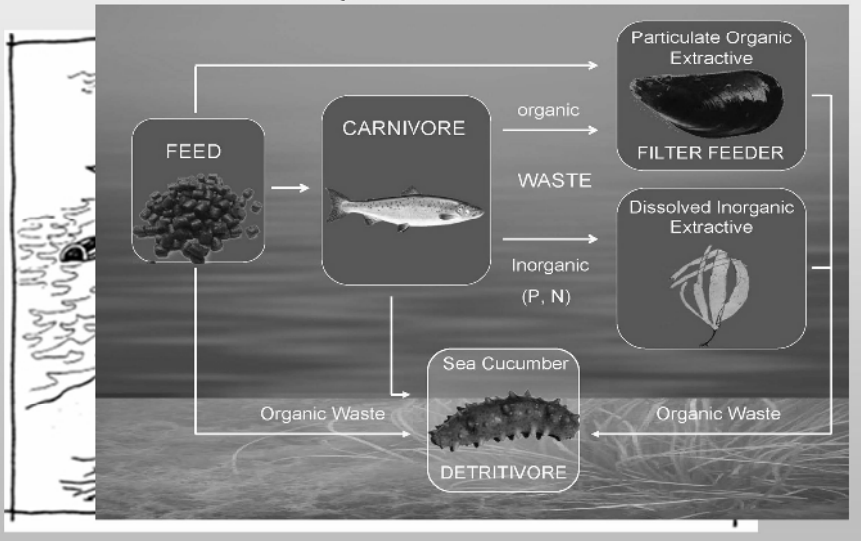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Measures to Reduce Nutrient Dischar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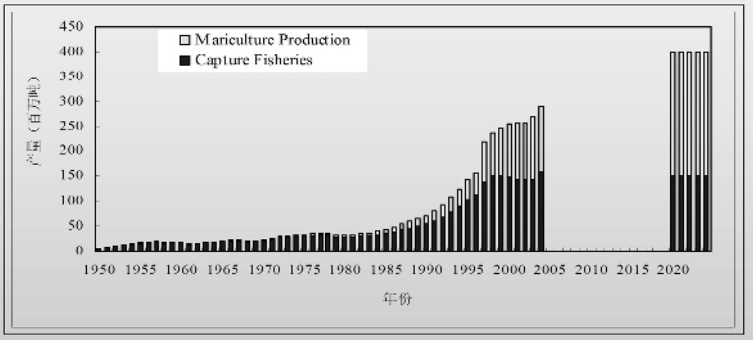
Example on Mariculture



http://www.yslme.org

YSLME

Protecting Yellow Sea fish stocks



The growth of population has put more demand on aquaculture for ever higher production. It is anticipated that in 2020, about 25 million tons sea food need to be produced from ma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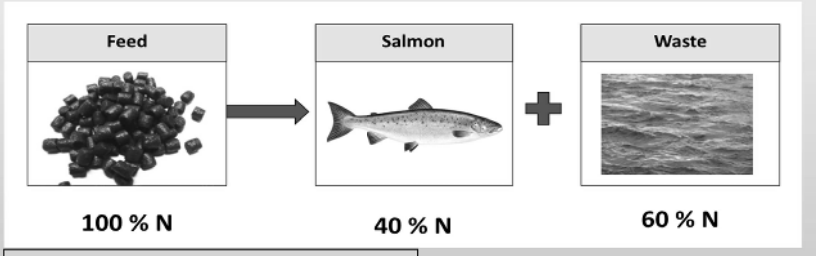
From – Dr. Wang Q.Y.

There would be ? Million tones of sea food lacking

http://www.yslme.org

YSLME

Potential Impacts of Mariculture to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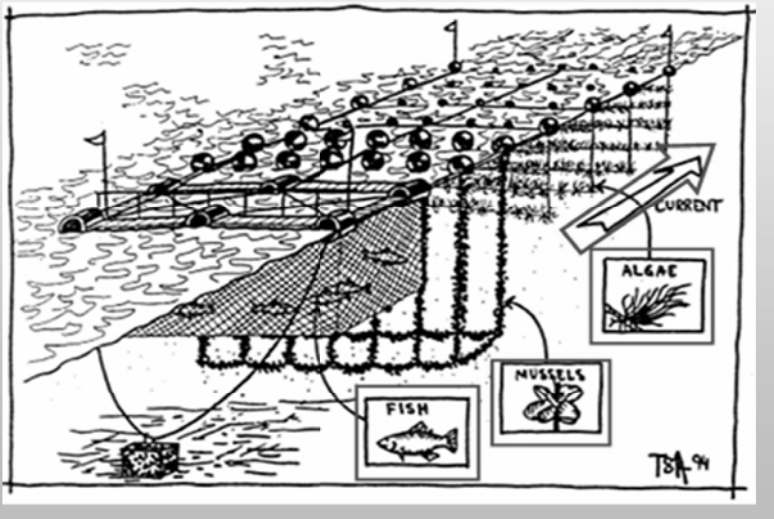


From Fang J.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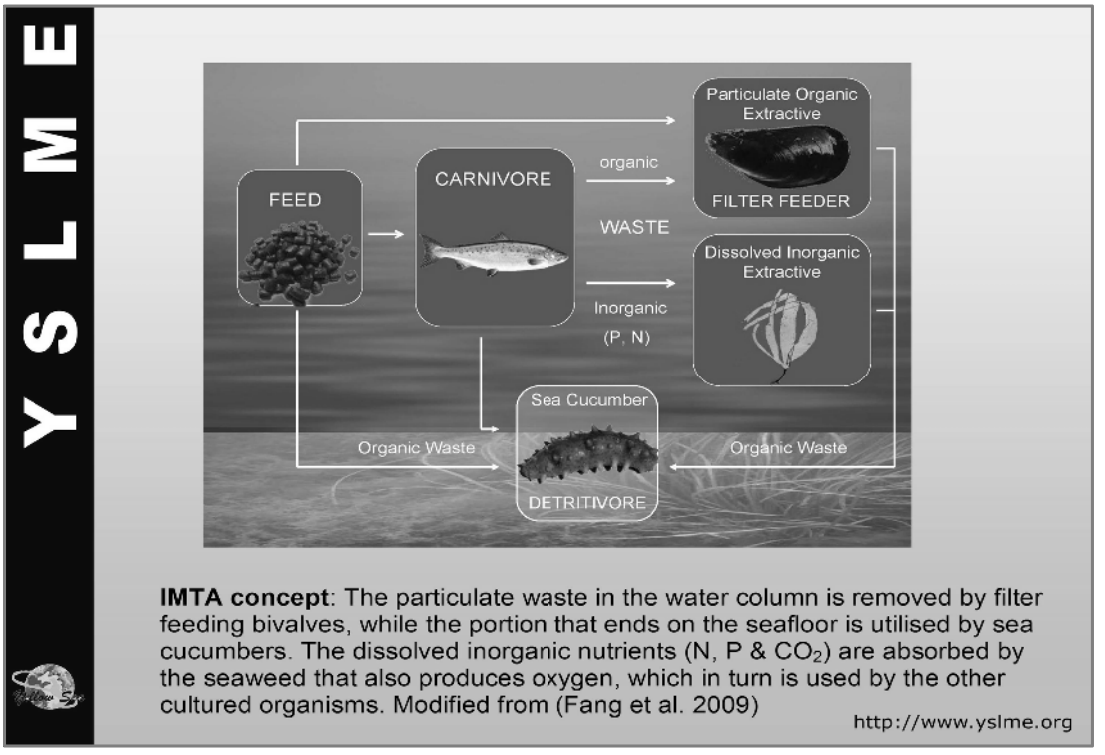
http://www.yslme.org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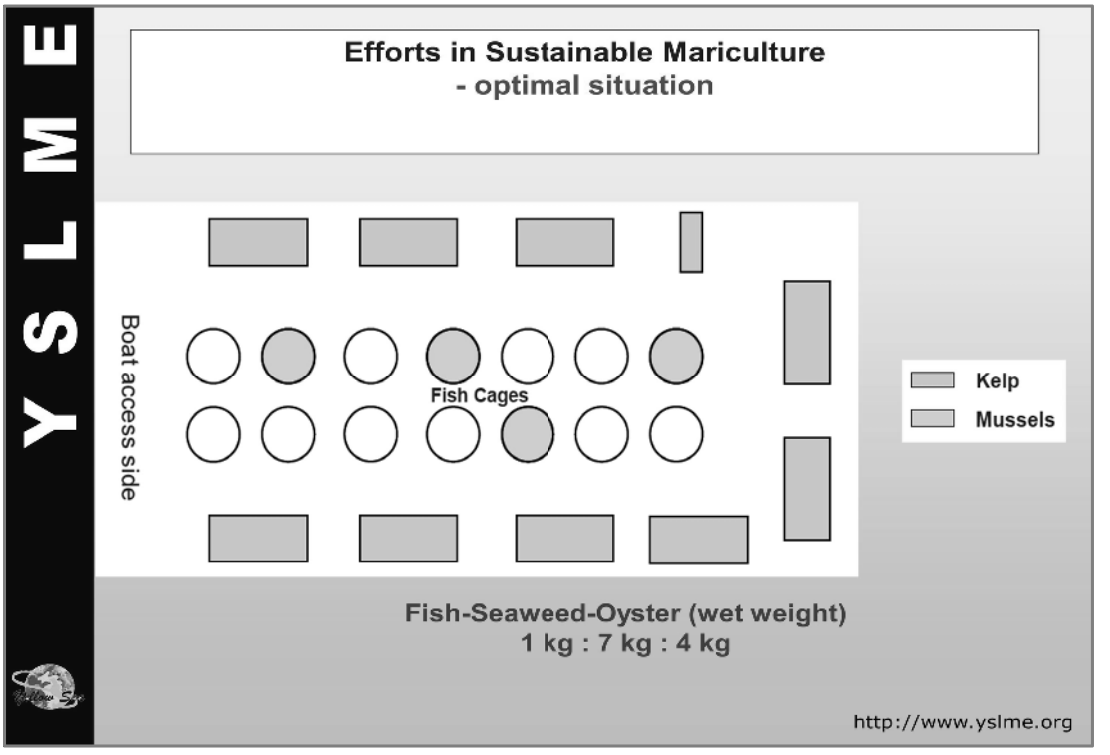
Concept of IMTA



http://www.yslme.org


YSLME
FEED
CARNIVORE
organic
WASTE
Inorganic
(P, N)
Particulate Organic Extractive
FILTER FEEDER
Dissolved Inorganic Extractive
Sea Cucumber
DETRITIVORE
Organic Waste
Organic Waste
IMTA concept: The particulate waste in the water column is removed by filter feeding bivalves, while the portion that ends on the seafloor is utilised by sea cucumbers. The dissolved inorganic nutrients (N, P & CO_2) are absorbed by the seaweed that also produces oxygen, which in turn is used by the other cultured organisms. Modified from (Fang et al. 2009)
http://www.yslme.org


YSLME
http://www.yslme.org


YSLME
Efforts in Sustainable Mariculture
- optimal situation
Boat access side
Fish Cages
Kelp
Mussels
Fish-Seaweed-Oyster (wet weight)
1 kg : 7 kg : 4 kg
http://www.yslme.org


YSLME
http://www.yslme.org

YSLME

Is This Working?

Aquaculture 287 (2009) 304–310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Aquaculture

journal homepage: www.elsevier.com/locate/aqua-online

Assess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of intensive marine shellfish and seaweed farming—Application of the MOM system in the Sungo Bay, China

Jihong Zhang [a,*], Pia Kupka Hansen [b], Jianguang Fang [a,*], Wei Wang [a], Zengjie Jiang [a]

[a] Department of Mariculture Ecology and Carrying Capacity Laboratory, Yellow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Chinese Academy of Fishery Sciences, Nanhai Road 7#, Qingdao City, Shandong Province, 266071, PR China
[b]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P. O. Box 1870, Nordnes, N-5817 Bergen, Norwa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6 June 2008
Received in revised form 11 October 2008
Accepted 13 October 2008

Keywords:
Shellfish culture
Environmental impact
Redox potential
Benthic fauna
Modelling-Ongrowing fish farms-Monitoring

ABSTRACT

The impact of large scale shellfish (*Crassostrea gigas*, *Chlamys farreri*) and seaweed (*Laminaria japonica*) culture on the benthic environment at the Sungo Bay, China was assessed using the B-investigation of the MOM system. The MOM system (Modelling-Ongrowing fish farms-Monitoring) was developed to control the impact of organic waste from marine fish farms in Norway, but it is based on a general conc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y be adapted to other fish species and longline shellfish or seaweed farming by adjusting parameters and techniques. 10 sampling station were set and a total of 66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Seasonal variations in three groups of parameters were compared,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 species sites. Benthic animals were found in all samples, and the redox potential stayed above +50 mV. The sediment conditions according to the Groups 2 and 3 parameters of the MOM-system were compar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ungou Bay benthic environment belong to condition 1 or

in the Sungo Bay the impact of long-term large scale aquaculture of shellfish and seaweed on the benthic environment was low

http://www.yslm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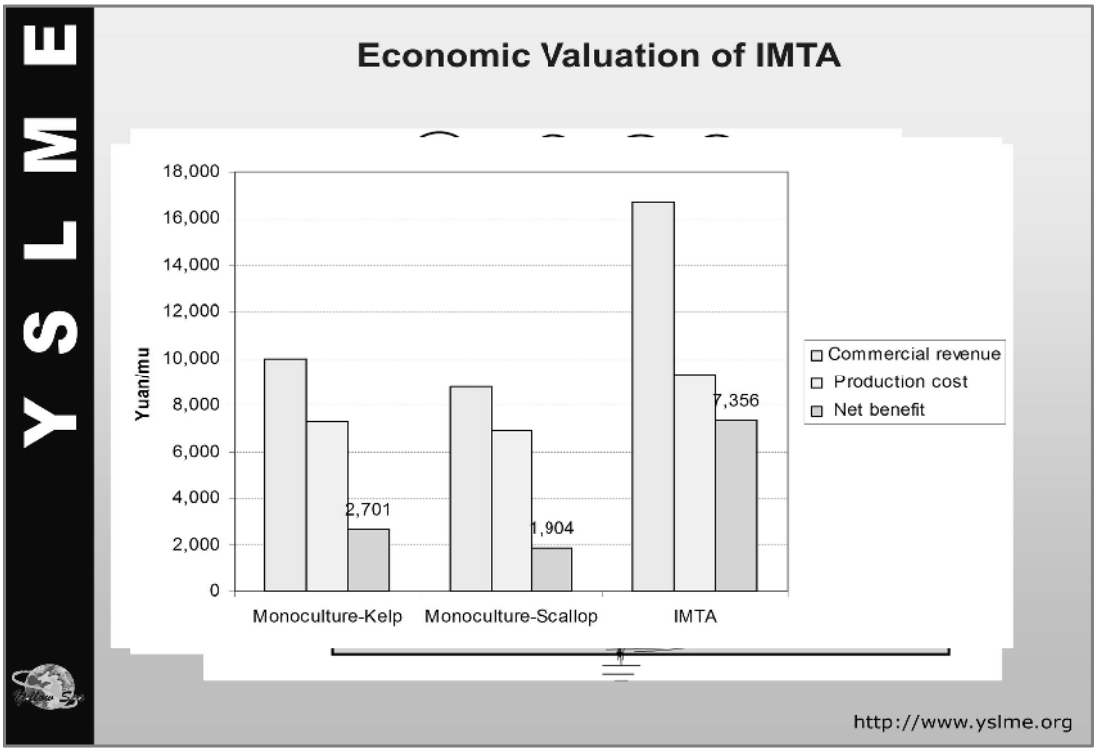
YSLME

Is This Working?

Checking ……



http://www.yslme.org


YSLME
Economic Valuation of IMTA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Yuan/mu
2,701
1,904
7,356
Monoculture-Kelp
Monoculture-Scallop
IMTA
Commercial revenue
Production cost
Net benefit
http://www.yslme.org

발제문

일본 수산물 상업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일본 수산물 상업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시모노세키 시립대
하마다 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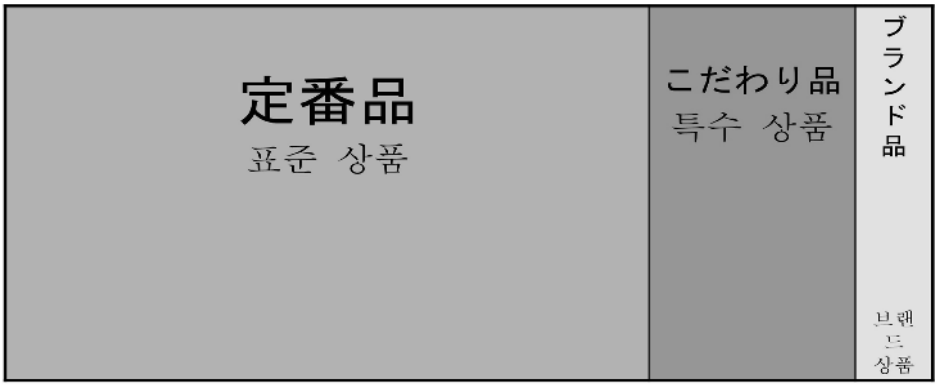
보고서 목적

어족자원의 급격한 열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관리 조치가 사용될 것이지만, 어업이 어족자원에 가하는 압력을 완화하려면 브랜딩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양식속도 향상 역시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① 일본 어업 브랜딩의 현황과 문제를 제시하고,
② 미래 양식제품 브랜드, 특히 양식어 브랜드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본, 한국, 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1-1 브랜드 정의

(1) 프리미엄 가격 발생
(2) 반복구매 고객의 존재
(3) 표준 상품, 특수 품목, 브랜드 품목 간의 차이



1-2 브랜드 구성요소 (기능)

브랜드 (Brand) → 태운 (Burnt) → 소나 위스키에 소인을 찍는 것에서 출발

(1) 식별・차별화 기능

기업: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소비자: 다양한 제품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선택하여 구매

(2) 품질 보증 기능

기업: 제품 출처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소비자에게 보장한 특정 수준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

소비자: 해당 브랜드 구매를 장려할 수 있는 보장과 확신을 제공

(3) 자기 표현 기능

소비자: 지위, "유행에 걸맞은 (fashionable)" 등의 상징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미와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

1-3 한 마디로 브랜드 (상품)를 표현하기

(1) 브랜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음; 표준 품목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음.

(2) 표준 품목이 브랜드 품목이 되지는 않음. "헌신 상품 (commitment goods)" 사이에 심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계속 사는 것은 브랜드.

(3) 브랜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속"으로, "지혜·지식에 의해 뒷받침" 됨.

1 - 4 브랜드를 창조하는 현재의 사회
(사용가치 소비에서 기호가치 소비로의 전환)

(1)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선택한 이유
① 사용가치 소비: 방한성, 방수성, 경량감 같은 옷 자체의 특성 및 기능 소비

② 상징가치 소비: 자기표현을 위해 (자기표현을 위해 일부러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고르는 것 등)

(2) 현재의 소비
① 상품 선택 때는 사용가치를 소비하면서 상징가치 소비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②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상징가치의 차이를 인식: 브랜드 지향적

2-1 일본 어업 브랜딩의 역사

	1960 ~ 1970	1970 ~ 1990	1990 ~ 2017
산업상품	「신제품의 시장 출시」 신제품 판매를 위한 상품 차별화 붐 (전자제품 등), CM을 이용한 제품 홍보	「1단계 브랜딩」 단순히 훌륭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없는 시대	「2단계 브랜딩」 후기 산업사회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시설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70%가 무형자산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가 브랜딩 경쟁에 도입되었음
수산물	선어	높은 신선함, 선어의 진보	브랜딩 접근법
	생선이 매일의 단백질 섭취를 위한 품목이 됨	단백질 섭취라는 기본기능이 줄어들고, 즐거움을 위한 소비가 탄생	브랜드 수산물의 탄생 소비자가 상품의 주된 특징으로 브랜드 가치를 꼽는 사회의 도래
		「1촌1품」 운동	지역 브랜딩 접근법→ 지역 브랜드 탄생으로 지역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짐 비명을 자아내는 요소

2-2 수산물 브랜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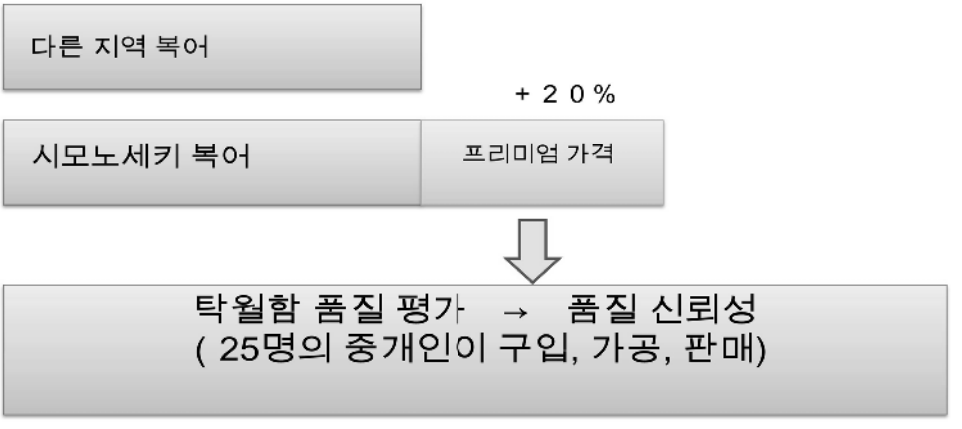
① 자연자원: 오마 참치, 사가노세키 고등어
→ 브랜드 가치가 희소성에 기반

② 양식: 아리아케 사가 김,
히로시마 굴, 킨키대학 참치
→ 브랜드 가치가 기술과 마케팅에 기반

③ 유통 기술: 시모노세키 복어
→ 유통업체와 문화적 특징 (요리 기술 등)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안정적

※ 자연 수산물을 구분하기는 힘듦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양식 수산물의 브랜드 육성이 활발해짐

2-3 츠키지 중개인들이 평가한 시모노세키 복어의 품질



2-4 시모노세키 복어의 브랜드 가치 (20% 프리미엄 가격)

(츠키지 시장 중개인들의 평가)
① 품질 보장 (우수한 품질, 상품 선별 시간 절감)
② 차별화 (깨끗한 상품, 높은 명성 등)

(소비자 평가)
① 품질 보장
② 자기표현 (고가의 시모노세키 복어를 먹음으로써) 자기 이미지 향상
③ 사회적 만족 (비싼 시모노세키 복어를 먹음으로써 우월감 느낌)

2-5 시모노세키 복어 브랜딩 성공의 핵심 포인트

(1) PR 활동·홍보
(1월 4일에 첫 경매, 왕실 납품)
(2) 중개인 간 경쟁 메커니즘
(중개인 간 친밀한 협력 → 품질 향상 및 넓은 선택권 보장)
(3) 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이 도시 맨홀뚜껑에 복어 마크를 추가, '복어의 도시'로 홍보)
(4) 숙성기간 등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시미 용으로 적당한 두께, 숙성 기간에 따른 이노신산 변화)
※ 지역 조건 및 조직 조건이 브랜딩에 적합한가
지역이나 조직에 경쟁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가

2-6 수산물 브랜딩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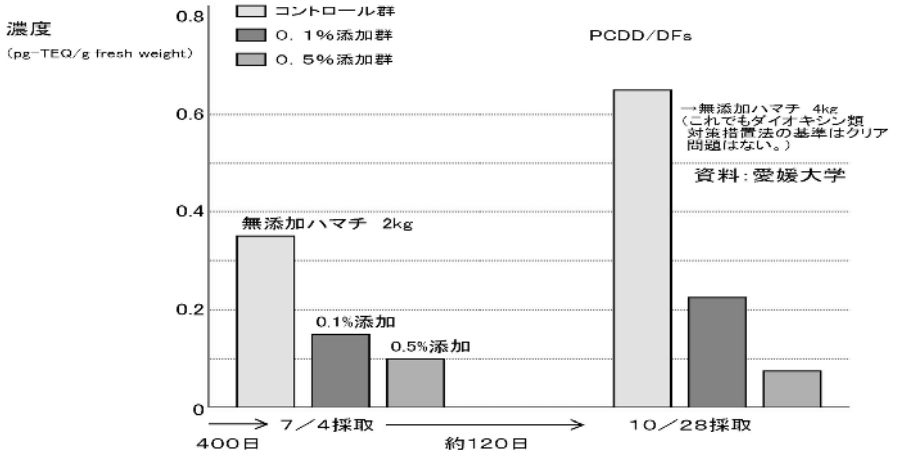
(1) 브랜드 기준이 느슨함
'브랜드' 위원회가 공식 검토를 위한 장소가 되었음. 해당 조직이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형의 "심의체" 역할을 하도록 변화시켜 품질 향상에 관한 조언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2) 분명한 브랜딩 목표 및 전략
현재 대부분의 브랜딩 노력은 행정기관이나 어업업계가 주도하는 브랜딩임. 브랜딩 노력이 소비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시각을 찾아보기 힘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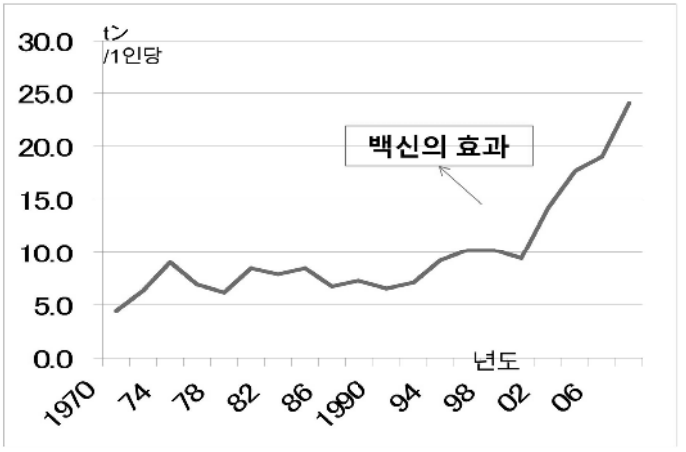
(3) 브랜딩을 네이밍 (naming)의 동의어로만 생각

(4) 브랜드화는 "사회에 대한 약속"
판매를 생각하기 전에 "브랜딩을 통해 사회에 무슨 약속을 할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3-1 미래 브랜드 예상 사례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양식 어류 (다이옥신 제거)



3-2 상처치료용 항생제 (백신)



※ 백신은 항생제 사용을 줄임. 생산비가 ¥850에서 ¥650으로 감소.

3-3 완전 양식된 고등어 (규슈 대학, 가라쓰 시 공동개발)

(1) "새로운 어족자원 창조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2012-2018)
5-6월에 알을 채집하여 이듬해 9월에 400g 크기로 운송

(2) 완전 양식된 고등어의 특징
자연산 고등어의 지방 함량이 평균 10%인데 반해, 양식 고등어는 혼합사료로 꾸준히 성장해서 지방 함량이 25%이며 아니사키스 (기생충)도 적음.

(3) 양식 고등어의 도매가는 1,000엔 가량이며; 양식 고등어의 브랜드명은 "가라츠 Q 사바 (Karatsu Q Saba)"임. 도시 이름을 넣어 홍보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3-4 전기 그물을 이용한 양식 물고기 진정 (40A 전기를 7초 동안 흘림)

효과 ①
작업효율이 마리 당 1.82~2.2초에서 1.06~1.39초로 40%로 향상.

효과 ②
물고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몽둥이로 때릴 필요가 없어져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음. (약 30%의 인력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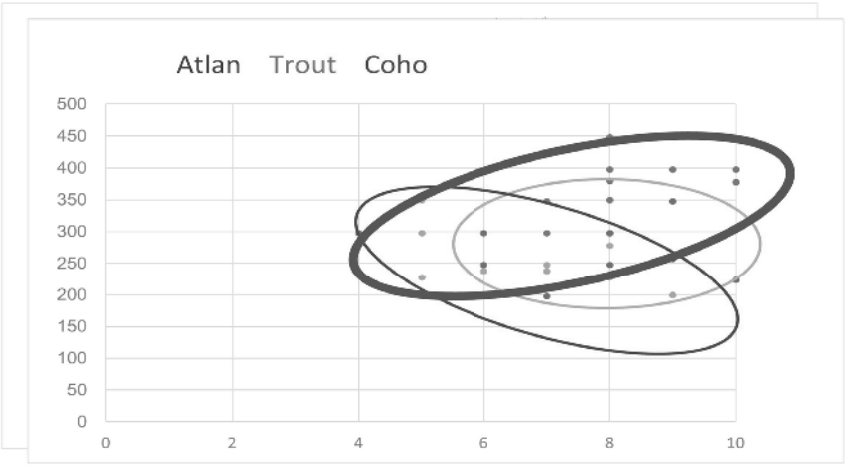
* 육지로 끌어올린 양식 물고기의 처리 작업이 극적으로 개선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선 품질도 향상되었음.

3-5 노르웨이 연어의 평가 (구매자들의 연어 유형별 품질 평가)

슈퍼마켓 체인 이름		A	B	C	D	E	F	G	H	I	J	K	평균
ATLAN	맛	9	10	8	8	10	10	10	10	10	5	3	8.5
	색깔	5	8	6	8	8	9	8	10	10	6	2	7.3
	지방			10	9	8	10	7	10	10	8	6	8.8
	총점	7	10	8	8	8	8	10	7	9	6	4	7.8
TROUT	맛	7		6	8	8	7	5	9	8	10	6	7.4
	색깔	8		8	8	10	9	10	9	10	10	6	8.8
	지방			7	7	8	9	9	6	9	6	5	6.6
	총점	9	×	6	8	8	8	7	10	9	8	6	7.9
COHO	맛		8	7	9	6	9	6	4		8	5	6.9
	색깔		8	6	9	6	9	8	7		10	5	7.6
	지방			7	7	6	7	9	7		6	4	6.7
	총점		5	7	8	6	9	8	5		7	5	6.9

※ Atlan: 노르웨이; Trout: 칠레; Coho: 미야기 (일본)

3-6 대형 소매업체의 노르웨이 연어 구입가격



일본, 한국, 중국 어업정책에 관한 결론

(1) 노르웨이에서는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을 이용한 어족자원 관리 투자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함.

(2) 노르웨이 양식업의 성공요인
① 혁신 추구
② 규모 확대 노력 (성장 원칙)
③ 우수한 마케팅 조직
④ 정부의 강력한 지원

(3) 노르웨이 양식업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일본, 한국, 중국은 독자적인 스타일의 양식업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

발제문

Improving Commercialization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and Brand Value

Eiji Hamada
Shimonoseki City University



Aim of the report

Various resource management measures will be taken for sustainable production in response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fishery resources, but in order to alleviate fishing pressures on fishery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rceived value through branding. It is also necessary to accelerate the speed of cultivation.
Below,
①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fisheries branding in Japan
② Future aquatic product brands,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ultured fish
We provided a topic on common issues between

1-1 Brand definition

(1) Premium price has occurred
(2) Existence of repeat customers
(3) Distinction between standard products, specialty items
and brand items



1-2 Brand Element (Function)

Brand → Burnt (burn)→The brand's beginning that it was stamped on grazing cattle and whiskey

(1) Identification · differentiation function

Enterprises: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by differentiating products

Consumer: Accurately select and purchase the products required in various products

(2) Quality assurance function

Company: promise to clarify the source of products, the location of responsibility and to continuously provide products with a certain level of quality guaranteed for consumers

Consumer: Provide consumers with security and confidence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bonds

(3) Self-expression function

Consumer: Recognize symbolic values such as status and "fashionable" and express themselves to others by using their meanings and images

1-3 Speaking brand (goods) in a word

(1) Brands are good in which consumers in low positions are able to buy from producers; standard items are good in which producers in low positions are able to sell to consumers.

(2) The standard product does not become a brand item. In the severe competition between "commitment goods," what is chosen by consumers, what is sticking to you is a brand.

(3) Brand is a socially recognized "commitment"
And it was backed by "wisdom · knowledge“

1 - 4 Contemporary society that creates brands

(Transition from usage value consumption to sign value consumption)

(1) Reason for choosing the clothes I am wearing now
① Usage value consumption: Features of the clothes themselves
such as winter, waterproofness, lightness consumption of functions
② Symbolic value consumption: For self expression, for example, conspicuous red consumption of self expressions when choosing clothes
(2) Contemporary consumption
① When choosing products, consumption value consumption is commonplace, in addition to considering symbolic value consumption
② In modern society, where products are overflowing in the market, you are aware of the differences with others'

2-1 History of fisheries branding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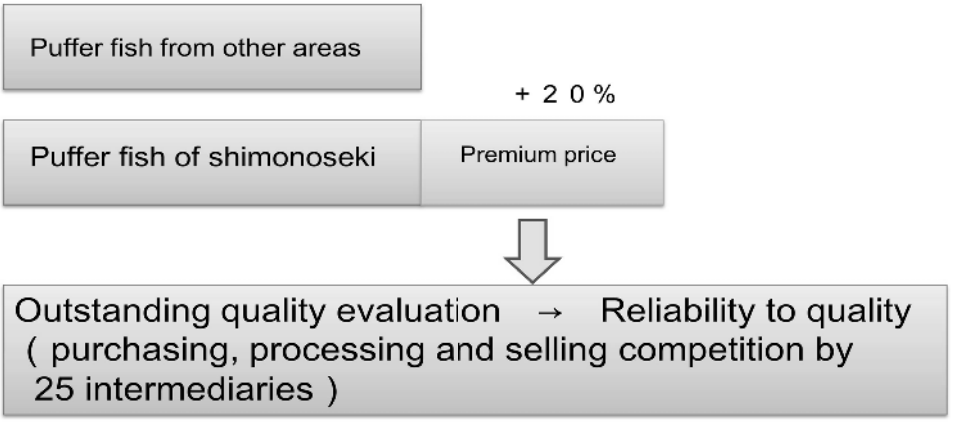
	1960 ~ 1970	1970 ~ 1990	1990 ~ 2017
Industrial goods	「Market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Product differentiation from new product sales rush, such as electric appliances, product appeal utilizing CM.	「Branding first stage」 An era where consumers do not perceive it simply by producing excellent products.	「Branding second stage」 Post industrial society 30% tangible assets land, buildings, facilities as corporate value.70% Intangible assets. In addition to products and regions them selves entering a branding competition .
Marine products	fresh fish	high freshness , progress of living fish	Aproach to branding
	Fish as everyday items for protein intake	The basic function of protein intake is reduced and pleasure consumption is born.	The birth of branded fishery products. The arrival of a -society where consumers decide brand value as the main product characteristic.
		「One village one product」 Movement	Approach to regional branding→ The birth of regional brands makes the regional economy even more difficult It is a factor that is scream.

2-2 Brand types of marine products

① Natural resources: Oma tuna, Saganoseki's mackerel
→ Brand value is based on rarity
② Aquaculture: Ariake Saga seaweed nori, Hiroshima Oyster, Kinki University Tuna
→ Brand value is technical and marketing based
③ Distribution technology: Shimonoseki puffer fish
→ Brand value is reliable for distributor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cooking skills

※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natural fishery products(No clear difference is felt for consumers). From this point on, brand-name raising of aquaculture fish becomes active.

2-3 Quality of Shimonoseki puffer fish by Tsukiji intermediary Evaluation



2-4 Shimonoseki puffer brand value (20% premium price)

(Evaluation of Tsukiji Market Brokerage)
①Quality assurance (good quality, saves you time choosing items)
②Differentiation (product is clean, profile is high etc.)

(Evaluation by consumers)
①quality assurance
②Self-expression (by eating high-priced Shimonoseki puffer) It will become image up)
③Social satisfaction (feeling of superiority by eating expensive Shimonoseki puffer)

2-5 Key points of successful Shimonoseki puffer branding

(1) PR activities · Publicity
(First Auction on January 4th, offering to the Imperial family)
(2) Mechanism of competition among traders
(Friendly collaboration between intermediaries → quality improvement and wide selection)
(3) Administrative support
(Appeal that the administration adds a puffer fish stamp to the city's manhole and is a city of puffer fish)
(4) Inquiry into thorough quality of maturation period
(How many millimeters thick is the sashimi , perceive inosinic acid proper in aging time?)
※ Whether reg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are formed to tackle branding.
Whether the competition mechanism is incorporated in the region or organization.

2-6 Challenges to efforts for marine products br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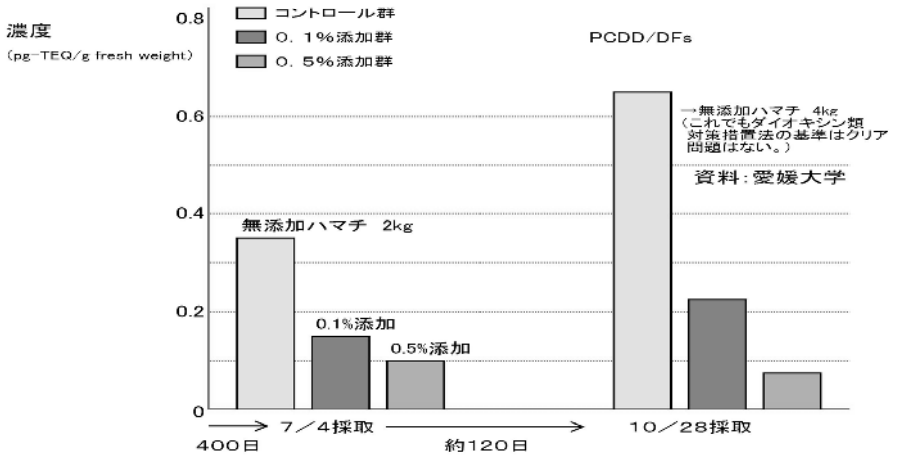
(1) The brand standard is loose
The 'brand' committee has become a place for formal review. We felt it was necessary to modify the organization to function as a consumer participation type "Commitment Committee" organization to advise and support quality improvement.

(2) Aim and strategy of clear branding
Most current branding efforts are " Administrative and fishery industry-led branding . The point of view that branding efforts work with consumers is mi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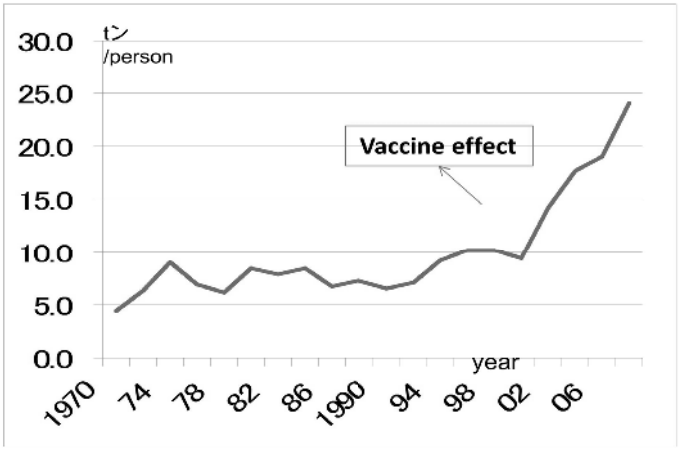
(3) Branding that only thinks about synonyms with naming.

(4) Brandization is "a promise to society"
Before thinking about selling, an examination of "What promises to society by branding“ is necessary.

3-1 Expected cases as future brands
Ultimate safety aquaculture fish (demineralized dioxin)



3-2 Debridement antibiotics (vaccination)



※Vaccines reduce antibiotic use. Production cost reduced from ¥ 850 to ¥ 650.

3-3 Completely cultured mackerel (developed by Kyushu University and Karatsu City)

(1)"New fisheries resources creation research project" (2012 - 2018)
To take eggs in May or June, and shipping eggs 400 g in size in september the following year

(2)Features of fully cultured mackerel
Lipids of natural mackerel are 10% on fat content average, whereas cultivated fish are consistently grown with mixed feed, fat content are 25%, so little Anisakis (parasites) are attached.

(3)One cultured mackerel sells at a wholesale price of around 1,000 yen; the brand name of fully cultured mackerel is called "Karatsu Q Saba" , and due to the public recruitment of the city, the name recognition is rising.

3-4 Calming aquaculture fish by electric fishing net (40 A for 7 seconds energization)

Effect ①

The working efficiency was 1.06 to 1.39 seconds / tail with calming, 1.82 to 2.2 seconds / tail without calming, and work efficiency improved by about 40%.

Effect ②

There was no need for hitting the head with clubs for calming before live, which made it possible to save labor costs for the ministry. (Realizing about a 30% cut in perso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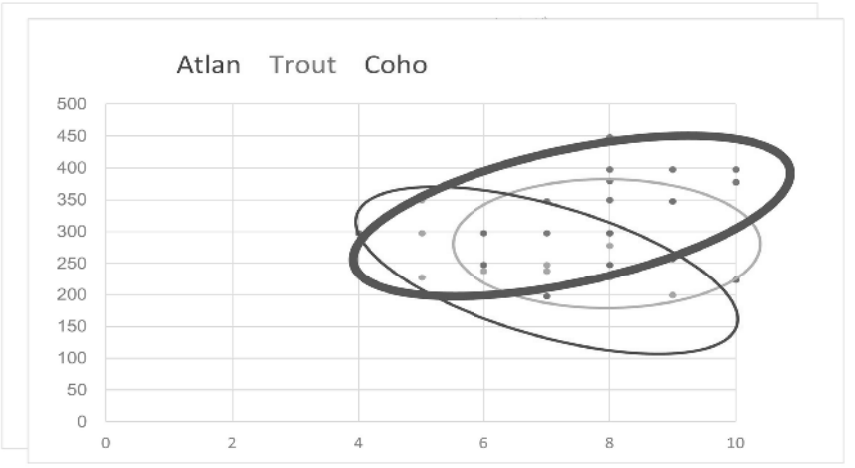
* Aquaculture fish disposal treatment work after landing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labor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of aquaculture fish has been achieved.

3-5 Evaluation of Norwegian salmon (Quality evaluation by salmon type by buyer)

Super chain name		A	B	C	D	E	F	G	H	I	J	K	Ave.
ATLAN	taste	9	10	8	8	10	10	10	10	10	5	3	8.5
	color	5	8	6	8	8	9	8	10	10	6	2	7.3
	fat			10	9	8	10	7	10	10	8	6	8.8
	overall point	7	10	8	8	8	8	10	7	9	6	4	7.8
TROUT	taste	7		6	8	8	7	5	9	8	10	6	7.4
	color	8		8	8	10	9	10	9	10	10	6	8.8
	fat			7	7	8	9	9	6	9	6	5	6.6
	overall point	9	×	6	8	8	8	7	10	9	8	6	7.9
COHO	taste		8	7	9	6	9	6	4		8	5	6.9
	color		8	6	9	6	9	8	7		10	5	7.6
	fat			7	7	6	7	9	7		6	4	6.7
	Overall point		5	7	8	6	9	8	5		7	5	6.9

※Atlan is Norway, Trout is Chile, Coho is Miyagi(japan)

3-6 Volume retailer Buyer's Norwegian salmon price range



Conclusion of Fishery policy issues in Japan, Korea and China

(1) In Norway, in response to a decrease in catch size, strengthening resource management investment in concentration in aquaculture and establishes global brands as a result.

(2) Success Factors of Norway Aquaculture
① Pursuit of innovation
② Aiming to scale expansion (growth principle)
③ Fulfilling marketing organization
④ Strong support of the state

(3) With reference to successful cases of Norwegian aquaculture, Japan, Korea, and China, should learn how to build an original style of culturing.

제3회 환황해포럼

Session Symbiosis 2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사회자 _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발표자 _ 명형남(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왕리(조교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미노우라 히로아키(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토론자 _ 장임석(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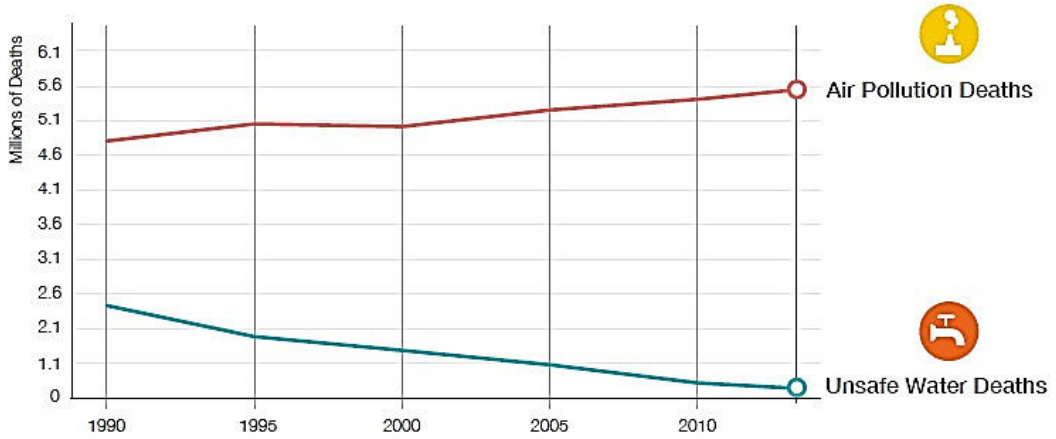
발제문

충청남도의 미세먼지와 건강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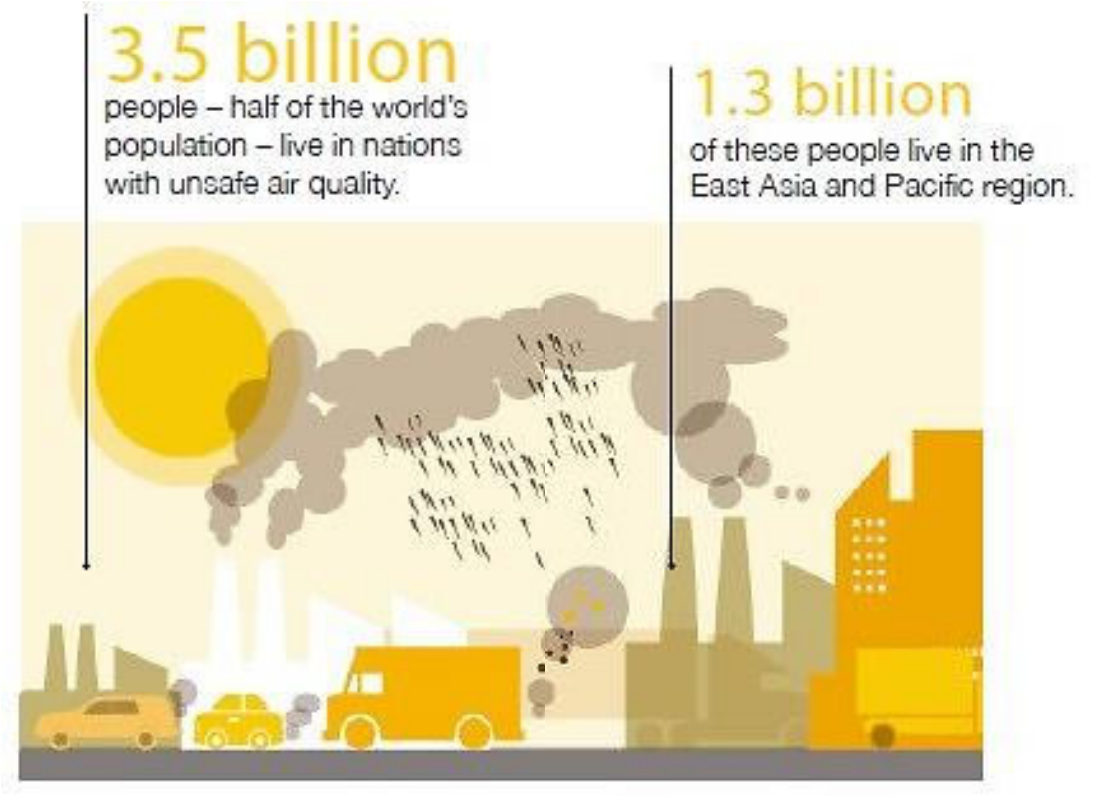
1. 미세먼지와 건강 관련 주요 이슈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20년 동안 안전하지 않은 식수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1).



〈그림 1〉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사망자수 추이
자료 : EPI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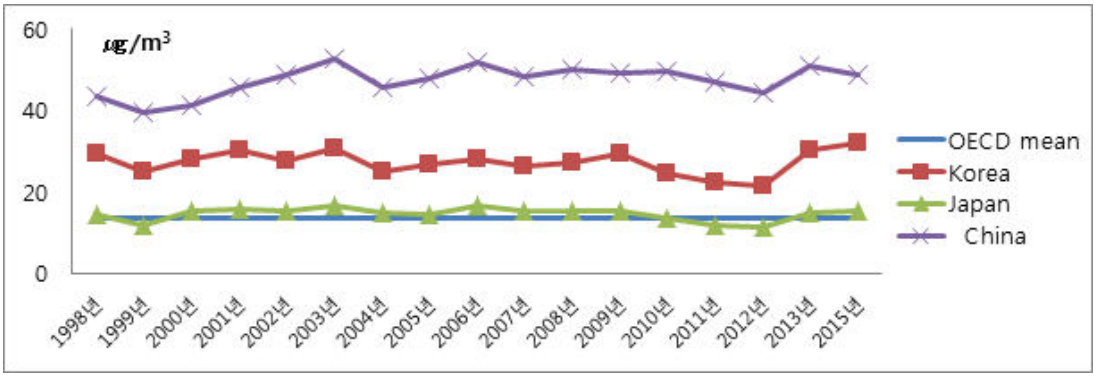
또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은 오염된 공기질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13억명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2).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안전하기 않은 공기질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자료 : EPI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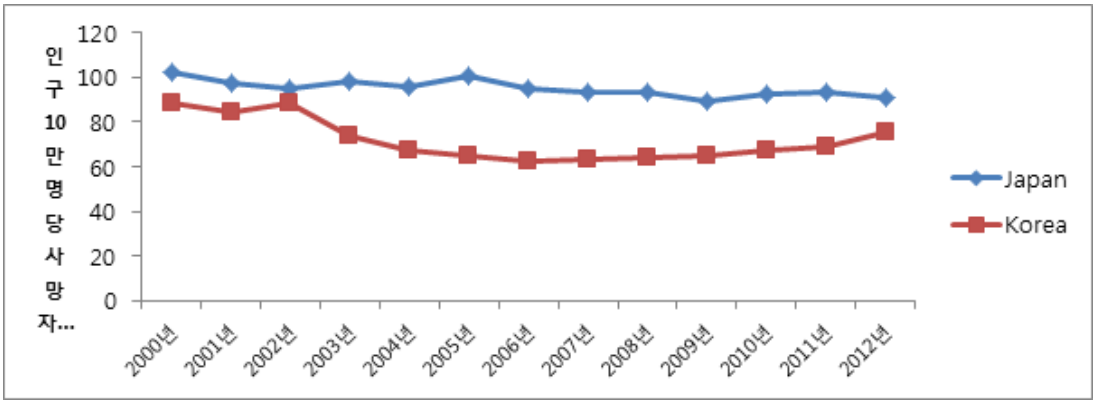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ECD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별로 미세먼지(PM2.5) 연평균 노출농도를 추정 조사한 결과, 한국은 1998년에 29.3 ㎍/m3 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에 32.0 ㎍/m3 이었다. 중국은 2015년에 48.8 ㎍/m3 이였고 일본은 15.5 ㎍/m3 이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노출농도인 13.7 0 ㎍/m3 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3배, 중국은 3.6배, 일본은 1.1배였다(그림 3).



〈그림 3〉 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PM2.5) 노출농도 변화
자료 : OECD Statistics data분석(2014년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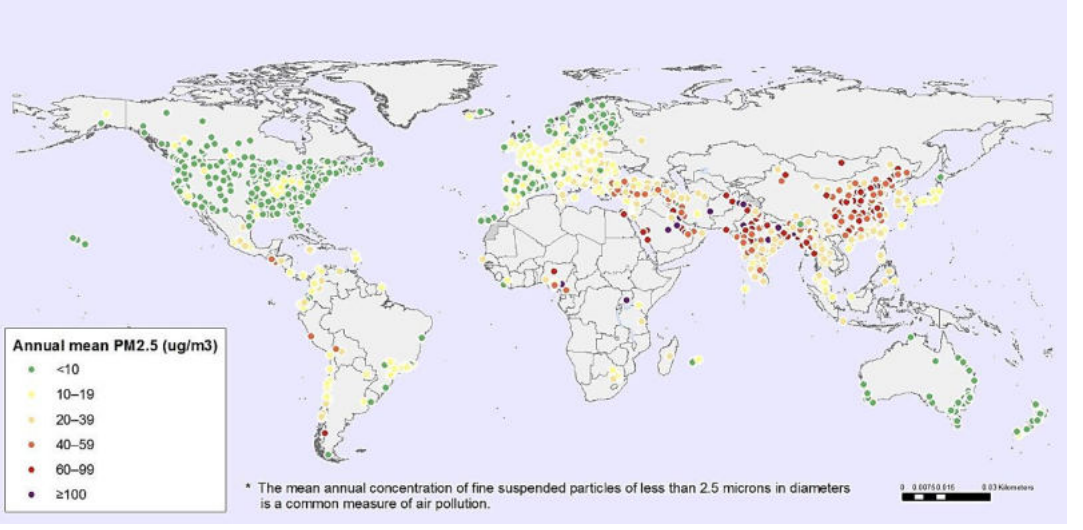
OECD의 건강통계 보고서(Health Statistics 2017)에 의하면 미세먼지(PM2.5)와 관련 있는 호흡기계 질환(Diseases of the respiratory)의 경우 일본은 2000년에 인구 10만명당 102.5명에서 2012년 88.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2000년에 인구 10만명당 88.1명에서 2012년에 70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4〉 한국, 일본의 호흡기질환 사망자수 변화
자료 : OECD Health Status(Causes of mortality) data분석(중국 데이터 없음), 표준화사망비

2) 세계보건기구(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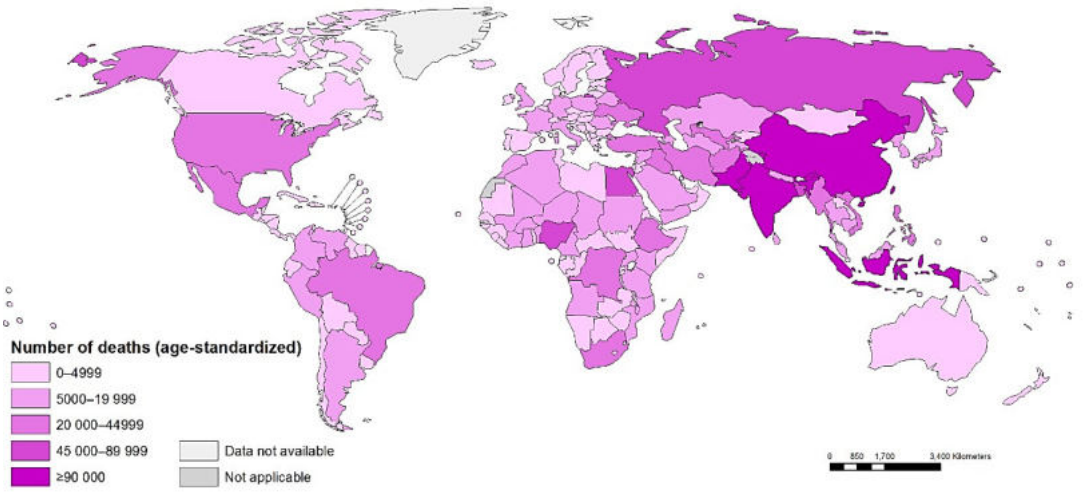
WHO는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해 호흡기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전세계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6 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27.5 0 ㎍/m3 로 3등급에 해당되었고, 일본은 2등급, 중국은 6등급에 해당되었다(그림 5).



〈그림 5〉 전세계 도시의 미세먼지(PM2.5)농도

자료 : WHO, 2016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연령표준화)를 2012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 15,3363명, 일본 11,089명, 중국 949,5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age–standardized)
자료 : WHO, 2016

3)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EPI)는 미국 예일대 환경법 · 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 지구 과학 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포럼(WEF)에서2년 마다 발표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성과지수 평가 지표는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과 생태계지속성(Ecosystem Vitality)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미세먼지 노출도와 질소산화물 노출도 그리고 실내 공기질노출도를 포함한 대기질 지수를 살펴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45.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77.6점으로 104위, 중국은 23.8점으로 17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의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shut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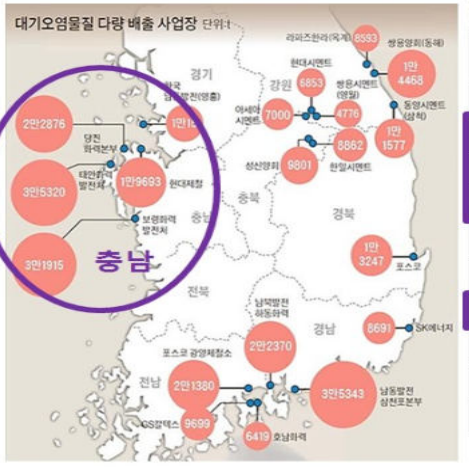
한국은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6월 한달)하였다. 대상시설은 모두 8호기이며 그 가운데 4호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가 · 지자체 대기 측정망11개소, 발전소 측정망 9개소, 측정차량 5개소, 간이측정기 15개소로 총 40개의 지점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충남지역 실측결과, 2015년 6월 미세먼지(PM2.5) 평균인 26 ㎍/m3 비해 2016년 6월에는 22 ㎍/m3 로 15.4% 감소하였고, 모델링 결과로는 충남의 최대영향지점에서 월평균 3.3 %가 낮아진 것으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발표하였다(2017.07.24).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PM2.5)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충남의 대기오염(미세먼지) 관련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분포

충남은 석탄수입의 용이성과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에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서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에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5위를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차지하였다. 충남의 경우에는 전국 상위 7위 안에 태안화력 · 보령화력 ·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7).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015년 배출량(kg/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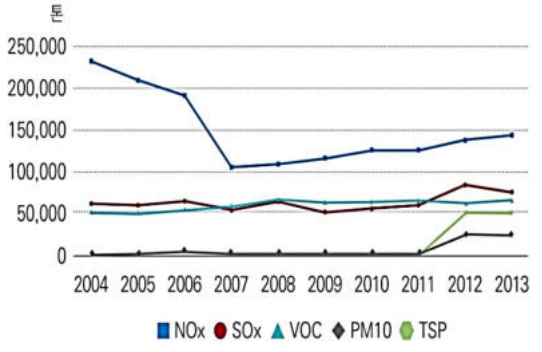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CO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경남	35,343,155	670,727	13,649,228	21,023,200		
서부발전 태안화력	충남	35,320,222	906,723	13,085,660	21,327,839		
중부발전 보령화력	충남	31,915,626	580,791	13,251,895	18,082,940		
동서발전 당진화력	충남	22,876,591	544,277	7,016,148	15,316,166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22,370,818	277,920	9,160,527	12,932,37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1,380,872	216,076	10,477,952	10,683,164	3,485	195
현대제철	충남	19,683,022	818,237	8,956,359	9,917,571	855	
풍용영해(동해)	강원	14,468,982	425,261		14,037,735	5,986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3,247,790	222,580	2,575,875	10,446,822	1,434	1,079
동양시멘트(삼척)	강원	11,577,874	150,586		11,421,559	5,729	

〈그림 7〉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분포

자료 : 중앙일보, 2016과 환경부, 2016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그림 8〉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남은 에너지산업 연소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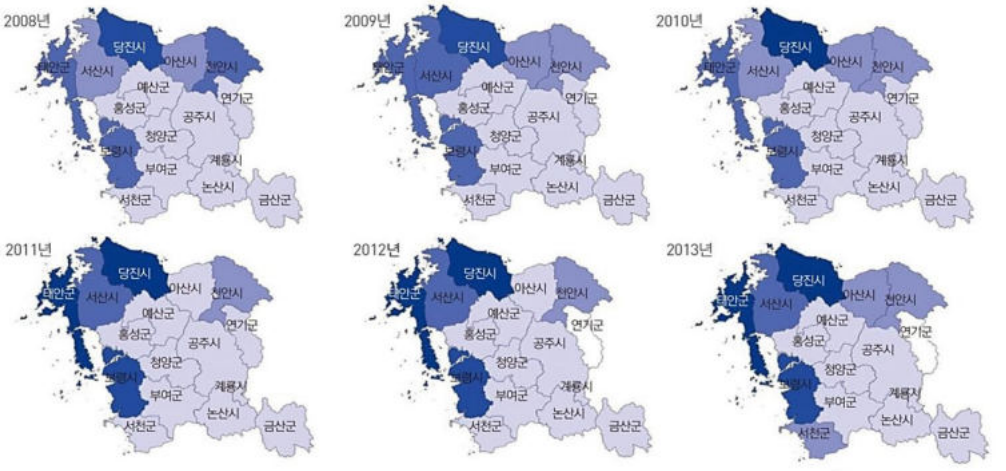


대기오염물질	비율(%)
NOx	43.0
SOx	43.0
TSP	46.0
PM10	47.0
PM2.5	46.0
VOC	21.0
NH3	2.0
CO	22.0

〈그림 8〉 충남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의 충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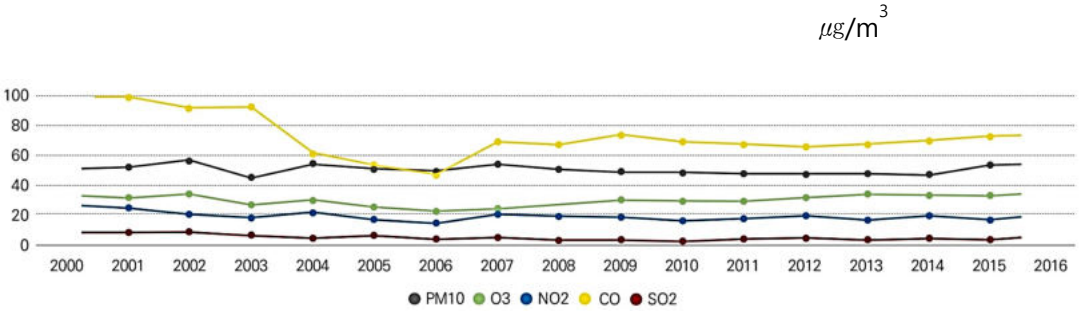
충남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도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

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9).



〈그림 9〉 충남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연도별 지리적 분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은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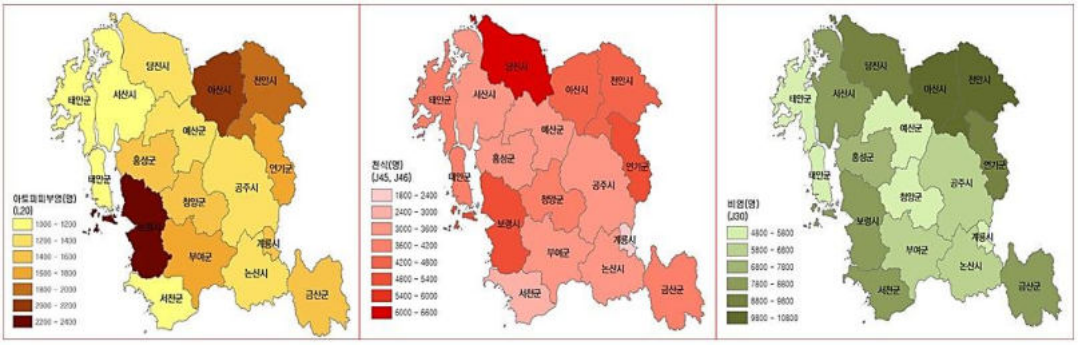


<그림 10> 충남의 기준성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변화

3. 충남의 대기오염(미세먼지)과 관련 질환조사

1) 대기오염과 관련 있는 환경성질환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의 충남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수가 2,243명으로 보령시에서 가장 많았다. 천식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수가 6,259명인 당진시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증가율도 가장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알레르기비염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수가 10,783명으로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그림 11〉 충남 시군별 환경성질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유병자수(2004~20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표 1〉은 충남의 환경성질환자 증가에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GEE)을 시행한 분석결과이다.

아토피는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천식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PM10)가 유병자수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즈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천식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2.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 총부유분진

과 미세먼지(PM10)였는데, 총부유분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유병자수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즈비를 살펴보면 총부유분진이 1,000톤 증가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약 0.5배 감소하고, 미세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3.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화 추정방정식(GEE)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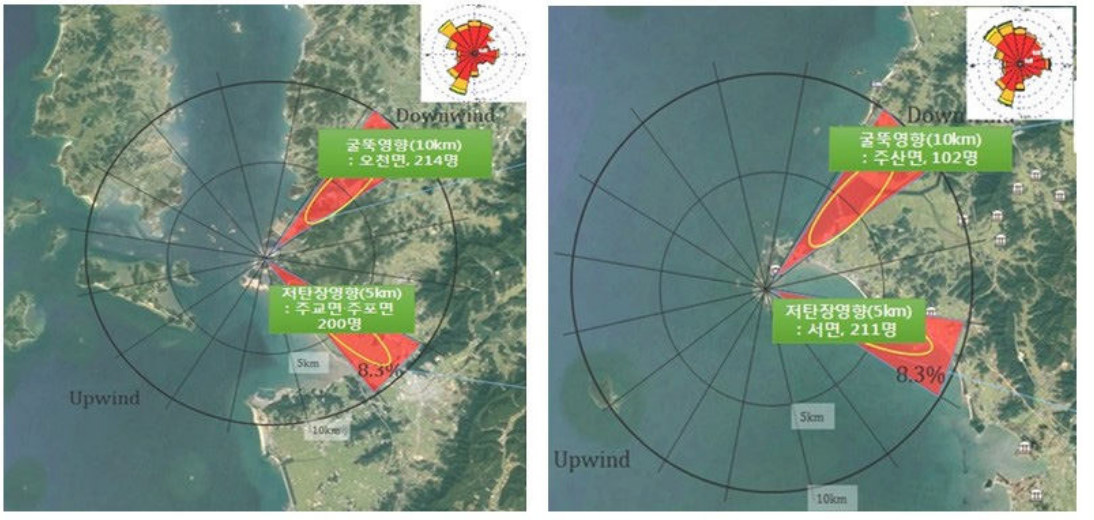
변수명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J30)		
	B	Odds ratio	(95% CI range)	B	Odds ratio	(95% CI range)	B	Odds ratio	(95% CI range)
질소산화물	−0.004	0.996	(0.989, 1.003)	0.003	1.003	(0.998, 1.007)	−0.005	0.995	(0.987, 1.002)
황산화물	0.005	1.005	(0.975, 1.036)	0.001	1.001	(0.990, 1.012)	0.001	1.001	(0.982, 1.021)
총 부유분진	−0.389	0.678	(0.343, 1.340)	−0.615	0.541	(0.290, 1.006)	−0.764	0.466	(0.313, 0.692)
미세먼지	0.667	1.949	(0.615, 6.183)	1.062	2.891	(1.007, 8.304)	1.320	3.745	(1.889, 7.425)
휘발성유기화합물	−0.006	0.994	(0.974, 1.015)	0.001	1.001	(0.990, 1.012)	0.014	1.014	(0.999, 1.030)

2)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 전후 건강실태조사

충남연구원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6월 한달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에 따른 주민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대상시설은 보령화력1호기 · 2호기, 서천화력1호기 · 2호기였다. 이 가운데 서천화력1호기 · 2호기는 6월부터 영구 가동 중단되었다.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역을 〈그림 12〉과 같이 선정하였다. 보령화력1호기 · 2호기는 굴뚝 영향권역으로 오천면(반경 10km)을, 저탄장의 영향권역으로 주교면과 주포면(반경 5 km)을 선정하였다. 서천화력1호기 · 2호기는 굴뚝영향권역으로 주산면(반경 10 km)을, 저탄장의 영향권역으로 서면(반경 5 km)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표본자수는 인구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 할당 표집으로 해당면 인구의 약 10%를 추출하였고 표본크기는 727명이다. 대상자는 해당지역의 20세 이상의 남녀이고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보령화력1호기 · 2호기의 경우 일시 가동중단이 막 끝난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진행하였고, 영구 가동중단된 서천화력1호기 · 2호기의 경우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12〉 설문조사 대상지역과 표본자수(왼쪽 : 보령화력, 오른쪽 : 서천화력)

지역별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신체증상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령화력 굴뚝영향권역(A-1)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기침(1.079), 가래(1.056), 눈따가움(1.0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화력 굴뚝영향권역(B-1)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기침(1.559), 재채기(1.412), 두통(1.402), 가래(1.275) 등이었다. 특히 서천화력 굴뚝영향권역(B-1)의 주민들이 다른 영향권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로 많이 호소한 증상은 기침, 가래, 눈목 따가움, 두통, 피부가려움, 재채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01$).

〈표 2〉 석탄화력발전 영향권역별 평소 신체 증상

mean±S.D.

항목	거주지역				F-value(p)
	A-1	A-2	B-1	B-2	
	(N=214)	(N=200)	(N=102)	(N=211)	
기침**	1.079±1.394	0.660±1.049	1.559±1.140	0.649±1.038	7.201(0.000)
가래**	1.056±1.373	0.555±0.901	1.275±1.082	0.673±1.052	13.554(0.000)
가슴 답답함*	0.836±1.255	0.450±0.895	1.412±1.189	0.469±0.896	23.736(0.025)
호흡곤란	0.654±1.164	0.300±0.743	1.127±1.078	0.332±0.758	22.180(0.292)
눈 따가움**	1.028±1.307	0.650±1.083	1.108±1.043	0.597±0.973	9.019(0.000)
코 따가움*	0.832±1.267	0.490±1.017	1.157±1.088	0.502±0.963	11.729(0.030)
목 따가움**	0.911±1.327	0.650±1.138	1.235±1.136	0.578±0.994	9.125(0.000)
두통**	0.921±1.353	0.465±0.940	1.402±1.007	0.621±1.108	17.930(0.000)
피부가려움**	1.005±1.344	0.520±0.956	1.137±0.995	0.512±0.968	14.430(0.000)
재채기**	0.916±1.268	0.625±1.058	1.412±1.102	0.602±0.997	14.865(0.000)

* .p〈0.05 ** .p〈0.001

(scale ; 0= 증상없음, 1=증상이 가끔 있으나 불편하지 않음, 2= 증상이 가끔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낌, 3=증상이 자주 있으나 불편하지 않음, 4= 증상이 자주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낌)

A-1 : 보령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오천면

A-2 : 보령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주교면·주포면

B-1 : 서천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주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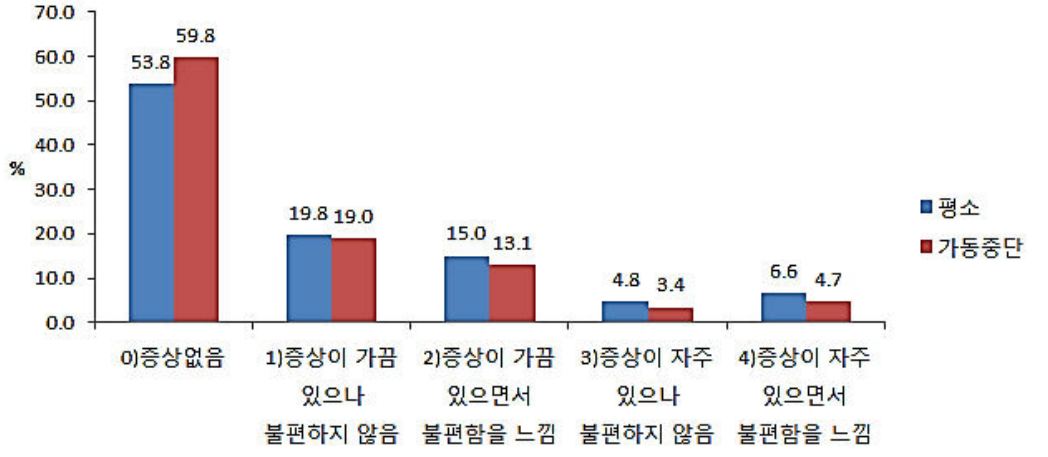
B-2 : 서천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서면

가동중단 기간 동안 신체 증상의 개선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신체증상에서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평소 기침 증상이 없다는 응답은 53.8 %로 나타났는데, 가동중단 기간 동안에는 59.8 %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 비해 증상이 6 % 정도 개선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가래의 경우는 평소 대비 6.2%, 가슴 답답함은 평소 대비 3.8%, 호흡곤란은 평소 대비 4.0%, 눈따가움은 평소 대비

6.0%, 코 따가움은 평소 대비 4.2%, 목 따가움은 평소 대비 6.7%, 두통은 평소 대비 4.3%, 피부 가려움은 평소 대비 5.3%, 재채기는 평소 대비 6.9%로 증상이 개선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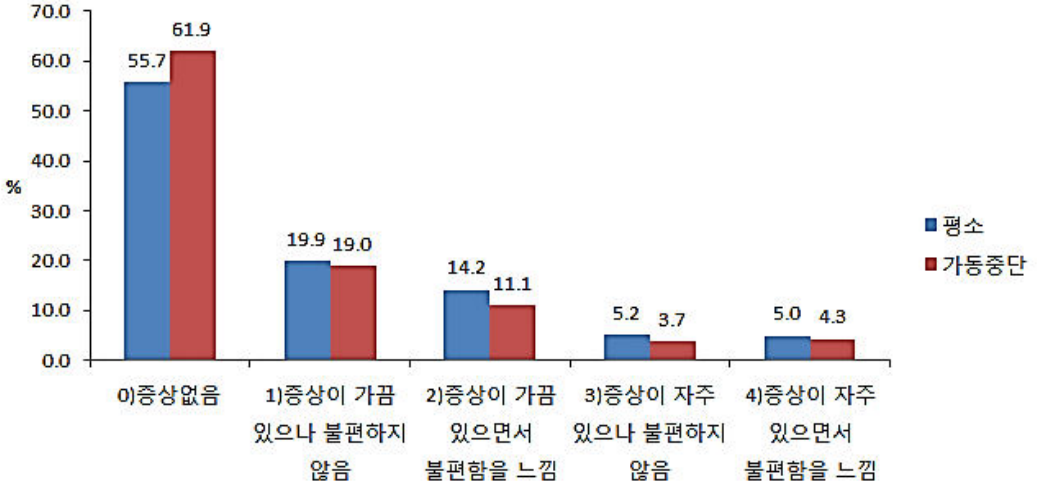
주요 신체증상 개선에 대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단위 : %, Base : 전체, n=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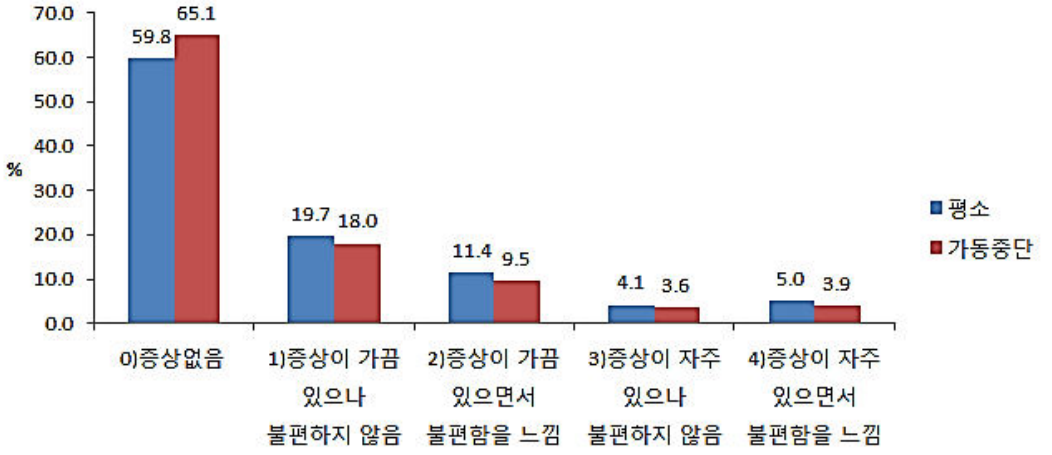
〈그림 13〉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기침)

(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4〉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가래)

(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5〉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피부가려움)

〈표 3〉은 평소 의사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질환은 모든 영향권역에서 각각 14.5%, 15.0%, 30.4%,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기관지염이었다. 특히 서천화력 굴뚝의 영향권역(B-1) 주민들의 경우는 기관지염이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표 3〉 석탄화력발전 영향권역별 평소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환

mean±S.D.

항목		거주지역				
		A-1	A-2	B-1	B-2	
		명(%)	명(%)	명(%)	명(%)	
천식*	No	196(91.5)	193(96.5)	88(86.3)	198(93.8)	p=0.009
	Yes	18(8.5)	7(3.5)	14(13.7)	13(6.2)	
기관지염*	No	183(85.5)	170(85.0)	71(69.6)	172(81.5)	p=0.028
	Yes	31(14.5)	30(15.0)	31(30.4)	39(18.5)	
심장질환*	No	206(96.3)	188(94.0)	90(88.2)	202(95.7)	p=0.024
	Yes	8(3.7)	12(6.0)	12(11.8)	9(4.3)	
결막염	No	196(91.5)	182(91.0)	94(92.2)	185(87.7)	p=0.460
	Yes	18(8.5)	18(9.0)	8(7.8)	26(12.3)	
정신(우울증, 스트레스)	No	198(92.5)	189(94.5)	95(93.1)	200(94.8)	p=0.753
	Yes	16(7.5)	11(5.5)	7(6.9)	11(5.2)	

* .p〈0.05 ** .p〈0.001

A-1 : 보령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오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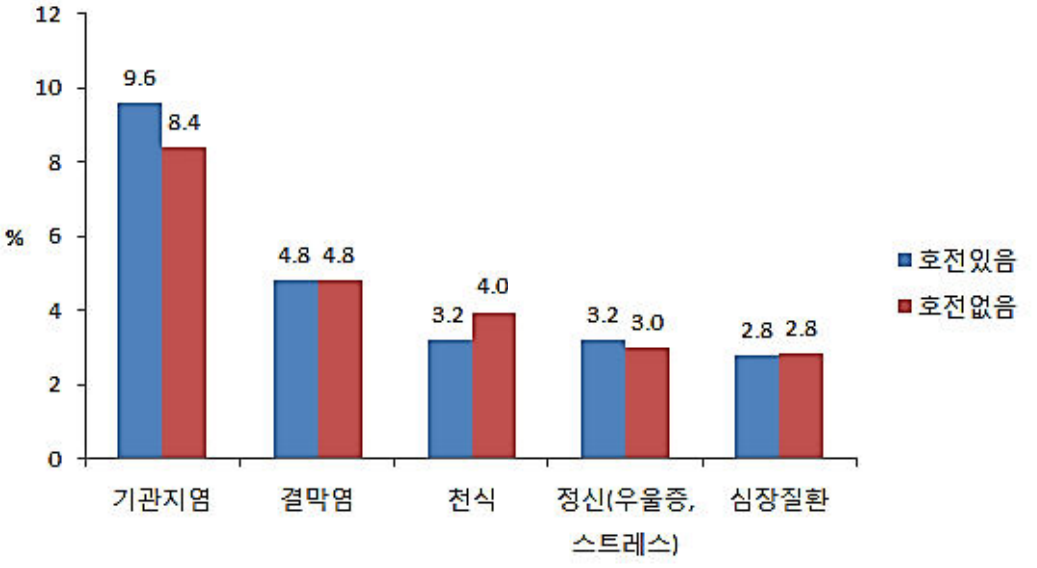
A-2 : 보령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주교면·주포면

B-1 : 서천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주산면

B-2 : 서천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서면

가동중단 기간 동안 질환의 호전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영향권역의 주민들에게서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기관지염의 호전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화력 굴뚝의 영향권역(A-1) 주민들의 경우는 기관지염의 호전 경험이 80.0%에 이르러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6〉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질환의 호전 여부

4.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대기질 규제로 인해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전해오면서, 산업용지는 현재 65,556천 ㎡로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환경오염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건강피해문제를 제기해 왔다.

충남은 건강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1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가 이슈화 된 것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 · 시행하였고, 그 동안 서북부지역에 몰려있던 대기 측정망을 충남도내 전역으로 확대 · 설치하였다.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세먼지 배출원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배출시설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 · 제도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역제안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표로 1)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2) 석탄발전 · 산업부문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비중 확대, 3) 한중 동북아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의제화 및 다자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2017년 9월26일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단기대책(17년 9월~18년 상반기)과 중장기대책(18년 하반기~22년)으로 구분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발전 · 산업 · 수송 · 생활)분야와 국제협력(한 · 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분야, 민감계층보호(민감 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정책기반(과학적 관리 기반)분야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에서 추진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봄철(3월~6월) 일시 가동 중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을 포함한 '탈(탈) 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전에 진행되는 성격의 주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 정책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주민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석탄화력발전의 일시 가동중단에 따른 건강실태조사의 사전 연구(pilot survey)로서, 보령화력1호기 · 2호기와 서천화력1호기 · 2호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증상의 개선과 질환의 호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설문조사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5기)의 가동중단 기간을 전후하여 건강실태 변화와 관련된 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을 통한 연속적인 생체지표 측정, 건강보험자료의 수진율 변화에 대한 통계 등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아가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건강영향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중국에게도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명형남. 2016, 충남의 환경성질환자 실태조사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전략과제)

명형남. 2017,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 열린충남 SUMMER Vol.79.

명형남, 김재식, 정금희, 이병창. 2017,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충남 대기질과 주민건강실태·정책인식조사 연구, 충남연구원(전략과제).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INAL REPORT. 2016, Yale.

OECD(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OECD(http://www.oecd-ilibrary.org/environment/data/air-quality-and-health/exposure).

WHO(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phe/aap_mbd/atlas.html).

발제문

징진지(京津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왕리
조교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1. 징진지 지역 자원환경 특징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의 약칭]의 자연적인 특징은 서북 산지, 동남 평원, 동부 해역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징진지 지역은 동경 113°04′ 에서 119°53′ , 북위 36°01′ 에서 42°37′ 사이에 걸쳐 있다. 화베이(華北)평원에 위치해 있는 징진지 지역은 북쪽으로 네이멍구(內蒙古)고원, 서쪽으로 황투(黃土)고원, 동쪽으로 보하이(渤海)에 인접해 있다. 또한 서쪽에 타이항산(太行山) 산지, 북쪽에 옌산(燕山) 산지가 있고, 옌산 이북은 장베이(張北)고원, 그 나머지는 하이허(海河)평원으로, 총면적은 21.6만㎢이다. 인접한 성(省)은 북쪽으로 랴오닝(遼寧), 네이멍구 자치구, 서쪽으로 산시(山西), 남쪽으로 허난(河南), 산둥(山東), 동쪽으로 보하이와 인접해 있다. 징진지 지역은 중위도 지대에 위치해 있어 기후는 뚜렷한 온대, 반습윤 계절풍 기후를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의 자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1) 징진지의 지리적 위치

옌산, 타이항산, 네이멍구고원의 영향으로 징진지 지역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서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산지, 고원, 구릉, 평원, 분지, 호수, 해양 등 다양한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평원 면적은 74,946㎢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11.98%를 훨씬 상회한다. 이 중 베이징의 평원 면적 비중은 38.6%, 톈진은 95.5%, 허베이는 30.5%로 모두 30%를 웃돈다. 양호한 지질 조건은 정착에 유리하다. 산지는 80,577㎢로 전체의 37.3%를 차지한다. 산지는 주로 허베이에 집중돼 있으며 허베이의 산지 면적은 70,197㎢로, 87.1%가 집중돼 있다. 징진지 지역 내 고원은 모두 허베이에 집중돼 있고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이다. 구릉, 호수 면적은 각각 4.3%, 1.9%로 낮은 편이다. 해안선은 허베이와 톈진에 분포돼 있는데, 640km이며 허베이와 톈진의 해안선 길이 비율은 3:1(표1)이다.

표1) 징진지의 자연 지리적 요소 특징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징진지	
항목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총면적	16410	100.0	11917	100.0	187693	100.0	216020	100.0
산지	10072	61.4	308	2.6	70197	37.4	80577	37.3
고원	0	0.0	0	0.0	24344	13.0	24344	11.3
구릉	0	0.0	229	1.9	9066	4.8	9294	4.3
평원	6338	38.6	11381	95.5	57228	30.5	74946	34.7
분지	0	0.0	0	0.0	22711	12.1	22711	10.5
호수	0	0.0	0	0.0	4148	2.2	4148	1.9
해안선 길이(km)	0		153		487		640	

(데이터 출처: 관련 자료 종합 정리)

징진지 지역의 자연 지리적 요소는 크게 산간지역, 평원, 해역 3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산간지역에는 고원, 산지, 분지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도 상기 3대 지역으로 징진지 지역을 구분해 자원 개발 이용과 환경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징진지 지역의 주요 지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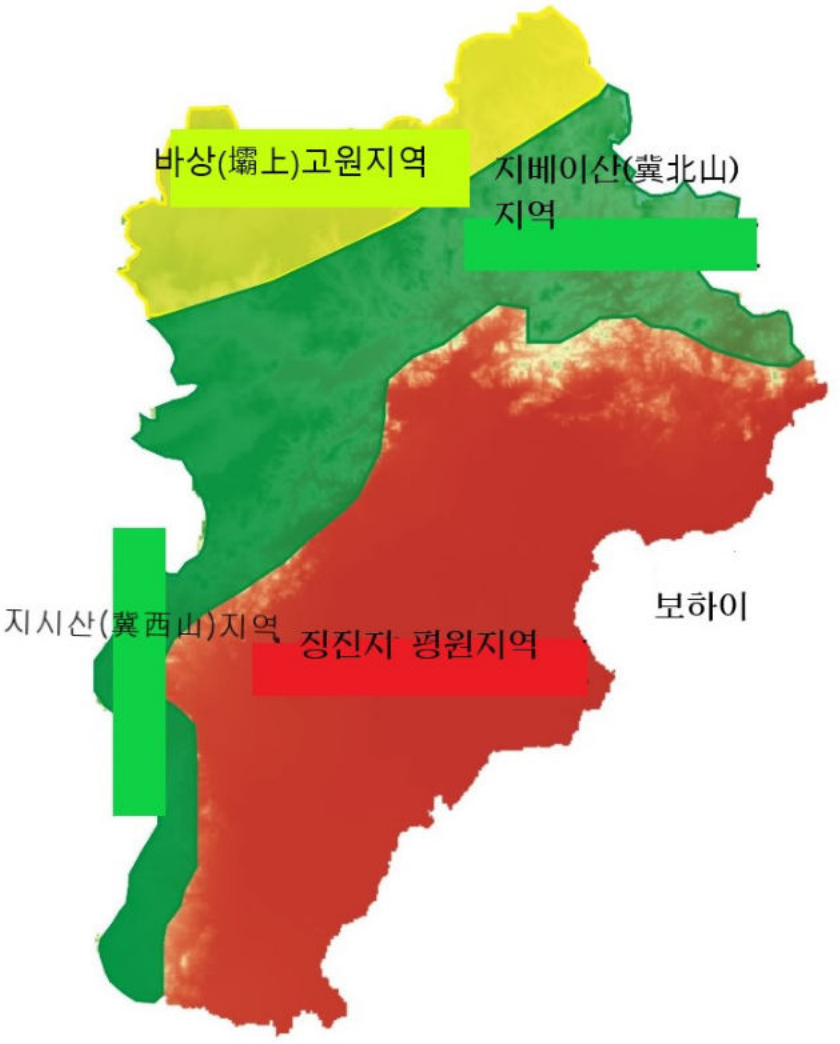


그림2) 징진지 지역 주요 지형 구획도

2.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상황

징진지 지역의 대기는 오랜 기간 매연, 황사 오염의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노력으로 기존의 대기오염의 악화가 다소 억제되었지만 도시건설이 가속화되고 물질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를 이루는 새로운 오염원이 징진지 대기오염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매연,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 발생으로

복합적인 대기오염이 새롭게 야기됐다. 이 중 PM2.5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PM2.5는 대기 중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인체 건강, 공기질, 가시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PM2.5는 공기에 바로 배출되는 1차 입자와 오염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입자로 구성된다. 이 중 1차 입자는 먼지 입자 및 식물과 광물 연소로 생성되는 카본블랙 입자를 포함하는데, 주로 자동차, 석탄, 바이오 연소에서 기인한다. 2차 입자는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을 포함하며, 대기 중의 1차 오염물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이 균일 혹은 비균일한 산화로 산성 에어로졸을 형성하는데, 이는 대기 중의 유일한 알칼리성 기체 NH3와 반응해 생성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용제 도료 등 휘발, 공업물질 등에서 발생한다.

2012년부터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징진지 지역 PM2.5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징진지 지역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174.09만t,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34.84만t, 연기(분진) 배출량은 146.42만t으로 전국의 각각 7.85%, 9.77%, 11.45%를 차지했다. 또한 오염 배출량도 상당히 막대하다. 지역 평균 오염 배출량으로 볼 때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8.06t/㎢로, 전국의 약 3.5배에 이르며, 이 중 톈진의 배출량은 19.38t/㎢로 전국 평균 수준의 8배를 상회한다. 질소산화물의 징진지 지역 배출량은 10.87t/㎢로, 전국의 약 4.5배이고 이 중 톈진은 30.12t/㎢로, 전국의 12배에 달한다. 징진지 지역의 연기(분진) 배출량은 6.78t/㎢로, 전국의 5배에 이른다. 대량의 오염 배출량과 높은 평균 밀도는 이 지역의 복합형 오염의 심화와 지역 대기 관리에 어려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 징진지 지역 폐기가스 중 주요 오염물 배출 상황

지표	지역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연기(분진)
총량		만t	만t	만t
	베이징	9.79	18.83	6.58
	톈진	23.09	35.89	7.59
	허베이	141.21	180.11	132.25
	징진지	174.09	234.84	146.42
	전국	2217.91	2404.27	1278.83

지표	지역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연기(분진)
지역평균		t/㎢	t/㎢	t/㎢
	베이징	5.96	11.48	4.01
	톈진	19.38	30.12	6.37
	허베이	7.52	9.60	7.05
	징진지	8.06	10.87	6.78
	전국	2.31	2.50	1.33

(자료출처: '중국통계연감2012')

최근 몇 년간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국환경보호부 '전국 도시 공기질 일간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2016년 겨울철 베이징 일평균 공기질 지수(AQI)는 145, 이 중 심각오염과 중증오염 일수 비중이 각각 10.23%과 18.18%에 이르렀다. 2017년 봄철 일평균 AQI는 99로, 이 중 우수, 양호한 일수 비중이 각각 25.56%와 40.00%였고 심각 및 중증 오염 일수는 1.11%와 5.56%로 하락했다. 최근 여름철 일평균 AQI는 128[35]로, 공기질의 중증, 경도(輕度), 양호 비중은 각각 28.57%, 28.57%, 38.57%로 나타났다(표3).

표3) 2016년 겨울 이후 베이징 공기질 통계

공기질		겨울	봄	여름
AQI		145	99	128
오염유형비중(%)	우수	9.09	25.56	0.00
	양호	37.50	40.00	38.57
	경도오염	18.18	18.89	28.57
	중도(中度)오염	6.82	8.89	28.57
	중증오염	18.18	5.56	2.86
	심각오염	10.23	1.11	1.43

35) 각각 입동, 입춘 입하를 경계로 한다. 겨울 기간은 2016년 11월 7일에서 2017년 2월 3일, 봄 기간은 2017년 2월 3일에서 5월 4일, 여름의 시작은 2017년 5월 5일이며, 본문의 여름 통계는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함.

3. 징진지 지역 환경관리의 어려움과 문제

첫째,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징으로 생태환경 악화가 심화됐다. 지형적으로 볼 때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으며 북부와 서부의 옌산과 타이항산이 평지 대부분의 절반을 둘러싸고 있다. 북부 네이멍구고원, 서부 황투고원이 황사 발원지인데, 주로 편북풍과 편서풍이 불어 황사의 습격을 자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베이(三北, 시베이/화베이/둥베이) 방호림(防護林) 등 일련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황사의 영향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문제도 현재 두드러진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미세먼지의 출처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량의 휘발성 유기물, 질소산화물 및 주변 공업지대에서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유황이 화학반응을 통해 생선된 입자이다. 징진지 이남 지역의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데, 편남풍을 타고 들어온 오염물이 산에 막혀 확산되지 못해 남아 있다가 원래 이 지역의 오염물과 2차 반응을 해서 대기오염이 가중된다.

둘째, 징진지 경제/사회 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 발전은 각각 탈공업화, 공업화 후기 단계로 진입했지만 징진지 지역의 86.89%를 차지하는 허베이성은 공업화 중기 단계에 있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징이 단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허베이성 제3차 전국 경제 조사 주요 데이터 공보' 자료에 따르면, 허베이성 제조업 수는 9.36만 개로 전체 기업의 21.46%를 차지했고, 제조업 종사자 수는 493,98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6.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 중 흑색금속 제련과 압연 가공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제조업 종사자 수가 상위1~3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허베이성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밖에 '허베이성 2014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1조 1,758억 3,000만 위안이며 이 중 장비제조업,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건자재공업, 의약공업, 섬유의류업이 주도 산업이고, 대부분 산업의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문제가 두드러졌다. 허베이의 고오염 특징과 산업구조적 특징이 서로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징진지 지역은 오염방지, 환경기준 연계, 환경기술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이 미흡해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구조적 불균형이 생태환경 벨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징진지 지역의 구조적 문제는 주로 인구, 산업에서 나타나며 주로 특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 지역의 산업구조는 양호한 경사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현재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인구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징진지 지역 도시 체계 중 상부는 베이징, 톈진이라는 초대형도시와 특대도시이고, 하위부분은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도시와 소도시인데, 중간층의 대도시 수가 너무 적어 도시 체계에서 뚜렷한 단절이 보인다. 징진지 지역에는 탕산시(唐山市), 스자좡시(石家莊市), 한단시(邯鄲市), 징저우시(定州市), 바오딩시(保定市), 잉녠현(永年縣) 등 6개 도시인구가 100만 이상이며 특히 탕산시 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다. 중간층 도시 수가 너무 적어서 상부의 영향력을 하부로 전달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징진지 지역 도시 체계 불균형은 초대형도시, 특대도시와 지역 전체 협력 시스템 부재와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적/물적/자금/정보 흐름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인구 과밀로 베이징/톈진의 수자원, 토지자원, 자연의 지탱능력이 이미 병목에 이르렀고 도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부담을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생태환경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생성 원인 분석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제/사회 발전 단계, 자원상태, 자연지리구조,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사회 발전 측면에서 베이징과 톈진이 각각 탈공업화와 공업화 후기 단계에 놓여 있지만 허베이성은 여전히 공업화 중기 단계에 놓여 있는 등 편중된 산업구조가 주된 특징이다. 환경 쿠츠네츠 곡선에 따르면, 공업화 중기 단계에 자원 소모가 더 많고 환경 오염이 더 심하다.

자원 보유 측면에서 허베이의 철광석 저장량은 27.3억t으로 전국의 13.15%를 차지한다. 또 중국의 주요 에너지 중 석탄의 연간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약 48% 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채굴 생산량에 대해 감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6년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2.0%에 달했다. 풍부한 원재료에 힘입은 허베이의 철강공업 발전은 규모 확장에 유리하지만 석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오염물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 지리적 구도 측면에서 징진지의 북부는 옌산 산지와 장베이고원, 서부는 타이항산 산지, 나머지는 하이허평원이 자리 잡은 서북은 높고 동남은 낮은 '삼태기 형상'을 나타낸다. 오염물이 산 앞의 베이징에 도달 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상 조건 측면에서 이 지역에 편남풍이 불면 편남풍이 허베이에서 배출한 대량의 오염물을 북쪽으로 보내는데, 옌산과 타이항산이 막고 있어 베이징에 정체되고 2차 반응으로 오염은 한층 가중된다(그림 3).

이 밖에도 민간용 석탄,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 조리에 의한 유연(油煙) 등도 미세먼지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징시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와 환경보호국 연구단이 베이징시에 대해 시행한 수차례 대기 오염 연구에 따르면, 남방(허베이, 허난, 산시 서부 등지 포함)지역에서 유입된 오염물이 베이징 PM2.5에 미치는 기여율은 42.36%~69.12%로, 비교적 큰 편으로 조사됐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미세먼지 기여율 평균치는 63.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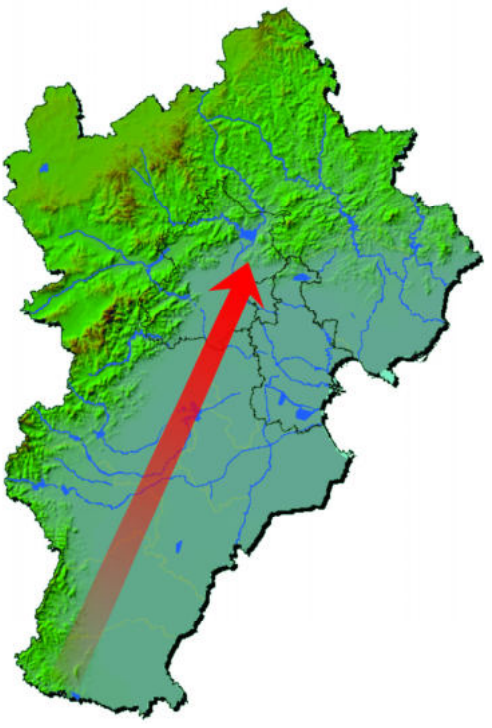


그림3) 징진지 지리적 구조로 인한 편남풍에 실린 오염물 정체 및 심화 반응

5.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최근 몇 년간 징진지 지역은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와 지방에서는 10여 건의 정책 문건을 발표했고 모니터링, 경보, 긴급조치, 조사 독촉, 기준 제정, 바람 통로 건설, 병행 협력 및 석탄, 산업, 차량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관리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했다(표4). 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정부가 함께 발표한 《징진지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치 (2016-2017)》, 2017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조치들이다.

표4)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조치

구분	내용		
정책 문건	국가 및 지역	거시지도	《징진지 협동 발전 규획 강요(綱要)》, 《'13.5'시기 징진지 국민 경제/사회 발전 규획》,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
		미세먼지 관리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시행 세칙》 및 연도 주요 사업, 《징진지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치(2016~2017)》, 《징진지 협동 발전 생태환경 보호 규획》,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자동차 오염 배출 통제 협동사업 시행방안》, 《징진지 및 주변지역 주요 업종 대기오염 기간 한정 관리 방안》,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방안》, 《2017-2018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 방안》
	지방	독자조치	3지역 《대기오염 방지 조례》, 《베이징시 2013-2017년 공기 청정 행동 계획》 및 연도별 계획, 《톈진시 공기 청정 행동 방안》 및 연도별 계획, 《허베이성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시행방안》 및 연도별 계획, 《허베이성 대기오염 방지 심화 3년(2015-2017) 행동방안》, 허베이성 내 각 시 대기오염 방지 극복 행동방안/계획/종합관리방안/집중행동,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 주요 과학연구 업무방안(2014-2017)년》
		다자조치	《징진지 지역 환경보호 우선 극복 협력 기본협의》, 《베이징시인민정부 톈진시인민정부 환경보호 강화 협력 기본협의》, 《톈진시인민정부 허베이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건설 강화 협력 기본협의》
정책 조치	관리	석탄	석탄소비 총량 통제, 석탄 대체, 석탄 청정이용, 석탄금지구역 설치, 석탄 보일러 퇴출
		산업	에너지생산 억제, 기업 이전 조정, 오염 고배출 기업 폐쇄 및 신축 금지, 주요산업 오염 관리, '오염기업' 정리/정비, 설비 오염배출 기준 강화, 기업 무단 배출 시정, 기업 탈황/탈질, 기업 휘발성 유기물 처리
		차량	구매제한, 운행제한, 고배출 차량 퇴출, 자동차 배출 기준 강화
		기타	공사장 먼지 날림 관리, 오염물 배출 비용 인상, 짚 연소 금지 관리, 선박 대기오염 관리, 중앙난방 보급률 제고, 도시와 주변 녹지화 및 방풍/방호림 건설 등
	모니터링		공기질 모니터링 장소 증가, 주요 오염지역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 설치
	경보		징진지 및 주변 7개 성/시 중증오염 예보 논의 플랫폼 구축, 중국기상국의 징진지 환경기상예보/경보센터 설립,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방지 전문가 위원회 설치
	긴급조치		중증오염기업 생산 제한/중단, 건축 공사장 토목공사 작업 중단, 자동차 운행 제한, 초/중/고교 휴교 등

구분	내용	
	조사 독촉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 정기적 논의, 베이징-톈진 자동차 기준 초과 배출 공동 집행 시범업무, 자정 불시 조사
	기준 제정	보일러 오염물, 음식 조리, 먼지 날림 및 휘발성 유기물 소비, 휘발성 유기 오염물 배출 기준 잠정 일치, 중증오염 경보 기준 통일
	바람통로 건설	베이징에 통풍 통로 건설해 환기 원활화
	병행 협력	대기오염 관리와 기술 원조 위해 베이징 매년 랑팡(廊坊), 바오딩에 4.6억 위안 지원, 톈진 매년 창저우(滄州), 탕산에 4억 위안 지원

상기 표에서 보듯이 모든 정책 조치에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노력이 담겨 있다. 베이징 자동차 관리를 일례로, 최근 몇 년간 베이징시가 자동차의 저배출과 연료 감축을 위해 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베이징은 전국 최초로 가솔린 차량 제5단계 배출 기준을 시행하였고 보조금 퇴출을 통해 노후 자동차 36.6만 대를 퇴출시켰다. 2014년 베이징 자동차 총량 통제를 통해 연간 증가량이 24만 대에서 15만 대로 감소했고 보조금 기준 인상으로 노후 자동차 47.6만 대를 퇴출시켰다. 2015년에는 디젤 차량 제5단계 배출 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택시 강제 폐기 신고 기준을 8년에서 6년으로 바꾸고 노후 자동차 38.9만 대를 퇴출시켜 120만 대 퇴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했다. 황색표지차량(黃標車,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을 전면 퇴출시켰고 신에너지 자동차 규모가 3.5만 대에 달했으며 디젤 버스 8,800여 대의 개조/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2016년에는 노후 자동차 44만 대를 퇴출(전출 포함)시켰고 택시 4.6만 대의 삼원 촉매 장치를 교체했다. 8대 업종 신규 중형 디젤차량 5,500여 대에 집진장치를 장착했다. 중심도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52%에 이르렀다. 제6단계 차량용 디젤 기준을 발표했고, 디젤 경차 5환로 이내(5환로 불포함) 도로 업무일 운행 제한 정책인 국Ⅰ, 국Ⅱ를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 말 기준으로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은 570만 대였고 자동차 오염 관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적으로 감소해 2016년 48㎍/㎥를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징진지 지역은 황사로 고통을 받았지만 산베이 방호림 등 일련의 생태환경 보호 프로젝트의 실시에 힘입어 황사의 영향이 확연히 약화됐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조치로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다. 지금껏 그랬듯이 징진지 지역은 대기오염과의 사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장젠(張建). 『징진지 지역 현대 기후변화와 기후 적합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9.

류이(劉燚). 『징진지 지역 공기질 상황과 공기질과 기후조건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2010.

펑창훙(馮長紅)·허캉닝(賀康寧)·런바오쥔(任寶俊)·장리링(張立玲). 『허베이성 징진 풍사(風紗)지역 식수(植樹) 문제 회복 주요 형식과 기술』. 랴오닝임업과기, 2009. (1):p.52-56.

훠야전(霍亞貞) 외. 『베이징 자연지리』. 베이징사범학원출판사, 1989.

쑨톄산(孫鐵山)·리궈핑(李國平)·루밍화(盧明華). 『징진지 도시권 인구 집중과 확산 및 영향 요소, 지역 밀도 함수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지리학보, 2009. 64(8):p. 956-966.

펑잉덩(彭應登)·중량(鍾良)·류추이링(劉翠玲). 『베이징 PM2.5 오염 특징과 방지 방법』.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2012. (3):p.52-54.

왕차오신(王朝欣)·한춘량(韓純亮). 『허베이성 생태환경 변화 추세 및 대책 분석』. 허베이요감(遙感), 2006. (4):p.14-15, 30.

시단리(奚旦立)·쑨위성(孫裕生)·류슈잉(劉秀英). 『환경 모니터링(제3판)』. 고등교육출판사, 2004.

발제문

京津冀地区雾霾治理政策举措

Wang L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 Regional Econom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 R. China

一、京津冀地区资源环境本底特征

京津冀自然基础特征是以西北山地、东南平原、东部海域为基本组成。京津冀地区位于东经113°04′至119°53′，北纬36°01′至42°37′之间。地处华北平原，北接内蒙古高原，西邻黄土高原，东临渤海。该地区西为太行山山地，北为燕山山地，燕山以北为张北高原，其余为海河平原，总面积21.6万平方公里。所接省域为：以北与辽宁、内蒙古自治区相接壤，以西与山西交界，以南与河南、山东相邻，以东紧傍渤海。由于京津冀地区处于中纬度地带，使得该地区气候具有明显的暖温带、半湿润大陆性季风气候特征，这对本区域内其它资源环境要素具有深刻的影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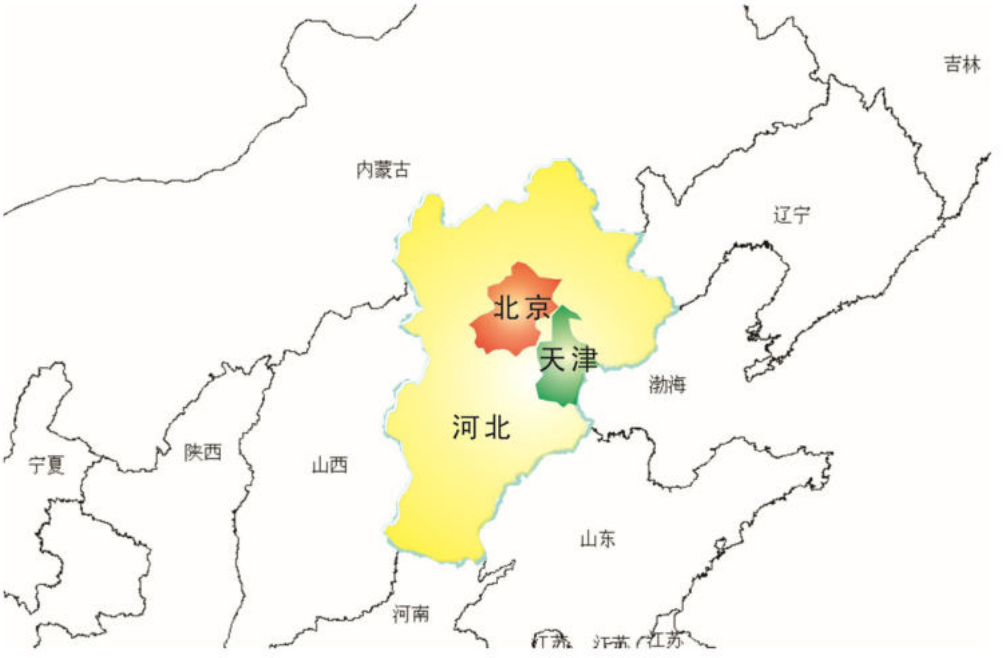


图 1 京津冀的地理区位

受燕山、太行山、内蒙古高原的影响，京津冀地区整体地势呈西北高、东南低的特征。区域内部的自然地理要素较为齐全：山地、高原、丘陵、平原、盆地、湖泊洼淀、海洋等均具备。平原面积 74946 平方公里，所占全区域面积比重为 34.7%，远高于全国 11.98%的平均水平。其中，北京平原面积比重 38.6%、天津 95.5%、河北 30.5%，均高于 30%。良好的地质条件有利于人类在此集聚定居。山地 80577 平方公里，所占比重 37.3%。山地主要集中在河北境内，河北的山地面积 70197 平方公里，共集中了区域内部 87.1%的山地。京津冀区域内高原全部集中在河北境内，集中分布在北部的张家口、承德地区。与山地相对应，盆地主要集中在河北境内，所占总面积比重为 10.5%。丘陵、湖泊洼淀的面积较小，分别占全域面积的 4.3%和 1.9%。海岸线分布在河北和天津境内，共 640 公里，河北与天津的海岸线长度约 3:1（表 1）。

表 1 京津冀自然地理基本要素特征

区域	北京		天津		河北		京津冀	
项目	面积（平方公里）	比重（%）	面积（平方公里）	比重（%）	面积（平方公里）	比重（%）	面积（平方公里）	比重（%）
总面积	16410	100.0	11917	100.0	187693	100.0	216020	100.0
山地	10072	61.4	308	2.6	70197	37.4	80577	37.3
高原	0	0.0	0	0.0	24344	13.0	24344	11.3
丘陵	0	0.0	229	1.9	9066	4.8	9294	4.3
平原	6338	38.6	11381	95.5	57228	30.5	74946	34.7
盆地	0	0.0	0	0.0	22711	12.1	22711	10.5
湖泊洼淀	0	0.0	0	0.0	4148	2.2	4148	1.9
海岸线长度（公里）	0		153		487		640	

数据来源：根据相关资料综合整理。

根据京津冀地区自然地理基本要素特征，可将该地域总体分为三大地域单元：山区、平原、海域。其中，山区包含高原、山地、盆地等地理要素。在本报告中，也主要以此三大地域单元来系统梳理京津冀地区资源开发利用与环境保护的现状和存在的问题。京津冀地区主要地形区划如下图所示：



图 2 京津冀地区主要地形区划图

二、京津冀地区大气污染状况

长期以来，京津冀地区大气受煤烟型污染、沙尘污染的困扰。近年来，虽然通过努力传统型大气污染的恶化态势有所遏制。于此同时，随着城市建设的快速发展和人民物质生活水平的提高，以机动车尾气为主体的新型排放源导致京津冀大气污染的性质发生了根本性变化。煤烟型污染、沙尘污染与机动车尾气污染发生叠加，形成了新的复合型大气污染。其中，以 PM2.5 为重要组成。PM2.5 是指大气中直径小于或等于 2.5 微米的颗粒物，对人体健康、空气质量和能见度影响极大。PM2.5 主要由直接排入空气的一次粒子和污染物再次通过化学反应生成的二次粒子组成。其中，一次粒子主要包括尘土性粒子及由植物和矿物燃烧产生的碳黑粒子，主要来源机动车、燃煤及生物质燃烧。二次粒子主要包括硫酸铵和硝酸铵，其由大气中的一次气态污染物二氧化硫和氮氧化物通过均相或非均相的氧化形成酸性气溶胶，再和大气中唯一的偏碱性气体 NH3

反应生成，主要来源机动车排放、溶剂涂料等挥发、工业面源等。

约从 2012 年开始，京津冀地区的雾霾问题开始被公众广为关注。下表展现雾霾较为严重时，京津冀地区反应生成 PM2.5 的主要污染物排放情况。由表可以看出，京津冀地区二氧化硫排放量 174.09 万吨、氮氧化物排放量 234.84 万吨、烟（粉）尘排放 146.42 万吨，分别占全国的 7.85%、9.77%和 11.45%。污染物排放量相当巨大。从地均污染物排放来看，二氧化硫 8.06 吨/平方公里，是全国的近 3.5 倍，其中天津的排放量 19.38 吨/平方公里，超过了全国平均水平的 8 倍；氮氧化物京津冀排放量为 10.87 吨/平方公里，是全国的近 4.5 倍，其中天津 30.12 吨/平方公里，更是高达全国的 12 倍；烟（粉）尘排放量京津冀地区 6.78 吨/平方公里，是全国平均水平的 5 倍。由于污染物排量大、地均密度高，造成了该地区复合型污染严重，为区域大气治理提出了更为严峻的挑战。

表 2 京津冀地区废气中主要污染物排放情况

指标	地区	二氧化硫	氮氧化物	烟（粉）尘
总量		万吨	万吨	万吨
	北京	9.79	18.83	6.58
	天津	23.09	35.89	7.59
	河北	141.21	180.11	132.25
	京津冀	174.09	234.84	146.42
	全国	2217.91	2404.27	1278.83
地均		吨/平方公里	吨/平方公里	吨/平方公里
	北京	5.96	11.48	4.01
	天津	19.38	30.12	6.37
	河北	7.52	9.60	7.05
	京津冀	8.06	10.87	6.78
	全国	2.31	2.50	1.33

数据来源：《中国统计年鉴 2012》

近年来，京津冀雾霾状况较为好转，但仍面临一定压力。根据中国环境保护部“全国城市空气质量日报”数据显示，2016年冬季北京日均空气质量指数（AQI）为145，其中，严重污染和重度污染天数比重分别高达10.23%和18.18%；2017年春季日均AQI为99，其中，优和良的天数比重分别高达25.56%和40.00%，严重和重度污染天数降为1.11%和5.56%；截至目前夏季日均AQI为128[1]，空气质量主要集中在中度、轻度和良的类型，比重分别为28.57%、28.57%、38.57%（表3）。

表3 2016年冬季以来北京空气质量统计

空气质量		冬季	春季	夏季
AQI		145	99	128
污染类型比重（%）	优	9.09	25.56	0.00
	良	37.50	40.00	38.57
	轻度污染	18.18	18.89	28.57
	中度污染	6.82	8.89	28.57
	重度污染	18.18	5.56	2.86
	严重污染	10.23	1.11	1.43

三、京津冀地区环境治理的困难和压力

首先，半封闭的地貌特征加剧了生态环境恶化。从地势来看，整个地区西北高、东南低，北部和西部的燕山和太行山将大部分平原地区半包围住。由于主导风向是偏北风和偏西风，北部内蒙古高原、西部黄土高原作为重要沙尘源，加上主导风向的影响，使得本地区频繁受到沙尘暴侵袭。近年来，随着三北防护林等一系列生态环境保护工程的实施，沙尘影响明显减弱。另外，雾霾问题当前较为突出。据研究，北京雾霾来源主要为交通排放的大量挥发性有机物、氮氧化物和周边工业生产排放的大量二氧化硫经化学转化生成的颗粒物。京津冀以南地区污染较重，偏南风夹着污染物进入本地区后，受山体阻隔影响无法扩散，与本地区污染物进行二次反应，加剧了空气污染。

其次，京津冀经济社会发展对生态环境提出更高要求。虽然京津的经济发

[1]分别以立冬、立春、立夏为界，冬季日期为2016年11月7日到2017年2月3日、春季日期为2017年2月3日到5月4日、夏季起始日期为2017年5月5日，本文夏季统计截止日期为2017年7月14日。

展已经分别进入后工业化和工业化后期阶段，但占据京津冀地区 86.89%国土面积的河北省正处于工业化发展中期阶段，以重化工业为主导的产业结构特征在短期内无法改变。根据《河北省第三次全国经济普查主要数据公报》数据显示，全省制造业数目 9.36 万个，占所有企业数目的 21.46%；制造业吸纳的从业人员最多，为 493.98 万人，占所有从业人员的 36.71%，其中黑色金属冶炼和压延加工业、非金属矿物制品业、金属制品业从业人员数位居前三位。制造业在河北省经济增长和就业拉动方面的作用巨大。另外，根据《河北省 2014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数据显示，规模以上工业增加值 11758.3 亿元，其中装备制造业、钢铁工业、石化工业、建材工业、医药工业、纺织服装业为主导产业，这其中大部分产业的环境污染和能源消耗问题较为突出。河北的高污染特性与产业结构特征相依存，在短期内难以改变。另外，京津冀地区在污染防治、环境标准对接、环保技术交流等领域的合作尚未完善，产业发展带来的生态环境压力进一步加大。

第三，结构性失调给生态环境带来较大压力。京津冀结构性问题主要体现在人口、产业主要集中于特大城市，无法合理疏解。虽然三地产业结构具有很好的梯度特性，但目前尚没有实现协调发展。除此之外，人口结构的失调性问题也非常突出。京津冀地区城市体系中顶层是北京、天津两个超大城市和特大城市，底层是数量占 95%的中等城市和小城市，中间层的大城市数量过少，城市体系出现了明显断层。京津冀地区仅有唐山市、石家庄市、邯郸市、定州市、保定市、永年县 6 个城市人口在 100 万人以上，且其中仅有唐山市人口在 300 万人以上。由于中间层城市数量明显偏少，无法承接来自顶层的辐射，带动底层发展的能力也较弱。京津冀地区城市体系的失调，和超大城市、特大城市与区域整体合作体系未能建立有关，人流、物流、资金流、信息流无法在区域间顺畅流通。由于人口过度集中，京津的水资源、土地资源、生态承载均已到达瓶颈，城市公共服务和基础设施不堪重负，各类生态环境问题突显。

四、京津冀地区雾霾成因探析

京津冀地区的雾霾，与经济社会发展阶段、资源禀赋、自然地理格局、气象条件息息相关。

经济社会发展方面，虽然，北京和天津分别处于后工业化和工业化后期阶段，但是，河北省仍处于工业化中期阶段，产业结构偏重是其重要特征。根据环境库兹涅兹曲线，工业化中期阶段资源消耗更多、环境污染更重。

资源禀赋方面，河北的铁矿石储量高达 27.3 亿吨，占全国的 13.15%。另外，我国主要能源中煤炭相对丰富，年产量占全世界比重维持在 48%左右；虽然采取产量压减措施，2016 年，煤炭在我国能源消费中的比重仍然高达 62.0%。河北发展钢铁工业有丰富的原材料支撑利于其规模扩张，再加上煤炭的广泛使用，极易导致污染物排放相对更多。

自然地理格局方面，京津冀北部为燕山山地和张北高原，西部为太行山山地，其余为海河平原，呈西北高、东南低的“簸箕状”。污染物到达山前的北京后，无法向外扩散。

气象条件方面，一旦本区域发生偏南风，其带着河北排出的大量污染物向北进，受燕山太行山阻挡，停留于北京，并进一步发生二次反应加重污染（图 3）。

除此之外，民用燃煤、机动车尾气、扬尘、餐饮油烟等，也一定程度上影响本区域雾霾程度。

北京市环境保护监测中心和环保局的研究团队对本市多次典型空气重污染进行研究发现，来自南方（包括河北、河南和山西西部等地）的外来污染物输送对北京 PM2.5 贡献较大，外来贡献率在 42.36%-69.12%之间；在污染最重的时段，外部区域输送对北京雾霾贡献率平均值达到 6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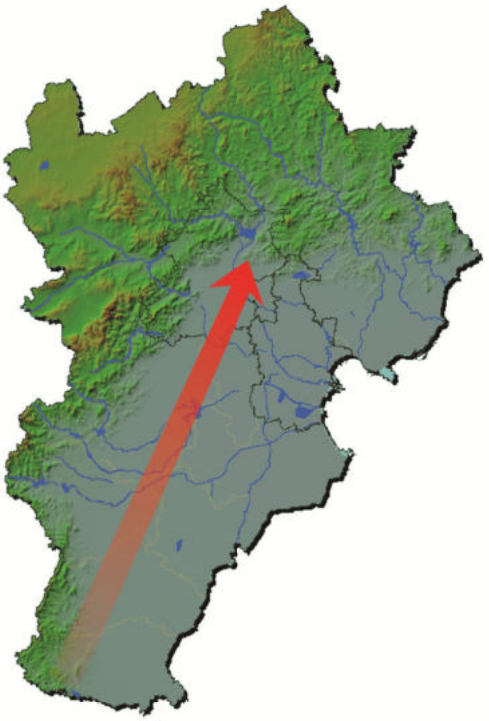


图 3 京津冀自然地理格局导致携带污染物的偏南风在此滞留并加重反应

五、京津冀地区雾霾治理政策举措

近年来，京津冀地区雾霾治理力度非常大。国家和地方出台了五十余项政策文件，开展了监测、预警、应急、督查、标准制定、风道建设、对口合作，以及以煤炭、产业、车辆为重点的综合治理等大量治霾探索（表 4）。去年中国环保部联合京津冀三地政府出台的《京津冀大气污染防治强化措施（2016-2017）》，今年的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强化督查，更是极其严厉治理雾霾。

表 4 近年来京津冀地区雾霾治理政策措施

类别	内容		
政策文件	国家及区域	宏观指导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十三五”时期京津冀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环保治理	《京津冀及周边地区落实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实施细则》及年度重点工作、《京津冀大气污染防治强化措施（2016-2017）》、《京津冀协同发展生态环境保护规划》、《京津冀及周边地区机动车排放污染控制协同工作实施方案》、《京津冀及周边地区重点行业大气污染限期治理方案》、《京津冀及周边地区 2017 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2017-2018 年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强化督查方案》
	地方	单方	三地《大气污染防治条例》、《北京市 2013-2017 年清洁空气行动计划》及各年度计划、《天津市清新空气行动方案》及各年度计划、《河北省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实施方案》及各年度计划、《河北省大气污染深入治理三年（2015-2017）行动方案》、河北省内各市大气污染防治攻坚行动方案/计划/综合治理方案/集中行动、《北京市大气污染防治重点科研工作方案（2014-2017）年》
		多方	《京津冀区域环保率先突破合作框架协议》、《北京市人民政府天津市人民政府进一步加强环境保护合作框架协议》、《天津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加强生态环境建设合作框架协议》
政策举措	治理	煤炭	煤炭消费总量控制、燃煤替代、煤炭清洁利用、设置禁煤区、淘汰燃煤小锅炉
		产业	压减产能、企业搬迁调整、关停及不新建高排放企业、重点行业污染治理、“散乱污”企业清理整治、设备提标改造、企业无组织排放治理、企业脱硫脱硝、企业挥发性有机物治理
		车辆	限购、限行、淘汰高排放车辆、提升机动车排放标准
		其他	施工工地扬尘治理、提高污染物排污收费、秸秆禁烧治理、船舶大气污染治理、提高集中供热普及率、城市及周边绿化和防风防沙林建设等
	监测		增加空气质量监测站点、污染重点安装在线监测设备
	预警		建立京津冀及周边七省区市重污染预警会商平台、中国气象局成立京津冀环境气象预报预警中心、成立京津冀区域大气污染防治专家委员会
	应急		重污染企业限产停产、建筑工地停止土方作业、机动车限行、中小学校停课等

	督查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强化督查、定期会商、京津两地机动车超标排放联合执法试点工作、零点突击检查
	标准制定	锅炉污染物、餐饮油烟、扬尘及挥发性有机物排污费、挥发性有机物污染物排放标准初步一致，重污染预警标准统一
	风道建设	在北京建设两级通风廊道，提升建成区空气流通性
	对口合作	北京支持廊坊、保定每年 4.6 亿元，天津支持沧州、唐山每年 4 亿元进行大气治理，开展技术援助

上表每一项政策措施内部都包含了复杂而艰巨的努力。以北京市机动车治理为例，近年来北京市在机动车低排放控车减油所做的努力如下：

2013 年，北京在全国率先实行汽油车辆第五阶段排放标准，另外，通过淘汰补贴，淘汰老旧机动车 36.6 万辆。

2014 年，北京机动车总量控制指标年增量由 24 万辆压缩到 15 万辆。另外，进一步提高补贴标准，淘汰老旧机动车 47.6 万辆。

2015 年，北京市在全国率先实施柴油车辆第五阶段排放标准；实施出租车 8 年改 6 年强制报废标准；淘汰老旧机动车辆 38.9 万辆，提前五年完成 120 万辆淘汰目标；全面淘汰黄标车；新能源汽车规模达到 3.5 万辆；实施了 8800 多辆柴油公交车的升级改造。

2016 年，淘汰（含转出）老旧机动车 44 万辆；完成 4.6 万辆出租车三元催化器更换；5500 余辆八大行业新增重型柴油车“戴口罩”；中心城公交出行比例达到 52%；发布了第六阶段车用汽柴油标准；发布了国Ⅰ、国Ⅱ排放标准轻型汽油车五环路（不含）以内道路工作日限行政策。

通过上述努力，截止至 2016 年底，北京市机动车保有量约 570 万辆，通过机动车污染治理，二氧化氮浓度实现平稳下降，2016 年首次降至 50 微克/立方米以下，达到 48 微克/立方米。

曾经京津冀地区受到风沙的困扰，但随着三北防护林等一系列生态环境保护工程的实施，沙尘影响明显减弱。近年来，在政府强有力的雾霾治理工作中，京津冀地区的雾霾状况已经有所改善。我们坚信，照此以往，一定能够打赢京津冀地区空气污染的攻坚战。

참考文献：

张建，京津冀地区现代气候变化和气候适宜度研究，硕士学位论文，2009.

刘燚，京津冀地区空气质量状况及其与气象条件的关系，硕士学位论文，2010.

冯长红，贺康宁，任宝俊，张立玲. 河北省京津风沙源区困难立地植被恢复主要模式与技术. 辽宁林业科技，2009，(1)：52-56.

霍亚贞等. 北京自然地理. 北京师范学院出版社，1989.

孙铁山，李国平，卢明华. 京津冀都市圈人口集聚与扩散及其影响因素——基于区域密度函数的实证研究. 地理学报，2009，64(8)：956-966.

彭应登，钟良，刘翠玲. 北京 pM2.5 污染特点及防治途径. 节能与环保，2012，(3)：52-54.

王朝欣，韩纯亮. 浅析河北省生态环境演化趋势及对策. 河北遥感，2006，(4)：14-15，30.

奚旦立，孙裕生，刘秀英. 环境监测(第三版). 高等教育出版社，2004.

발제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도쿄 미세먼지(PM) 농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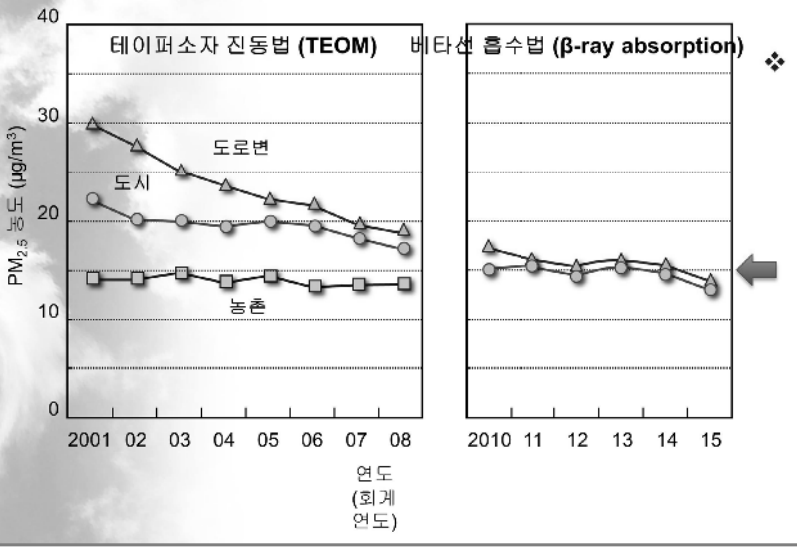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2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초미세먼지($PM_{2.5}$)의 연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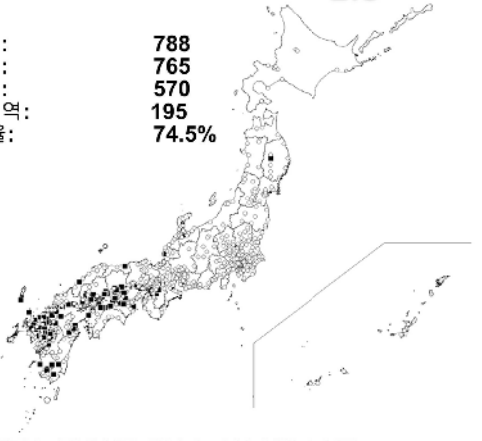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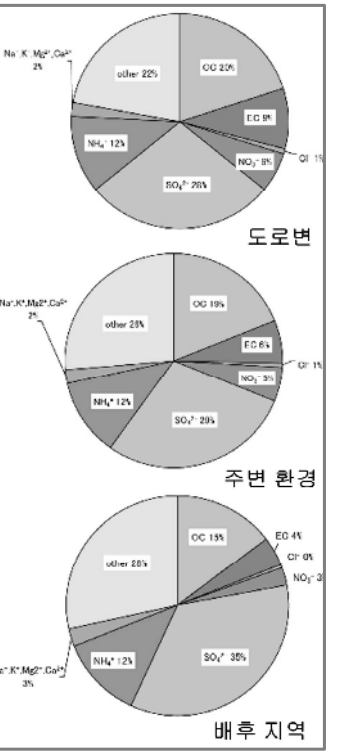
❖ 도로변 및 도시 지역의 $PM_{2.5}$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여 일본 기준치인 15μg/m³ 까지 감소 (연평균)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PM_{2.5}$ 현황

전체 지역: 788
효과 지역: 765
○ 달성 지역: 570
■ 미달성 지역: 195
달성 비율: 74.5%
(2015)





❖ $PM_{2.5}$ 기준 미달성 지역은 일본 서부에 분포.
❖ 원소탄소(EC) 농도는 도로변에서 높고, 황산염 농도는 배후 지역에서 높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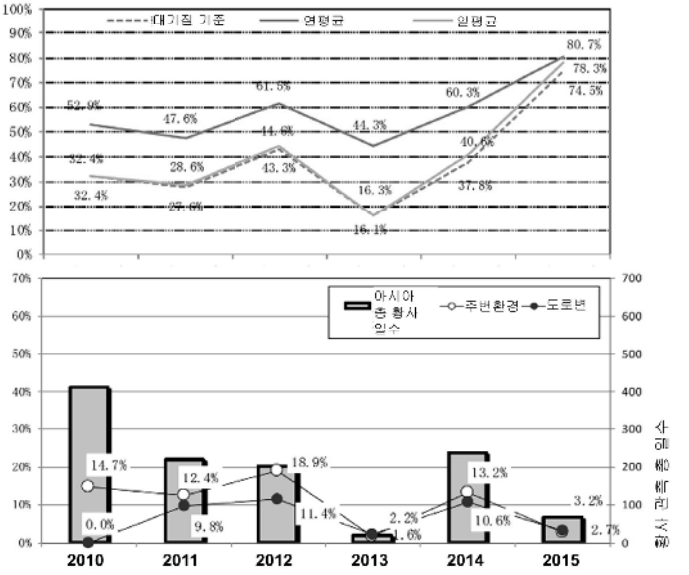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PM_{2.5}$ 대기질 기준의 달성 비율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은 **15 μg/m³** 미만

일평균 기준:
98%가 **35 μg/m³** 미만

황사의 영향으로 인한
미달성 지역



5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일본의 과거 대기질 문제



6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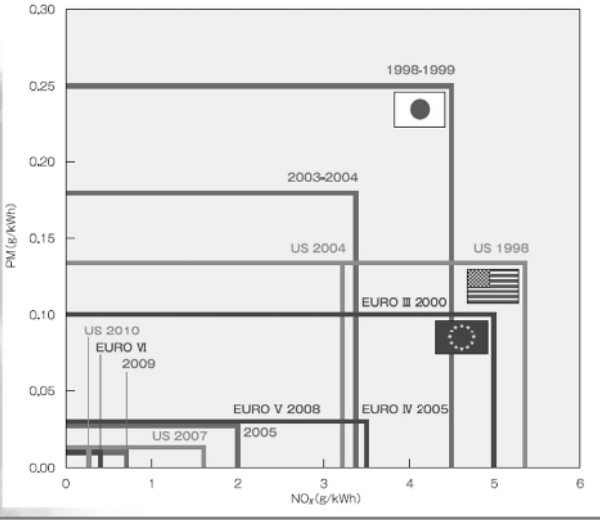
일본의 과거 대기질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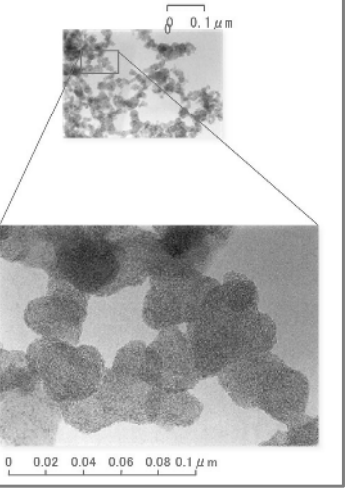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공장 및 산업 분야	흡연규제법 (1962) 대기관리법 (1968) 황사, SO_2 황산화물 총량규제 (1974)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1973) NO_x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1981)				
교통 분야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배출규제 (1973) 트럭/버스 질소산화물 규제 (1977) 일본판 머스키법 (1978) NO_x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법 (1992) 미세먼지 배출 규제 (1993) PM 자동차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저감법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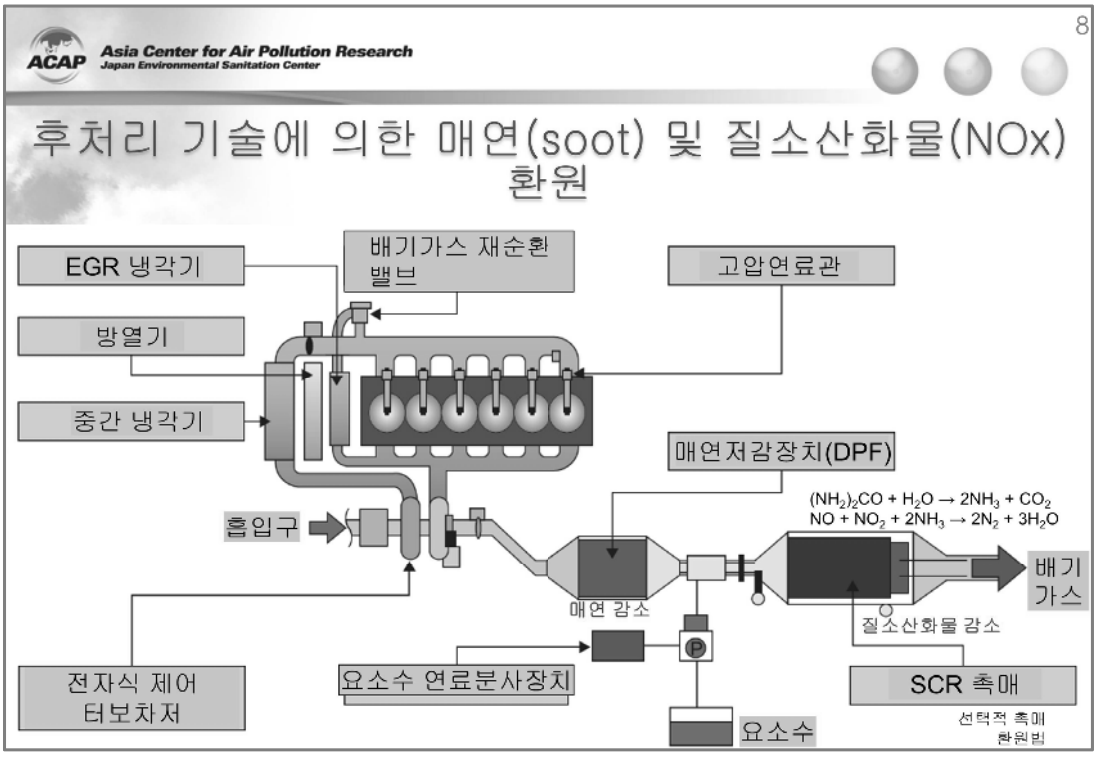
7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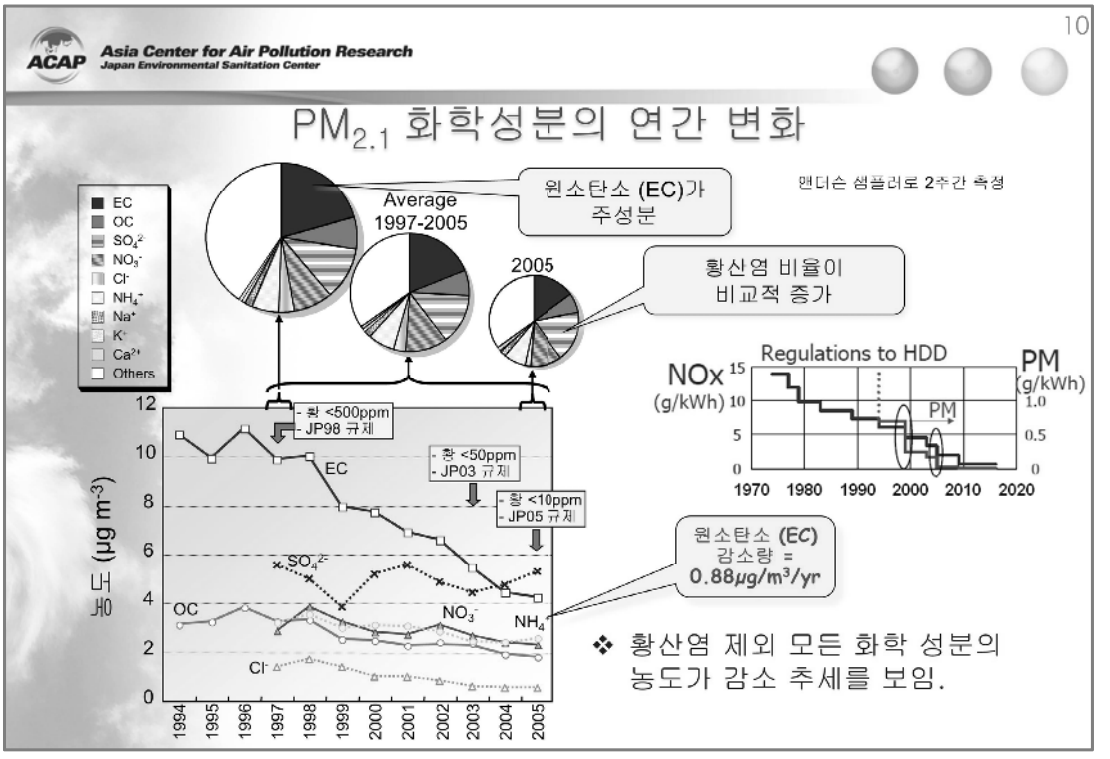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원소탄소(EC) 농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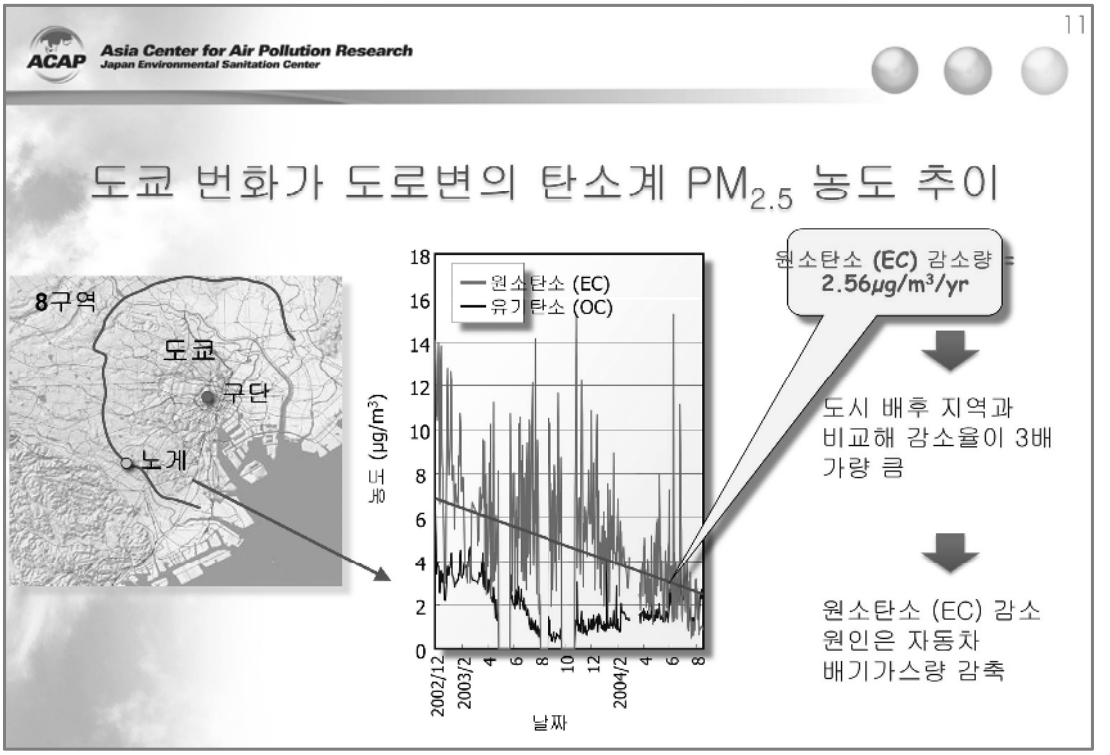





8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후처리 기술에 의한 매연(soot) 및 질소산화물(NOx) 환원
EGR 냉각기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고압연료관
방열기
중간 냉각기
매연저감장치(DPF)
흡입구
$(NH_2)_2CO + H_2O \rightarrow 2NH_3 + CO_2$
$NO + NO_2 + 2NH_3 \rightarrow 2N_2 + 3H_2O$
배기 가스
매연 감소
질소산화물 감소
전자식 제어 터보차저
요소수 연료분사장치
SCR 촉매
선택적 촉매 환원법
요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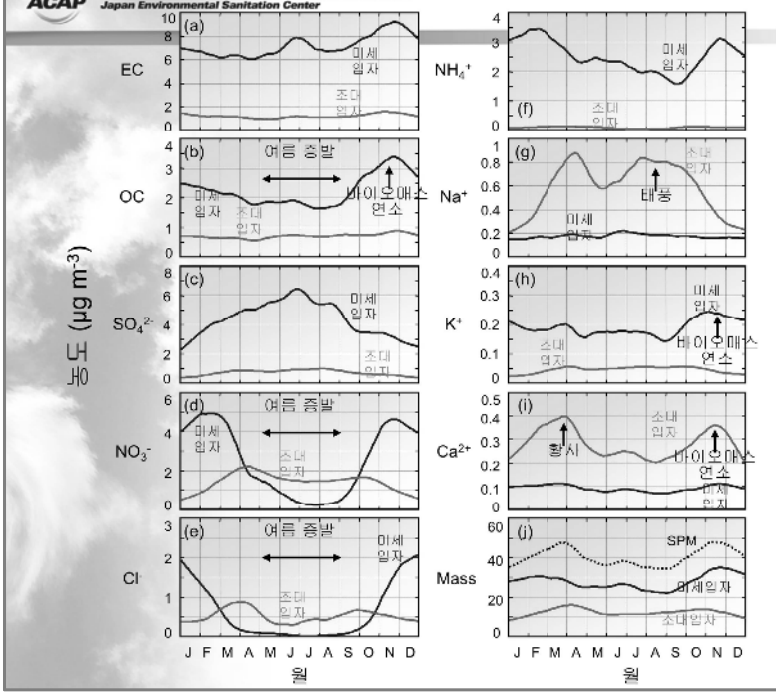

9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도쿄 시내 미세먼지 관측
아스쿠니 신사
도시 배후 지역
(도요타 구단 빌딩)
고쿄
8구역
도쿄
구단
노게
❖ 1994년부터 도시 배후 지역에서 앤더슨 샘플러 사용 및 화학분석을 통해 미세먼지를 측정.


10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PM2.1 화학성분의 연간 변화
EC
OC
SO4 2-
NO3-
Cl-
NH4+
Na+
K+
Ca2+
Others
Average 1997-2005
2005
원소탄소 (EC)가 주성분
앤더슨 샘플러로 2주간 측정
황산염 비율이 비교적 증가
Regulations to HDD
NOx (g/kWh)
PM (g/kWh)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 황 <500ppm - JP98 규제
- 황 <50ppm - JP03 규제
- 황 <10ppm - JP05 규제
농도 (μg m-3)
원소탄소 (EC) 감소량 = 0.88μg/m3/yr
❖ 황산염 제외 모든 화학 성분의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임.


11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도쿄 번화가 도로변의 탄소계 PM2.5 농도 추이
8구역
도쿄
구단
노게
원소탄소 (EC)
유기탄소 (OC)
농도 (μg/m3)
날짜
원소탄소 (EC) 감소량 = 2.56μg/m3/yr
도시 배후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3배 가량 큼
원소탄소 (EC) 감소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량 감축

12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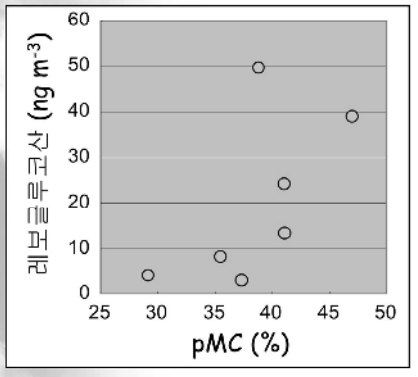
화학성분의 계절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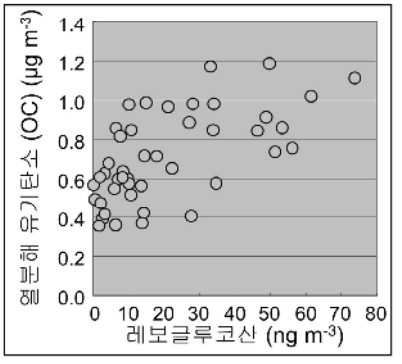
❖ 도쿄 시내에서 확인 가능한 바이오매스 연소의 영향.

13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바이오매스원 지표





pMC (percent modern carbon)의 정의
pMC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C)의 함유량을 이용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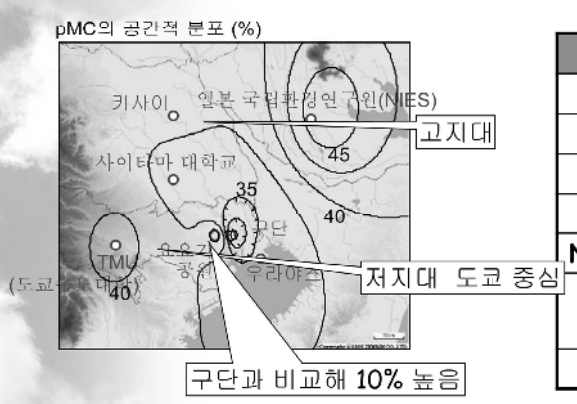
{pMC = 0 (%) : 화석연료원
{pMC = 100 (%) : 바이오매스원

❖ pMC 와 레보글루코산은 바이오매스원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열분해 유기탄소 (OC)와 관련이 있음.

14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방사성탄소 분석과 pMC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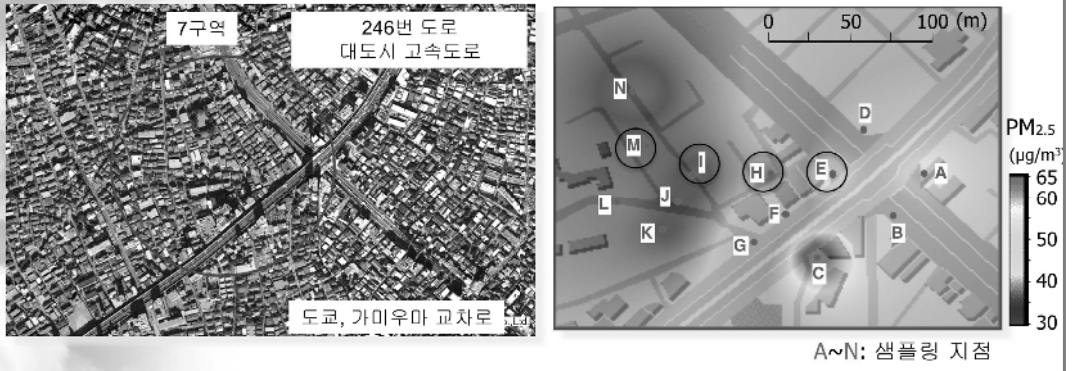
관측 장소	pMC (%)
우라야스	37.3
구단	29.1
사이타마 대학교	35.5
키사이	38.8
NIES (쓰쿠바 시)	47.0
TMU (하치오지 시)	41.0
요요기 공원	41.1

- pMC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농촌 지역에 비해 도쿄 중심가 (시내)에서 바이오매스 기여도가 낮음을 확인 가능.
- 그러나, pMC를 통해 도쿄 중심가에서도 탄소의 29%가 바이오매스에서 나온다는 것 또한 확인 가능.

15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PM_{2.5}$ 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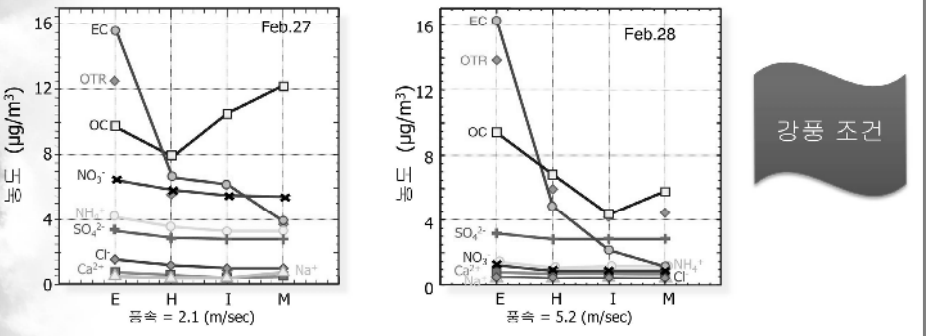
A~N: 샘플링 지점

- 혼잡한 간선도로를 마주한 장소는 높은 $PM_{2.5}$ 농도를 보이나, 좁은 도로에 들어서면 모든 도로에서 $PM_{2.5}$ 농도가 감소.

16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원소탄소 (EC), 유기탄소 (OC) 및 이온의 공간 감쇠



- 도로변 (E)에서 내부 지역 (M)으로 갈수록 원소탄소 (EC)의 공간 감쇠가 두드러짐.
- 지점 E에서 EC, OC 및 황산염의 농도가 풍속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됨.
- 차량을 제외한 다른 근원의 영향이 있음을 내부지역의 OC를 통해 알 수 있음.

17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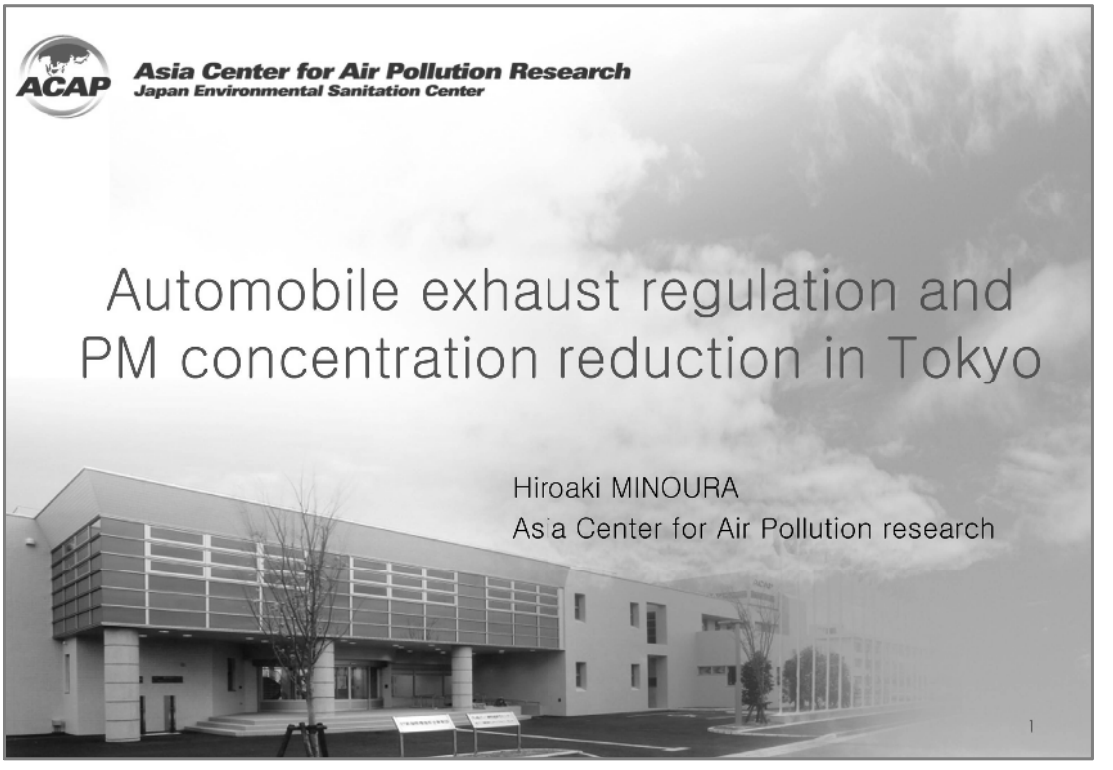
- 도로변 및 도시 지역의 $PM_{2.5}$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서부에 위치한 지역의 3/4 에서 일본 기준치인 15μg/m³ 를 초과.
- $PM_{2.5}$ 의 원소탄소(EC) 농도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새로운 감축 목표는 황산염을 대상으로 함.
- 자동차는 여전히 $PM_{2.5}$ 발생의 주요 원인.
- 바이오매스 연소의 유기탄소(OC) 기여는 도쿄 중심가에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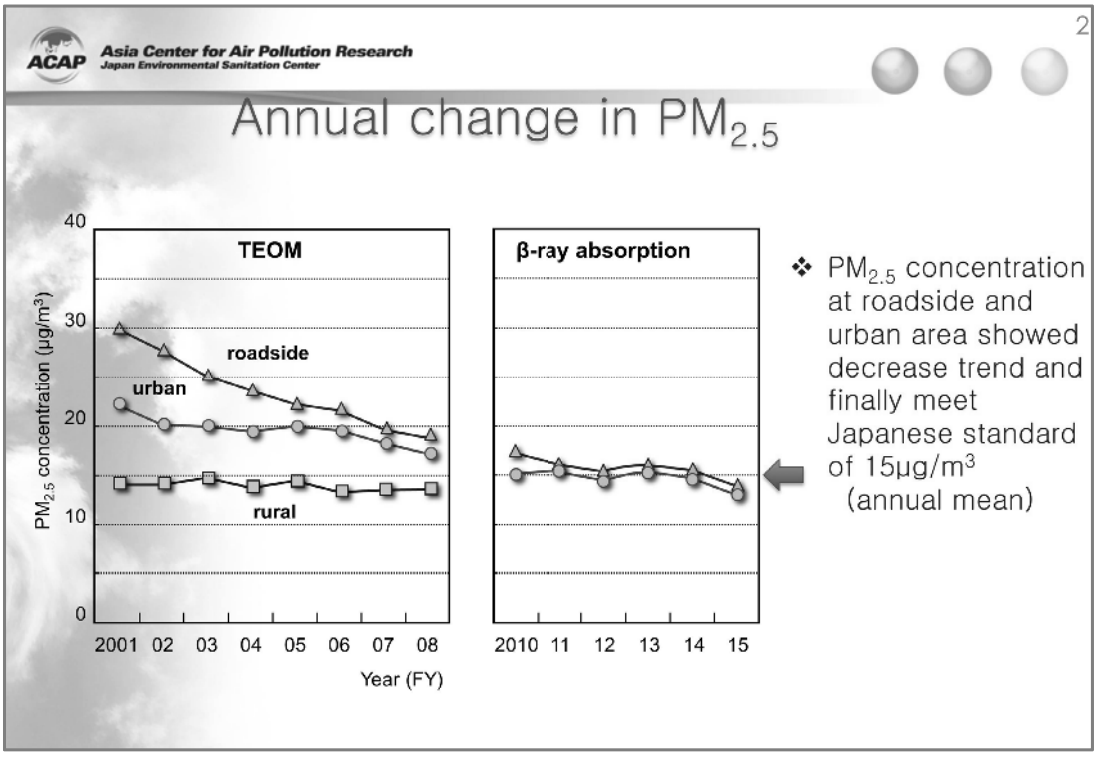

ACAP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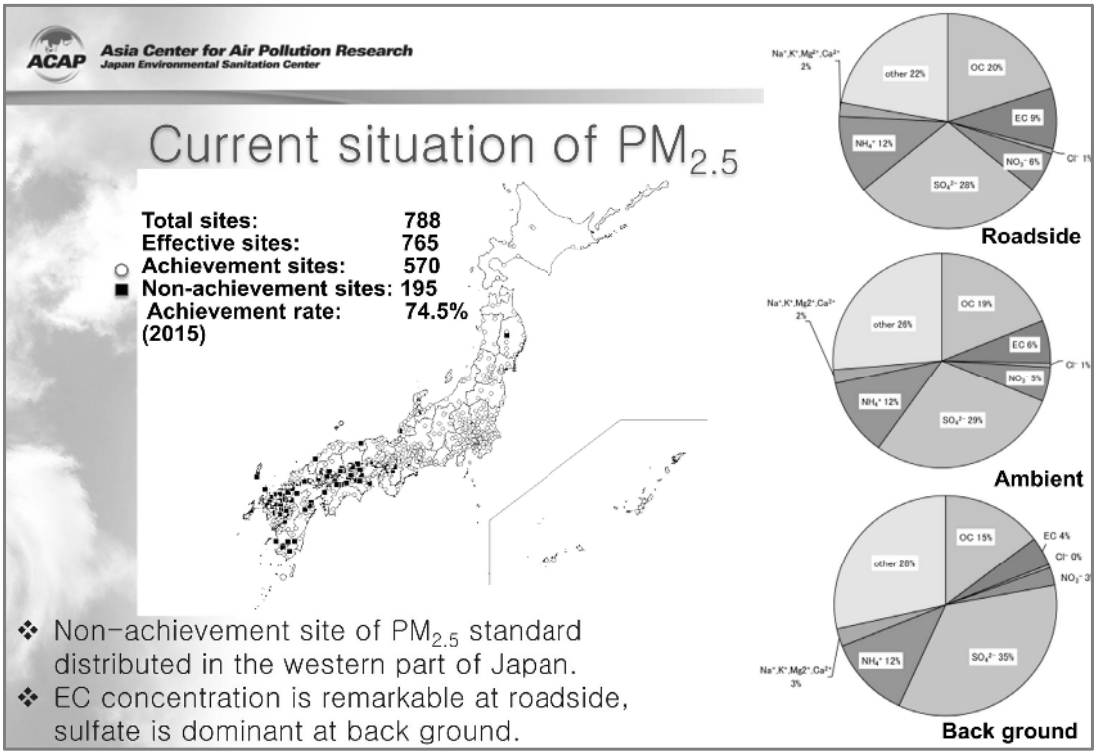
발제문

Automobile exhaust regulation and PM concentration reduction in Tokyo

Hiroaki MINOURA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2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nual change in PM2.5
TEOM
β-ray absorption
roadside
urban
rural
PM2.5 concentration (μg/m3)
40
30
20
10
0
2001 02 03 04 05 06 07 08
2010 11 12 13 14 15
Year (FY)
❖ PM2.5 concentration at roadside and urban area showed decrease trend and finally meet Japanese standard of 15μg/m3 (annual mean)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Current situation of PM2.5
Total sites: 788
Effective sites: 765
Achievement sites: 570
Non-achievement sites: 195
Achievement rate: 74.5%
(2015)
Roadside
Ambient
Back ground
❖ Non-achievement site of PM2.5 standard distributed in the western part of Japan.
❖ EC concentration is remarkable at roadside, sulfate is dominant at back groun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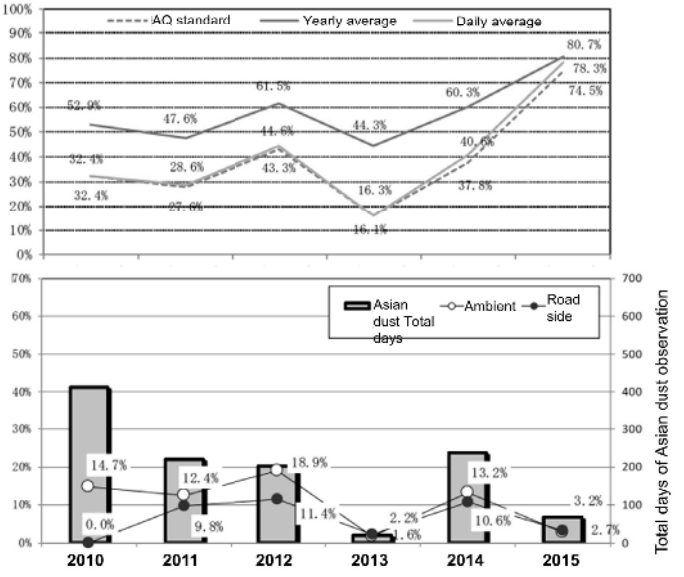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chievement ratios of $PM_{2.5}$ AQ standard

Yearly average standard:
Yearly average value is less than 15 μg/m³

Daily average standard:
98th percentile value is less than 35 μg/m³

Non-achievement sites due to influence of Asian dust



5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Japanese AQ issues in the past



6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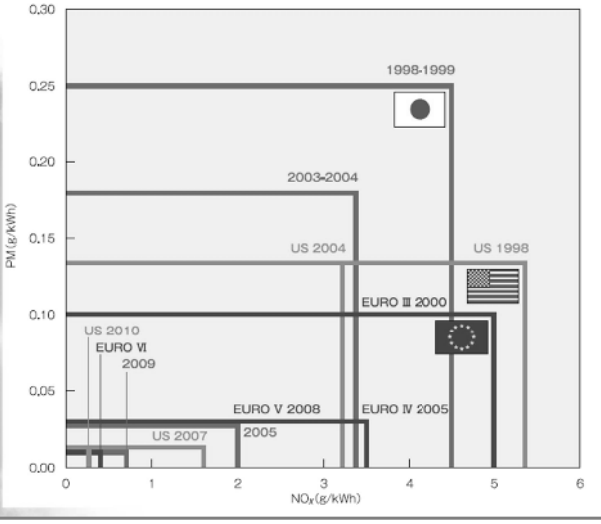
Japanese AQ issues in the pas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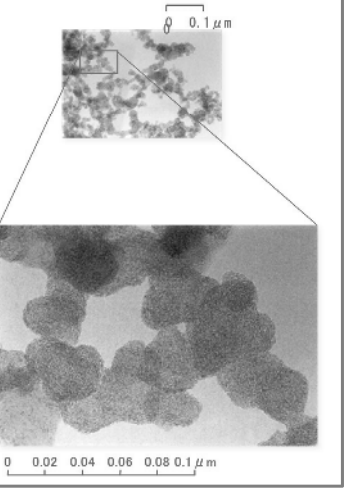
	1960s	1970s	1980s	1990s	After 2000
Factory and Industrial sector	Smoke regulation law (1962)	Clean Air Act (1968) Dust, SO_2 SOx total amount regulation (1974) NOx emission standard (1973) NO_x	NOx total amount regulation (1981)		
Traffic sector		CO/HC/NOx emission regulation (1973) Truck / bus NOx regulation (1977) Japanese version Muskie regulation (1978) NO_x	Automobile NOx Reduction Law (1992) PM emission regulation (1993) Automobile NOx / PM Reduction Law (2001)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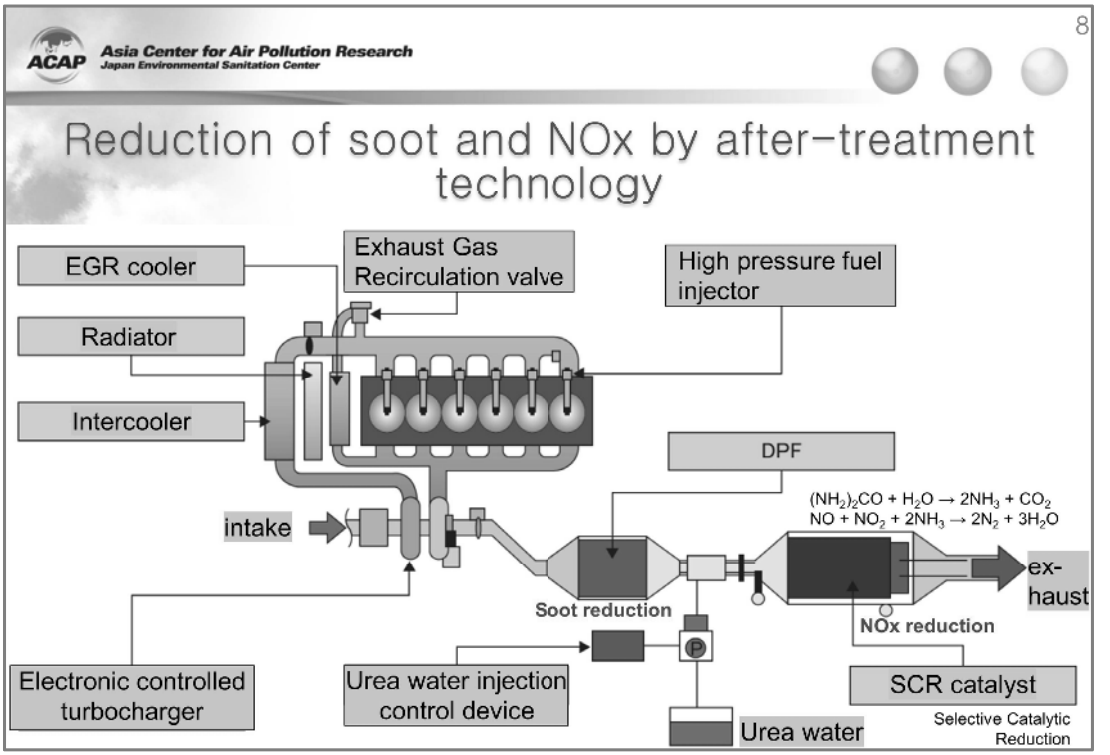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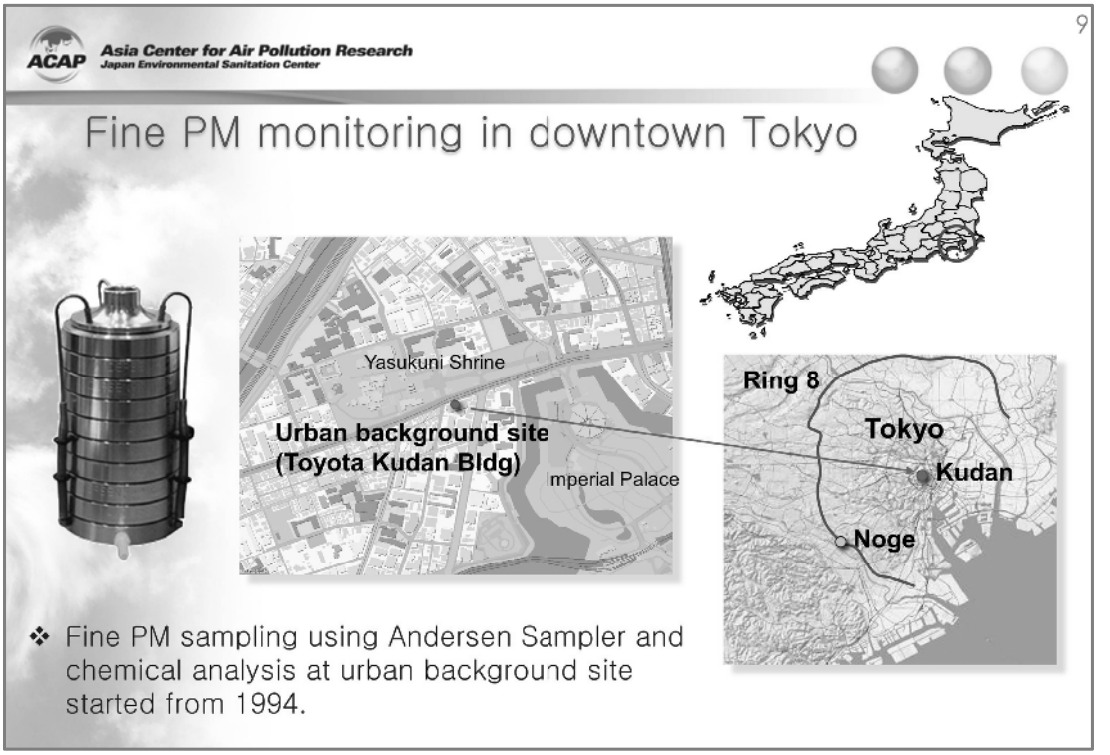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Reduction of EC concentration due to vehicle exhaust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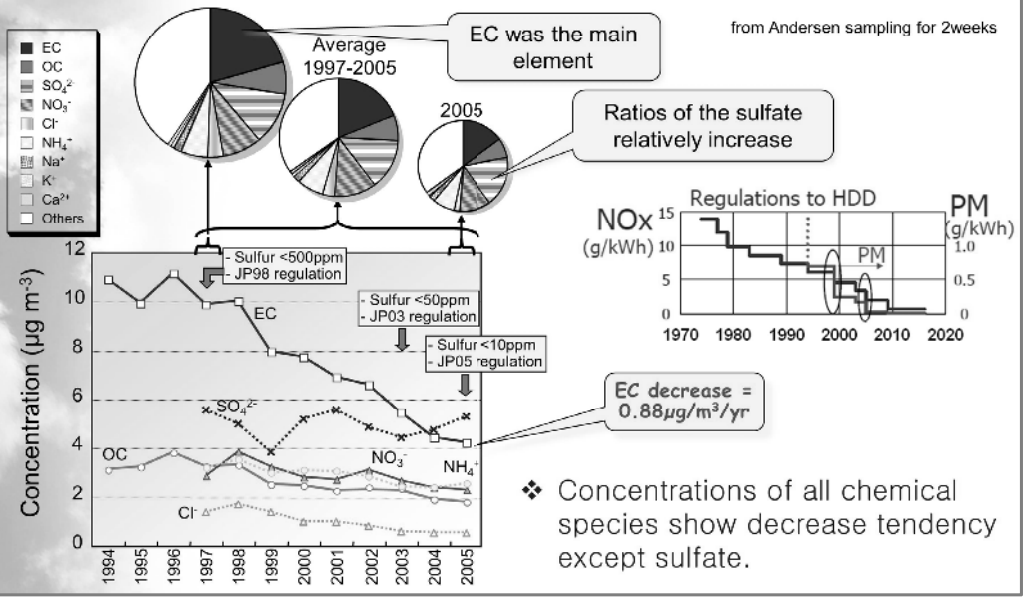

8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Reduction of soot and NOx by after-treatment technology
EGR cooler
E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High pressure fuel injector
Radiator
Intercooler
DPF
intake
$(NH_2)_2CO + H_2O \rightarrow 2NH_3 + CO_2$
$NO + NO_2 + 2NH_3 \rightarrow 2N_2 + 3H_2O$
ex-haust
Soot reduction
NOx reduction
Electronic controlled turbocharger
Urea water injection control device
SCR catalyst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Urea water


9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Fine PM monitoring in downtown Tokyo
Yasukuni Shrine
Urban background site
(Toyota Kudan Bldg)
mperial Palace
Ring 8
Tokyo
Kudan
Noge
❖ Fine PM sampling using Andersen Sampler and chemical analysis at urban background site started from 1994.

10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Yearly variations of chemical components in $PM_{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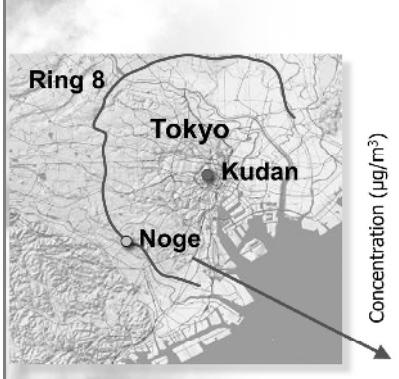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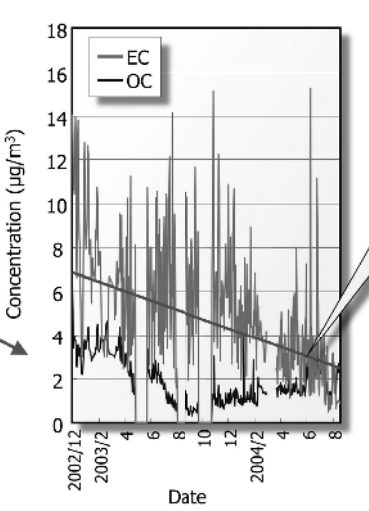
❖ Concentrations of all chemical species show decrease tendency except sulfate.

11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Carbonaceous $PM_{2.5}$ concentration trend at busy roadside in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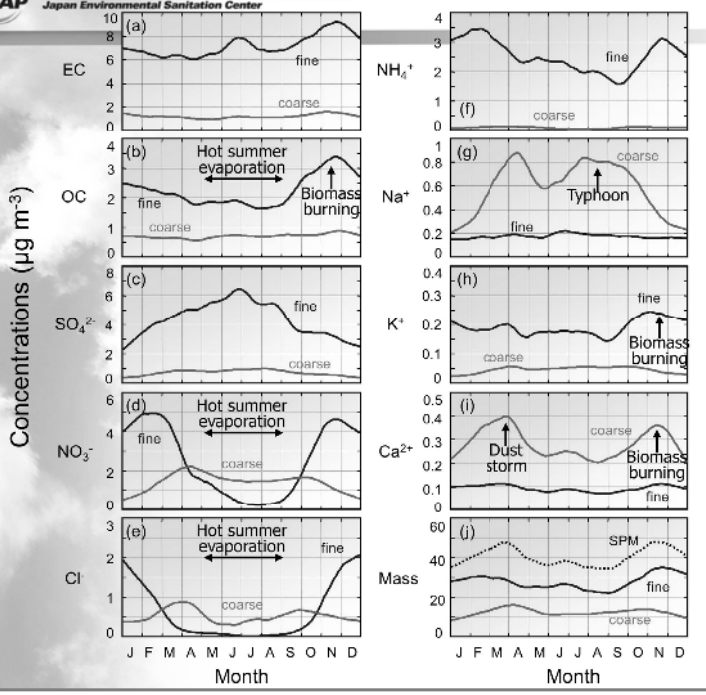
EC decrease = 2.56μg/m³/yr

~3 times larger than the decrease ratio of urban background site

Reduction in EC concentration is due to improvement of automobile exhaust

12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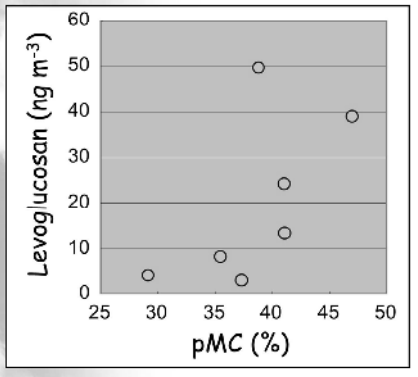
Seasonal variations in chemical com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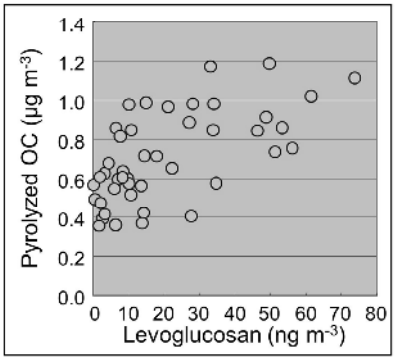
❖ Influence of biomass burning can be seen in downtown Tokyo.

13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Indicators of Biomass source





Definition of pMC
(percent modern carbon)
pMC is calculated from the content of ^{1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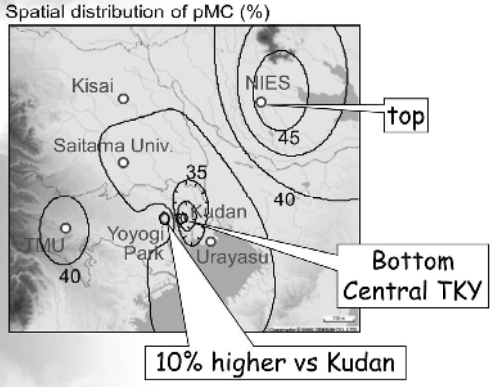
{ pMC = 0 (%) : fossil fuel source
pMC = 100 (%) : biomass source

❖ pMC and levoglucosan are indicators showing biomass origin, and they correlate with Pyrolyzed OC.

14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Radio carbon analysis and distribution of p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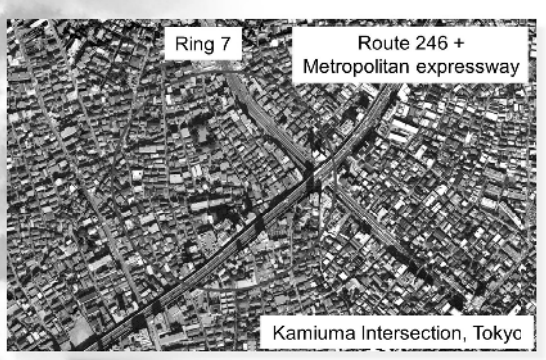
Obs. site	pMC (%)
Urayasu	37.3
Kudan	29.1
Saitama Univ.	35.5
Kisai	38.8
NIES (Tsukuba)	47.0
TMU (Hachioji)	41.0
Yoyogi Park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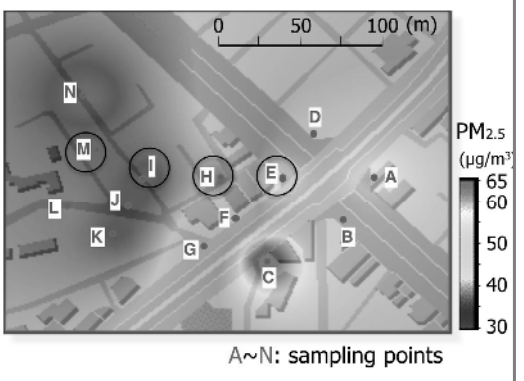
-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MC showed that biomass contribution is lower in central (downtown) Tokyo comparing with rural area.
- However, pMC showed that 29% of carbon comes from biomass even in central Tokyo.

15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Spatial distribution of $PM_{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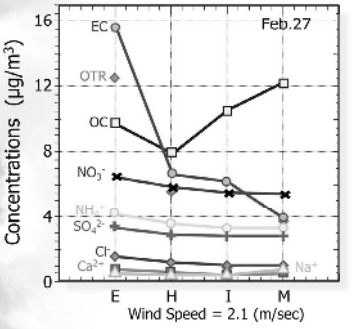
A~N: sampling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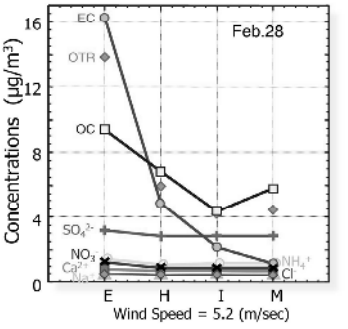
- The place facing the busy trunk road shows high $PM_{2.5}$ concentration, but when entering a narrow street the concentration decreases uniformly.

16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Space attenuation of EC, OC, and ions





High wind condition

- Space attenuation of EC concentration from the roadside (E) to inside area (M) was remarkable.
- The concentrations of EC, OC, and sulfate at E point were constant for the wind speed.
- Influence of the other source except for vehicle was suggested on OC at inside area.

17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er

summary

- $PM_{2.5}$ concentration at roadside and urban area showed decrease trend, but 3/4 sites located mostly in western area exceed Japanese standard of 15μg/m³.
- EC concentration in $PM_{2.5}$ decreased remarkably due to vehicle emission control, and new target becomes sulfate.
- Automobile still is a major source of $PM_{2.5}$
- Contribution to OC of biomass burning exist in central Tokyo.


ACAP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Special Session 2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사회자 _ 강명구(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발표자 _ 임승관(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팡레이(전 송장미술관 관장)
노리아키 이마이(認定NPO법인DxP 이사장)

토론자 _ 김종구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임옥상 (화가, 세계문자연구소 대표)
조미수 (풀울림 공동대표, 전 Peace Boat 공동대표)

발제문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1. 머리말

근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점차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로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불안과 위협[36]을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가주의 논리로 무장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해온 근대 산업문명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분절된 많은 개인은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며 복지, 주거, 교육, 정보 담론 등 다양한 담론에서 소외당하는 '사회적 배제'라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겪는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이 현대인이 느끼는 심각한 사회문제다.[37]

지금 정부는 시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문화활성화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약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체

36)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에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 안에서 공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분석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10519818.html.

37) '한국사회의 빈곤 상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강신욱 외, 2005)

관련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38] 문화예술분야도 2011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생활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공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원 사업 기간 후에는 공동체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거나, 언론을 통해 모범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벽화 마을들은 지금 그곳 주민에 의해 그림이 지워지면서 깊은 갈등 만 남았다. 이는 공동체의 자발성을 통제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모순적 한계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원 목적과 평가 방법, 제시된 정산 규범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방법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대상들 간에 일어나는 경쟁심을 적극적인 주민 참여 동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39]

공동체의 성장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자유로운 개성들이 기진 역량과 그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를 찾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의 성과 지점은 그 구성원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민주적인 합의, 자율적인 협동 과정에 있다. 가시적이고 양적인 결과는 오히려 그 과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소속감과 연대감, 상호의존관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방법 제시보다는 구성원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이나 의식 변화를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글은 인천 '문화바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예술이 갖는 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려 한다.

공동체 활성화 주요 요인을 수평적 소통과 자율적 협동, 지속할 수 있는 자립과 일상

38)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정부 부처 14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 등이다.
39) 박주형. 2013.『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생활 의미 수준을 높이는 창작,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환경을 만드는 전업 활동가로 나누어 생활예술이 이 요인들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소개할 것이다.

2. 생활예술 공동체 '문화바람' 소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이하 센터) 1996년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후 2005년 재창립을 맞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예술가나 정부 정책이 아닌 시민문화운동에서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인 문화수용자로, 생활권내 일상영역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토양을 만드는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이다.

오랫동안 인천은 인근 타 도시보다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오지 않았다. 인천 시민은 공연을 잘 보지 않아 기획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열악한 문화환경은 그 책임이 시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센터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수용자 운동을 설명하고 CMS 회원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400여 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는 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회원이 5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 곡선이다.

우리가 회원이 되어 돈을 모아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무료로 관람하자는 문화수용자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콘서트' 는 2회 공연을 모두 매진하는 1600명이 관람을 했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공연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 그간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 의지가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문화바람 회원은 연 5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 1회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동아리 회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1) 수평적 소통 (사회적 개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첫 번째 동기는 기능 습득과 숙련을 바라는 자기만족이다. 오직 자신을 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결심과 선택이다. 기타를 잘 치고 싶고, 신나는 밴드공연을 하고 싶은 바람에서 맘에 드는 동아리에 가입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몇 주가 지나면 만족 원인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다.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더 큰 만족이다. 경쟁과 이해 관계없이 같은 취미를 공감하고, 서로 익숙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느끼는 안정감이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 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상대방의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며, 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결속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높인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를 견디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타자와의 친근한 만남은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의 공유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드러내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 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관념적인 위계질서인 소득과 교육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서열로 작동했으나 이제는 전인격적 관계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다. 심보선은 이런 결사체를 '작업장 공동체'로 설명한다. '생활예술 동아리 구성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인간적 호흡의 교환, 협력적 작업,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에 초점을 맞춘다'[40]는 것이다.

또한, 생활예술활동에서는 경쟁이 필요 요소가 아니다. 스포츠활동과 같이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을 경쟁하지 (과정이 공정하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않아도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즐겁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예술 활동의 속성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드러내고 다른 의견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 과정에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참고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참조

40)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가 된다는 감정은 사회적 존재감이다. 그동안 고립감과 배제감을 느끼던 개인이 사회적 개인, 즉 공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위계와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소통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경험을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소통과 표현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41] 이렇게 동아리 구성원들 안에서 사회적 위계질서와 차별을 극복하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랑시에르가 말한 민주주의가 사회적 약자인 몫이 없는 자들에 몫의 실현이라고 할 때[42] 소통능력은 이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 된다.

이러한 수평적 소통 관계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결정에 실천적인 행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였는가? '그 결정에 따른 유, 불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참여자들이 어떠한 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예' '아니오'를 표명하는 실천적인 소통을 하였는가? 를 측정 지표로 제시했다. 무임승차나 배제는 자율적 협동의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2) 자율적 협동 (호혜적 연대 공동체)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피하고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혹은 그러기 바라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려고한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은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깨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구성원들과 공통된 이해관계, 목표,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제한된 존재를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 의지로 선택한 소속은 다른 구성원이 인정하는 조건, 즉 사회적 규율 준수를 지켜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는 공유하는 유 무형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과의 합의에 동의하는 공유화 과정이다. 이렇게 개인은 집단을

41) 엄기호. 『단속사회』.창비. 2014.
42)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인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선택하고 환대받으며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우리'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재규정 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위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은 주로 소속 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새로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경험, 즉 민주적 소통과 표현 감수성으로 높아진 자존감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성원과 낯선 사람인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공동체 속성이다. 공동체의 연속성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소속감으로 외부와 구분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속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그동안 국가주의와 시장경쟁을 동력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집단주의로 이용하기도 했다.

집단 정체성에 경도된 배타적 집단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나 갈등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사회를 양극단으로 대립시키고 서로를 증오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힘을 결집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집단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국가적 대형 사고들을 대하는 치열한 입장 대립이 그랬다. 사건을 유발한 사회 구조와 부정의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 정체성을 내세워 타 집단을 적대관계로 규정하며 비이성적인 증오와 멸시,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소속된 개인의 행동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인 연줄 네트워크나 이익 담합공동체와 같은 유사공동체다.

문제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가이다. 찰스 타일러 Charles Taylor는 전체 내의 소수자 집단에 요구하는 정체성을 '동일성'으로 정의하는 데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주의는 자신의 견해를 우세하게 하고 세력을 키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근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주의는 세속적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자발성과 의지로 자율적 협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구성원의 일체성을 위해 관리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구성원과 권력을 나누

고 함께 책임지는 제도문화에서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공동체의 현안을 내 문제로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주인의식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식은 구성원의 도덕적 양심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의 문제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 뽀루뚜알레그리는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주민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유는 정책 시스템 때문이다. '참여 예산제'는 작고 가난한 마을 주민들까지 모든 시민은 시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 이러한 협치는 그동안 행정역량으로 불가능했던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주민의 창조적인 정책 제안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사업과 예산 분배, 집행 그리고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몫이 없는 시민들이 몫을 행사한 결과다. 심리학에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이론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은 참여나 개입,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으로도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3) 자주적 자립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생활예술 공동체에서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본주의적 통념이나 시장 경제적인 평가나 압박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와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의미에 동의하여 연대하는 협동조합 목적과 같다. 또한, 어느 정도 자립을 통해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줄여 효과적인 공익사업을 위한 수평적인 민관협업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고 생활예술 공동체에서의 자립이 간신히 생존하는 상태인 자급(subsistence)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다. 신자유주의적인 무한 이윤 추구와 소유가 아니라 충분함(sufficiency)의 실천 윤리를[43] 실현하는 '공유'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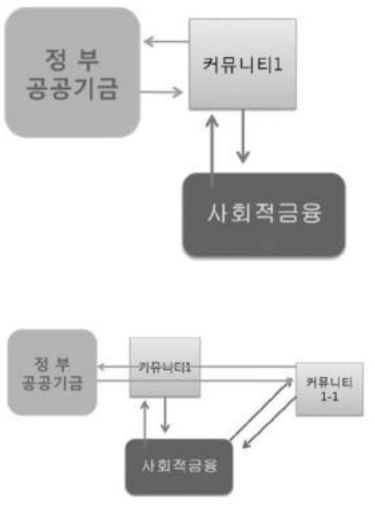
자생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거점 공간 마련과 유지다. 소통과 관계로 신뢰가 높은 공동체도 깨지고 흩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공간 유지비용이 원인이다. 요즘 사회쟁점이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방식은 행정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위탁 형식이나 한시적인 조건부 임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외부 압력과 조정,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등으로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간 이용자, 즉 구성원들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시도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며 지속할 수 없었다. 공모를 통한 공간 지원 경우도, 과업에 따른 공간 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지속적 성장과 경험 축적이 힘들다.

공간의 자생성을 위한 마중물 지원제도

필자는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정책'[44]을 제안한다. 마중물 지원제도 방식은 우선 지원 대상을 지역에서 정기적인 수입 구조나 자생력을 갖춘 커뮤니티가 지원 대상이다.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은 자생력이 있는 커뮤니티가 공간을 매매 혹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최초 정부 지원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간 담보와 역량에 맞는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 이 대출금은 정부에 상환하고 커뮤니티는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43)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2015. p62.
44)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 방식 예시〉

공간의 구매 가격이 20억이고, 지역에서 정기적 수입이 보장되고 자생력 커뮤니티가 이 공간을 사용하길 원하는 상황

① 우선 20억을 정부 기금으로 커뮤니티에게 지원한다.
② 그 돈으로 계약(구매)을 한다.
③ 그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에서 20억을 대출받는다.
④ 대출받은 돈으로 정부 지원 기금을 상환한다.
⑤ 커뮤니티는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에 장기 저리(低利)로 갚는다. 단 그 단체의 상환능력에 맞게 진행한다. 예를 들어 10~15년에 이르는 장기 상환 설계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은 손실 위험은 최소화된다. 만약 지원 받은 공동체가 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담보물인 건물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마중물 지원제도'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사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76년 설립된 그라민 은행은 설립 초기, 150달러 미만의 돈을 담보와 신원 보증 없이, 하위 25%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줬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 장기 저리 신용대출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한 지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환율 등 신용이 떨어지면 다른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두는 시스템으로 서로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그라민 은행의 상환율은 설립 이후 연평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주 일반 영리 금융에서도 시행한다. 캐나다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에만 투자하는 투자기금이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만 대출을 해주는 이 기금은 상당 부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출자에서 시작되지만, 노조 기금이나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도 투자자로 참가해 자금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자금을 투자해 15년 동안 상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른바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Fiducie'를 운영하는 '상티에'(Chantier)의 부대표 '마틴 프라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 부문에 장기 저리로 투자하는 것은 금리는 낮지만, 일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일반 투자보다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출 금액이 공동 소유인 점과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내부 공동자산으로 쌓아두는 특성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그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일반 기업체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다.[45]

4) 전업 활동가 (생활예술 철학을 지닌 촉매자)

'문화바람' 공동체에서 전업 활동가들은 공동체 구성원인 동시에 매개자 역할을 함께 한다. 생활예술 전업 활동가는 사업에 있어서 목적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헌신하는 봉사자가 아니다. 이 경우 오히려 활동가는 관료화의 오류에 빠져 구성원을 대상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매개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이해는 생활예술 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행정 업무 능력, 구성원 내 관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급하지 않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매개자나 활동가 역할 없이 생활예술 공동체가 공적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의 운영에는 '예술적 취향'과 '사회적 관계', '조직 내부'과 '조직 바깥'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문화매개자로서 전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46]

전업 활동가는 생활예술이 가는 철학적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5) 2012년 07월 13일 자,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⑩. 협동조합의 성공조건, CBS 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46) 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 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경제와 사회. 한을출판사. 겨울호

다양한 관계 경험과 현안 해결을 통해 얻은 지식(Know how)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 내부 조직도 개성을 중시하고 협동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고 소통하며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동가 조직 내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 보장은 활동가의 자존감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활동가 조직이 권위적인 소통체계로 양적 성과나 결과에 책임과 부담을 느낀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통제나 관리의 사업방식에 원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는 시민을 잘 통치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과 협동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하고 가꾸는 역할을 해야한다. 즉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계몽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참여'로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다. 전업 활동가는 구성원들을 자신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드는 자다.[47]

5)일상생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창작 (생산과 소비의 주체)

생활예술에서 창작은 예술의 소비나 유통을 넘어서는 생산 활동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창작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나와 우리를 차분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동네와 지역 사회 혹은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48] 창작은 공동체 구성원의 평범한 노동과 일상이 소재가 되어 그 의미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창작에 대한 타자의 공감과 지지는 긍정적인 되먹임이 되어 생산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게 된다.

존 듀이는 문화가 허공에서 만들어진, 혹은 자기 자신들이 이룬 인간 노력의 결과가

47)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48) 김태현. 2016. [안산의 지역공동체 연극] 성공회문화대학원.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장기간 쌓이고 쌓인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했다. 이처럼 예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매체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 의미를 갖고 만들어진다.

이제 더는 생활예술의 의미와 그 역할이 순수 예술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생활예술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신조로 미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예술가/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전 고대 예술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고양된 것들이며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다. 지금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아우라를 지닌 예술작품 들은 그 당시 사회적 목적(의미)에 일치되어 생산되었다.[49] 그래서 예술은 직접적인 삶과 경험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의미도 유지할 수 없다.

의미에서 모더니즘 이후 커뮤니티아트나 사회참여예술 등과 함께 나타나는 생활예술은 근대 이후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던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예술 근원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동안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산업 문명이다. 산업사회는 국가주의와 집단적 획일주의, 시장 경제과 성장주의로 무한경쟁을 일으키며 자율적 개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지금 이 산업 문명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와 환경에 지속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며 구질서가 돼가고 있다. 또한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계에서 복잡계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요동이 창발하는 환경은 자율적인 개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혼돈상태에서 가능성이 커진다. 관성과 부정의에 대한 자각이나 새로운 문화변동에 대한 욕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작은 요동을 만들고 있다. 그 요동은 처음 자기 촉매로 공명을 동해 동조화를 만들어 내면서

49) 이재언 옮김.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새 질서가 되어 구질서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그 요동은 의미에 따라 부정적인 되먹임을 받으면 공명에 실패하고 사라진다.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결국, 문화변동과 사회 패러다임 변화는 의미에 긍정적인 되먹임을 일으키는 일상생활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생활예술과 이를 매개한 공동체 활동은 협동에 의한 자주 관리가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여 역량을 발현하는 조건이다. 자율은 자신이 실행한 노동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 관리 운영에서는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합의된 시스템의 공정성에 구성원들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예술 활성화 정책은 중앙 계획과 통제를 줄이고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영역도 구성원의 자주 관리에 확장 이양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예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demo(민중)+cracy(통치) 즉,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은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자격 없는 자, 몫 없는 자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통한 감성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50]고 한다.

생활예술은 감성적 실천 영역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 갱신되고 고양을 바라는 개인이 부르는 예술의 새 이름이다.

50) 심보선. 『그을린 예술』.민음사.2013

발제문

비 어펙티트
–2009년 이후의 청년 예술가들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2009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국제 금융 위기

北京奥运会之后
全球金融危机

재기록되어야 할 과정

被重新编写的程序

중국 예술 교육의 두 시기

中国艺术教育的两个阶段

校门胡同 5

恢复高考，建立艺术教育系统

1977년, 중국은 대입 시험을 재도입하고 예술 교육 시스템을 재확립함

天之骄子

1977-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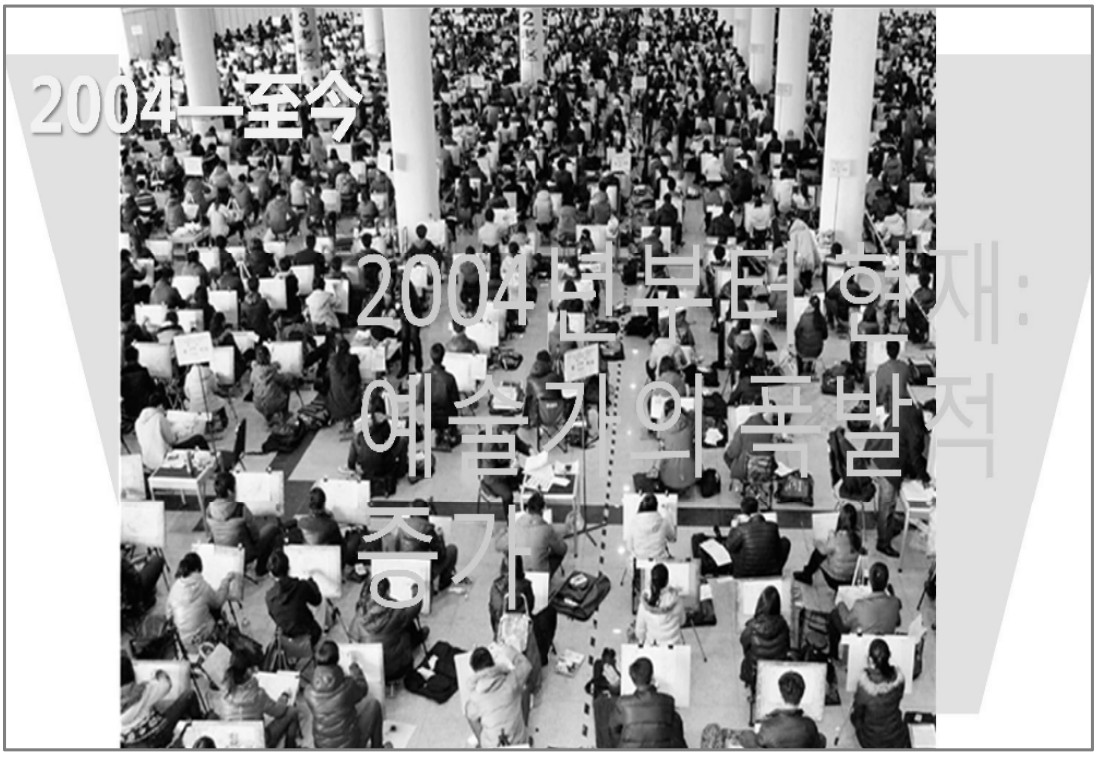


1977년에서 1999년까지 예술가는 명예로운 직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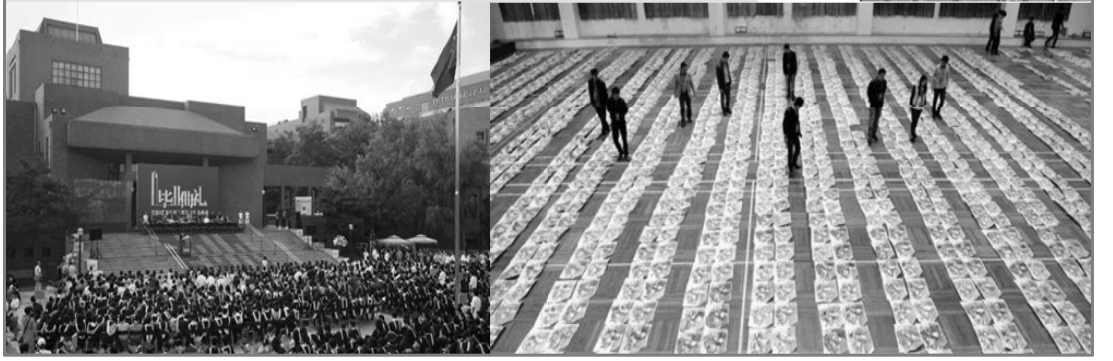




교육 개혁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술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제공함
1999년에 2,000개 대학 내에 700개의 예술 관련 학과가 설립됨
2017년에는 10만 명이 예술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함



教育制度改革，扩大高校招生数量
1999年，2000多所高校，其中700设立艺术学院
2017年，各类艺术院校毕业本科以上学生10万





베이징 내 예술 지구: 역사적 발전 및 분포

北京艺术区

历史沿革&分布

위앤밍위앤 화가 마을
(Yuanmingyuan Painters Village, 1990-1994)

송주앙 화가 마을
(Songzhuang Painters Village, 1994~)

동춘
(Dongcun, 1993-2003)

798 **아트 디스트릭트**
(798 Art District, 2002**년**~)
……

圆明园画家村 (1990—1994)

宋庄 (1994年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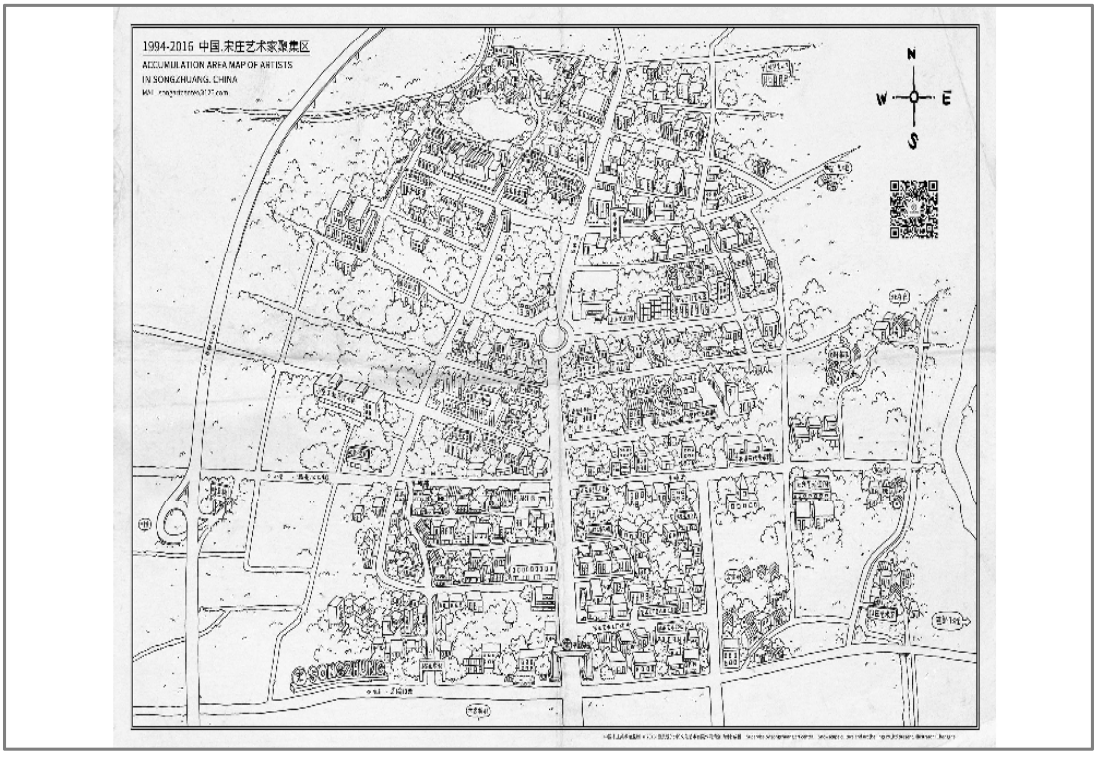
东村 (1993-2003)

798艺术区 (2002起)

……

위앤밍위앤 화가 마을 (Yuanmingyuan Painters Village / 圆明园画家村, 1990-1994)	송주앙 화가 마을 (Songzhuang Painters Village / 宋庄, 1994~)	동춘 (Dongcun / 东村, 1993-2003)	798 아트 디스트릭트 (798 Art District / 798艺术区, 2002년~)
후안티에 예술 지구 (Huantie Arts District / 环铁, 2005-2017)	차오창띠 예술 지구 (Caochangdi Arts District / 草场地, 2004~)	블랙 브릿지 예술 지구 (Black Bridge Arts District / 黑桥, 2006-2016)	동잉 예술 지구 (Dongying Arts District / 东营艺术区, 2007-2010)
진앙 예술 지구 (Jinwang Arts District / 金旺家园, 2015~)	지앙푸 예술 지구 (Jiangfu Arts District / 将府庄园, 2006-2014)	T3 예술 지구 (T3 Arts District / T3艺术区,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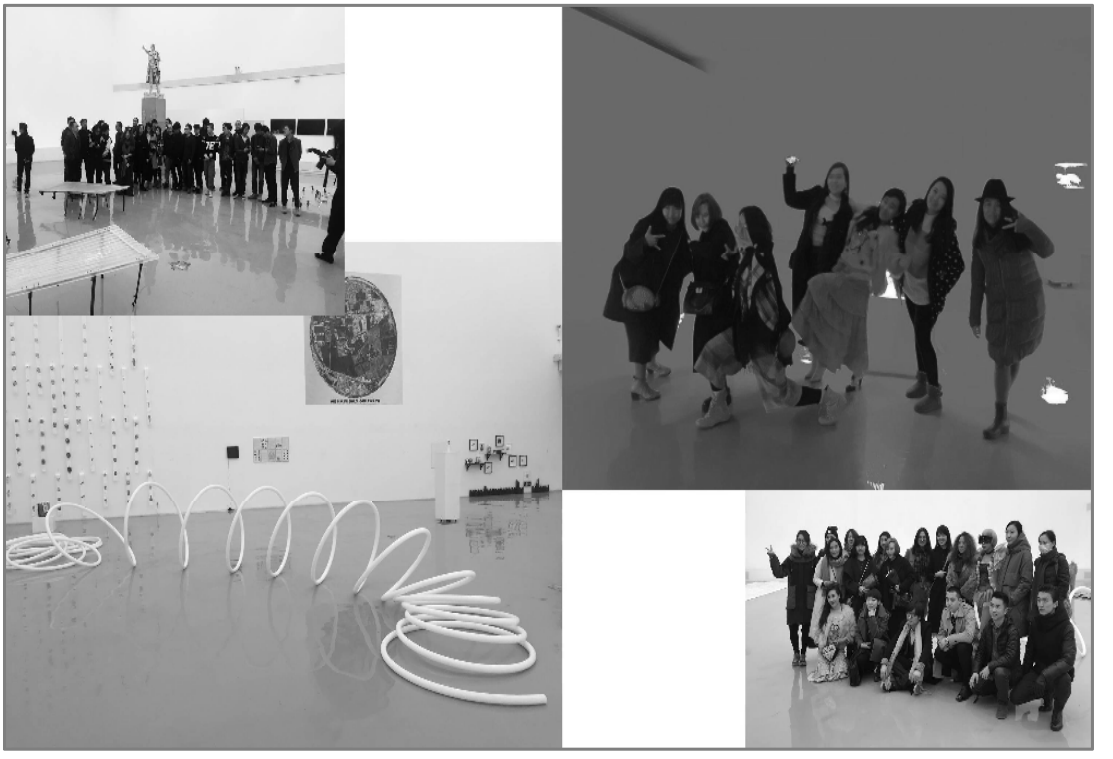

WE:
1994-2013
The 20th Anniversary
Collective Exhibition
of China Song Zhuang
Artists
我们:
1994—2013
中国宋庄艺术家群体
二十周年纪念特展
WE
20
years
2013.9.28-11.18
宋庄美术馆
滨河小区
1996-2004
策展人：方雷
展览时间：2014/05/25 —2014/07/20
开幕时间：2014/05/25 下午15:00
宋庄美术馆
Participating Artists：


1994-2015 中国.宋庄艺术家聚集区
ACCUMULATION AREA MAP OF ARTISTS
IN SONGZHUANG, CHINA
N
W
E
S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
青年艺术家的实践

1970년대에 태어난
예술가들의 고충
七零后艺术家的艰涩
1980년대에 태어난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작
八零后艺术家出发


年轻艺术家的展览
夜走
黑桥
七见
SEVEN VIEWS
MR.JIAN AND MISS KA
PROJECT 8
去火星
GO MARS
2014/4/18
主体
MAJORITY
异见
铅笔
Pencil
孟柏伸




여러 청년 예술가들의 사례
青年艺术家的几个个案



중국 청년 예술가들의 현실적 딜레마

青年艺术家的现实困境

사라지는 예술 지구들

艺术区消失

나이팡지 (Naifangzi) 예술 지구, 008 국제 예술 지구, 지앙푸 (Jiangfu) 국제 예술 지구 등, 수많은 예술 지구가 정부 시책으로 철거됨

奶子房艺术区：2006年，艺术家开始租地自建住房，2010年被拆迁。
蟹岛西艺术区：2006年入驻，2010年被拆迁。
008国际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索家村艺术区：建于2003年，2010年最终被拆迁。
孙河艺术区：2012年被拆迁。
创意正阳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将府艺术区：2006年8月，2014年被拆迁。
长店95号艺术区：2007年，2010年被拆迁。
东营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北皋艺术区：2006年艺术家开始陆续搬入。2010年被拆迁。
.....

높은 부동산
임대료
高房价

도시-농촌
통합
城乡一体化

예술의
가변적 경향
艺术风潮多变

예술 시장의
버블 경제
艺术市场泡沫化

예술가의
저소득 문제
收入不稳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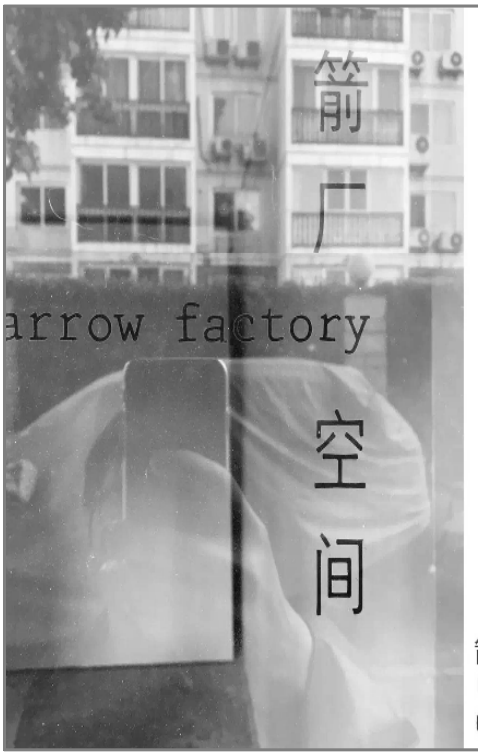


'영향을 받은 (affected)'
젊은 세대의 사회 운동

被行动中的 年轻一代的 社会化运动

베이징의
독립 예술 공간
独立空间
(北京)

❶ 箭场空间
❷ Action
❸ OFF空间
❹ AIYO
❺ M的房间
❻ 分泌场
❼ "我们说要有空间 于是就有了空间"
❽ 惊奇的房间
❾ ON SPACE





箭场空间
애로우 팩토리
(Arrow factory)





액션 (Action)

莫里·麦肯齐，研究过几乎所有黑桥的非营利性空间，也采访过近60位艺术家。他觉得，相较于独立空间的学术性，黑桥的艺术空间和艺术项目有着更强的社交属性。张明信在Action空间的项目"五星大饭店"是邀请大家一起来吃饭，于伯公邀请大家到空间里来做饭、喝伏特加。黄道明将AIYO空间变成了茶室，每天都有艺术家和客人来喝茶聊天。



M的房间





分泌场



北村独立工场（成都） 观察社（广州）
黄边站（广州） 器·Haus 空间（重庆）
上午空间（上海） 实验工作坊（成都）
腾挪空间（广州）
扬子江论坛（武汉）
杂货铺空间（广州）
陵水复合艺术馆（海南陵水）
……

중국 내
타 지역의
독립 예술
공간

국내其他城市



시골로 향하다
回到乡村

2층 출판사 (The publishing house on the second floor), 베이징
二楼出版机构（北京）
스지에쯔 아트 갤러리 (Shijiezi Art Gallery), 간쑤
石节子美术馆（甘肃）
쉬춘 (Xucun)
许村（山西）
더 비산 플랜 (The Bishan Plan)
碧山计划（安徽）
자오 스페이스 (Zao Space), 내몽골
造空间（内蒙）
린조우, 허난
林州（河南）






第11届上海双年城市馆项目
11th Shanghai Biennale City Project
GRAIN GOD NARRATIVE
2016.10.21—2017.2.14
稻米的世界
农法
米宇
米舞




Xu Cun International Art
Community
許村國際藝術公社


HOME LAND
XU C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无二白集
BAZAAR IN WHITE™








宋莊美術館
SONGZHUANG ART CENTER
2012 (首届)
当代艺术 weibo 大展
The First Contemporary Art 'weibo' Exhibition in 2012
http://weibo.com/songzhuangartcenter
Curator : Fang Lei

互联网世界


宋莊美術館
SONGZHUANG ART CENTER
你的世界
第二届当代艺术WEIBO大展(2013)
线上征集时间：
2013.03.12
2013.10.15
www.songzhuangartcenter.com

예술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순수한 이론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예술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부한 매력을 지님. 예술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영원함.

艺术，不是可以被机械使用的理论，它之所以充满魅力是因为它饱含的热情，艺术是无用的，但是是永恒的。



감사합니다.

感谢
聆听

발제문

Be affected
–Young Artists since 2009

Fang Lei
Former Director of Songzhuang Art Center



2009

AFTER BEIJING OLYMPIC GAMES
GLOBAL FINANCIAL CRISIS

北京奥运会之后
全球金融危机

Procedures that be recoded
被重新编写的程序

Two phases of art education of China

中国艺术教育的两个阶段

校尉胡同 5

恢复高考，建立艺术教育系统

In 1977, China reinstate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reestablished the system of art education

天之骄子

1977-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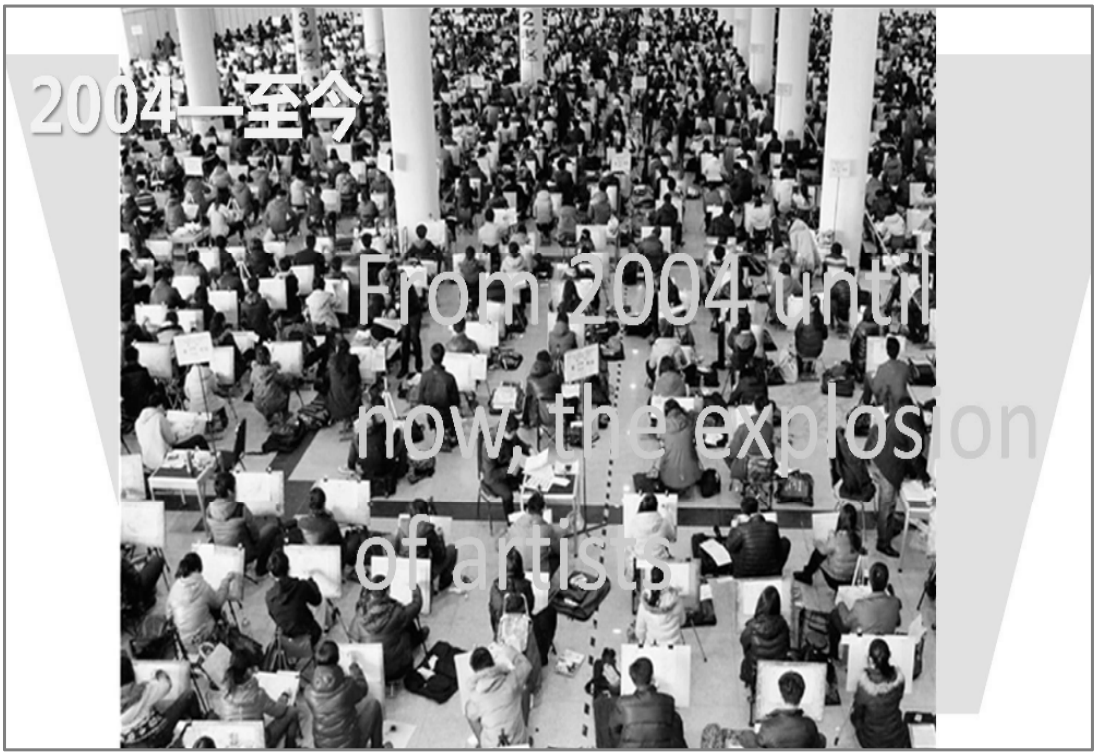


During 1977 to 1999, it was a great honor to be an artist.









Due to the reform of education，more students got the opportunities to study at art colleges
In 1999, 700 departments of art were established within 2000 universities
In 2017, more than 100,000 art students graduated from colleges

教育制度改革，扩大高校招生数量
1999年，2000多所高校，其中700设立艺术学院
2017年，各类艺术院校毕业本科以上学生10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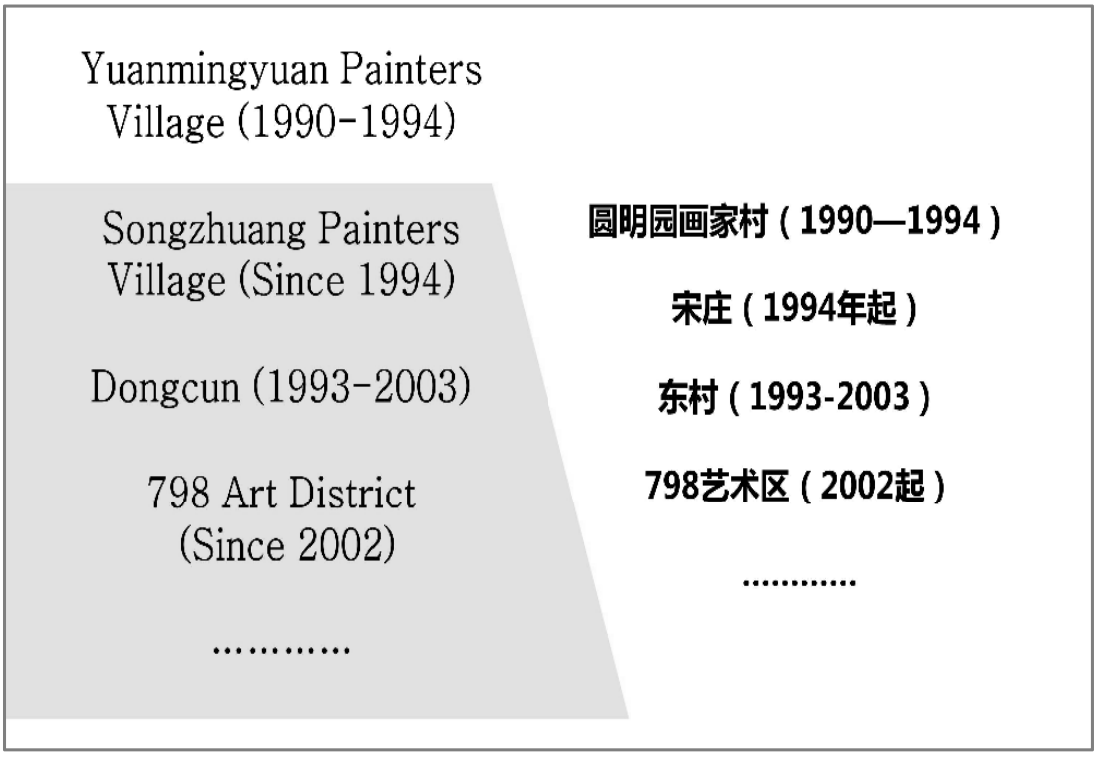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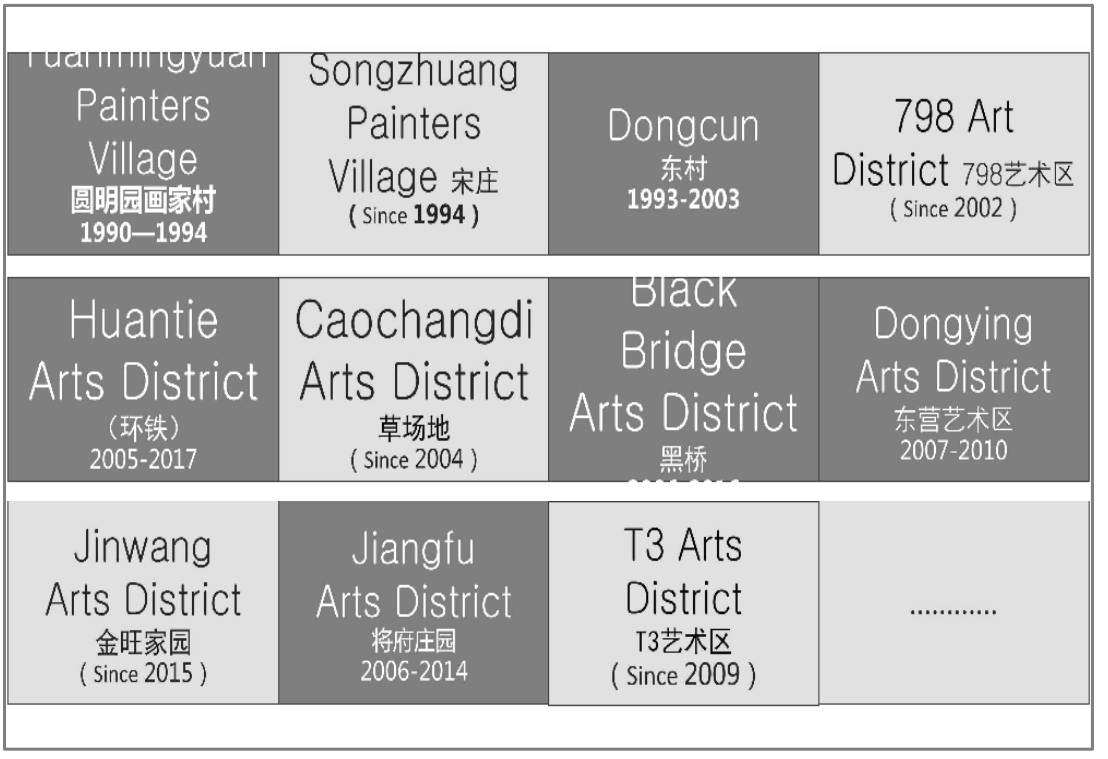


Arts districts in Beijing: historical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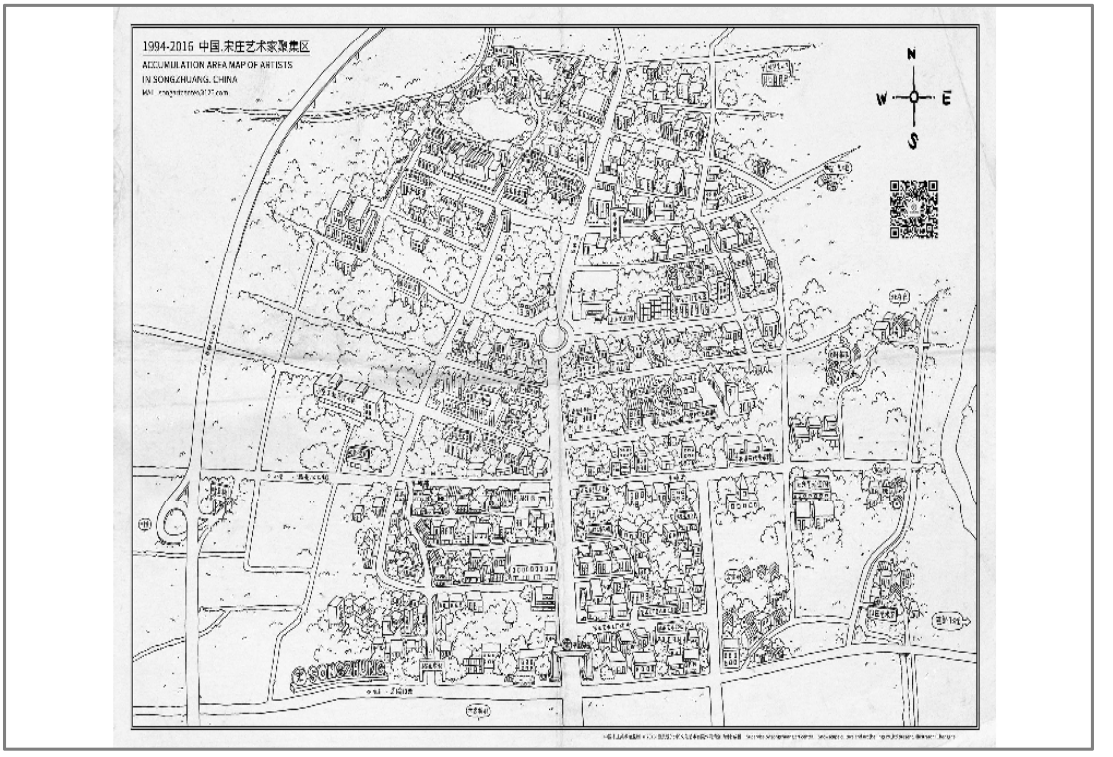
北京艺术区

历史沿革&分布


Yuanmingyuan Painters Village (1990-1994)
Songzhuang Painters Village (Since 1994)
Dongcun (1993-2003)
798 Art District (Since 2002)
.....
圆明园画家村（1990—1994）
宋庄（1994年起）
东村（1993-2003）
798艺术区（2002起）
.....


Yuanmingyuan Painters Village 圆明园画家村 1990—1994
Songzhuang Painters Village 宋庄 (Since 1994)
Dongcun 东村 1993-2003
798 Art District 798艺术区 (Since 2002)
Huantie Arts District (环铁) 2005-2017
Caochangdi Arts District 草场地 (Since 2004)
Black Bridge Arts District 黑桥
Dongying Arts District 东营艺术区 2007-2010
Jinwang Arts District 金旺家园 (Since 2015)
Jiangfu Arts District 将府庄园 2006-2014
T3 Arts District T3艺术区 (Since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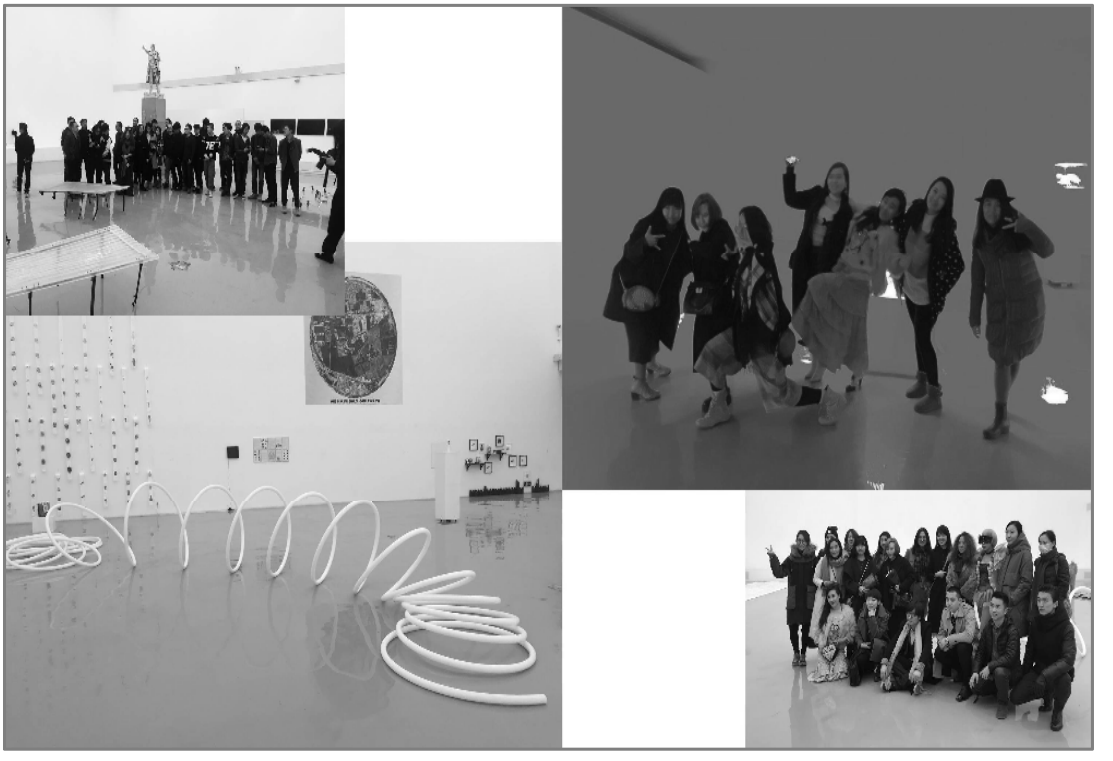

WE:
1994-2013
The 20th Anniversary
Collective Exhibition
of China Song Zhuang
Artists
我们:
1994—2013
中国宋庄艺术家群体
二十周年纪念特展
WE
20
years
2013.9.28-11.18
滨河小区
1996-2004
Participating Artists : Ai Chang > Bai Yihuo > Cao Xiaodong > Cai Dongdong > Chen Guong > Chen Weiqun
Shao Yihong & Mu Chen > Shi Xinning > Hua Jiming > Hai Yun > Han Bing > Li Wei > Liu Ligun > Liu Jin > Liu Zheng
Liu Xiaocheng > Liu Fei > Liu Fengshi > Liu Yu > Ma Han > Ma Yunlei > Meng Qingsong > Wang Haoming (Jiang Ming)
Xu Ruotao > Xu Yihui > Xue Di > Yu Bogong > Yin Ling > Yang Wei > Zhang Dongliang > Zhang Hui > Zhu Ming > Zhu Fadong


1994-2015 中国.宋庄艺术家聚集区
ACCUMULATION AREA MAP OF ARTISTS
IN SONGZHUANG, CHINA
N
W
E
S

The practices by young artists
青年艺术家的实践

The difficulties of artists who were born in the 1970s
七零后艺术家的艰涩
The new beginnings of artists who were born in the 1980s
八零后艺术家出发


年轻艺术家的展览
夜走
黑桥
七见
SEVEN VIEWS
MR.JIAN AND MISS KA
PROJECT 8
铅笔
Pencil
孟柏伸
异见
去火星
GO MARS
2014/4/18
主体
MAJORITY




Several cases of different
young artists
青年艺术家的几个个案



The realistic dilemmas of young artists in China

青年艺术家的现实困境

The disappearance of many arts districts

艺术区消失

Lots of arts districts had been bulldozed by the government，such as Naifangzi arts district, 008 international arts district, Jiangfu international arts district, etc.

奶子房艺术区：2006年，艺术家开始租地自建住房，2010年被拆迁。
蟹岛西艺术区：2006年入驻，2010年被拆迁。
008国际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索家村艺术区：建于2003年，2010年最终被拆迁。
孙河艺术区：2012年被拆迁。
创意正阳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将府艺术区：2006年8月，2014年被拆迁。
长店95号艺术区：2007年，2010年被拆迁。
东营艺术区：建于2007年，2010年被拆迁。
北皋艺术区：2006年艺术家开始陆续搬入。2010年被拆迁。
.....

Real estate is high
高房价

Urban-rural integration
城乡一体化

Bubble economy of art market
艺术市场泡沫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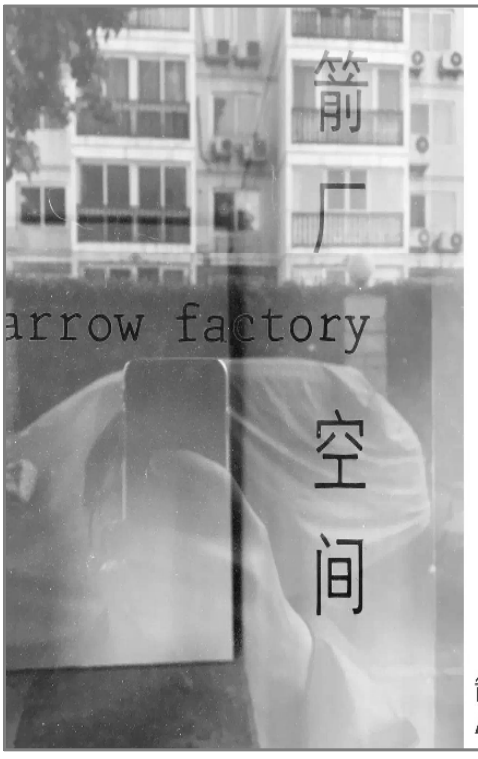
The changeable tendency of arts
艺术风潮多变

Low income of artists
收入不稳定




The social movements among
young generations who had be affecte
被行动中的
年轻一代的
社会化运动


Independent
arts spaces in
Beijing
独立空间
(北京)
❶ 箭场空间
❷ Action
❸ OFF空间
❹ AIYO
❺ M的房间
❻ 分泌场
❼ “我们说要有空间
于是就有了空间”
❽ 惊奇的房间
❾ ON SPACE



箭场空间
Arrow factory







Action

莫里·麦肯齐，研究过几乎所有黑桥的非营利性空间，也采访过近60位艺术家。他觉得，相较于独立空间的学术性，黑桥的艺术空间和艺术项目有着更强的社交属性。张明信在Action空间的项目“五星大饭店”是邀请大家一起来吃饭，于伯公邀请大家到空间里来做饭、喝伏特加。黄道明将AIYO空间变成了茶室，每天都有艺术家和客人来喝茶聊天。



M的房间





分泌场



北村独立工场（成都） 观察社（广州）
黄边站（广州） 器·Haus 空间（重庆）
上午空间（上海） 实验工作坊（成都）
腾挪空间（广州）
扬子江论坛（武汉）
杂货铺空间 （广州）
陵水复合艺术馆（海南陵水）
……

Independent arts spaces in other areas of China

国内其他城市



Go back to countryside
回到乡村

The publishing house on the second floor（Beijing）二楼出版机构（北京）
Shijiezi Art Gallery (Gansu)
石节子美术馆（甘肃）
Xucun (Xucun)许村（山西）
The Bishan Plan碧山计划（安徽）
Zao Space (Inner Mongolia)造空间（内蒙）
Linzhou (Henan)林州（河南）






第11届上海双年展城市项目
11th Shanghai Biennale City Project
GRAIN GOD NARRATIVE
2016.10.21—2017.2.14
稻米的世界
农法
米字
米舞




Xu Cun International Art
Community
許村國際藝術公社


HOMELAND
XU C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无二白集

BAZAAR IN WHITE™








宋莊美術館
SONGZHUANG ART CENTER
2012 (首届)
当代艺术 weibo 大展
The First Contemporary Art 'weibo' Exhibition in 2012
http://weibo.com/songzhuangartcenter
Songzhuang Art Center weibo
策展人：方雷
Curator : Fang Lei

互联网世界


宋莊美術館
宋莊美術館新浪微博：http://weibo.com/songzhuangartcenter
宋莊美術館
SONGZHUANG ART CENTER
你的世界
策展人：方雷
Curator: Fang Lei
线上征集时间：
2013.03.12
2013.10.15
第二届当代艺术WEIBO大展(2013)
www.songzhuangartcenter.com

Art has never been the purely theory that can be used mechanically, it is full of charm because it is full of enthusiasm. Art might be impractical, but it is eternal.

艺术，不是可以被机械使用的理论，它之所以充满魅力是因为它饱含的热情，艺术是无用的，但是是永恒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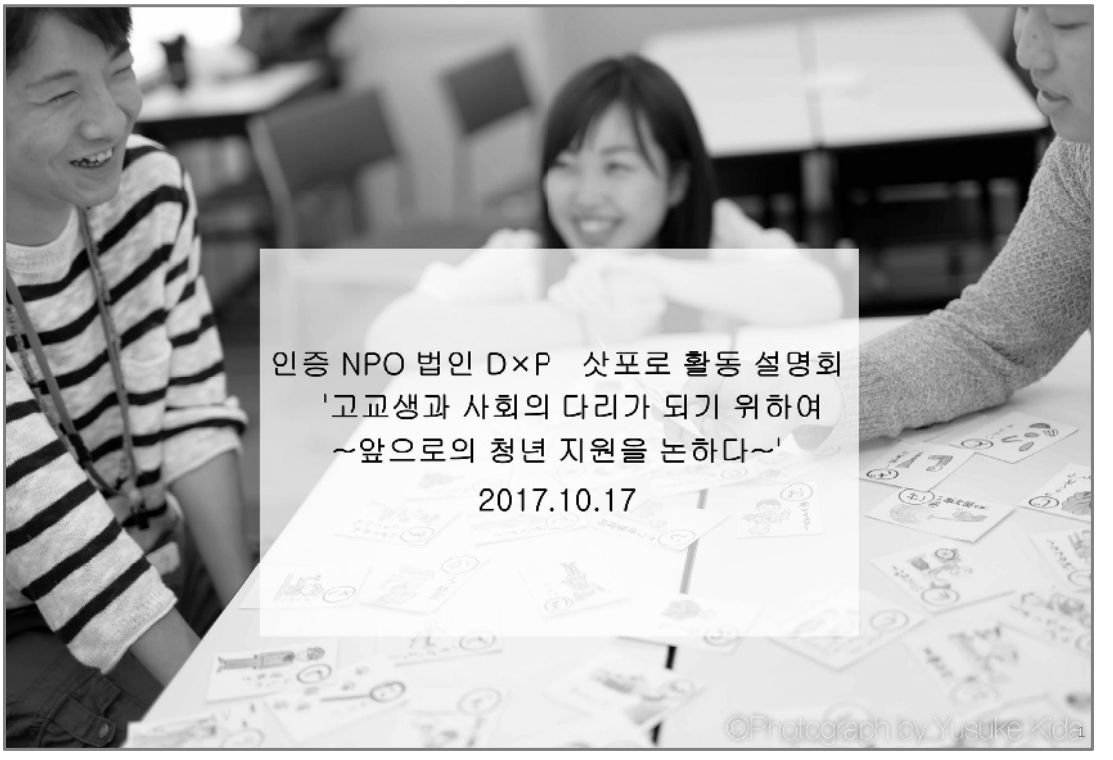
Thank you for listening.

感谢聆听

발제문

고교생과 사회의 다리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의 청년 지원을 논하다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NPO법인DxP 이사장




인증 NPO 법인 D×P
텐마바시·사원 8명·인턴 16명·자원봉사 250명
정액기부회원 310명·스폰서 기업 32개사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사업 도메인의 주축

통신제·정시제 고교용 청년 지원사업



D×P의 청년 지원사업흐름의 확립

D×P는, 학습지원은 다른 NPO와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고교생에게 '사회관계 자본의 구축'과 '성공 체험의 양성' 등 2가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의 진로 결정률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통신·정시제 고교에서의 학점 인정

수업 'Crescendo'



2 수업 후에도 이어지는 '식'을 통한 '이바쇼(居場所, 거처) 프로그램'



3 새로운 도전 '챌린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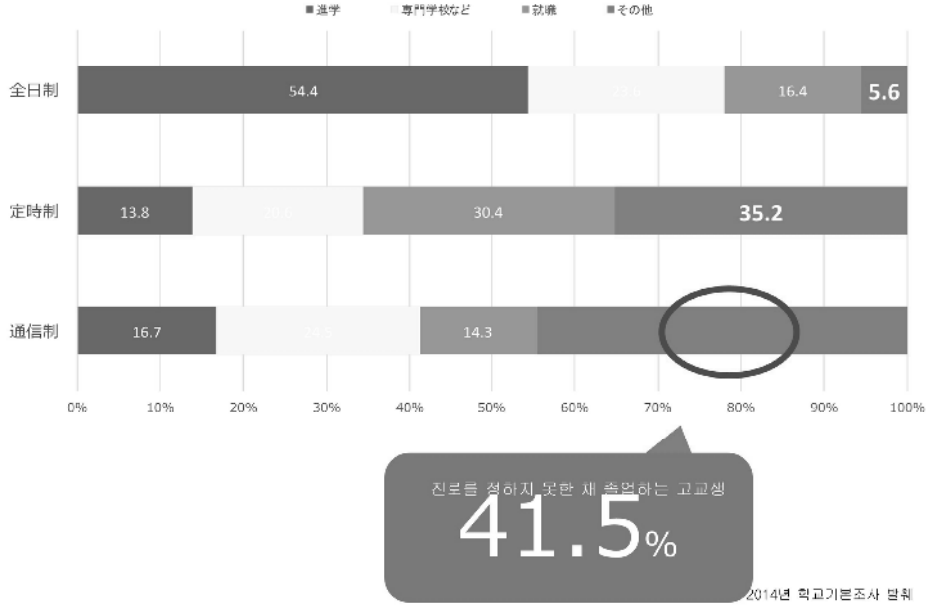


사회관계자본(사람과의 연계)의 구축

성공 체험의 양성

사회 과제

고교생의 졸업 시 진로 진로 정하지 못한 채...



What's The ISUUE?

고통을 짊어진 채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통신·정시제 고등학교의 학생들.

통신제 고교		정시제 고교	
40%	70%	31%	21%
등교거부 경험자	편입·전입 학자	한부모 가정	1학년의 중퇴율

→그리고 통신의 40%·정시의 30%가 진학도 취직도 하지 못한 채 졸업

통신제·정시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태는

■고교 중퇴 경험자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

■등교거부 경험자의 비율이 높다

■취업하는 비율도 옛날에 비해 낮다

■어린이의 빈곤·경제궁핍가정이 많다
(한부모 가정이나 생활보호가정의 비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졸업 시에 진학도 취직도 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

청년 무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을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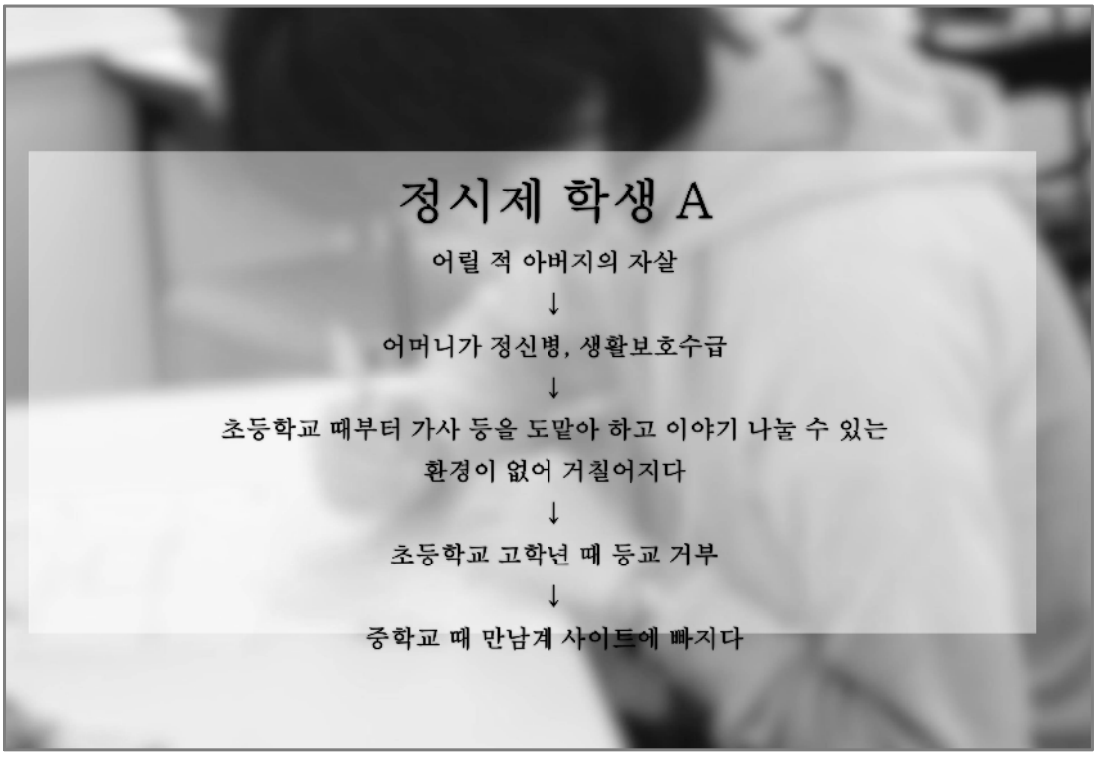
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전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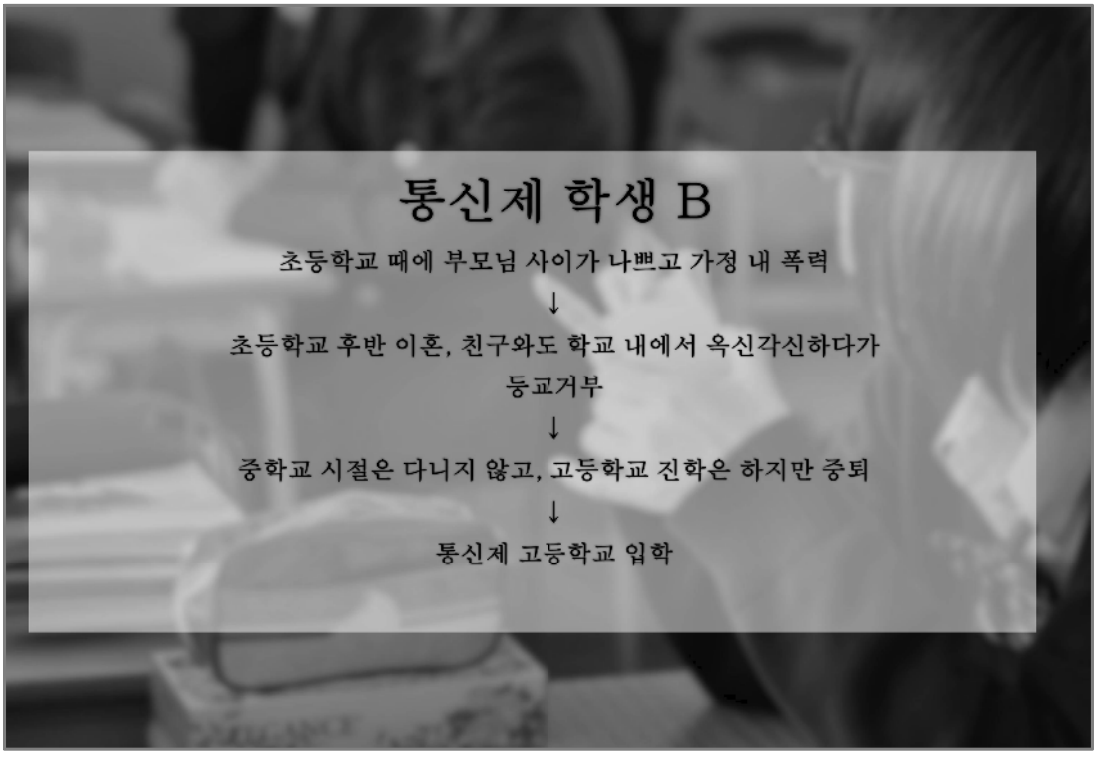

3邦人 イラクで人質
日本経済新聞
4月9日
金曜日
「自衛隊、3日内に撤退」
武装集団 従わねば
日本政府「撤退の理由ない」
バグダッド北方で監禁か
オルガノ
2004년 4월 인질사건


그리고 대학으로
APU


대학시절, 고립


등교거부 문제도 같은 처지
→통신제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Hiroshi OKAMOTO


정시제 학생 A
어릴 적 아버지의 자살
↓
어머니가 정신병, 생활보호수급
↓
초등학교 때부터 가사 등을 도맡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거칠어지다
↓
초등학교 고학년 때 등교 거부
↓
중학교 때 만남계 사이트에 빠지다


통신제 학생 B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 사이가 나쁘고 가정 내 폭력
↓
초등학교 후반 이혼, 친구와도 학교 내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등교거부
↓
중학교 시절은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만 중퇴
↓
통신제 고등학교 입학

D×P의 청년 지원사업흐름의 확립

D×P는, 학습지원은 다른 NPO와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고교생에게 '사회관계 자본의 구축'과 '성공 체험의 양성' 등 2가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의 진로 결정률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통신·정시제 고교에서의 학점 인정 수업 'Crescendo'



2 수업 후에도 이어지는 '식'을 통한 '이바쇼 프로그램'



3 새로운 도전 '챌린지 프로그램'



사회관계자본(사람과의 연계)의 구축

성공 체험의 양성

16

PROGRAM 1

통신·정시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 'Crescendo'
사회인·대학생 자원봉사와의 대화를 축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과 만난다





통신·정시제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맡고 있는 NPO는 D×P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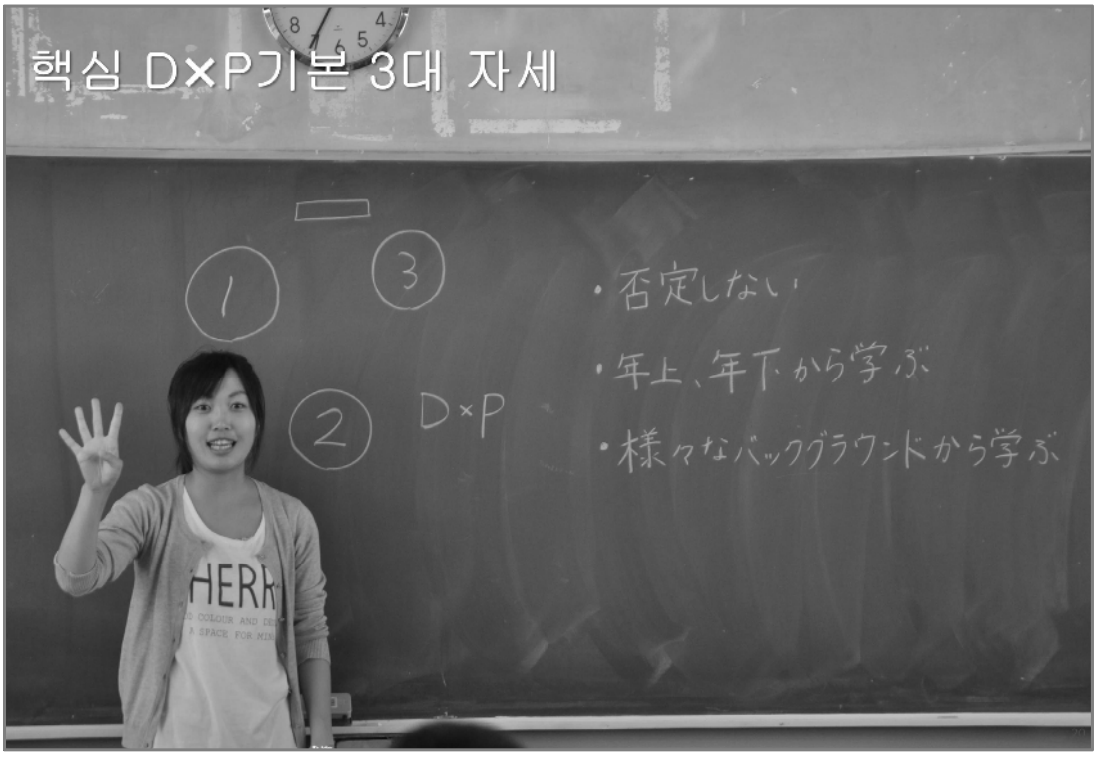
17

Crescendo란?

1. 1회성 수업이 아니다
2. 소수의 클래스에 많은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3. 다양한 어른들의 '과거'와 '삶'을 만난다.
4. 부정하지 않는다는 가치관.
5. 학교 안에서 학교의 수업으로

18




핵심 D×P기본 3대 자세
1
2
3
D×P
・否定しない
・年上、年下から学ぶ
・様々なバックグラウンドから学ぶ


기업도 참여, 합동 연수회 예시


수업 전 협의


사후 MTG

D×P의 청년 지원사업흐름의 확립

D×P는, 학습지원은 다른 NPO와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고교생에게 '사회관계 자본의 구축'과 '성공 체험의 양성' 등 2가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의 진로 결정률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통신·정시제 고교에서의 학점 인정 수업 'Crescendo'



2 수업 후에도 이어지는 '식'을 통한 '이바쇼 프로그램'



3 새로운 도전 '챌린지 프로그램'



사회관계자본(사람과의 연계)의 구축

성공 체험의 양성

24

PROGRAM 2

수업에서 만난 학생과 계속해서 만나는
'이바쇼(居場所, 거처) 프로그램'

동창회, 사진부, 아트부, 풋살 등
고교생의 '사회관계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입니다.



D×P 사진부



D×P 아트부



동창회

25



고등학교에서의 고교생·졸업생의 있을 만한 곳(居場所)을 곳을 만드는 주 1, 2회 '이고고치(居心地, 편안한 곳) 카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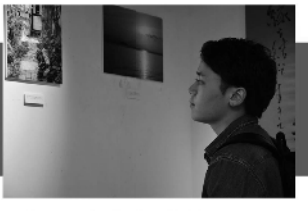
PROGRAM 3

'OK 됐다! ' 의 경험을 나누는
챌린지 프로그램

숙박형 인턴이나 스터디 투어의 참가,
아트전·사진전 개최, 이벤트 운영 등 고교생에게
도전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숙박형 인턴
※이관



아트·사진전 개최



스터디 투어 참가

27



D×P의 사업부 전체상

비전: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란?

올해부터 굉장할 거야.

사람과의 연계	+	일하면서 배운다	+	살 수 있는 곳
학생과 사회를 잇는 사업부		취업 지원/ 커뮤니티 창출 사업부		생활 지원 사업부(가) ※앞으로
청년이 '사람과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에 있으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부		청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①취업처와의 매칭과 진로 상담 ②직업훈련이 가능한 장을 만드는 사업부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장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부. 앞으로 실시

認定NPO法人 D×P

DxP's INCOME

사업 수입과
기부 수입의 하이브리드형

사업 수입

사립 고등학교나
대학·전문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실시, 수업
컨설팅 비용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과제를 안고
있는 학생 대상



+

기부 수입

공립 고등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실시, 애프터
크레센도 프로그램의
실시 비용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이나 지원의 손길이
없는 학생 대상



30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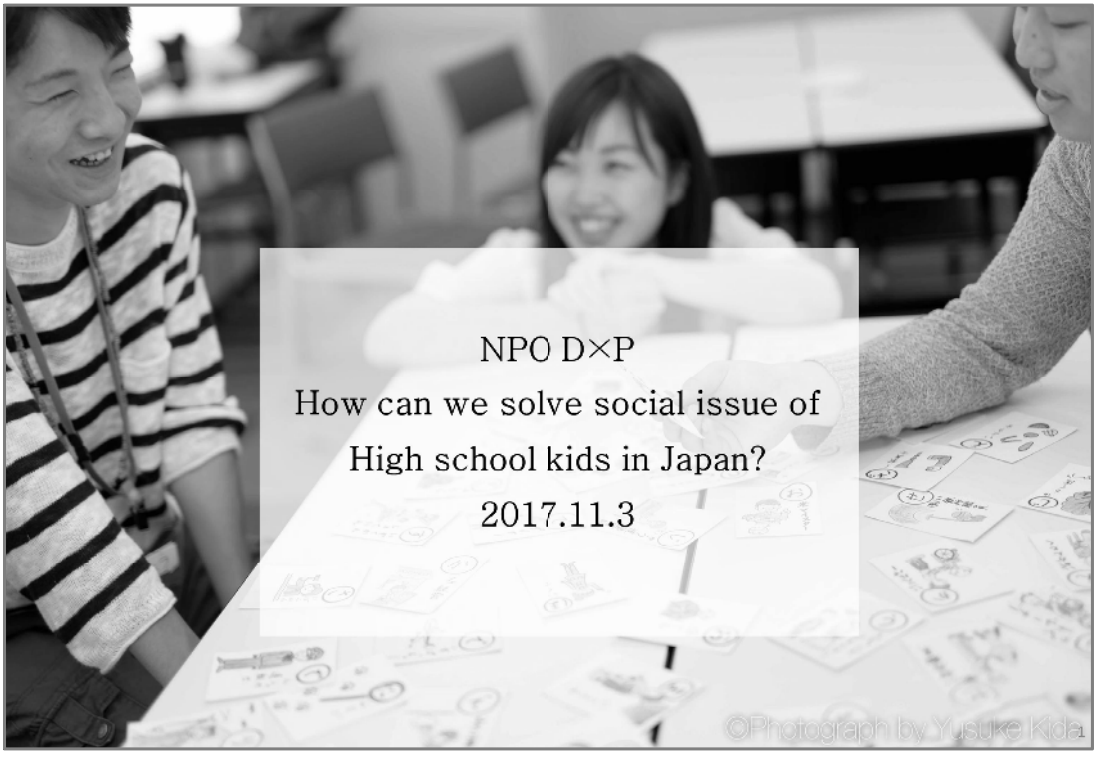
시대에 부응해 조기에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NPO 조직으로

인증 **NPO** 법인 DxP

발제문

How can we solve social issue of High school kids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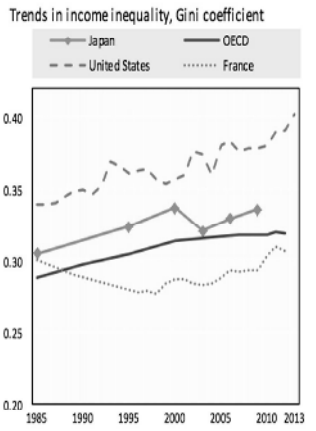
Noriaki Imai
Chairman, NPO Co. Dx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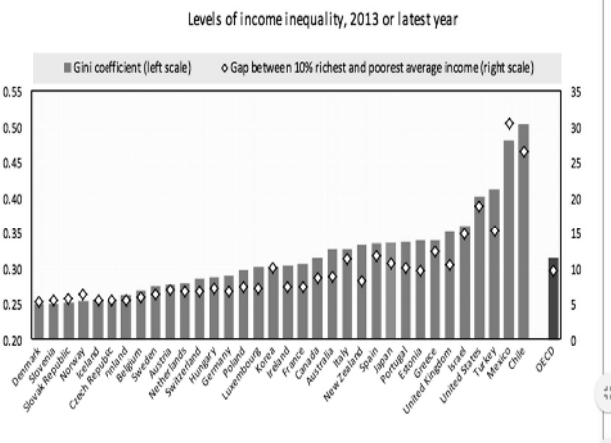


Do you think Japan have a problem in Poverty?

2

Figure 1: Trends and levels of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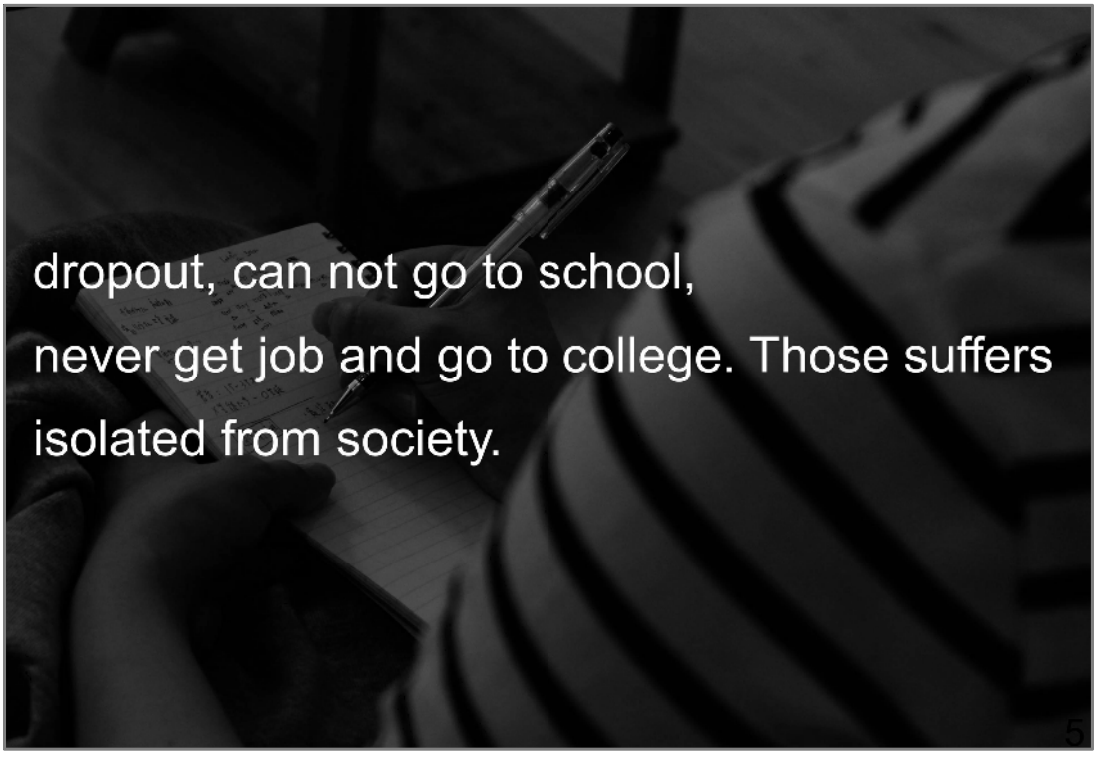
The Gini coefficient is a common measure of income inequality that scores 0 when everybody has identical incomes and 1 when all the income goes to only one person.

* Other surveys, such as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ggest lower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n 2009.

3

In Japan, one in six children lives in poverty.

4




NPO D×P Tackling those issues for high school children in Japan.


What we do : Support Sevice for Correspondent and Night High school

What's The ISUUE?

しんどさを抱え、未来に希望を持てない、通信・定時制高校の生徒たち。

Correspondent high school

Night high School



Experience not go to school

Experience Drop out more than o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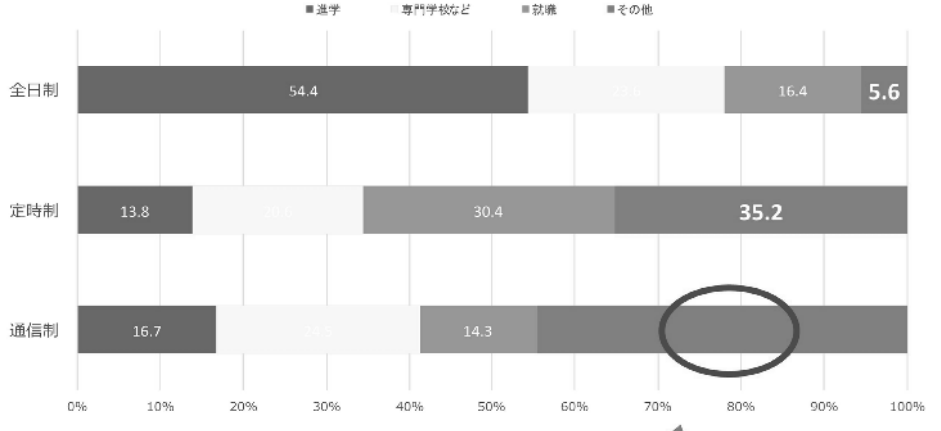
Single parents

Drop out rate in 1st year

180,000 □ 100,000 = 280,000 Kids

Social Issue

Do not get Job and go College after graduate



進路が決まらないまま卒業する高校生

41.5%

H26学校基本調査より

Why do I start NPO D×P?

10




9 days Captured
葬られた「拘束日本人」「殴打映像」のすべて


University
APU


Isorated piriod


Meeting with students
©Hiroshi OKAMOTO

D×P PROGRAM

Supporting 1000 High school kids in 2016,
Providing Empowerment program

1 Class for Emporment program "Crescendo"



2 After Class Supporting Service



3 Challenge program



Making Social Capital

Making Experience for Self Esteem

16

PROGRAM 1

"Crescendo" is supported by 180
highly commitmented vollunter in 2016.





D×P is Known as first NPO having proper class with high school.

17

PROGRAM 2

After class supporting Service

Example



Photo Club



Art Club



After class getharing

18



19



PROGRAM 3

Challenge Program



Long Intern program



Exhibition program



Overseas Program

dp


Long Internship Program
In Small island in countryside


Exhibiton Program
©Kanako SUM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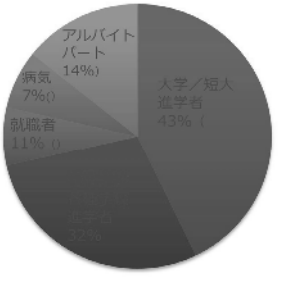
Our Result

Job and College Rate after Graduate

86%

※通信制高校全体での進路決定率は55.5%

2016年3月に卒業した
クレッシェンド受講生の進路状況



【出典】NPO法人D×P
（クレッシェンド実施校へのヒアリングに基づき）

d.p

25


Education is equal chance to
Have good life in their life.

Special Session 3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_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토론자 _ 정초시(충북연구원 원장)

펑젠창(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싱궈(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고우이용(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다즈강(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정일지(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준교수)

발제문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교류 상황 및 협력 제안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1. 허베이성(河北省)사회과학원 소개

허베이성정부 직속 기관인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허베이성 사회과학 분야 최고의 종합연구기관이자 허베이성정부의 싱크탱크이다. 산하에 경제연구소, 농촌경제연구소, 재무경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인력자원연구소, 법학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신문방송학연구소,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연구센터, 관광연구센터를 비롯한 연구기관 12곳, 사회과학정보센터(도서관)와 '허베이학간(學刊)', '경제논단', '사회과학논단'을 포함한 학술 정기간행물 잡지사 3곳을 두고 있다.

본원의 주요 학과는 농촌경제학, 지역경제학,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연구, 지방사(地方史)연구, 현대문화(문학)발전연구이고, 주요 지원 학과는 서비스경제, 인구사회학, 마르크스주의철학과 현대화, 지방법제구축이며, 주요 육성 학과는 인재자원개발, 신문방송학, 거시경제정책학, 관광경제이다.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거시경제와 공공정책연구센터, 도농발전연구센터, 혁신드라이브발전연구센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의 약칭]협력발전연구센터, 사회관리연구센터 등 비정규(비실체)싱크탱크연구센터 5곳을 세우고 업무상 필

요에 따라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인력과 공동으로 싱크탱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간행물 '싱크탱크 성과 전문 보고서', '정책 결정 참고'는 허베이성정부에 직접 보고된다.

본원의 전문가 인재에는 국가 고위층 인재 특수 지원 계획 입선 전문가[국가 '만인계획(萬人計劃)' 철학사회과학 리더 인재] 1명, 국무원 특별 수당 전문가 8명, 전국 문화 선전 계통 '사개일비(四個一批)' 인재 1명, 허베이성 관리 우수 전문가 3명, 허베이성 우수 전문 기술 인재 1명, 허베이성에 크게 공헌한 청장년 전문가 14명이 포함된다.

2.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 교류 상황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개방적인 대외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공 등 국가의 23개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대외 교류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 중 중요한 협력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본원은 한국 충남연구원,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과 3자 협력 관계를 맺고 지방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특히 '삼농(三農)', 환경, 관광 등 주요 분야에 대해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한중 양국의 지역 발전 정책과 '삼농', 환경, 관광 등 주요 분야 전문 연구 ② 전문가 상호 방문, 연구 분야 경험 교류와 학습 ③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④ 매년 대표단 상호 파견, 관련 시찰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된다.

⑵ 본원은 일본 이와테(岩手)대학과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테 대학, 도호쿠(東北)대학의 농촌문제 연구 전문가와 수년간 협력 과제 연구(출판 저작 포함)를 진행하였고 중일 농촌 발전 학술 심포지엄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상호 학술적 상호 방문과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두 연구소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이슈는 2022년 허베이성 장자커우(張家口)에서 동시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빙설 인재 육성, 빙설 관광 개발 등이다.

(3) 본원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포트웨인캠퍼스(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자 간 상호 방문. 본원 학자 6명이 잇달아 인디애나대학 포트웨인캠퍼스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②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매년 대표단 방문 기간 공통의 관심 주제와 관련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③ 협력 연구 진행. 본원의 사회학연구소와 인디애나대학 포트웨인캠퍼스의 사회학과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재단에 신청을 논의 중이다.

(4) 본원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 버나디노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는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주요 활동에 학자들의 상호 방문 연수, 학술 시찰 방문, 협력 연구 진행 등이 포함되며 특히 전자상거래 연구 분야에서 심층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5) 본원과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의 현대중국연구센터는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허베이성 낙농업 발전에 대해 협력 연구를 실시하였고 농업 발전과 관련 정책에 대해 수차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제 학술회의에 상호 참가하였다.

(6) 본원과 러시아 과학원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전문가와 학자가 상호 방문하여 중국 문제, 경제발전 예측, 인구와 취업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7) 본원은 영국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과 협력하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 연구생을 모집, 육성하고 있다.

(8) 본원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경영대학원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에는 학자 상호 방문, 학술 교류, 유학생 양성이 있으며 원거리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허베이성정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중 본원의 역할

⑴ 대외정책 결정 연구: 본원의 연구원은 국제 정세 변화, 대외 경제무역, 투자유치, 허베이 대외개방 확대 등 문제에 관한 과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성정부 및 관련 부처에 연구 보고와 제안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⑵ 외국 관련 문제 자문: 성정부와 관련 부처에 국제 정보 자료와 자문 서비를 제공한다.

⑶ 주요 국제 교류 행사 참여: 2013년 4월 본원은 허베이성과 미국 아이오와(Iowa)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아이오와주 농업부처 및 농업 협력사와 현대 농업 발전 문제에 대해 교류를 실시하였다.

⑷ 주요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획 참여: 2017년 상반기 본원은 허베이성 대외 우호협력 조직 일환으로 허베이성과 미국 아이오와주가 허베이성 청더시(承德市) 롼핑현(灤平縣)에 공동 구축하는 '중미 우의 시범 농장'프로젝트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의 농장의 시범 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4. 본원이 추진 중인 대외협력 교류 활동

⑴ 허베이성 국제 싱크탱크 포럼 개최: 매년 한 차례 3회 연속 개최

⑵ 연구원들의 해외 국제 학술회의 및 학교 방문 장려, 자금지원

⑶ 매년 대표단 해외 파견, 외국 대표단 영접, 학술 교류 실시

⑷ 발전 수요에 맞춰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 및 수립, 대외교류 확대

⑸ 지방대학 및 기타 지방기관이 외국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하도록 지원

5. 협력 확대 제안

⑴ 공통 관심사 문제(과제)에 관해 공동 연구, 대비 연구 실시

⑵ 상대측에 상호 지원 제공(주로 협조, 연락, 인도), 상대측 연구원이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시찰하도록 지원

⑶ 단기 교류 협력 과제 선정 제안: 환경 관리, 신농촌건설과 도농일체화 발전, 신도시 건설

발제문

河北省社会科学院对外学术交流情况及合作建议

彭建强
河北省社会科学院副院长′ 研究员〔教授〕

1. 河北省社会科学院简介

河北省社会科学院是河北省政府直属事业单位，是河北省社会科学领域最高综合性研究机构，也是省政府的智囊机构。全院有经济研究所、农村经济研究所、财贸经济研究所、社会发展研究所、人力资源研究所、法学研究所、哲学研究所、历史研究所、语言文学研究所、新闻与传播学研究所、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研究中心、旅游研究中心共 12 个研究部门，同时拥有社会科学信息中心（图书馆）和《河北学刊》、《经济论坛》、《社会科学论坛》3 个学术期刊杂志社。

在学科建设上，农村经济学、区域经济学、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地方史研究、当代文化（文学）发展研究为我院重点学科，服务经济、人

口社会学、马克思主义哲学与现代化、地方法制建设为重点扶持学科，人才资源开发、新闻传播学、宏观经济政策学、旅游经济为重点培育学科。

在智库建设上，河北省社会科学院成立了宏观经济与公共政策研究中心、城乡发展研究中心、创新驱动发展研究中心、京津冀协同发展研究中心、社会治理研究中心 5 个非编制（非实体）智库研究中心，根据工作需要，联合院内外人员力量开展智库研究。内刊《智库成果专报》、《决策参考》直报省政府参阅。

在专家人才方面，现有国家高层次人才特殊支持计划入选专家（国家"万人计划"哲学社会科学领军人才）1 人、国务院特殊津贴专家 8 人、全国宣传文化系统"四个一批"人才 1 人、河北省省管优秀专家 3 人、河北省杰出专业技术人才 1 人、河北省有突出贡献中青年专家 14 人。

2. 河北省社会科学院对外学术交流情况

河北省社会科学院坚持开门办院，积极开展对外交流合作，先后与韩国、日本、美国、俄罗斯、新西兰、加拿大、英国、法国、意大利、巴西、墨西哥、澳大利亚、南非等国家的 23 所高校或科研机构建立了友好合作关系，形成了较为广泛的对外交流格局。其中较为重要的一些合作对象和合作内容有：

（1）我院与韩国忠南研究院、中国黑龙江省社会科学院建立了三方合作关系，就地方层次区域发展政策,特别是就“三农”、环境、旅游等重点领域开展学术交流与合作。具体内容包括：①就中韩两国区域发展政策和“三农”、环境、旅游等重点领域展开专题研究；②推进专家互访，促进人员在研究领域的经验交流和学习；③共同举办学术研讨会；④每年互派代表团，开展相关考察活动。

（2）我院与日本岩手县立大学有着长期合作关系。与日本岩手县立大学、日本东北大学的农村问题研究专家曾开展过多年的合作课题研究（并出版著作），开展过多次中日农村发展学术研讨会，始终保持着学术互访和学术交流活动。最近两院校关注的重点为 2022 年由我省张家口协办的北京冬季奥运会，以及冰雪人才的培养、冰雪旅游的开发等。

（3）我院与美国印第安纳大学-普度大学韦恩堡分校（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有着长期合作关系。主要内容包括：①互派访问学者，我院先后有 6 名学者到印第安纳大学-普度大学韦恩堡分校研修访学 6 个月；②联合举办学术研讨会，每年利用代表团访问机会，就双方共同感兴趣的主题开展学术研讨；③开展合作研究，我院社会学所与印第安纳大学-普度大学韦恩堡分校的社会学系，正在协商合作申请国际研究项目基金。

（4）我院与美国加州州立大学圣伯纳迪诺分校（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有着长期合作关系。主要内容是派出访问学者研修、学术考察访问和开展合作研究，特别是在电子商务研究领域有着较为深入的交流。

（5）我院与新西兰惠灵顿维多利亚大学（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当代中国研究中心有着长期合作关系。近年来，曾就中国和河北省奶业发展开展合作调研，就农业发展和相关政策开展过多次学术研讨，互相参加国际学术会议。

（6）我院与俄罗斯科学院有着长期合作关系。最近几年，每年都有双方专家学者互访，主要在中国问题研究、经济发展预测、人口与就业等领域开展交流合作。

（7）我院与英国国立密德萨斯大学（Middlesex University）合作，联合招收培养在职博士。

（8）我院与美国加州大学河滨分校（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商学院合作，主要是开展学者互访、学术交流、培养留学生，并就远程在线教育进行合作研究开发。

3. 我院在河北省政府国际交流合作中的作用

（1）涉外决策研究：我院科研人员针对国际形势变化、对外经济贸易、

招商引资、扩大河北对外开放等方面的课题研究成果，形成研究报告和建议上报省政府及相关部门决策参考。

（2）外事咨询：为省政府及相关部门提供国际信息资料查询和咨询服务。

（3）参与重大国际交流活动：2013 年 4 月我院参加了河北省与美国艾奥瓦州建立友好省州 30 周年纪念活动，与美国艾奥瓦州农业部门和农业合作社，就现代农业发展问题进行了交流和对接。

（4）参与重大国际合作项目谋划：2017 年上半年，我院参与了河北省对外友协组织的关于河北省与美国艾奥瓦州联合在河北省承德市滦平县建立“中美友谊示范农场”的项目研讨，对友谊农场的示范内容和发展方向提出建议。

4. 我院正在推动的对外合作交流活动

（1）举办河北省国际智库论坛：每年举办一次，已经连续举办三届。

（2）鼓励和资助科研人员出国参加国际学术会议或访学。

（3）每年派代表团出访，接待国外来访，开展学术交流。

（4）根据发展需要，谋划建立新的合作关系，拓展对外交流。

（5）协助地方高校或其他地方机构与国外机构建立合作关系。

5. 进一步合作建议

（1）就共同关心的问题（课题）开展联合研究、对比研究。

（2）互相为对方提供支持（主要是协调、联系、引领），帮助对方科研人员来本国本地区开展较为深入的专题调研和实地考察。

（3）建议近期交流合作选题：环境治理；新农村建设和城乡一体化发展；新城建设。

발제문

한중일 지방 싱크탱크 협력 심포지엄 발언 요약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제3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에서 싱크탱크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각국 전문가, 학자와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조직위원회 발의와 포럼 주제에 맞춰 3가지 측면에서 산둥사회과학원 싱크탱크 구축 상황 및 대외 교류와 협력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산둥사회과학원 기본 상황 소개

1978년 3월 설립된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인민정부 직속 종합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성(省)위원회 및 성정부의 주요 '싱크탱크'이자 '브레인 트러스트'이다. 산둥사회과학원은 기초 이론 연구와 응용 대책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 이론과 현실 문제를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둥사회과학원 산하에는 문화연구소,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소, 국제유학(儒學)연구교류센터, 마르크스주의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인구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 재정금융연구소, 현대종교연구소, 성(省) 상황/사회발전 연구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정책연구실, 싱크탱크연구센터 등 연구기관 16곳, 기능처 7곳, 성급(省級) 연구기지 7곳을 두고 있다.

산둥사회과학원 직원은 300명에 달하며 이 중 전문 기술인 200여 명, 고급 전문 기술직이 140명에 달한다. 설립 이래 획득한 연구 성과는 2만여 건, 출판저작물은 1,000여 부에 달하고 국가 및 성급 우수 성과상을 받은 성과물이 500건에 달하며 350여 건의 연구 성과는 중앙 및 성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많은 연구 성과는 국내외 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었다.

2015년 이후 성위원회와 성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산둥사회과학원은 성정부가 제기한 '중국 일류 싱크탱크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연구조직, 성과전환, 심사평가, 인재양성, 비용관리 등 측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 중국 내 지방 사회과학원 중 최초로 사회과학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산둥싱크탱크연맹을 발기함으로써 여타 지방의 사회과학원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을 추진, 선구자와 시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산둥사회과학원 대외 교류와 협력 현황 및 성과

현재 본원은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30여 개 연구기관, 대학과 학술 교류 및 협력 협의를 체결하였고 70여 개 단체와 밀접한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본원은 글로벌 정상급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세계 유명 대학 싱크탱크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LKYSPP) 아시아경쟁력연구소와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본원 전문가, 학자의 학술적 시야를 넓혔고 국제 학계에서의 본원의 지명도를 높였다.

한국과의 교류에서 본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동대학,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상호 방문, 과제 협력,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의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원은 안동대학과 '한중유학(儒學) 교류대회'를 3차례 공동 개최해 유가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주제로 심층적인 교류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중해양경제포럼'을 7차례 공동 개최하여 한중 해양경제 정책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

산둥성 발전포럼'을 20차례 공동 개최하여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24개 이슈 의제에 대해 깊은 교류를 나눴고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에서 산둥사회과학원의 역할이 점차 뚜렷해지고 추진 프로젝트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첫째, 산둥성과 경기도, 지난(濟南)시와 안동시 2쌍의 우호도시 체결을 성사시켰다.

둘째, 한중 유학교류대회, 한중 해양경제포럼 등 유명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셋째, 산둥과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와 경제, 무역 분야에서 심층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넷째, 한중 해양 페리와 해저터널 건설 방안 검토, 검증에 참여하여 한중 해양 페리 개통을 가속화했다.

3. 성급(省級)정부 대외교류 협력 중 산둥사회과학원의 역할 및 계획

지방의 차세대 싱크탱크인 산둥사회과학원은 경제문화 강성(强省) 건설 가속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省)의 경제/사회 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제정, 중대 전략 계획, 주요 프로젝트 검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본원은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산둥성 우호도시 발전 연구 보고', '산둥성 성급 우호도시 교류 질 평가 연구 보고' 등 2편의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산둥성 대외 우호도시 발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주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산둥성의 향후 우호도시 발전에 참고할 만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 밖에 '산둥성-러시아 투자 협력 강화 연구', '새로운 상황 하의 산둥성-싱가포르 중장기 협력 계획', '산둥성-호주 중장기 협력 계획' 등 3편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거나 작성에 참여하여 산둥

성의 대외 개방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산둥성 자유무역지대 건설 신고 방안 검증에 참여하였고, 한중 자유무역지대 선행 시범지역 건설 방안을 참고하여 '한중일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 건설 연구', '산둥–한국 경제무역 협력의 실천 경험 연구' 등 2가지 과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중일 지방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신형 싱크탱크 건설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대외개방 현황에 입각하여 산둥 대외개방 심화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고 산둥의 대외개방 고도화, 대외개방 수준 향상, 경제/문화/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

첫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의 주요 분야와 실행 가능한 방법을 준비한다. 현재의 산둥 대외개방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정부에서 조직한 외사(外事)자문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산둥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상황 하의 대외개방 심화 전략 구상, 주요 분야와 방향을 적절히 제안함으로써 성정부가 대외개방 정책을 제정하는 데 참고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둘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의 사전 연구와 방안 검증을 강화한다. 산둥성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 현황, 핵심이익, 전략 배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각 측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협력하는 데 유리한 잠재적 우위를 연구, 분석한다. 또한 연구 역량을 집중시켜 지역경제 협력에 대해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여 정부 간 공식 교섭과 협력에 선도적, 예열적, 완충적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 소통과 전략 연계를 촉진한다. 산둥사회과학원은 국가 간 발전 단계, 역사 전통,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 싱크탱크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학술 심포지엄,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형식을 통해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와 간극을 제거하여 지역경제체 간 정책 소통과 전략 연계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명은 개방할 때 발전하고 민족은 융합할 때 공존한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며, 지방 싱크탱크 간 심층적 교류 추진, 환황해 각국 간 실무 협력 촉진 등에서 이번 포럼이 중요한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우정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제문

中日韩地方智库合作研讨会上的发言提纲

王兴国
山东社会科学院副院长′教授

很荣幸受邀参加“第三届环黄海论坛”，与来自各国的专家学者就智囊机构在环黄海圈地方政府间国际交流中的作用进行交流。根据组委会提议和论坛主题设置，我从三个方面简要介绍一下山东社会科学院智库建设情况及对外交流与合作的现状。

一、山东社会科学院基本情况介绍

山东社会科学院成立于1978年3月，是山东省人民政府直属的综合性社会科学研究机构，是省委、省政府的重要“思想库”和“智囊团”。山东社会科学院始终坚持基础理论研究与应用对策研究并重，着重研究解决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中提出的重大理论与现实问题。

山东社会科学院现有文化研究所、历史研究所、哲学研究所、国际儒学研究与交流中心、马克思主义研究中心、法学研究所、人口学研究所、经济研究

所、农村发展研究所、国际经济研究所、财政金融研究所、现代宗教研究所、省情与社会发展研究院、海洋经济文化研究院、政策研究室、智库研究中心等16个研究机构，7个职能处室和7个省级研究基地。

山东社会科学院现有在职人员近300人，其中专业技术人员200余人，具有高级专业技术职称人员近140人。建院以来，取得各类研究成果20000多项，出版著作1000余部，成果获国家和省部级优秀成果奖近500项，350多项研究成果获得中央和省领导的批示。许多研究成果在国内外学术界产生了重大影响，在改革开放和经济社会发展中取得了良好的社会效益。

2015年以来，在省委、省政府的大力支持下，山东社会科学院围绕省领导提出的“建设国内一流智库”这一目标，在科研组织、成果转化、考核评价、人才培养、经费管理等方面进行了大胆地改革创新，在全国地方社科院中率先实施了社会科学创新工程，并在全省倡议发起了山东智库联盟，新型智库建设走在各省市地方社科院的前列，在全省地方智库建设中较好地发挥了引领和示范作用。

二、山东社会科学院对外交流与合作的现状及成就

目前，我院与美国、加拿大、巴西、俄罗斯、英国、法国、德国、澳大利亚、新西兰、新加坡、日本、韩国等国家的30余个科研机构或高等院校签订了学术交流与合作协议，与70余个单位保持着密切的学术交流与合作关系。尤其是近3年来，我院与全球顶尖智库美国兰德公司和全球知名大学智库新加坡国立大学李光耀公共政策学院亚洲竞争力研究所建立了学术交流与合作关系，进一步开拓了我院专家学者的学术视野，提升了我院在国际学术界的知名度。

在对韩交流方面，我院与韩国海洋水产开发院、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韩国安东大学、韩国京畿开发研究院等，通过人员互访、课题合作和共同举办国际学术会议等形式，保持着长期的学术交流与合作关系。我院与韩国安东大

学共同举办了三届“中韩儒学交流大会”，围绕儒家文化的传承与创新这一主题进行了深入的交流和探讨；与韩国海洋水产开发院共同举办了七届“中韩海洋经济论坛”，为中韩海洋经济政策领域的交流与合作做出了积极贡献；与韩国京畿开发研究院共同举办了十二届“山东省-京畿道发展论坛”，先后围绕两省道共同关注的24个热点议题进行了深入交流，为两省道经济社会的繁荣发展提供了智力支持。

近年来，山东社会科学院在推动山东省对外交流与合作中的作用越来越明显，推动的项目也越来越多，主要有以下几个方面：

一是促成了山东省与京畿道、济南市与安东市两对友好城市的建立。

二是定期举办中韩儒学交流大会、中韩海洋经济论坛等品牌学术会议。

三是推动了山东与俄罗斯、澳大利亚、新加坡等国在经贸方面的深入合作。

四是参与了中韩海洋轮渡和海底隧道建设方案的研讨和论证，加速了中韩海洋轮渡的开通。

三、山东社会科学院在省级政府对外交流合作中的角色及打算

作为地方新型高端智库，山东社会科学院围绕加快经济文化强省建设这一目标，在事关全省经济社会文化发展大局的重要政策制定、重大战略规划、重点项目论证上主动作为、积极献策，较好地发挥了智库资政建言和服务决策的功能。在山东省对外交流与合作过程中，山东社会科学院也积极建言献策。近年来，我院在深入调研和系统分析的基础上，主持完成了《山东省友城发展研究报告》《山东省省级友城交往质量评估研究报告》等两份报告，深入分析了山东省对外友好城市发展的现状、存在的问题及今后的重点发展方向，为我省新时期友城发展提供了决策参考；主持或参与了《山东省加强与俄罗斯投资合作研究》《新形势下山东省与新加坡中长期合作规划》《山东省与澳大利亚中长期合作规划》等三份研究报告的撰写，为山东省深化对外开放提供了智力支

撑；参与了山东省自贸区建设申报方案的论证，并结合中韩自贸区先行试验区建设方案，开展了《中日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建设研究》《山东与韩国经贸合作的实践经验研究》两个课题的研究，为中日韩地方经济合作积极建言献策。

在新型智库建设的大背景下，山东社会科学院将立足山东省对外开放的现状，大力加强山东深化对外开放的战略研究，在优化山东对外开放格局、提升山东对外开放水平、促进山东经济文化社会可持续发展上发挥应有的作用。

一是酝酿山东省对外交流与合作的重要领域和可行路径。在深入系统地分析当前山东对外开放格局的前提下，积极参与省政府组织的外事咨询会议，围绕山东经济社会发展需求，有针对性地提出新形势下深化对外开放的战略设想、重要领域和重点方向，为省政府制定对外开放政策提供决策参考。

二是加强山东省对外交流与合作的前期研究和方案论证。全面了解与山东省友好合作的国家和地区的发展现状、核心利益、战略安排，研究梳理出有利于各方深入广泛开展合作的潜在优势，并集中科研力量对区域经济合作开展前期研究，提出针对性和操作性强的对策建议，以期对政府间正式谈判与合作起到先导、预热和缓冲的作用。

三是促进山东省对外交流与合作的政策沟通与战略对接。由于国家与国家之间的发展阶段、历史传统、文化背景等诸多方面存在差异，山东社科院将积极参与区域智库合作，通过学术研讨、人员互访、共同举办国际学术会议等形式，达成学术共识，增进相互信任，消除误会和隔阂，在促进区域经济体之间政策沟通与战略对接上发挥建设性作用。

“文明在开放中发展，民族在融合中共存”。希望本届论坛的成功举办，能进一步搭建起友谊的桥梁，在推动地方智库之间的深入交流、促进环黄海各国之间的务实合作等方面发挥重要的引领和示范作用，并为维护地区和平与稳定，促进地区繁荣与发展作出新的贡献。

발제문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싱크탱크의 역할과 제안

– 구이저우성(貴州省)사회과학원을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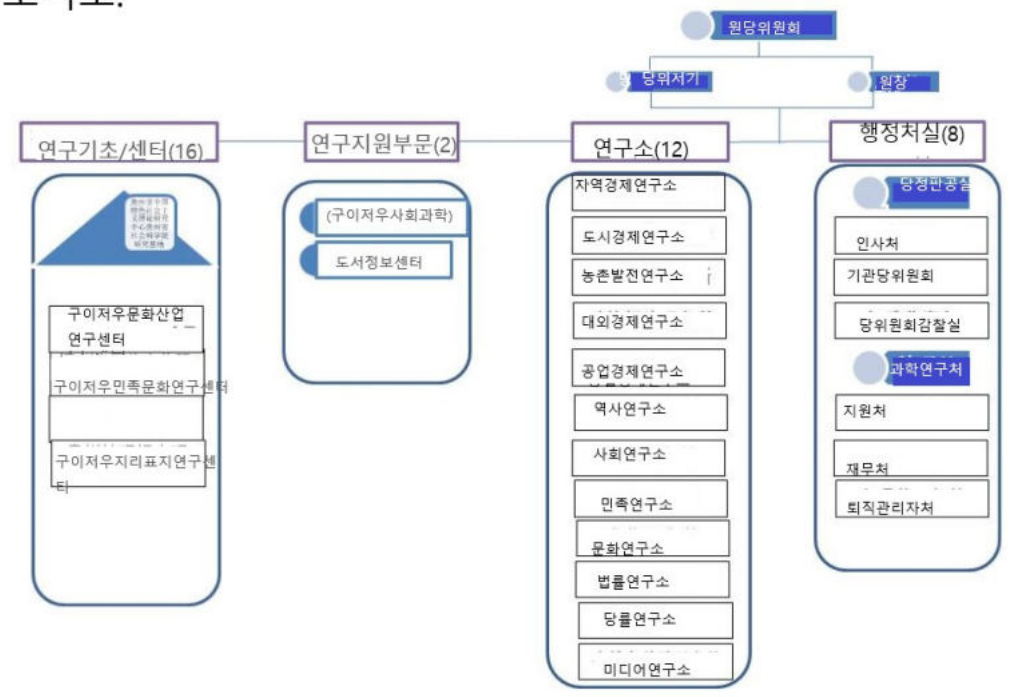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1.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 개황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은 구이저우성 유일의 철학/사회과학 종합 연구기관으로, 구이저우성인민정부 직속 기관이다.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구이저우분원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며, 1979년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으로 개명되었다.

산하에 연구소 12개, 연구지원부문 2개, 행정처실 8개를 두고 있다. 관리자 직원은 184명, 정년 퇴직한 직원은 129여 명이다. 정급(正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27명, 부급(副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65명,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직원은 70명, 박사 학위 소지자는 40명이다.

조직도:



2. 연구 과제 및 연구 활동

기초이론 연구

지난 수년간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은 양명(陽明)문화연구, 삼선건설(三線建設)연구, 구이저우불교문화연구, 항전(抗戰)문화연구, 묘족무경(巫經)문화연구 등을 주제로 하는 기초이론 연구 체계를 형성했다. 또한 민족법학, 산업경제학, 빅데이터관리학, 민족학, 지역경제발전경제학, 응용사회학, 중국역사, 전문사(專門史), 금학(黔學)을 주제로 하는 학과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의 두드러진 성과는 중공중앙선전부 '마르크스주의 이론연구와 건설 공정' 주요 실천 경험 종합 과제 2건을 진행하여 선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정책결정 응용 연구

구이저우성 각급 정부의 규획, 주요 문건 담당이 핵심인 정책결정 응용 연구이다. 최근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본원의 전문가가 [국무원(2012)2호] 문건, 첸중(黔中)경제구 역발전규획 등 국가, 성(省)의 주요 문건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성 지도부 지시 과제'와 '사회과학 내부참고', '여론정보', '정무정보', '자슈(甲秀)싱크탱크 전문보고서' 등을 주요 채널로 하는 연구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 정책결정에 자문 역할을 한다. 최근의 두드러진 성과는 성 지도부 지시 과제의 연간 입안 수가 2010년의 14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증가했고, 매년 20여 건의 연구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 주요 고위인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와 관련 부처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략정책 결정 연구

성위원회, 성정부의 정확한 지도 아래 '과학연구, 인재양성, 관리강화'라는 3대 전략을 견지하고 기초연구에 기반하며 응용대책 연구를 핵심으로, 구이저우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이론과 현실 문제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전략정책 결정 연구를 부단히 심화하고 있다.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는 '구이저우 법치 발전 보고', '구이저우 사회 발전 보고'로 대표되는 구이저우 청서 시리즈 13종이 중국 지방 사회과학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본원이 주최한 후발주자추월포럼, 쟈슈싱크탱크포럼과 본원이 주관한 '생태문명과 반빈곤' 주제포럼 등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대외교류 협력 내용 및 프로젝트

대외교류 협력 기관 건립

'원(院)-성(省), 원-원, 원-지방, 원-학교, 원-기업' 협력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구이저우성 최초의 문과(文科) 박사후 실무기관을 건립했고 27명이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구이저우성 유일의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실무기관 및 중국사회과학(베이징)도농규

획설계연구원 구이저우분원 및 구이저우금학연구원, 구이저우성불교문화연구원, 구이저우성삼선건설연구원, 성사회과학원첸시난저우(黔西南州)분원, 구이저우-스위스발전비교연구센터, 빅데이터정책법률혁신연구센터 등 10여 개 연구기관을 건립했다.

대외교류 협력 프로젝트 전개

원-성 협력 프로젝트인 구이저우성인민정부가 중국사회과학원에 의뢰한 협력 프로젝트로, 본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구, 세계은행에서 의뢰한 연구 프로젝트, 구이저우-스위스 발전 강화 연구인 스위스(구이저우)산업단지 시범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지방 사회과학원의 역할(효용)과 제안

역할(효용)

지방 사회과학원은 전국 철학/사회과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이자 싱크탱크 건설의 중요한 역량으로,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방 사회과학원은 철학/사회과학 연구와 혁신의 중요한 기지로, 대외개방 확대에 사상 이론의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싱크탱크', 브레인 트러스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어 싱크탱크 정보 자료 공유를 실현하고 신형 싱크탱크 건설을 지원하며 국내외 일류의 싱크탱크와 유명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대외문화교류기지'를 세우고 문화 해외진출 및 유치에 관한 전략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국내외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과 구이저우가 경제, 문화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제문

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智囊机构的角色和建议

– 以贵州省社会科学院为个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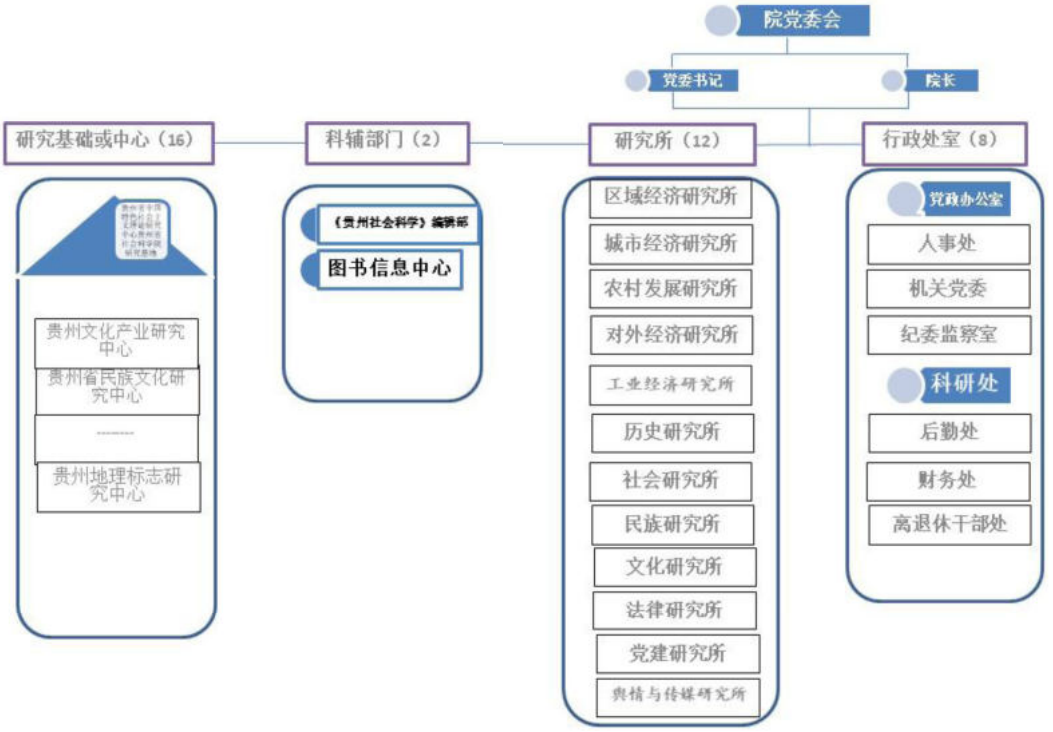
苟以勇
贵州省社会科学院对外经济研究所所长/研究员

一、贵州省社会科学院概况

贵州省社会科学院是贵州省唯一的哲学社会科学综合性研究机构，是贵州省人民政府直属事业单位。其前身为1960年成立的中国科学院贵州分院哲学社会科学研究所，1979年更名为贵州省社会科学院。

全院现有12个研究所，2个科辅部门，8个行政处室。现有干部职工184人，离退休人员120多人。全院有正高级专业技术职称人员27人，副高级专业技术职称人员65人。有研究生以上学历人员70人，博士40人。

组织图：



二、研究课题及研究活动

——基础理论研究。多年来，贵州省社会科学院形成了以阳明文化研究、三线建设研究、贵州佛教文化研究、抗战文化研究、苗族巫经文化研究等为重点的基础理论研究体系；构建了以民族法学、产业经济学、大数据治理学、民族学、区域经济与发展经济学、应用社会学、中国历史、专门史、黔学为重点的学科体系。近期突出成绩是：承担了中共中央宣传部“马克思主义理论研究和建设工程”重大实践经验总结课题2项，得到中宣部的高度肯定。

——应用决策研究。以承担贵州省各级政府的规划、重要文件为重点的应用决策研究。近期突出成绩是：我院专家首席专家起草[国务院（2012）2号]文件、黔中经济区发展规划等国家、省重要文件。以“省领导批示、圈示课题”和《社科内参》《舆情信息》《政务信息》《甲秀智库专报》等为主要渠道的研究成果服务省委省政府决策咨询。近期突出成绩是：省领导圈示课题年立项数量由2010年的14项增加到2017年的66项；每年有20多项研究成果得到省委省政府主要领导的肯定性批示；许多成果直接或间接进入省委、省政府和有关部门的确决策。

——战略决策研究。在省委、省政府正确领导下，着力实施“科研立院、人才强院、管理兴院”三大战略，以基础研究为依托，以应用对策研究为重点，以贵州经济社会发展中的重大理论和实际问题为主攻方向，战略决策研究不断深入。近期突出成绩是：以《贵州法治发展报告》《贵州社会发展报告》为代表的贵州蓝皮书系列13种，居中国地方社科院前列。主办的后发赶超论坛、甲秀智库论坛和承办的“生态文明与反贫困”主题论坛等影响力不断扩大。

三、对外交流合作内容及项目

——组建对外交流合作机构。创新“院省、院院、院地、院校、院企”合作机制，建立贵州省第一个文科博士后科研工作站，目前已有27人进站；建立贵州省唯一的中国社会科学院学部委员工作站；组建中社科（北京）城乡规划设计研究院贵州分院。组建贵州省黔学研究院、贵州省佛教文化研究院、贵州省三线建设研究院、省社科院黔西南州分院、贵州与瑞士发展比较研究中心、大会数据政策法律创新研究中心等20多个研究机构。

——开展对外交流合作项目。院省合作项目，即贵州省人民政府委托中国社会科学院的合作项目，我院与中国社会科学院联合开展重大项目研究；世界

银行委托研究项目；加强贵州与瑞士发展研究，瑞士（贵州）产业园示范园建设项目等。

四、地方社科院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的角色（作用）和建议

——角色（作用）。地方社科院作为是全国哲学社会科学的一支生力军和智库建设的重要力量，在推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应担当重要角色。

地方社会科学院是哲学社会科学研究和创新的重要基地，能为扩大对外开放提供思想理论资源，能对推进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发挥‘思想库’‘智囊团’作用。

——建议

- 搭建学术交流平台，实现智库信息资料的共享互动，服务新型智库建设，加强与国内外高端智库和知名专家的联系交流。
- 建立“对外文化交流基地”，积极开展文化走出去及引进来的相关战略研究。
- 积极拓展国际国内合作渠道，加强与韩国的交流合作，助推贵州与韩国在经济、文化上的相互了解与双向合作。

발제문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1.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헤이룽장분원 철학사회과학학부와 1964년 설립된 헤이룽장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79년 성(省)위원회 승인을 거쳐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이 설립됐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전국 일류의 지방 사회과학원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형 싱크탱크 건립을 목표로 과학연구, 인재 양성, 제도관리, 개방, 민주 노선을 견지하며 자생동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외 영향력과 혁신 추진력을 높임으로써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산하에 연구소(센터) 13곳, 기관처실 9곳, 연구지원 부문 2곳, 간행물 발간 기관 1곳, 교육 기관 2곳을 두고 있다. 헤이룽장성에 분원 12개, 지역 상황 조사연구 기지 6곳이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상황 조사연구 헤이룽장 기지 사무실이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에 설치돼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18개 성급(省級) 리더 인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치학 이론은 헤이룽장성 '535 공정'의 제2군이다. 또한 고급 연구원 33명,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 40명을 보유한 외에도 국가

에 크게 기여한 청장년 전문가, 국무원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문화건설종신영예상 수상자, 헤이룽장성우수청장년 전문가, 성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지역문화 명사 등 8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학습과 탐색', '헤이룽장 사회과학', '시베리아 연구', '중국-동북아 국가 연감' 등 공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4종 및 연감 및 보고서 '요보(要報)'를 발간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석사 학위 수여 권한을 보유한 5개 지방 사회과학원 중 하나로, 응용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세계사 4개 1급 학과의 석사 학위 수여 권한과 정치학, 세계사 2개 성급 중점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직업대학)은 사회과학원 유일의 성인 대상 고등교육기관이다.

설립 이래 각종 연구 성과 1.5만여 건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저작, 편저, 번역서 680여 부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급, 성급 주요 과제 380여 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에는 국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 80여 건, 동북공정 약 20건, 성(省) 사회과학 연구 계획 프로젝트 240여 건, 성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40여 건이 포함되며 500여 건의 성과가 성부급(省部級, 성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현임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당위(黨委) 서기(書記)는 중국공산당헤이룽장성위원회 부비서장(副秘書長) 우펑청(武鳳呈)이고 원장은 주위(朱宇) 연구원이다.

2. 대외 학술교류 상황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은 1980년대 전 소련과의 국경무역 협력에서 시작되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싱크탱크로서 지리적 이점과 연구 경험을 이용하여 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지원했으며, 전 소련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소련 및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 모스크바대학, 전 소련과학원 극동분원 역사/고고(考古)연구소, 극동분원 아시아태평양지리연구소, 아무르주립대학 등과 중앙 및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파트너 관계를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헤이룽장사회과학

원은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북한, 몽골과의 다양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유라시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타 지역과의 학술교류를 아울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각국이 싱크탱크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관한 의견' 등 건설 의견이 추진되면서 헤이룽장성은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룽장성이 세계적 안목과 지역의 시야를 갖춰 관심이 집중되는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권위 있고 선도하는 성급 싱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포지셔닝에 따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형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있다. 본원이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에는 러시아연구소, 동북아연구소, 유태인연구센터, 동북아/국제문제연구센터가 있으며 기타 연구소와도 교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기관이 주를 이룬다. 수년간의 국제교류 상황으로 볼 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1) 양자/다자 간 학술 관계 광범위 체결

최근 성위원회 선전부와 외사판공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심화를 통해 한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긴밀하게 학술 교류를 실시한 결과, 체결된 학술 계약과 협력 MOU가 20여 건, 창출된 인맥이 500명 이상에 이른다. 이 중 한국과 7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중문화우호협회,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회, 둥북아역사재단), 러시아 5건, 일본 5건, 몽골 2건, 북한 1건(논의 중)을 체결했다. 성 나아가 전국의 동북아연구에서 권위적 위치를 구축하고 학술과 미디어 발언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여 명 학자 해외출국 50여 차례, 상대국 학자 등 500여 명의 방문 영접이 1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중 한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1개월 이상 연수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2가지 측면에서 학술교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첫째, 국제문제 연구 학자들의 일본국제교류재단, 성외사판공실 국제협력교류원, 민간단체 실무 연수 등 프로젝트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충청북도, 한중문화우호협회,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 일본홋카이도대학에서 객원 연구와 실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에 달한다. 둘째, 한국 정초시, 정지현, 미국 키신저(Kissinger), 바셰프스키(Barshefsky), 일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야마베 유키고(山邊悠喜子), 타바타 신이치로 (田畑伸一郎), 아라이 히로후미(新井洋史), 몽골 바야사후, 투무얼, 이스라엘 올메르트(Olmert)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명예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내외 명예 특별 연구원이 31명에 달하고 유명인 효과를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수준을 향상하며 영향력과 감화력을 제고하고 있다.

(2) 과학연구와 싱크탱크 국제교류의 장 구축 강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지방 싱크탱크로서 글로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조건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와 센터가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싱크탱크포럼과 관련 심포지엄 정기 개최, 국내외 싱크탱크 협력 연구 등 방식을 통해 국내외 싱크탱크, 국가와 지방 싱크탱크의 연계, 관점 논의, 교류 소통, 신뢰 증진에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개방, 혁신, 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국제포럼을 이용하여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는 데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10회 이상의 중국-러시아 지역협력포럼 개최에서 발전한 동북아지역발전포럼은 이미 6회째를 맞이하였고, 2014년 성정부 지시에 따라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으로 개명되었다. 본원은 상기 포럼을 주관하고자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 학자, 정부 고위층, 다국적기업인을 결집시키고, 학술 교류를 통해 헤이룽장성 개혁개방 성과를 홍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 소련 장관회의 의장, 러시아연방부총리, 중러우호협회 의장, 20여 명의 러시아과학원 원사(院士), 6명의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주(駐)선양(沈陽) 한미일 총영사, 한/미/일/북한/몽골 유명 학자, 주중(駐中) 경제계/기업계 인사 약 500명이 잇달아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중러박람회 기간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과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 위원회 선전부, 광밍(光明)일보사와 공동 주관하는 '동북진흥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협

력포럼의 2가지 고정 포럼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전국일본경제학회연회, 전국신흥경제체헤이룽장분과포럼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문헌출판사와 공동 수립한 동북아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기반해 중국동북아국가연감, 중-러 양국언어 청서, 동북아 청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한/러/일/몽골 등 국가의 학자를 초빙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경지역을 공동 시찰함으로써 싱크탱크 협력과 교류의 상시화, 고급화, 플랫폼화를 실현하였다.

(3) 동북아지역 최초 다자 간 싱크탱크 연맹 결성

2016년 6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동북진흥과 일대일로 건설 글로벌 포럼' 개최라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 동북아 싱크탱크 연맹 결성을 제안, 동북아 한/중/일/러/몽골 등 51개 싱크탱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플랫폼 개척, 싱크탱크 교류 촉진, 실무협력 추진에서 다자 간 싱크탱크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싱크탱크 협력이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 3대 국제문제연구소, 지방 사회과학원 9곳, 정부연구센터, 유명 학부의 싱크탱크 등 중국 싱크탱크 39곳과 한국 4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몽골 2곳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맹은 동북아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에 이론적, 실천적인 다자 간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설립 1년간 싱크탱크 연맹은 헤이룽장사회과학원에 설치된 동북아연구소의 비서처(秘書處)를 통해 양자/다자 간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상대국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포럼, 양자 혹은 다자 간 조사연구 및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향후 전자교류 간행물 출판, SNS, 포럼 윤번 개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헤이룽장성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의 역할

헤이룽장성위원회 성정부를 지원하는 브레인트러스트이자 싱크탱크 건설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헤이룽장성 대외개방을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싱크탱크의 기본 포지셔닝으로 확정하며 응용/기초연구 우위를 이용

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룽장성의 개방전략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소련, 러시아, 한국, 일본에 대한 헤이룽장성 개방의 성급 및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개방 성과는 헤이룽장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다. 예컨대 2005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경제무역 협력 전략의 성급 법규로의 승격과 2007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한국과의 과학기술 경제무역 협력 성급 전략의 법규 승격은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대책을 제안해 만들어진 개방 전략이다. 발표 이후 그 해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기업 측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직간접적인 헤이룽장성 지원이 국가 전략 연구에 포함되었다. 일례로 2012년 이후의 '5대 규획', 2014년의 '헤이룽장과 네이멍구(內蒙古) 동북부 지역 국경 개발 개방 규획', '룽장(龍江)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규획' 등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토론과 입안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국경 항구 등 지방정부, 민간기업 투자 입안 등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2014년 2월 가동한 퉁장(同江)대교 프로젝트, 2016년 12월 가동한 헤이허(黑河)대교 프로젝트, 헤이룽장성과 하얼빈(哈爾濱)시 우호도시인 일본 니가타현(新瀉縣)과 니가타시가 하얼빈에 수출하는 생화사업, 하얼빈시 온천사업 일본 협력 연계, 한중문화우호협회 헤이룽장성 문화협력 사업 등이 있다. 넷째,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 심화를 위한 헤이룽장성의 이론적 지원, 학술적 각도에서 제공한 기초 이론과 응용연구의 학술 저작 등 성과, 동북아 연감 등 참고서적은 하얼빈무역상담회에서 외교사절 및 기업인들에게 증정됐다. 다섯째, 정부 관련 투자유치, 상무부처 투자유치, 사업 소개, 기업/정부 해외진출에 이론적/인적 뒷받침 제공, 성/시정부의 외국과의 협력에 20여 차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여섯째, 동북아 전략 연구원(성급 신형 양성 싱크탱크 랭킹 1위),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회, 헤이룽장/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회, 세계경제, 러시아역사, 아태경제주요학과, 중-일 싱크탱크네트워크헤이룽장기지, 헤이룽장성동북아지역경제연구기지 등 민간 단체와 학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외 개방을 지원하고 외국 학자의 강좌 및 교류를 조직했다. 특히 동북아 연구회는 2016년 전국 우수 학회와 성급 특색 학회로 선정됐다.

발제문

通过深化对外学术交流提升智库国际影响力

笪志刚
黑龙江省社会科学科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

一、黑龙江省社科院简介

黑龙江省社会科学院的前身是1960年建立的中国科学院黑龙江分院哲学社会科学学部和1964年成立的黑龙江省哲学社会科学研究所。1979年，经省委批准，组建黑龙江省社会科学院。黑龙江省社会科学院以创建全国一流地方社会科学院和中国特色社会主义新型智库为目标，坚持科研强院、人才兴院、制度管院、开门办院、民主建院，激发内生动力，聚焦社会合力，提高服务全省发展贡献力，提升国内国际影响力和支撑创新保障力，以科研为中心的各项工作取得了显著成效。

黑龙江省社会科学院设有13个研究所（中心）、9个机关处室、2个科辅部门、1个办刊单位、2个办学单位。在全省设有12个市地分院和6个省情调研基地，中国社会科学院国情调研黑龙江基地办公室设在黑龙江省社会科学院。黑龙江省社会科学院拥有18个省级领军人才梯队，其中政治学理论为全省"535工程"第二层次梯队。拥有正高级研究员33人，硕士研究生导师40人，其他

国家级有突出贡献中青年专家、享受国务院特殊津贴专家、领奖文化建设终身荣誉奖、黑龙江省优秀中青年专家、享受省政府特殊津贴专家、省文化名家等80余人。

黑龙江省社会科学院办有《学习与探索》、《黑龙江社会科学》、《西伯利亚研究》、《中国—东北亚国家年鉴》4种公开发行期刊、年鉴和送阅件《要报》。黑龙江省社会科学院是全国具有硕士学位授予权的5家地方社会科学院之一，拥有应用经济学、政治学、社会学、世界史4个一级学科硕士学位授予点和政治学、世界史2个省级重点学科，继续教育学院（职工大学）是社会科学院系统唯一的一所成人高校。

建院以来，全院共发表各类科研成果1.5万余项，其中专著、编著、译著680余部；承担国家级和省级重要课题380余项，其中国家社科基金项目80余项、东北边疆工程项目近20项、省社科研究规划项目240余项、省科技攻关项目40余项；共有500余项成果获省部级以上奖励。

中共黑龙江省委副秘书长武凤呈为现任黑龙江社科院党委书记，朱宇研究员为院长。

二、对外学术交流情况介绍

黑龙江省社科院的国际学术交流活动起步较早，从上个世纪80年代对前苏联的边境贸易合作开始，黑龙江省社科院作为智库利用地缘优势和研究积淀，积极为本省深化对前苏联和东欧国家的经贸合作服务，形成了对前苏联远东和西伯利亚地区为重点，辐射前苏联欧洲地区的学术交流网络，与前苏联科学院远东研究所、莫斯科大学、前苏联科学院远东分院历史和考古研究所、远东分院亚洲太平洋地理研究所、阿穆尔州立大学等中央和地方为重点的交流伙伴关系。与此同时，黑龙江社科院积极开拓与欧美日韩朝蒙的各种交流，形成了侧重欧亚，兼顾其他的学术交流方向。

近年，随着国家重视智库合作和推出相关《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等建设意见，本省打造新型智库建设步伐加快，给黑龙江省建设具有世界眼光、区域视野和省情关注的新型智库带来重大机遇，作为省级权威和领军智库，黑龙江省社科院遵循实现服务地方党政决策的根本定位，结合提升国际影响力，强化以国际化交流打造具有国内外影响力的新型服务型智库。我

院涉及国际交流与合作的研究机构主要有俄罗斯研究所、东北亚研究所、犹太人研究中心、东北亚和国际问题研究中心，其他研究所也有交流，但总的以国际片为主。从他们多年的国际交流来看，主要体现在以下三个方面。

（一）广泛建立双边和多边的学术签约关系

近年，在省委宣传部和省外办的大力支持下，通过深化“走出去”和“请进来”，密切与俄日韩朝蒙美英新等国的学术往来，先后建立学术签约和备忘录合作关系20余个，开拓各种人脉超过500人。其中，对俄5个，对日5个，对韩7个（对外经济政策研究院、产业银行经济研究所、韩中文化友好协会、忠南研究院、忠北研究院、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东北亚历史财团）、对蒙2个、对朝1个（正在商谈），对构筑在全省乃至全国的对东北亚研究的权威地位、夯实和扩大学术及媒体话语权起到了关键支撑作用。组织学者出访50余批次，100多人次，接待对方学者等来访100余批次，500多人次。其中对俄韩日一个月以上的进修项目多个。另外，黑龙江社科院还从两个方面推动夯实学术交流基础。一是鼓励国际问题研究学者积极申请日本国际交流基金、省外办国际合作交流员、民间团体工作进修等项目，先后有多人赴俄罗斯科学院远东分院、日本北海道大学、韩国忠清北道、韩中文化友好协会客座研究、工作深造。二是聘请了美国基辛格、巴尔舍夫斯基，日本池山大作、山边悠喜子、田畑仲一郎、新井洋史，韩国郑超时、郑知贤，蒙古国巴亚萨呼、图木尔，以色列奥尔默特等名人担任名誉研究员，使现有国内外名誉和特别研究员达到31人，通过名人效应把国际交流做大，夯实国际交往水平，提升影响力和感召力。

（二）加强科研和智库国际交流平台的建设

作为地方智库提升国际化水平的重要路径，黑龙江社科院积极支持有条件和优势的研究所和中心构筑国际交流平台，通过定期召开国际智库论坛和相关研讨会，中外智库合作研究等方式，为中外智库、国家和地方智库对接，切磋观点、沟通交流、增信释疑提供基础平台，实现为政府决策提供理论支撑、实践引导，促进政府决策的更加开放、创新和包容。20年来，黑龙江社科院利用国际论坛构建国际交流平台不断取得突破。由举办了十余届的中俄区域合作论坛演变而来的东北亚区域发展国际论坛已成功召开六届，2014年根据省政府指

示改名为中俄智库合作论坛。我院利用承办上述论坛的平台聚集了一大批国内外顶级专家学者、政府高官和跨国企业家，对以学术交流宣传我省改革开放成就和扩大影响起到了很大的作用。前苏联部长会议主席雷日科夫、俄联邦副总理尼古拉耶夫、俄中友协主席季塔连科、20余名俄罗斯科学院院士、6名中国社科院学部委员、美日韩驻沈阳总领事、美日韩蒙朝知名学者、驻华商会和企业界人士近500人先后莅临会议。现在黑龙江社科院拥有作为中俄博览会期间的“中俄智库合作论坛”和与中共黑龙江省委宣传部、光明日报社合办的“东北振兴与‘一带一路’”合作论坛两个固定机制，2017年6月还承办了全国日本经济学会年会、全国新兴经济体黑龙江分会论坛。此外，黑龙江省社科院还依托与社科文献出版社共建的东北亚数据库平台，利用出版中国东北亚国家年鉴、中俄双语蓝皮书和东北亚蓝皮书的出版机制，聘请俄日韩蒙等国学者参与撰写研究报告、共同进行边境地区考察等，实现了智库合作与交流的常态化、高端化和平台化。

（三）创造性地倡议创办了东北亚地区首个多边智库联盟

2016年6月，利用召开东北振兴与一带一路建设国际论坛的有利契机，黑龙江社科院倡议成立了东北亚智库联盟，并得到东北亚中俄日韩蒙51家智库积极响应，在开辟聚智新平台，促进智库交流，推动务实合作上打造了一个多边智库交流与合作平台，填补了东北亚地区在该领域的合作空白。其中中国智库39家，涵盖国内包括中国社科院三大国际问题研究所、地方9家社科院、政府研究中心、知名学府的著名智库等多家研究型智库。俄罗斯3家、韩国4家、日本3家、蒙古国2家，为向东北亚各国政府建言献策，推动地方层面友好合作提供了具有学理和实践支撑的多边平台。成立一年来，智库联盟通过设在黑龙江社科院东北亚所的秘书处开展了一些双边和多边交流活动。例如共同参与对方举办的国际学术论坛、双边或多边调研及共同研究，今后还将就出版电子交流刊物、微信公众号、轮流举办论坛等进行进一步的磋商。

三、黑龙江社科院在服务黑龙江省国际合作中的作用

作为服务黑龙江省委省政府的智囊团和思想库、智库建设中的核心智库和领军智库，黑龙江省社科院始终把推动本省对外开放作为己任，将服务地方经济社会发展作为智库的根本定位，在利用应用和基础研究优势服务及参与决策上做出了诸多努力，也取得了较为令人瞩目的成就。主要体现在：一是直接服

务省级开放战略出台。黑龙江省对前苏联和对俄、对日韩开放的很多省级和上升为国家级战略的开放成果都有黑龙江省社科院科研人员的积极参与。例如2005年黑龙江省出台的对俄科技经贸合作战略升级省级法规、2007年黑龙江省出台的对韩科技经贸合作省级战略升级法规，都是在黑龙江省社科院科研人员对策建议基础上形成的开放战略。出台伊始就使当年的对俄和对韩经贸合作在贸易和投资商出现双攀升。二是直接或间接服务黑龙江省被纳入国家战略视野的研究。例如2012年以来的《五大规划》、2014年的《黑龙江与内蒙古东北部地区沿边开发开放规划》、龙江丝路带建设规划等。三是直接参与具体项目的讨论和立项论证，服务沿边口岸等地方政府、民营企业投资立项等。例如2014年2月启动的同江大桥项目、2016年12月启动的黑河大桥项目、黑龙江省和哈尔滨市友好城市日本新泻县和新泻市向哈尔滨出口鲜花项目、哈尔滨市温泉项目对接日本合作等、韩中文化友好协会对黑龙江省的文化合作项目等。四是为黑龙江省深化对俄及东北亚合作提出理论支撑，从学理和学术角度提供基础理论和应用研究的学术著作等成果，东北亚年鉴等工具书作为哈洽会礼物赠送驻外使节及商务人士。五是为政府相关招商、商务部门招商引资、项目推介、企业和政府走出去提供智力和人脉支撑，先后为省市政府委办局提供涉外合作机会20余次。六是利用东北亚战略研究院（省级新型培育智库排名第一）、黑龙江省东北亚研究会、黑龙江俄罗斯东欧中亚研究会、世界经济、俄罗斯历史、亚太经济重点学科、中日思想库网络黑龙江基地、黑龙江省东北亚区域经济研究基地等民间社团和学科资源服务对外开放，组织了多场外国学者的讲座和交流，东北亚研究会2016年被选为全国优秀学会和省级特色学会。



MEMO



MEMO



MEMO



MEMO



제3회

황해황해 포럼

3rd Pan-Yellow Sea Forum

» 발 행 처 동아시아재단
» 발 행 일 2017년 11월
» 디자인 · 인쇄 쵸이스디자인 (02-2272-2633~4)
» 관 련 문 의 동아시아재단 (02-325-2604~6)